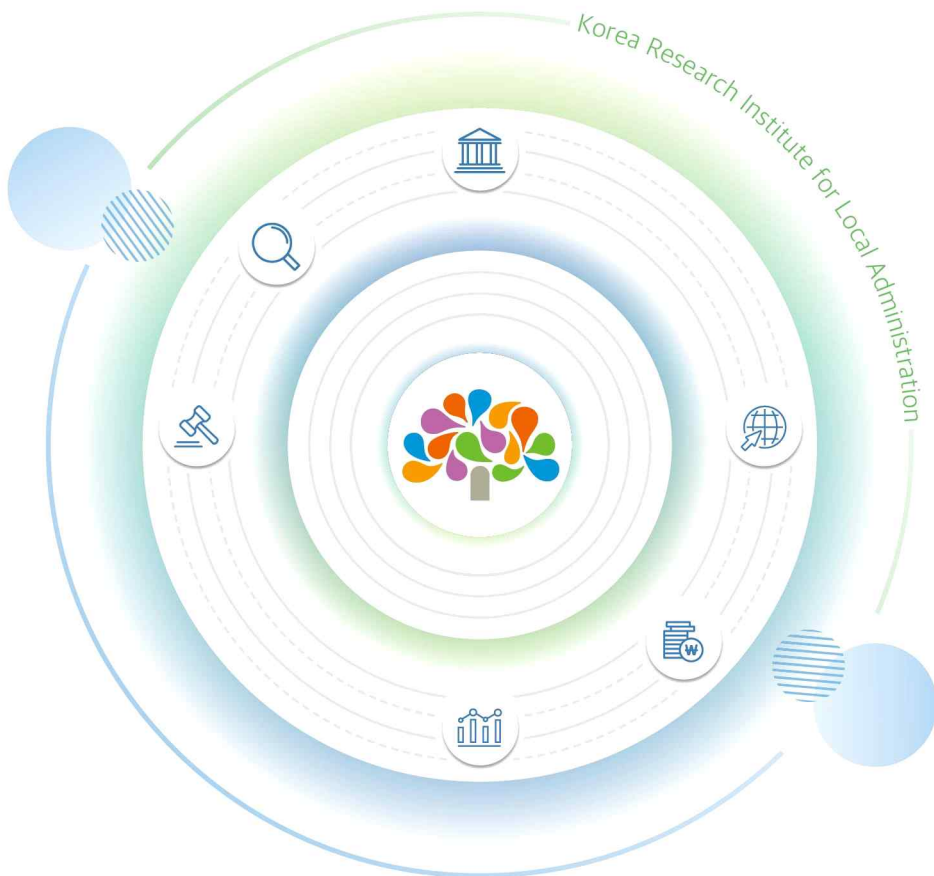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권한 지방이양 (RISE체계)에 따른 충남형 고등교육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김 진 ·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저 자 김 진, 김성주

연구책임자 김 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 구 진 김성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요약

1. 연구 목적 및 체계

□ 연구 목적

- 고등교육 정책을 둘러싼 환경 및 정부 기조 변화에 따라 충청남도의 특성화 전략 및 발전계획을 반영한 고등교육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이 필수적인 시점
-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과 대학 간의 관계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에 따라 변화할 지역과 대학 간 관계에 대해 논의함
 - 둘째, 충청남도의 지역 및 산업 여건과 도내 대학 여건 등을 분석하여 지역과 대학 간 연계 방향성을 탐색하고
 - 셋째, 지역-산업-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충남형 고등교육 기본계획 수립의 바탕이 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 넷째, RISE 시행에 따라 재정투자계획 및 성과관리 방안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연구 분석 체계

○ 본 연구의 연구 분석 체계는 다음과 같음

[표 1] 연구 분석 체계

1.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지역-대학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RISE	⇒	1. 이론적 논의: 정부와 대학 관계 2.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의 개요와 지역-대학 관계 재정립
▽		
3. 충청남도 지역-대학 여건 분석	⇒	1. 충남 지역 발전 전략 분석 2. 충남 지역 여건 분석 3. 충남 대학 여건 분석
▽		
4. 충청남도 고등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구상(안)	⇒	1. 충남형 고등교육 기본계획(안) 2. 재정투자계획 관련 고려사항 3. 성과관리 방안
▽		
5. 연구 종합 및 시사점	⇒	1. 연구 결과 종합 2. 연구 시사점

2. 지역-대학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RISE

□ 기존 대학 재정지원 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대학에 미치는 행정 및 재정적 영향력은 중앙부처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음
- 이는 그동안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사무 관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없었기 때문임
 - 원칙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사무 권한은 국가에 속해 있어 대학의 설립 및 운영,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및 정책 지원과 관리 등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임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더불어 고등교육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지역과 대학에 대한 위기감이 공존하면서 지역 중심 대학 정책이 제시되었음

- 2019년 이후 최근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핵심어(keyword)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지역’이 강조되었음
 - 2021년 5월 교육부 정책 비전에 ‘지역’이 포함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대학의 자율 혁신, 공유 및 협력, 포용 사회 및 미래 교육 등이 핵심어로 등장하였음
 - 2019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컨소시엄이나 플랫폼 등을 구축하여 공동으로 대학 사업을 진행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음
 - 2023년 2월 들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이 교육부의 정책 목적이 되면서 지역 주도 대학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비전으로 내세우게 된 것을 확인 가능함

□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 개념과 주요 특징

-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는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약자로 대학 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의미함
- RISE가 기존 대학 재정지원정책과 구별되는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교육부가 주관하던 대학 재정지원 예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전환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해 '23년부터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개편하여 약 9.74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됨

□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 하에서 지역-대학 역할 재정립 필요

- 구체적으로 RISE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구성, 고등교육 기본계획 수립,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게 됨

[그림 1] RISE 추진 체계



3. 충남 지역·대학 여건 분석

1) 충남 지역 발전 전략 분석 결과

- 제 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민선 8기 역점 과제 및 당면 현안 등을 분석한 결과 충청남도 도정 운영에 있어 사회적 측면보다는 경제 및 지역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역점 과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략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향후 지역-대학 연계 핵심 분야 도출에 있어 복지나 문화 등 사회적 측면에 대한 새로운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충청남도 도정 운영에 있어 고등교육 분야 관련 과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2) 충남 지역 여건 분석 결과

- 청년 인재 유출 관련, 출생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인구수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졸업까지의 인구수는 점차 증가, 대학교 졸업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대폭 감소가 있었음
 - 따라서 충청남도의 청년 인구 유출은 대학 졸업 후 일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학 진학 단계에서의 유출은 비교적 적으나 구직 단계에서의 2차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됨

- 산업 여건 전망을 보면, 대내적으로 도내 이전기업 유치실적이 감소하고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대외적으로는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져 외생적 요소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가짐
 - 충남 지역 북부권과 그 외 권역(서해안권, 내륙권, 남부권) 간 경제력 격차 심화로 인해 지역 내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노동시장 여건을 보면 충남은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청년고용률에 있어 전국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의 경우 낮은 수준을 나타냄에 따라,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이 가능한 상황임
- 충남의 12대 주력산업별 부족 인원 현황을 학력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의 경우 화학, 자동차, 기계 순으로 부족 인원이 많게 나타났고, 전문학사의 경우 기계, 화학, 자동차 순이며 학사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순으로 인원이 부족했으며 석·박사의 경우 자동차, 반도체, 소프트웨어 순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3) 충남 대학 여건 분석 결과

□ 지역 인재 관련 기본 방향 설정

- 지역대학에서 졸업한 학생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으로 취업하게끔 유인하는 단기적 유인 방안 추진 중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우수 일자리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세울 때 대학 재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등의 지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근시안적 정책으로 사료됨
 - 근본적으로 청년 인구의 유출 방지 및 지역 착근, 기업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양성, 정주 여건 개선과 직업·평생 교육 활성화 등 핵심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충남과 대학의 공생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산학협력 관련 현황 및 시사점

- 지역 주력산업별 도내 대학, 지역 혁신기관, 연구소 및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현황을 보면 충남의 경우 혁신 자원이 많은 편에 속하는 반면 산업기술인력 부족 문제 해결 필요
 - 2020년 충남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1.7%로 전국 평균(2.2%)보다 낮은 수준이나, 2015년(1.4%) 이후 부족률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으로 인력 구인·구직의 미스매칭 해결 필요
 - 2020년 충남 미충원인력 발생 원인 중 ‘현장 투입이 가능한 숙련·경력 갖춘 인력이 없어서(29.1%)’, ‘직무수행을 위한 학력·자격을 갖춘 인력이 없어서(27.3%)’가 큰 비중을 차지

□ 창업 관련 쟁점

- 창업 교육 및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한 창업 인력 양성 및 창업촉진을 위해 지역 내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창업 지원 확대, 창업 강좌 등 교육 확대, 창업 중심 대학 추가 선정 등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충남 천안·아산 지역을 제외하면, 지역 내 신기술·신산업 기반 창업생태계 여건이 미약, 지역 또는 권역별 특화산업 중심의 지역발전 계획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 필요
 - 충남 창업 생태계 관련 지역-대학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협의회 활성화 필요

□ 충남 도내 대학 특성화 관련 시사점

- 충남 발전계획과 연계한 도내 대학별 특성화 분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특성화 분야는 국방(군수) 안전, 헬스케어, (장애인)재활복지, 스마트농업, 사회복지, 문화관광, 디지털 정보화, 모빌리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바이오 헬스케어, 2차전지, 해양바이오 등임
 - 건양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중부대, 청운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서대, 호서대 등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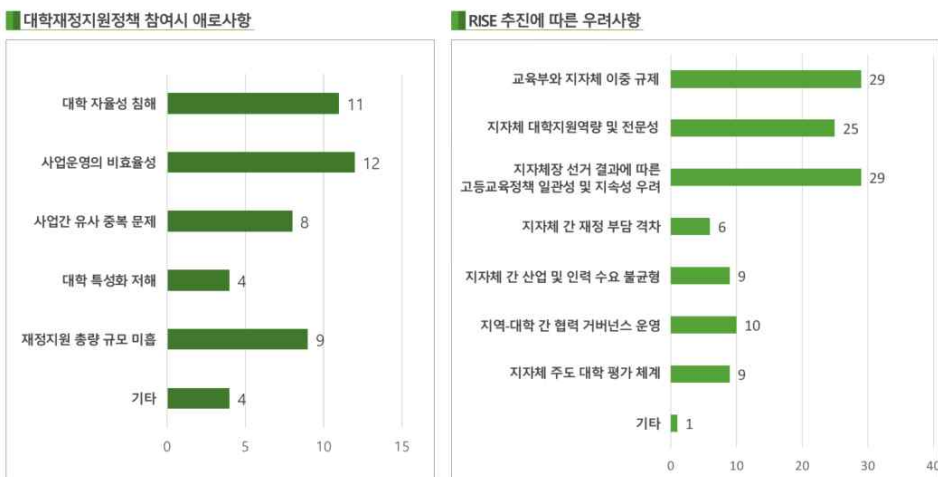
-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의 사업 선정 및 성과평가, 성과관리 차원에서 지역사회 수요와 연계된 중점 과제 및 세부 사업 발굴이 필수적임

4) 대학 설문조사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RISE 추진에 따른 우려 사항

- 충남 도내 대학 보직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에 따른 고등교육정책 일관성 및 지속성 우려,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중 규제,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 역량 및 전문성 우려 등이 제기됨
 - 충남 측에서도 대학들의 우려를 파악하고, 일회성의 설문조사로 그치지 않고 향후 다양한 의견 청취 방식을 통해 소통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대학재정지원정책 및 RISE 추진에 따른 우려 사항



□ 성공적인 RISE 추진을 위한 충남 및 대학의 역할

- 설문조사 결과 성공적인 충남 RISE 추진을 위해 대학이 충남의 역할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았음
 - 도내 모든 대학 소외 없는 지원 약속, 대학재정 지원 규모 확대, 대학-지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 대학 정책 관련 전문성 강화, 청년 정주 여건 개선,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노력 확대, 평가에 있어서 경쟁보다 공유 우선시, 기존 대학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등을 피력함

- 성공적인 충남 RISE 추진을 위해 대학 스스로의 역할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인재 양성, 교육 혁신 등 전통적인 대학 역할 강화 뿐만 아니라, 이제껏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지역과의 연계, 대학 거버넌스 개선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광역 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의 대학과 지역 협력이 필수라는 의견 존재

4.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구상(안) 제안

1) 충남 RISE 비전 및 목표(안) 도출

- 이상의 충남 지역발전 전략 및 지역 여건, 대학 여건 분석,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충남 RISE 비전 및 목표(안)을 도출함
- ‘미래로 동반 성장하는 힘센 충남-대학’을 비전으로 총체적 지역 인재 양성 기반 강화, 지역 특화 연구 개발 역량 강화, 취·창업 생태계 구축, 대학 역할 혁신과 변화 등의 4대 핵심 분야를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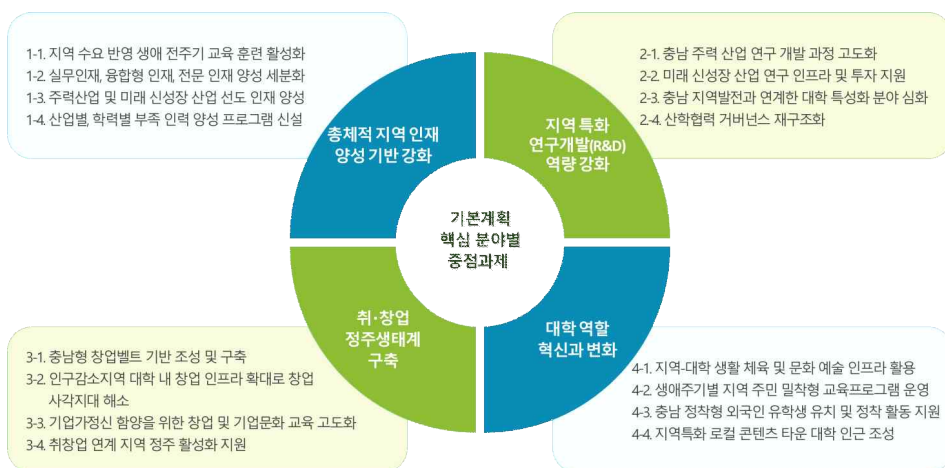
[그림 3]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안)



□ 핵심 분야 및 중점 과제 도출

- 사람, 기술, 경제, 혁신 등을 핵심 가치로 하여 다음의 4가지 핵심 분야를 도출함
 - 핵심 분야는 총체적 지역 인재 양성 기반 강화, 지역 특화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취·창업 정주 생태계 구축, 대학 역할 혁신과 변화 등이며 주요 중점 과제는 다음 [그림 4]과 같이 제시함

[그림 4]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 핵심 분야별 중점 과제 도출(안)



2) 재정투자계획 관련 고려사항

□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불확실성이 큰 시점에서 충남 RISE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함

-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배분 방식의 불확실성이 높음
 - 교육부 및 그 외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고, 충남 도내 대학의 참여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충남 RISE 재정투자계획의 선결 조건으로 중앙 정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규모 및 건수 파악,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과의 연계 등을 제시함
 - 또한 RISE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3) 성과관리 방안에 대한 제언

□ 충남의 지역 발전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중앙으로부터 이양받는 대학 관련 행·재정적 권한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대학 사무 관련 정보나 전문성은 현재 수준에서 부족할 수 밖에 없음
 -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일정 부분 투입되는 점,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 관련 전체 권한이 이양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전 대학 위주로 충남 RISE 성과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이를 바탕으로 충남형 RISE 성과관리 추진 체계를 제안하고, RISE에 포함되는 기존 5개 사업의 평가 지표를 점검하였으며,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중점과 제별 성과지표 후보군을 제시함

[표 2] 충남형 고등교육 기본계획 성과 목표별 성과지표 제시안

핵심분야	중점과제	사업 주요 내용(성과목표) 예시
1. 총체적 지역인재 양성기반 강화	1-1. 지역 수요 반영 생애 전주기 교육 훈련 활성화	초·중·고등학생 대상 충남 지역 역사 문화 이해 프로그램 제공 및 활성화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의체 구축)
		의료 복지 등 지역 수요 반영 교육 훈련 활성화 (공공 간호사제,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등)
		대학 우수 인프라 활용을 통한 재직자 직업역량 향상, 직업 전환,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유연하게 운영
	1-2. 실무인재, 융합형 인재, 전문 인재 양성 세분화	산업 현장 우수 연구자(기업 재직자 및 연구소 연구자 등)가 교육하는 실무 인재 양성
		유관기관, 기업, 대학이 협력하는 융합형 인재 교육 프로그램 신설
		직업전문교육 거버넌스 체계 구축 (HiVE 참여 대학 거점)
	1-3. 주력산업 및 미래 신성장 산업 선도 인재 양성	기업 성장 단계 및 산업 분야별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주력산업(모빌리티, 바이오, 디스플레이) 선도 고급 인재 교육 강화
		미래 신성장 산업(반도체, 2차전지) 선도 고급 인재 양성

핵심분야	중점과제	사업 주요 내용(성과목표) 예시
2. 지역특화 연구개발 (R&D) 역량강화	1-4. 산업별, 학력별 부족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생산 인력 부족 산업 및 전문 인력 부족 산업별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기술인력조사 결과에 맞추어 대학 내 학과 신설 지원
	2-1. 충남 주력 산업 연구 개발 과정 고도화	모빌리티, 바이오,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 중심 대학 육성
	2-2. 미래 신성장 산업 연구 인프라 및 투자 지원	반도체, 2차전지 기업-대학 공동 산학연구, 인프라 고도화 및 투자 지원
	2-3. 충남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분야 심화	군수, 안전, 헬스케어, 복지, 스마트농업, 문화관광 등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분야 심화
3. 취·창업 정주 생태계 구축	2-4. 산학협력 거버넌스 재구조화	대학-지역혁신기관-산업체 연계 통합 플랫폼 구축
	3-1. 충남형 창업벨트 기반 조성 및 구축	베이밸리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벤처창업 전주기 지원 시스템 구축 서해안 해안·온천·문화재·축제·호텔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밀착형 축제 및 문화공연 개발 및 관련 인력 양성 가로림만, 해양레저관광 등을 기반한 제조와 서비스 융합 의 그린창업벨트 육성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기반 강화 (폴리텍대학 해양 수산캠퍼스 26년 예정)
		충남 도내 인구감소지역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신설 창업중심대학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창업 문화 확산
		재학생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창업 교육 프로 그램 운영 기업 임원 대상 기업 문화 교육 고도화를 통한 인력 미스 매치 해소
	3-4. 취·창업 연계 지역 정주 활성화 지원	창업선도 중심 대학 추가 지정 지원 대학 중심 충남 청년 도시재생 지산학 플랫폼 구축
4. 대학역할 혁신과 변화	4-1. 지역-대학 생활 체육 및 문화 예술 인프라 활용	대학 내 공간 개방 및 지자체와의 공동 운영으로 주민 문화 및 생활체육 수요 대응
	4-2. 생애주기별 지역 주민 밀착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신설 및 대학 간 연계를 통한 평생교육 체계 구축 (LiFE 참여 대학 거점)

핵심분야	중점과제	사업 주요 내용(성과목표) 예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사이버 대학, 지자체 평생교육 학습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on-off로 제공
		소단위 학위과정(마이크로 디그리) 도입 및 활성화 지원
4-3. 충남 정착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활동 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자체-대학 공동 박람회 개최
		유학생 정착을 위한 취업 및 정주 여건 개선
4-4. 지역특화 로컬 콘텐츠 타운 대학 인근 조성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 문화 콘텐츠 타운 조성하여 기초 지자체-대학-공공기관 협력 사업 발굴
		기초 지자체-대학 연계하여 로컬 크리에이터 스쿨 운영 하여 발굴 및 양성 위한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활성화

5. 연구 시사점

1) RISE 재정 관련 내·외부적 선결 요건

□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 재정투자계획 수립의 내부적 요건

- 향후 충남이 RISE 사업 예산을 기획하고 수립할 때 충남 도내 대학의 협력이 필수이며 고등교육정책협의회 등 정기적 회의와 의사소통 창구 마련 등을 통해 충남 측의 파악이 필요함
- 국고보조 및 복합재원, 자체 재원 투자 형식 등 대학 재정 투자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할 때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심사 등이 필요할 것이고 이에 대한 충남도청 및 대학 차원의 협업을 통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임

□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 재정투자계획 수립의 외부적 요건

- 충남 내부적인 요건 마련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계획성 있고 투명한 재정 투자 계획이 필요함
 - 주관부처인 교육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불명확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지역과 대학의 거버넌스 체계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거버넌스 체계 또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 및 타 중앙부처 연관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면밀한 연계·협력이 필수이며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공공 재정의 유사·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음

2) 대학 책임성 담보 방안 마련 필요

□ 대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에 반해 선행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음

- 대학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폐교 대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대학의 역할은 상당히 클 것이라는 의견과 대학 폐교 자체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가 공존함
- 분명한 것은 향후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방 대학들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대학들의 폐교 자체를 늦추는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임

□ 종합하면 충남 RISE 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충남 도내 대학 책임성을 담보할 방안이 필요함

-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해 공공 재정이 대학에 투자되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학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함
 - 특히 국·공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에 공적 자금을 투입할 때 지역 주민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이 필요함
- 충남은 지역 내 건전한 대학을 중심으로 RISE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대학재정지원 일부의 행·재정적 권한을 이양받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대학에 대한 인사권 행사나 구조 조정 등 대학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수단이 많지 않아 결국 RISE 체제 하에서 성과관리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임

3) 참여 주체 간 정보 비대칭성 완화 필요

□ 태생적 정보 비대칭성 존재

- 교육 사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가 아닌 것에서 기인하는 태생적인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함
 - 즉,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교육 담당 중앙부처 및 타 부처 등과 비교할 때 교육 사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였음
- 본 연구에서 충남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에 따른 고등교육정책 일관성 및 지속성 우려,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중 규제,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 역량 및 전문성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음

□ 정보 비대칭성 최소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내 대학 담당 인력 및 조직 관리 필요

- RISE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 관련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인력 및 조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대학 재정 지원 사무를 오래 해왔던 한국연구재단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현재 교육부가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을 통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비시범지역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함
 - 충남 RISE 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공무원 대상 교육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및 사학진흥재단, 연구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목 차

제1장 |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의 주요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 범위	9
2. 연구 방법	10

제2장 | 지역-대학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RISE

제1절 이론적 논의: 정부와 대학 관계	15
1. 한국 대학 재정지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	15
2. 대학 재정 지원 정책 현황	17
제2절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의 개요와 지역-대학 관계 재정립	36
1.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의 개념	36
2.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의 주요 특징	37
3. 지역혁신 중심 대학운영체계(RISE) 하에서 지역-대학 역할 재정립	41

제3장 | 충청남도 지역-대학 여건 분석

제1절 충남 지역 발전 전략 분석	47
1.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47
2. 충청남도 역점 과제	55

3. 충청남도 당면 현안	61
4. 지역발전전략 중 고등교육 분야 분석	63
제2절 충남 지역 여건 분석	70
1. 인문 환경	70
2.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86
3. 소결	121
제3절 충남 대학 여건 분석	123
1. 충남 대학 일반적 여건	123
2. 충남 도내 대학별 여건	132
3. 대학 설문조사 분석	182
4. 소결	203

제 4 장 | 충청남도 고등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구상(안)

제1절 충남형 고등교육 기본계획(안)	209
1. 충남형 고등교육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도출	209
2. 핵심 분야 세부 내용	211
3. 핵심 분야별 중점 과제	212
제2절 재정투자계획 관련 고려사항	219
1. RISE 시행에 따른 지방 재정 영향	219
2. 중앙부처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220
3.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와의 연계	231
제3절 성과관리 방안	233
1. 이론적 논의	233
2.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 성과관리의 기본 방향	239
3. 충남형 RISE 성과관리(안) 제안	247

제5장 | 연구 종합 및 시사점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263
1. 충남 지역 여건 분석 결과	263
2. 충남 대학 여건 분석 결과	264
3. 충남 대학 대상 설문조사 결과	268
4.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구상안 제안	271
제2절 연구 시사점	273
1. RISE 재정 관련 내·외부적 선결 요건	273
2. 대학 책임성 담보 방안 마련 필요	275
3. 참여 주체 간 정보 비대칭성 완화 필요	277

【참고문헌】	279
--------------	-----

【부록】	285
------------	-----

표 목차

[표 1-1] OECD 대비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비교	3
[표 1-2] 시도별 대학 입학자 수 변화 비교	7
[표 1-3] 연구 분석 체계	12
[표 2-1] 국가 및 지자체 고등교육기관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17
[표 2-2] 정부별 고등교육재정지원 주요 특징	20
[표 2-3] 주요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개괄	25
[표 2-4] 고등교육 재정지원 재원별 현황 (2021년)	28
[표 2-5] 지방자치단체별 대학 재정지원 사업 지원금액 및 비율 (2021년)	29
[표 2-6] 지방자치단체 대학 재정 지원 현황 (2021년)	30
[표 2-7]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목적별 지원금액 및 비율 (2021년) ..	34
[표 2-8] 중앙-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사업 유형별 재정지원 비교 (2021년)	34
[표 2-9] 중앙-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사업 목적별 재정지원 비교 (2021년)	35
[표 2-10] 기존 RIS와 RISE 비교	39
[표 2-11] RISE 사업 향후 추진계획	40
[표 3-1]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	50
[표 3-2] 충남 문화·관광 자원 현황 (2022년)	72
[표 3-3] 시도별 지역발전지수 변화 현황	73
[표 3-4] 시도별 균형발전지표 현황 (2019년)	74
[표 3-5] 충남 시군별 주민등록인구 현황	74
[표 3-6] 충남 시군별 주민등록인구 및 순이동인구 현황	79
[표 3-7] 충남 연령별 순인구이동 현황	80
[표 3-8] 생애주기별 지역 간 청년 이동 현황 (표본조사 기준)	83
[표 3-9] 생애주기별 지역 간 청년 이동 현황 (모집단 추계 기준)	84
[표 3-10] 전국 및 충남 경제활동 분야별 총부가가치 비중	88

[표 3-11] 충남 총부가가치 현황	90
[표 3-12] 충남 제조업 지역내총생산 세부 현황	91
[표 3-13] 지역별 1인당 지역 내 총소득 (2016-2020년)	93
[표 3-14] 시도별 소득역외순유출입 현황 (2022년)	95
[표 3-15] 충남 주요 고용지표 현황	98
[표 3-16] 충남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98
[표 3-17] 충남 사업체 수 현황	99
[표 3-18] 충남 종사자 수 현황	99
[표 3-19] 전국과 충남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비교	100
[표 3-20] 최근 10년 간 전국과 충남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비중 변화	103
[표 3-21] 최근 10년간 전국 및 충남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가율	104
[표 3-22] 전국 및 충남 구인·구직 동향 추세	107
[표 3-23] 전국 및 충남 직업별 구인배율 (2023년 1~3월 합계 기준)	107
[표 3-24] 전국과 충남 인력 부족 현황 추세	109
[표 3-25] 전국과 충남 인력 부족률 산업별 현황 (2022년)	110
[표 3-26] 전국과 충남 산업별 빈일자리수 및 빈일자리율 현황 (2022년)	112
[표 3-27] 지역노동시장권의 유형 분류	114
[표 3-28] 충남 시군별 지역노동시장 현황	114
[표 3-29] 충남 산업별 산업기술인력 현원 및 고용형태	117
[표 3-30] 전국 및 충남 산업 기술인력 현원 및 부족인원 추세	119
[표 3-31] 전국 및 충남 12대 주력산업별 부족인원 현황	120
[표 3-32] 충남 12대 주력산업별·학력수준별 부족인원	120
[표 3-33] 지방자치단체별 고등교육기관 현황 (2023년)	123
[표 3-34] 충청남도 고등교육기관 현황 (2023년)	124
[표 3-35] 지역별·학교 유형별 대학 재학생 수 현황 (2022년)	125
[표 3-36] 지역별·학교 유형별 재학생 및 신입생 총원율 현황 (2022년)	127
[표 3-37] 지역별 대학교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2022년)	128
[표 3-38]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대학재정지원액 현황 (2021년)	129

[표 3-39]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인재정책 주요 내용	135
[표 3-40] 충남 지역 인재 육성 정책 주요 내용 (2022년 기준)	138
[표 3-41] 충남 도내 대학 재학생 및 신입생 충원율 현황 (2022년)	141
[표 3-42] 충남 고등학생의 지역별 대학 진학 현황 (2019년)	142
[표 3-43] 충남 대졸자의 지역별 이동 현황 (대학 → 현 거주지)	144
[표 3-44] 지역별 대학 졸업자 취업 지역	146
[표 3-45] 지역별 대학 평균 취업률 (2021년 기준)	147
[표 3-46] 충남 도내 대학별 취업 현황	149
[표 3-47] 대학 산학협력 분류 체계	151
[표 3-48] 충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정책 내용 (2023년 기준)	153
[표 3-49] 최근 3년간 충남 대학 현장실습 이수 학생수	155
[표 3-50] 최근 3년간 충남 대학 캡스톤디자인 개설 대학 비율	155
[표 3-51] 최근 3년간 충남 대학 학제별 설립유형별 주문식 교육과정 대학 비율 ..	156
[표 3-52] 최근 3년간 충남 대학 주문식 교육과정 수 및 참여학생 수	156
[표 3-53] 최근 3년간 충청권 대학 주문식 교육과정 참여학생 수	157
[표 3-54] 최근 3년간 충청권 대학 국내외 특허 출원 수	158
[표 3-55] 충남 도내 대학교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2022년)	158
[표 3-56] 디스플레이 분야 충남 도내 대학 및 관련 학과 현황	161
[표 3-57] 디스플레이 분야 충남 도내 혁신 자원 현황	162
[표 3-58]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인력 현황	163
[표 3-59] 자동차 분야 충남 도내 대학 및 관련 학과 현황	163
[표 3-60] 자동차 분야 충남 도내 대학, 연구 및 지역혁신기관 현황	164
[표 3-61] 자동차 분야 연구인력 현황	165
[표 3-62] 바이오 분야 충남 도내 대학 및 관련 학과 현황	166
[표 3-63] 바이오 식품 및 헬스케어 분야 충남 도내 혁신 자원 현황	168
[표 3-64] 바이오 분야 연구인력 현황	169
[표 3-65] 반도체 및 수소전지 분야 충남 도내 대학 학과 현황	169
[표 3-66] 충남 창업 육성 정책 주요 내용 (2022년 기준)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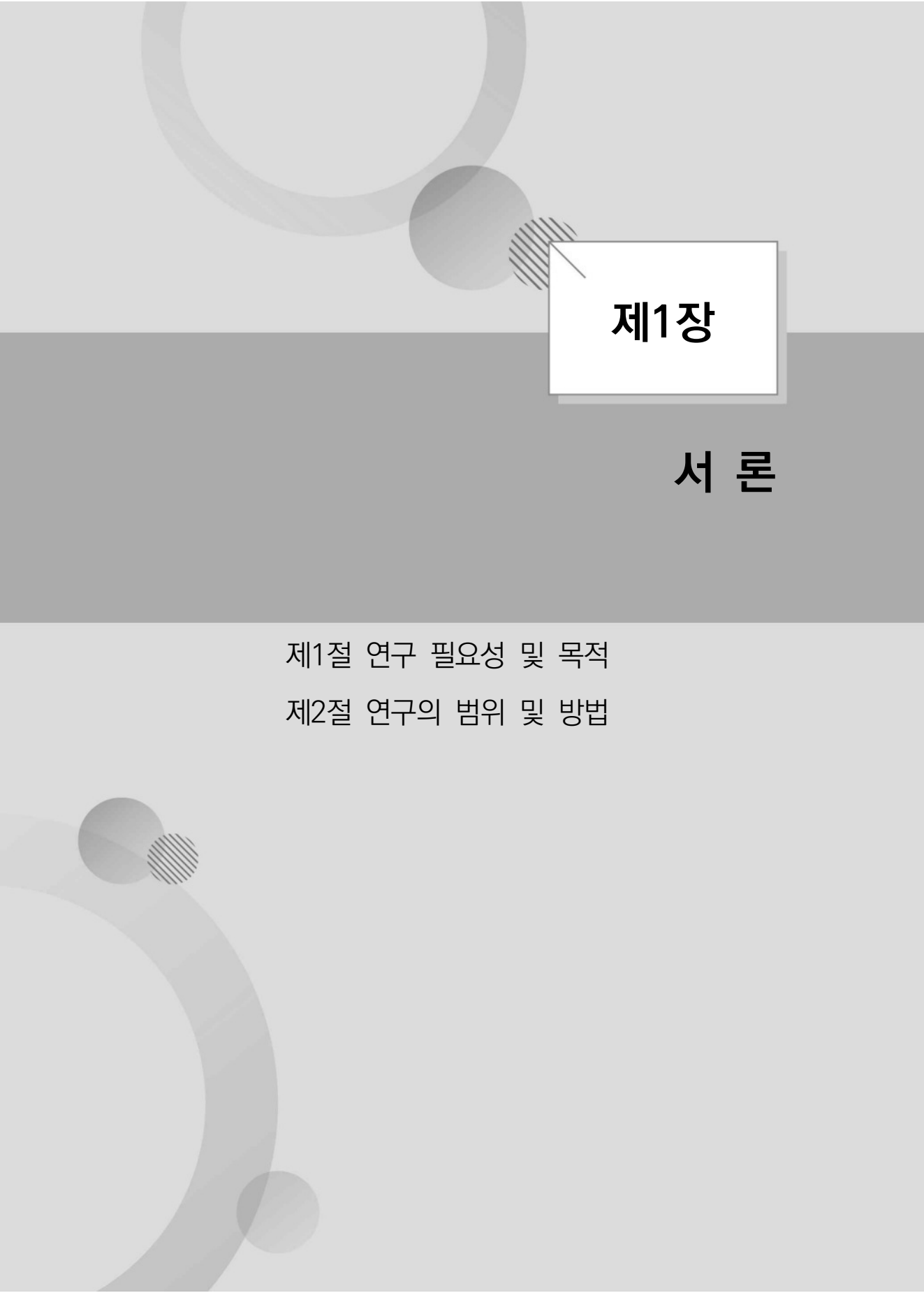
[표 3-67] 충남 대학 학생 창업 및 창업 지원 현황 (2022년 기준)	174
[표 3-68] 최근 3년 충남 대학 창업강좌 개설 대학 비율	175
[표 3-69] 최근 3년 충남 대학 창업강좌 수 및 이수학생 수	177
[표 3-70] 충남 대학 창업 교육 현황 (2022년 기준)	178
[표 3-71] 충남 도내 대학 창업교육 지원 현황 (2022년 기준)	179
[표 3-72] 충남 도내 대학 특성화 현황 (2021년 기준)	180
[표 3-73] 대학 대상 설문조사 주요 내용	182
[표 3-74] 대학 재정지원 관련 설문 응답자 특성	183
[표 3-75] 산학협력 관련 설문 응답자 특성	184
[표 3-76] 대학 재정지원사업별 만족도	185
[표 3-77] 대학 산학협력 유형별 만족도	191
[표 3-78] RISE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199
[표 3-79] RISE 성공적 운영을 위한 대학 역할	201
[표 3-80] RISE 성공적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안	203
[표 4-1] 충남-대학 연계 사업 후보군 예시	213
[표 4-2]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 중점 과제 주요 내용 구상(안)	216
[표 4-3] 중앙부처의 충남 도내 대학 지원 현황 (2021년 기준)	222
[표 4-4] RISE에 포함되는 주요 사업 예산 및 지방비 비율	225
[표 4-5] RISE에 포함되는 주요 사업 및 참여 충남 도내 대학	227
[표 4-6] 충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 가용 자원 현황 (2021년 기준) ..	228
[표 4-7] 지방재정 투자사업 개요	232
[표 4-8]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제도 개요	235
[표 4-9] 지방 주요 재정사업 평가지표	244
[표 4-10] 충남 고등교육 성과 평가 항목 및 배점	249
[표 4-11] 평가등급 부여방식	250
[표 4-12] RISE에 포함되는 기존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251
[표 4-13] 충남형 고등교육 기본계획 성과 목표별 성과지표 제시안	254
[표 5-1] 대학 대상 설문조사 주요 결과 요약	269

그림 목차

[그림 1-1] 지방자치단체별 20~30대 청년인구 비율 변화 추세	5
[그림 1-2] 학령인구 연령구조 추계: 2020~2070년 중위 연령 기준	6
[그림 1-3] 연구의 공간적 범위	9
[그림 2-1] 정부별 대학 재정지원 정책 변화	19
[그림 2-2] 역대 정부별 대학 재정지원 정책 변천 과정	23
[그림 2-3] 최근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핵심어	24
[그림 2-4] 고등교육 재정지원 재원별 구성 (2021년)	28
[그림 2-5] 지방자치단체별 대학 재정지원 현황 (2021년)	32
[그림 2-6] 지방자치단체 대학 재정지원 사업유형별 구성 (2021년)	33
[그림 2-7]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목적별 구성 (2021년)	33
[그림 2-8] RISE 비전도	36
[그림 2-9]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개편 방향	38
[그림 2-10] 기존 대학지원정책 추진 방식	41
[그림 2-11] RISE에서의 대학지원 정책 방식 변화	42
[그림 2-12] RISE 추진 체계	43
[그림 3-1] 충남 민선 8기 5대 목표별 역점 과제	55
[그림 3-2] 안서동 대학로 조성 구상도	68
[그림 3-3] 충남 시·군별 면적 현황	70
[그림 3-4] 충남 공간발전 구상도	71
[그림 3-5] 충남 시·군별 인구 현황	75
[그림 3-6] 충남 시·군별 인구 증가율 현황 (2010~2018년)	76
[그림 3-7] 충남 연령별·성별 인구 구조	77
[그림 3-8] 2040년 충남 시·군별 인구 전망	78
[그림 3-9] 2022년 기준 충남지역 청년 전출입 현황	81

[그림 3-10] 충남 청년의 전출 및 전입 사유 (2021년 기준)	85
[그림 3-11] 주요 지역 생애주기별 청년 이동 현황	86
[그림 3-12] 충남 수출 변화 추이 (2000~2022년)	87
[그림 3-13] 충남 산업별 총부가가치 비중 변화	89
[그림 3-14] 충남 지역내총생산 전국 대비 비중 및 성장률 추이	92
[그림 3-15] 2019년 기준 충남 15개 시군의 GRDP 비중	93
[그림 3-16]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 내 총소득 비중 (2020년 기준)	95
[그림 3-17] 전국 및 충남 지역의 순수취 본원소득 추세	97
[그림 3-18] 충남 시군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 현황	101
[그림 3-19]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중	102
[그림 3-20] 지역별 업종 분포 현황	106
[그림 3-21] 전국 빈일자리수 추세 ('18년~'22년)	111
[그림 3-22] 주요 지역 및 충남 빈일자리수 비교 (2022년)	112
[그림 3-23] 충남과 주변 지역 직주 실태	116
[그림 3-24]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대학재정지원 현황	130
[그림 3-25]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대학재정지원 현황 (경상운영비 제외) ..	131
[그림 3-26] 충남 시군별 대학과 대학생 수 분포 현황	140
[그림 3-27] 충남 청년 인구 이동 단계별 패턴 비교	146
[그림 3-28] 최근 3년간 충청권 대학 주문식 교육과정 참여학생 수	157
[그림 3-29] 디스플레이 분야 대학 및 지역혁신기관 분포	162
[그림 3-30] 자동차 분야 대학 및 지역혁신기관 분포	164
[그림 3-31] 바이오 식품 분야 대학 및 지역혁신기관 분포	167
[그림 3-32]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대학 및 지역혁신기관 분포	168
[그림 3-33] 충남 전체 기업 분포 및 창업 인프라 현황	170
[그림 3-34] 최근 3년 충청권 평균 창업강좌 수	176
[그림 3-35] 최근 3년 충청권 대학 창업강좌 이수학생 수	176
[그림 3-36] RISE 포함 사업 참여 여부 및 만족도	186
[그림 3-37]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 참여 여부 및 만족도	188

[그림 3-38] 대학지원정책 참여시 애로사항 및 RISE 추진에 따른 우려사항	190
[그림 3-39] 인력개발 분야 산학협력 경험 여부 및 만족도	192
[그림 3-40] 연구개발 분야 산학협력 경험 여부 및 만족도	194
[그림 3-41] 창업 분야 산학협력 경험 여부 및 만족도	195
[그림 3-42] 분야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산학협력 종류 (복수 응답)	196
[그림 3-43] RISE 추진에 대한 우려사항: 산학협력	197
[그림 4-1] 충남지역-대학 연계 방향성	209
[그림 4-2]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안)	210
[그림 4-3]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 핵심 분야별 중점 과제 도출(안)	215
[그림 4-4] 중앙부처 충남 도내 대학 지원 현황 (2021년)	221
[그림 4-5] 교육부 외 중앙부처 주요 대학재정지원 사업 현황 (2021년 기준)	228
[그림 4-6] 성과관리의 구성요소	233
[그림 4-7] 목표관리제의 추진 과정	236
[그림 4-8] 논리모델의 추진 과정	237
[그림 4-9] BSC의 기본구조	239
[그림 4-10]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단계별 추진 방안	245
[그림 4-11] LiFE 사업 선정 평가 방식	246
[그림 4-12] 충남형 RISE 성과평가 기본절차	248
[그림 5-1] 대학재정지원정책 및 RISE 추진에 따른 우려 사항	268
[그림 5-2] 충남 RISE 기본계획 체계(안)	27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1) 인구 감소 시대, 지역 대학 관련 지원 정책의 변화

- 최근, 우리나라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지역 대학의 존폐 위기와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혁신 역량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대학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대학의 존재 의의를 강조하고 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
 - 특히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의 핵심 자산인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 변화로부터 혁신이 시작될 수 있음(허선영, 장후은, 이종호, 2022)
-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 투자는 높은 반면에 고등교육에 지출되는 돈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표 1-1] OECD 대비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비교

기준연도	구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2019	한국	13,341	17,078	11,287
	OECD 평균	9,923	11,400	17,559
	OECD 평균 대비	134%	150%	64%

출처: OECD 교육지표 2022 결과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22.10.04.)에서 재인용

- '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평균에 비해 고등교육에 지출되는 공교육비 지출액이 약 6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최근 정부는 그동안 교육 분야 간의 투자 불균형을 시정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고등·평생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음
- 교육부(2021)는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인구유출을 막는 ‘댐’으로서의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 및 그 핵심 축으로서의 지방대 역할 재정립”을 강조한 바 있음(교육부, 2021. 02.28)
- 새로운 정부에서도 2022년 7월에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 중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명시함

85.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 과제 목표

-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하여 지역 위기 극복 및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
-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지속 개발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 강화

▶ 주요 내용

- (지자체 권한 강화)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 (지역인재 투자협약 제도) 중앙정부-지자체 협약 하에 지역 산업,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인재 육성
- (지역 거점대학(원) 육성) 지역 소재 연구중심대학 육성 추진 및 지역 우수연구자 양성, 국립대 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역할 강화
-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일터-대학 순환형 대학 평생교육으로 지역 밀착형 평생·직업교육 제공
-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기관 지정·운영('23년) 및 마이스터대 지원 확대

▶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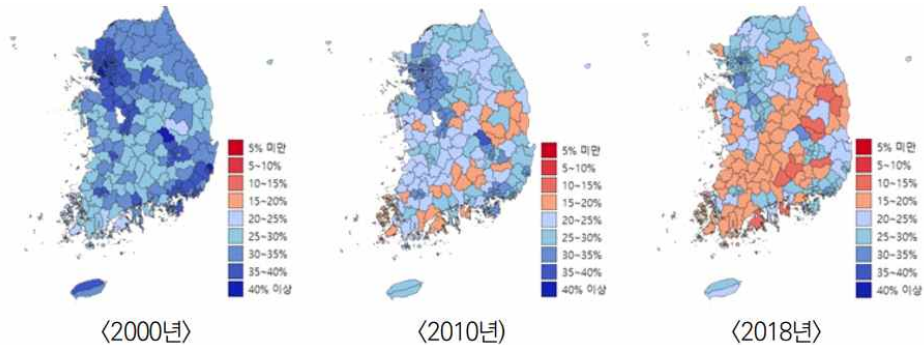
- 대학-지자체-산업 간 협력으로 지역위기 극복 및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
- 구직자·재직자의 구직 애로 완화 및 신기술 역량 강화

2)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 가속화

- 2019년 12월 기준으로 국토면적의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 인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함

- 비수도권의 인구비중은 2000년 53.7%에서 점차 감소하다가 2019년 수도권보다 1,737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박진경·김도형, 2020)

[그림 1-1] 지방자치단체별 20~30대 청년인구 비율 변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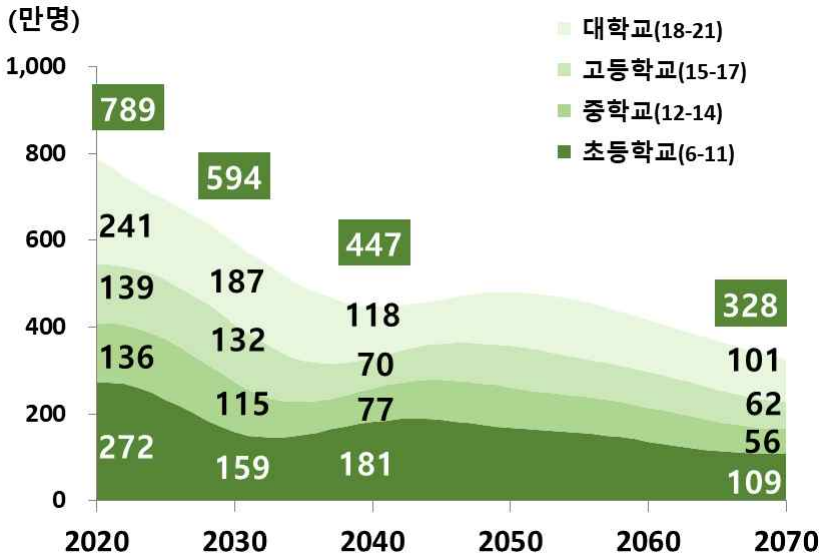
출처: 박진경·김도형(2020:29)

- 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음
 - 해당 지역의 핵심 인적자원에 해당하는 청년인구의 지역 이탈은 지역에서 중대한 위기로 인식되며(이상림, 2018) 이는 인구의 양적 감소뿐만 아니라 감소의 질적 구조 문제가 가중되고 있음을 나타냄

3)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대학 위기

-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특히 지방 대학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 유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6세 이상 21세 인구에 해당하는 학령 인구는 2020년 약 789만명에서 향후 10년 동안 195만명이 감소하여 2030년에는 약 594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2] 학령인구 연령구조 추계: 2020~2070년 중위 연령 기준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1:41)

- 연덕원(2021)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학 입학정원은 4만명 미달하였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4년 미충원 규모는 약 8만명으로 2배 가량으로 예상됨
- 2차 감소기가 시작되는 2032년부터는 감소 추세가 심화되어 2040년에는 대입 정원이 28만 3000여명으로 감소될 전망¹⁾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비수도권 대학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음
 - 시도별 대학 입학자 수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미충원의 대부분은 비수도권 지방 대학인 것으로 드러남

1) 충청투데이. 2022.04.03. 대학 미달 가속화... 2년뒤, 입학정원 8만명 못 채운다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357>

[표 1-2] 시도별 대학 입학자 수 변화 비교

시도	입학자 증감 현황		2020년		2010년	
	차이(A-B)	비율(%)	입학정원	입학자(A)	입학정원	입학자(B)
서울	732	0.9	72,666	84,818	74,562	84,086
부산	△4,181	-11.3	3,036	32,845	33,754	37,026
대구	△989	-8.5	9,822	10,670	10,638	11,659
인천	137	1.8	6,789	7,700	7,282	7,563
광주	△606	-3.9	13,825	15,000	14,524	15,606
대전	△1,252	-6.1	18,224	19,212	18,909	20,464
울산	△717	-17.9	3,092	3,294	3,750	4,011
세종	△346	-10.8	2,657	2,863	2,939	3,209
경기	△2,030	-4.7	37,475	41,251	38,908	43,281
강원	△2,505	-12.7	16,116	17,255	17,977	19,760
충북	△1,797	-9.4	16,125	17,325	17,852	19,122
충남	△5,394	-15.4	26,876	29,637	32,287	35,031
전북	△2,913	-14.7	15,258	16,864	18,416	19,777
전남	△1,690	-16.4	8,186	8,621	9,993	10,311
경북	△4,863	-15.6	25,146	26,320	29,210	31,183
경남	△2,757	-16.6	13,550	13,811	15,405	16,568
제주	△141	-5.4	2,450	2,462	2,604	2,603
합계	△31,312	-8.2	318,693	349,948	349,910	381,260
수도권	△1,161	-0.9	116,930	133,769	120,752	134,930
비수도권	△30,151	-12.2	201,763	216,179	228,258	246,330

출처: 종로학원하늘교육 (교육통계서비스 기반 자료 가공)²⁾

- 교육통계서비스 기반 자료를 가공한 종로학원하늘교육(2021)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0년의 입학자수 증감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으로 약 17.9%가 감소했으며 경남, 전남, 경북, 충남, 전북 순으로 나타났음

2) 충청헤럴드. 2021.05.16. 충남지역 대학들 최근 10년새 입학자수 5394명 줄어... “대학 위기 가속”
<http://www.ccherald.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1>

-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인재 집중 현상이 결합되어 지방대학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폐교 위기 대학이 증가하면서 결국 대학 소재지 지역의 경제 악화로도 연결됨
 - 학령인구 감소는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져 1) 지방 대학의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 → 2) 폐교 위기 대학 증가 → 3) 대학 소재지 지역 경제 악화 → 4) 인재 유출 등의 악순환 반복
 - 등록금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의 존폐 위기로 다가오고 이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위기로 직결됨

2. 연구의 주요 목적

- 고등교육 정책을 둘러싼 환경 및 정부 기조 변화에 따라 충청남도의 특성화 전략 및 발전계획을 반영한 고등교육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이 필수적인 시점임
 - 지역과 대학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예상되므로 지역-산업-학교 간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과 대학 간의 관계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에 따라 변화할 지역과 대학 간 관계에 대해 논의함
 - 둘째, 충청남도의 지역 및 산업 여건과 도내 대학 여건 등을 분석하여 지역과 대학 간 연계 방향성을 탐색하고
 - 셋째, 지역-산업-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충남형 고등교육 기본계획 수립의 바탕이 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 넷째, RISE 시행에 따라 재정투자계획 및 성과관리 방안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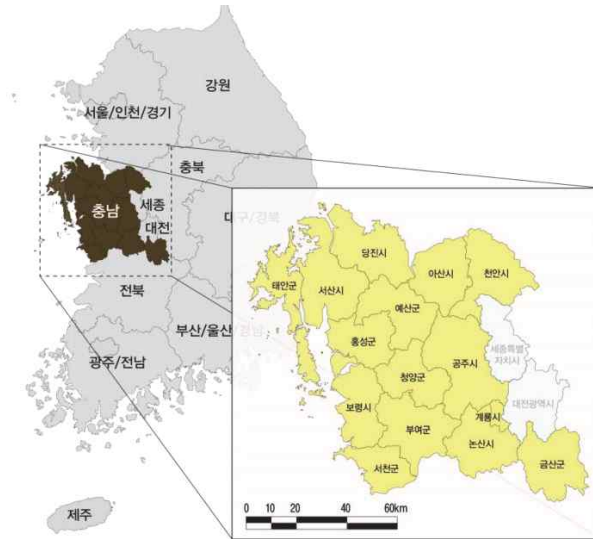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광역 단위의 충청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기초 단위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함

[그림 1-3] 연구의 공간적 범위



출처: 충남연구원(2021)

2) 시간적 범위

- 분석의 기준년도는 2023년으로 하되, 연구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는 목표년도는 고등교육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2025년부터 2029년으로 함
 - RISE는 2023년~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시행예정이고 2025년부터 5년까지 기본계획 작성을 하게 됨

- 충남의 여건 분석, 도내 대학의 현황분석을 위해 2010년도 중반 이후부터의 충남 활성화 산업 현황, 대학별 전문 분야 등을 살펴봄

3) 내용적 범위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도 내 위치한 고등교육기관 관련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의 고등교육 관련 정책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함
- 둘째, 지방자치단체-산업-학교 협력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양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 셋째, 충청남도의 특성화 전략과 발전 계획을 반영한 고등교육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충남 지역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고등교육 지원 정책 과제를 부문별로 제시하도록 함

2. 연구 방법

□ 지역-대학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선행연구 분석

- 정부와 고등교육기관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 RISE 체계에 대한 설명 및 이해
-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관계 재정립을 위한 현황 및 향후 변화 서술

□ 충남 지역 및 대학 여건 분석: 현황 및 실태 분석, 대학 대상 설문조사

- 충남 산업, 경제, 일자리 및 인구 여건 분석
 - 충남 주축 산업, 경제 현황, 일자리 및 인구 여건 등 관련 자료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지역 주요 현안 및 고등교육 지원 정책과의 연계성 도출
- 충남 대학 여건 분석
 - 충남 소재 대학 현황, 재학생 충원, 특허 및 강점 분야 등 여건 분석

○ 충남 지역-대학 연계 현황 분석

- 지역의 강점과 대학의 강점을 연계하여 '25년~'29년까지 재정투자할 핵심 분야 및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 마련, RISE 사업과의 정합성 제고

□ 충청남도 고등교육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협의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문헌 분석

○ 충청남도 RISE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비전, 목표, 핵심 전략 등 도출

- 전문가 협의회(Focus Group Interview), 문헌 조사 등을 통해 충남의 특성과 발전 전략이 반영된 지역 주도 대학지원사업의 비전, 목표, 핵심 전략 등 도출

○ 핵심 분야 선정 및 합리적 운영방안 도출

- 이해관계자(지자체, 기업, 대학 등) 대상으로 한 간담회, 대학 제출 자료 및 충남 내부 자료,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자료 등을 비교하여 충청남도 고등교육 기본계획 핵심 분야 선정 및 합리적 운영 방안 모색


○ RISE 시행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투자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제시

○ 성과관리 방안

- 핵심 분야별 성과 목표 및 지표 선정, 성과 분석 및 평가 방안 마련하여 성과 확산 및 환류 체계안 제시

[표 1-3] 연구 분석 체계

1. 서 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지역-대학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RIS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론적 논의: 정부와 대학 관계 2.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의 개요와 지역-대학 관계 재정립
3. 충청남도 지역·대학 여건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남 지역 발전 전략 분석 2. 충남 지역 여건 분석 3. 충남 대학 여건 분석
4. 충청남도 고등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구상(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남형 고등교육 기본계획(안) 2. 재정투자계획 관련 고려사항 3. 성과관리 방안
5. 연구 종합 및 시사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 결과 종합 2. 연구 시사점




제2장

지역-대학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RISE

제1절 이론적 논의: 정부와 대학 관계

제2절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의
개요와 지역-대학 관계 재정립



제1절

이론적 논의: 정부와 대학 관계

1. 한국 대학 재정지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기관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대학에 미치는 행정 및 재정적 영향력은 중앙부처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음
 - 이는 그동안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사무 관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없었기 때문임
- 원칙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사무 권한은 국가에 속해 있어 대학의 설립 및 운영,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및 정책 지원과 관리 등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임
 - 「고등교육법 제4조, 제5조, 제7조의2」 등에 따르면 대학의 설립 및 폐지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교육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함
 - 「고등교육법 제 8조」에 따르면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해 실험실습비·연구지원비·장학금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 「지방대학 및 지방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 1항 및 제2항 제6호」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됨
-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더불어 고등교육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고등교육법 제7조, 제 9조」 등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상호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함
 - 「지방대학 및 지방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책무를 다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는 등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방대학 및 지방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특성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5년 단위로 하는 시·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뉴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 지역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양성, 과학 기술 진흥,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함

【표 2-1】 국가 및 지자체 고등교육기관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구분	국가(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단체장)
대학 설립 및 폐지	고등교육법 제4조	-
대학 지도·감독	고등교육법 제5조	-
교육 재정 지원 및 보조	고등교육법 제7조	고등교육법 제7조
재정지원 계획 수립 및 협의·조정	고등교육법 제7조의 2	-
실험실습비 등 지급	고등교육법 제8조	-
대학 간 상호 협조 지원	고등교육법 제9조	고등교육법 제9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지방대학 및 지방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 3조	지방대학 및 지방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 3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지방대학 및 지방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 5조	-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	-	지방대학 및 지방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 6조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포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 제2항 제6호	-
시·도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 양성 등 포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 제2항 제3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 이상의 법적 근거 등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 내에는 교육부 사업으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학교 기업 지원 사업,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등 다양한 대학 관련 사업이 포함됨

2. 대학 재정 지원 정책 현황

1) 역대 정부별 대학 재정지원 정책 변화

□ 대학 재정지원 정책의 의의

- 대학 재정은 대학 교육의 질을 결정하고 대학 운영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투입 요소 중의 하나로 대학 재정지원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방식은 대학 교육의 효과성, 자원 활용의 효율성, 대학의 운영 행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제라고 볼 수 있음(윤정일, 2004:459)
- 따라서 역대 대학재정지원 방식의 양상과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지방 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의 협력 체계 구성 설계에 의의를 가짐

□ 기존 대학 재정지원 정책 기조

- 지금과 달리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고등교육의 설립자 부담원칙과 수익자부담원칙을 이유로 대학 재정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았음
 - 이런 이유로 1990년대 초반에는 대학 재정지원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았고 외부 평가에 의한 차등 지원의 개념이 없어(송기창, 2000)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관심이 적은 편이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문민정부 하에서 대학에 대한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재정 지원 방식에도 변화가 생김
 - 이른바 ‘교육재정 GNP 5% 확보정책’ 기조에 따라 교육예산이 대폭 증가하면서(송기창, 2015) 대학 지원예산도 증가하게 되었고 평가에 기반한 재정 지원방식이 도입됨
 - 정부는 대학의 특성화 및 다양화 지원과 촉진을 통해 대학의 질적 수준 제고를 목표로 삼게 됨(송기창, 2000)
 - 특히 5.31 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평가와 연계된 대학재정지원사업들이 시행 되었음(예를 들어 지방대학 특성화지원, 교육개역추진 우수 대학지원, 국제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송기창, 2000, 문보은 외, 2021)
 - 평가에 기반한 대학 재정지원 정책은 대학 간 경쟁 유발, 대학의 특성화 도모,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 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대 등을 목표로 하였음(나민주, 2002; 이정미 외, 2010)

[그림 2-1] 정부별 대학 재정지원 정책 변화



자료: 선행연구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이 시기 대학 재정지원 정책의 또 다른 큰 변화 중 하나는 일반지원사업의 폐지를 들 수 있음(문보은 외, 2021)
 - 2002년에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균등하게 지원되던 공·사립대 시설 및 설비 확충 지원사업이 종료
 - 2004년부터 대학특성화 기반조성 지원 사업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누리사업)과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전환
 - 2008년 들어 국립대학 대상 일반지원사업인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지원사업이 국립대학 기반조성사업에 통합되면서 되면서 사실상 일반지원 사업은 폐지되었음(송기창, 2010)
- 요약하면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큰 변화는 첫째, 평가에 기반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의 변모와 둘째, 일반재정지원사업의 폐지를 들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수주는 단순히 정부로부터 국고를 지원받는 것 이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되었다는 의미를 가짐(송기창, 2010: 331-332)
 - 이와 더불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양적 규모가 확대되고 종류가 다양해지고 사업 수가 많아졌음

□ 정부별 대학재정 지원 정책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대체적으로 대학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재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대학의 구조개혁 및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대학 대상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을 평가하는 지표나 평가 체제, 활용 범위도 정부별로 개선되어왔으며, 고등교육 수행의 목적을 고려한 교육 활동의 반영,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 확보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주목도 확인할 수 있음

[표 2-2] 정부별 고등교육재정지원 주요 특징

구분	주요 특징	주요 정책 내용
노무현 정부 (‘03~‘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기반 차등·선별지원 강화 및 대학경쟁력 제고 •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교육·연구, 자율성·책무성 강화와 더불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 지원 강화 - 사업 및 학생단위 지원 비중 및 규모 확대 - 경쟁 및 평가를 통한 재정 지원 방식과 사업계획 수립의 자율성 존중으로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도모 - 지방대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문제 해결 도모 - 지방대 등 대학특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 재정지원사업 신청 시 대응자금 요건 완화 및 폐지
이명박 정부 (‘0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연구자 중심 및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 포물려 펀딩 방식을 활용한 재정 지원 • 재정지원사업과 대학 구조개혁 간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대학 단위에서 교수·연구자 중심의 사업으로 재편 - 연구역량 중심에서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지원 - 사업 도입 및 기존 사업 통폐합(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 대학의 여건과 성과를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정량적 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대학 평가 및 재정 지원 우선순위 결정 - 교육여건 및 성과 지표 기반 대학 평가 실시 결과를 구조개혁과 적극 연계: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수혜 제한, 학생 학자금 대출 제한 및 보건·의료·사범 계열 등의 정원 증원 배제 등
박근혜 정부 (‘1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구조개혁 평가 지표 개선 및 평가 기능과 활용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표 확대: 대학정보공시 정량지표 외에 대학의 교육활동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반영 - 평가주기의 확대: 평가자료 기준 시점을 당해 연도 평가에서 3년으로 설정함으로써 대학의 지속적인 질 관리 강조 - 평가등급의 확대: 대학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전국 일반대 및 전문대를 A~E까지 총 5개 등급으로 세분화 - 평가활용범위 확대: 평가등급별 정원 감축과 정부재정지원제한 범위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제시

구분	주요 특징	주요 정책 내용
문재인 정부 (1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사업의 재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자율성 저해와 소모적 경쟁을 유발하는 정부 중심의 하향식 재정지원사업에서 일정 수준 대학을 기준으로 대학별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거한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사업의 단순화·재구조화와 동시에 고등교육 혁신 관련 사업 신설 - 교육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 양성, 대학 간 교육과정 및 인프라 공유 등을 기반으로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 기반 재정 지원

출처: 원세림·남수경·이희숙(2022:65)

○ 역대 정부별 대학 재정지원 정책 변천 과정을 간략히 나타내면 [표 2-2]와 [그림 2-5]와 같음

- 기존에는 국립대 육성, 특성화, 사회수요, 산학협력, 연구역량 강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재정지원 사업들이 진행되었음
-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연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BK 사업이 주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었음
- 노무현 정부 들어 평가 기반 차등 및 선별 지원이 강화되었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대학 특성화 사업이 도입되었음
- 이명박 정부 시기 기존의 기관이나 대학 단위를 대상으로 지원되던 방식에서 교수 및 연구자 중심의 사업으로 재편되었고, 포물러 펀딩 방식을 활용한 재정 지원 방식이 도입되었음
- 박근혜 정부 시절 대학구조개혁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평가 기능과 활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립대 육성 사업, 특성화 사업, 학부교육선도 대학 육성 사업,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대학 사업 등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 등이 전개됨
-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재구조화 하였고 고등교육 혁신 사업을 신설함
- 2019년 대학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국립대 육성,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서 대학 및 전문대 혁신지원사업,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서 산학 협력과 연구지원 사업 등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변모함

○ 2019년 이후 최근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핵심어(keyword)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2-3]과 같음

- 2021년 5월 교육부 정책 비전에 ‘지역’이 포함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대학의 자율 혁신, 공유 및 협력, 포용 사회 및 미래 교육 등이 핵심어로 등장하였음
- 2019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컨소시엄이나 플랫폼 등을 구축하여 공동으로 대학 사업을 진행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음
- 2023년 2월 들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이 교육부의 정책 목적이 되면서 지역 주도 대학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비전으로 내세우게 된 것을 확인 가능함

[그림 2-2] 역대 정부별 대학 재정지원 정책 변천 과정

목적	사업명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약어)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9~	
국립대육성	국립대학 혁신 (PoINT)																PoINT '14~'17년								[국립대 육성]
특성화	대학특성화 (CK)																CK(수도권, 지방대) '14~'18년								[일반재정지원] 대학혁신지원 I유형: 자율협약형 II유형: 역량강화형
	지방대학혁신 역량강화 (NURI)						지방대 NURI '04~'08년																		
	수도권대학특 성화(NURI)						수도권 NURI '04~'08년																		
사회수요	학부교육선도 대학 육성 (ACE)																ACE '14~'18년				ACE+ '17~'20년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도대학 (PRIME)																	PRIME '16~'18년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																	CORE '16~'18년							
	여성공학인재 양성(WE- UP)																								
산학협력	산학협력 선도 대학 육성 (LINC)															LINC 1 '12~'13년	LINC 2 '14~'16년				LINC + '17~'22년				[특수목적지원] 산학협력 (LINC+)
연구역량 강화	BK	BK 1 '99~'06년								BK 2 '06~'13년						BK3 '13~'20년						[특수목적지원] 연구지원 (BK21+)			

출처: 남수경 (2023:18), 문보은 외(2021), 교육부(2018.03) 참고

[그림 2-3] 최근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핵심어

	(2019. 8. 6.)	(2020. 9. 9.)	(2021. 1. 26.)	(2021. 5. 20.)	(2023. 02. 01.)
교육부 정책	교육부 대학혁신 지원방안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2021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비전	대학의 지을 혁신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공유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생태계 조성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 내일을 열어나가는 미래교육	지역과 함께 ,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	지역 주도 의 대학지원 패러다임으로 대전환
학사 유연화 (특성화, 적정 규모화)	규제 혁신 (학사제도 유연화, 융합교육) 대학 체제 혁신, 특성화, 자발적 퇴로 평가제도 개선(역량진단)	규제 혁신 (온 오프 융합 / 융합교육과정/대학 간 공유)	선제적 법, 제도 정비 (학술 진흥 관련 / 융합 학과) 적정규모화, 질적 혁신	규제 혁신 (학사 운영 포함) 적정규모화, 정원조정 유연화 구조개혁 및 대학 퇴출 고등교육 재정 확충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규제 특례) 담대한 혁신 (글로벌대학30 사업 운영)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3~25)
지역 공유, 협력		대학 간 공유 협력 (교육과정, 연구/학술 등) 디지털 역량, 원격수업 내실화, 콘텐츠 공유	원격수업 내실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및 공동학과	대학간개방·공유 협력 (K-MOOC) 공동교육혁신체제 (연합대학 등)	사도 대학지원 전담조직 기반 중앙부처, 지자체 재정지원 총괄 지역단위 정책 매뉴얼 운영 (지역재생-대학-일자리)
신산업 인력 양성	4차산업혁명분야 신산업인재양성 전문대학 혁신평생교육(직업 고등교육 기관) 지역인재 양성 교육과정 해외진출/유학생	디지털, 신산업 분야 산업맞춤형 인재 양성 재직자 후학습 지원 지역사회 기반 직업교육모델 고등교육 국제화	신기술분야 인재 양성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K-MOOC, 마이스터대학, 직업계고, 고졸취업 활성화) 미래교육 선도/국제화	첨단분야 인재 양성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 지원 (일반대, 전문대/ 마이스터대/지역연계)	5대 핵심분야 특화인재 양성 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 조성 (초·중·고교 협력육성) 연구인력 유입·육성 활성화 고숙련 실무 기술인재양성 평생직업교육훈련 내실화
협업 플랫폼	신학협력 클러스터(대학 캠퍼스 재구조화) 지자체-대학 컨소시엄 플랫폼	지역혁신플랫폼/지역공유대학	정책 추진 거버넌스 구축 지역 협업체계 구축 (지자체-대학)		지역주도 대학지원 추진체계 구축 (RISE센터 신설)

출처: 남수경 (2023:21)

○ 현재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크게 국립대 육성, 대학 혁신 역량 제고, 산학협력, 연구 혁신 지원 등으로 나뉘볼 수 있으며(오세희 외, 2021) 진행 상황은 [표 2-3]에 정리함

- 이 중 RISE에 포함되는 5개 사업은 밑줄을 쳐서 구분하였음
- RISE에 포함되는 5개 사업 외에도 국립대 육성 사업, 대학 혁신 지원사업 중 일반재정지원 사업 및 부처 협업형 인재 양성,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 탐색 지원사업, 4단계 BK21사업 등의 재정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임

[표 2-3] 주요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개괄

목적	사업명	사업 개요	
국립대 육성	국립대학육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전국 국립대 37개교 • (사업기간) 23.03.01~24.02.29 • (사업규모) 4,580 억원 • (지원내용) 국립대학별 자율혁신 추진 지원 	
대학 혁신 역량 제고	대학혁신 지원사업	[일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2022~2024년 • (사업유형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재정지원): 8.57억원 -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1,052.84억원 - (지방대학 활성화): 1,900억원 	[전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2022~2025년 • (사업유형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재정지원): 5,620억원 - (지방대학 활성화): 600억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 사업 (R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2020년~ • (사업예산) 2022년 국고 2,440억원 (사업관리비 12억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 지원) 단일형 국고 300억원 내외, 지방비 129억원 내외 / 복수형 국고 480억원 내외, 지방비 206억원 내외 - (신규 선정) 단일형 국고 300억원 내외, 지방비 129억원 내외 / 복수형 국고 400억원 내외, 지방비 172억원 내외 • (사업내용)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1)플랫폼을 구축하여 (2)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분야를 선정, (3)지역 내 대학 등이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a)교육체계를 개편하고, (b)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 	
산학협력 및 취·창업 혁신지원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일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2022~2027년 • (사업 유형 및 지원 규모) 	[전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2022~2027년 • (사업 유형 및 지원 규모)

목적	사업명	사업 개요	
	육성사업 (LINC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1) 기술혁신선도형: 13교 (교당 5,500백만원 내외) - (유형2) 수요맞춤성장형: 53교 (교당 4,000백만원 내외) - (유형3) 협력기반구축형: 10교 (교당 2,000백만원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1) 수요맞춤성장형: 44교 (교당 2,000백만원 내외) - (유형2) 협력기반구축형: 15교 (교당 1,100백만원 내외)
		• (총 사업규모) 4,070억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2021년~2026년 • (사업예산) 1,443억원 (12개 분야, 70개교 내외)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주도형)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차세대(시스템/지능형) 반도체, ④ 미래자동차 ⑤ 바이오헬스(맞춤형 헬스케어 포함), ⑥ 실감미디어(콘텐츠)(AR/VR 포함) ⑦ 지능형 로봇, ⑧ 에너지 신산업 (신재생 에너지) - (지자체 참여형) ① 항공·드론, ② 반도체 소·부·장, ③ 이차전지, ④ 차세대통신, ⑤ 예코업(業)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기술창업탐색팀 • (지원내용) 기술창업 탐색활동과 관련된 제반활동 지원(국내교육, 해외 교육,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모델 설계, 멘토링 등) • (지원규모) 37억원 (40개 내외 기술창업탐색팀) 	
연구혁신 지원	4단계 BK21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2020.09.01.~2027.08.31. • (사업규모) 연간 약 2,700억원 (총 1조 9천억원) • (사업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인재양성사업: 기초 및 핵심 학문분야 연구역량 제고 - 혁신인재양성사업: 혁신 성장 선도 신산업 및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연구인력 양성 - 대학원혁신 	
고등교육 다변화 지원	대학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 (LiFE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2023~2025년 • (사업예산) 2023년 51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체제 구축형) 20개교 내외 교당 10억원 내외, 200억원 - (평생교육체제 고도화형) 20개교 내외 교당 10억원 내외, 200억원 - (광역지자체 연계형) 5개 컨소시엄, 컨소시엄당 20억 내외, 100억원 	
기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H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2022~2025년 • (사업규모) 컨소시엄당 전체 사업비 연 20억원 내외, 국고 900억원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유형)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 (2유형) 직업전환교육기관(DX-Academy) 지정·운영 시범사업 	

목적	사업명	사업 개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2019~2023년 • (사업예산) 2022년 총 50억원 • (사업내용) 지역발전의 핵심주체인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 컨소시엄 구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달성(30%) 및 관련 산업 분야 취업지원을 위해 우수지역인재 공동양성 협력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2021~2024년 • (사업내용) 지역 신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혁신으로 전문대학 신산업분야 인재양성, 각 대학별 특화 신산업분야 설정 및 교육과정 혁신 등을 통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신산업 기술인재 양성 • ('23년 사업비) 총 142억원(사업비 140억원*, 사업관리비 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단 120억원(12개교), 신규 사업단 20억원(2개교) - 교당 10억원 내외 (기존 대학의 경우 연차평가를 통해 사업비 차등 지원)

출처: 교육부(2021.10³⁾), 대학재정지원사업 통합포털⁴⁾ 등 참고

주: 2023년 5월 기준이며, 밑줄 친 사업의 경우 RISE에 포함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임

2)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학 재정 지원 현황 분석

(1) 대학 재정 지원 개괄

□ RISE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관계 재정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등교육 기관에 누가, 얼마나, 어떻게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고등교육 재정 지원 규모는 약 16조 2,563억원임⁵⁾

- 중앙정부 지원액은 약 15조 5,967억 원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대부분 (약 96%)이 중앙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짐
- 중앙정부 지원액 중 교육부 지원액은 약 10조 8,988억 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부를 제외한 타부처는 약 4조 6,979억 원으로 약 28.9% 수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약 6,596억 원으로 4.1%로 구성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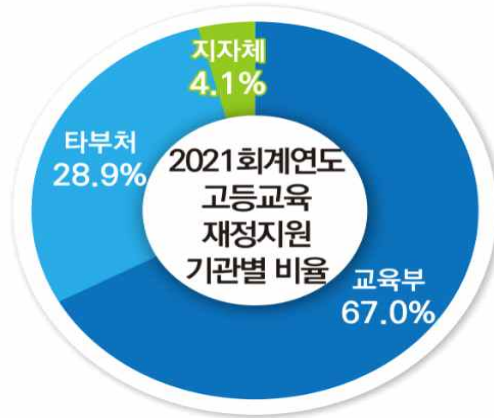
3) 교육부(2021.10). 2022년 고등교육 재정 지원 계획(안).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37&lev=0&statusYN=W&s=moe&m=0303&opType=N&boardSeq=89883>

4) 대학재정지원사업 통합포털 <https://uniall.nrf.re.kr/>, 대학 재정지원사업 통합 포털 플랫폼 <https://nrf.re.kr/univsupport>

5)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재정알리미 상 가장 최근년도 자료가 2021년임

[그림 2-4] 고등교육 재정지원 재원별 구성 (2021년)



출처: 대학재정알리미(2022)

[표 2-4] 고등교육 재정지원 재원별 현황 (2021년)

(단위: 개, 억원, %)

구분	중앙정부			지자체 ⁷⁾	계
	교육부	교육부 외	소계		
사업수	110	895	1,005	2,039	3,044
지원액	108,988	46,979	155,967	6,596	162,563
지원액 비중	67.04	28.90	95.94	4.06	100.00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2022:11)⁸⁾

(2) 지방자치단체 대학 재정 지원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재정 지원 현황

- 대학알리미에서 구독할 수 있는 최신 자료인 '21년도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재정 현황을 살펴봄⁹⁾

6)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7)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을 합산한 값임

8) 한국사학진흥재단(2022) '2021년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분석 보고서'

http://ebook.kasfo.or.kr/new/html/kfpp/book_view.html?UserDumy=kfpp&gid=170918092601428&sid=03&bid=230104134048521

- '21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에 약 6,596억원을 지원하고 있음¹⁰⁾
-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대학 당 평균 지원액은 약 15.8억원이며, 지자체별로는 인천, 울산, 전남, 경남, 강원, 충남 순으로 높은 편임

[표 2-5] 지방자치단체별 대학 재정지원 사업 지원금액 및 비율 (2021년)

(단위: 천원, %, 개)

지자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지원액	지원비율	대학수	대학당 지원액
1 서울	104,662,658	15.9	83	1,260,995.88
2 전남	67,146,854	10.2	19	3,534,044.95
3 경기	60,804,512	9.2	79	769,677.37
4 경남	60,557,645	9.2	20	3,027,882.25
5 충남	57,610,858	8.7	24	2,400,452.42
6 인천	52,680,893	8.0	9	5,853,432.56
7 강원	43,364,603	6.6	18	2,409,144.61
8 경북	36,625,390	5.6	37	989,875.41
9 충북	34,474,057	5.2	18	1,915,225.39
10 대전	30,017,345	4.6	19	1,579,860.26
11 전북	26,111,994	4.0	20	1,305,599.70
12 울산	23,931,676	3.6	5	4,786,335.20
13 광주	19,182,395	2.9	18	1,065,688.61
14 대구	15,644,059	2.4	12	1,303,671.58
15 부산	14,513,586	2.2	24	604,732.75
16 제주	9,464,576	1.4	4	2,366,144.00
17 세종	2,848,274	0.4	4	712,068.50
합계	659,641,375	100.0	416	1,585,676.38

출처: 대학재정알리미

주: 1) 공시대학 실 지원 금액 기준으로, 일반지원사업 외에 국·공립대학 경상운영비 지원 사업, 학자금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함

2) 대학수는 본교 및 분교를 포함하고 캠퍼스는 제외

9) '22년도부터 대학 재정 지원 현황 정보가 공시되지 않음

10) 대학수는 본교 및 분교를 포함하며 지원액은 중앙부처 지원액과 마찬가지로 공시대학 실 지원 금액 기준으로, 일반지원사업 외에 국·공립대학 경상운영비 지원 사업, 학자금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함

- 우리나라는 일반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지원 현황 통계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모두 포함됨
- 이를 지역별로 나누어 대학 재정지원 사업수와 지원액, 지원액 비율 등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 2-6]와 같음

[표 2-6] 지방자치단체 대학 재정 지원 현황 (2021년)

(단위: 개, 억원, %)

구분	소재지	사업수	지원액	지원액 비율
지방자치단체	서울	86	960	14.55
	전남	145	663	10.05
	경기	197	591	8.96
	경남	128	581	8.81
	충남	167	556	8.43
	인천	47	508	7.70
	강원	163	421	6.38
	경북	199	346	5.25
	충북	134	323	4.90
	대전	74	286	4.34
	전북	87	252	3.82
	울산	69	234	3.55
	광주	65	191	2.90
	대구	65	130	1.97
	부산	74	114	1.73
	제주	60	89	1.35
	세종	15	26	0.39
지방자치단체 소계		1,775	6,271	95.07
시·도교육청	서울	18	87	1.32
	전남	5	8	0.12
	경기	3	17	0.26

구분	소재지	사업수	지원액	지원액 비율
	경남	9	25	0.38
	충남	17	20	0.30
	인천	25	18	0.27
	강원	22	12	0.18
	경북	14	20	0.30
	충북	50	22	0.33
	대전	19	15	0.23
	전북	13	9	0.14
	울산	18	5	0.08
	광주	5	1	0.02
	대구	15	27	0.41
	부산	17	31	0.47
	제주	8	5	0.08
	세종	6	3	0.05
시도교육청 소계		264	325	4.93
총계		2,039	6,596	100.00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2022:74)

- 대학 재정지원 현황을 지방자치단체별 비중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1년 서울이 약 1,046억 원을 지원하여 약 1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 경기, 경남, 충남 등의 순으로 많음

[그림 2-5] 지방자치단체별 대학 재정지원 현황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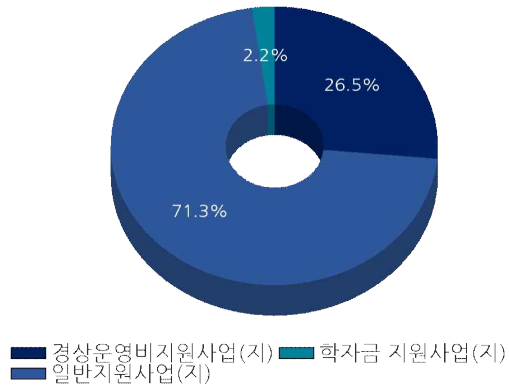
출처: 대학재정알리미

주: 1)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함

2) 기타는 전북, 울산,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세종을 합산함

- (사업 유형별 현황) 지자체의 대학 재정지원 구성을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재정지원액의 약 71%가 일반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공립 대학의 경상운영비 지원사업은 약 26.5%, 그 외 학자금 지원 사업은 2.2%로 구성됨

[그림 2-6] 지방자치단체 대학 재정지원 사업유형별 구성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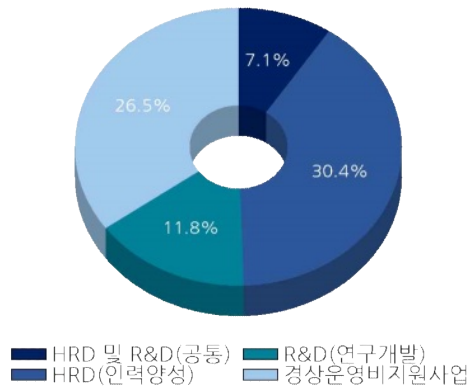


출처: 대학재정알리미

○ (사업 목적별 현황)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을 사업 목적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인력양성, 경상운영비 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과 연구 개발 공통 부문 지원 순으로 대학에 지원하고 있음

[그림 2-7]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목적별 구성 (2021년)

출처: 대학재정알리미¹¹⁾

주: 기타 항목이 약 24.2%이나 그림 상으로 나타나지 않음에 주의

11) <https://uniarlimi.kasfo.or.kr/statistics/highEducation/localOffice> (검색일 기준: 2023.05.10.)

【표 2-7】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목적별 지원금액 및 비율 (2021년)

(단위: 천원, %)

구분	지원금액	비율
HRD(인력양성)	200,446,583	30.4
R&D(연구개발)	77,917,800	11.8
HRD 및 R&D(공통)	46,896,341	7.1
경상운영비 지원	174,892,320	26.5
기타	159,488,331	24.2
합계	659,641,375	100.0

출처: 대학재정알리미¹²⁾

(3)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비교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금액과 구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총액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액 약 6,596억원은 중앙부처의 재정지원액인 15조의 약 4.2%에 해당하는 금액임
- (사업 유형 구성 비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일반지원사업 유형,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학자금 지원 사업 순으로 대학을 지원하고 있으나 금액과 비중에 큰 차이가 있음

【표 2-8】 중앙-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사업 유형별 재정지원 비교 (2021년)

(단위: 억원, %)

구분	일반지원사업	학자금 지원사업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금액 합계
중앙정부	69,844 (44.8)	40,180 (25.8)	45,943 (29.5)	155,967
지방자치단체	4,703 (71.3)	145 (2.2)	1,749 (26.5)	6,596

출처: 대학재정알리미

12) <https://uniarlimi.kasfo.or.kr/statistics/highEducation/localOffice> (검색일 기준: 2023.05.10.)

- (사업 목적 구성 비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인력양성을 주 목적으로 대학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선순위가 다른 것으로 보임
- 중앙은 인력양성-경상운영비 지원-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기타 순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인력양성-경상운영비 지원-기타-연구개발-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순으로 대학을 지원하고 있음

[표 2-9] 중앙-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사업 목적별 재정지원 비교 (2021년)

구분	지원금액(천원)		비율(%)	
	중앙	지자체	중앙	지자체
HRD(인력양성)	6,010,362,393	200,446,583	38.5	30.4
R&D(연구개발)	3,413,423,150	77,917,800	21.9	11.8
HRD 및 R&D(공통)	1,436,752,951	46,896,341	9.2	7.1
경상운영비 지원	4,594,260,319	174,892,320	29.5	26.5
기타	141,866,510	159,488,331	0.9	24.2
합계	15,596,665,323	659,641,375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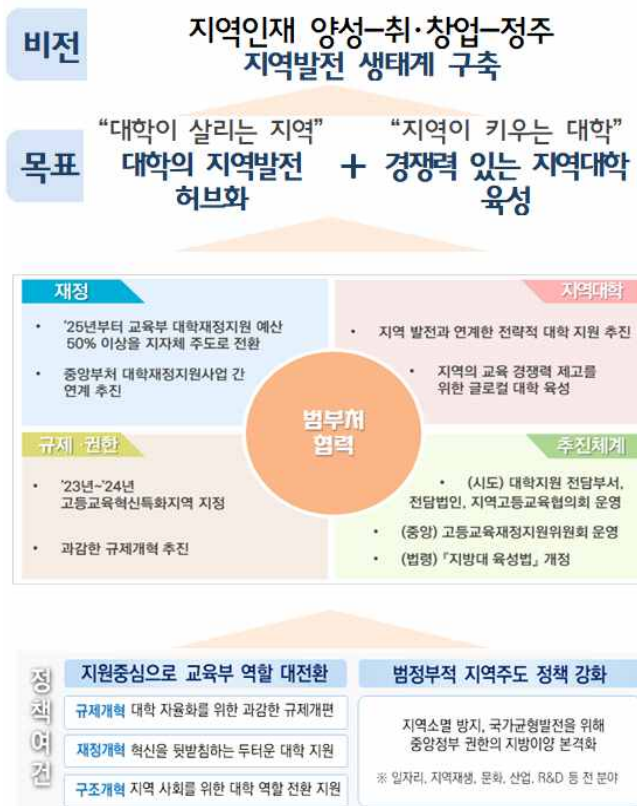
출처: 대학재정알리미

제2절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의 개요와 지역-대학 관계 재정립

1.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의 개념

-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는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약자로 대학 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의미함

[그림 2-8] RISE 비전도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3.02.01.)

-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에서 전담하던 대학 재정지원 예산과 기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임
 - 따라서 고등교육기관 관련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
 - 이는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지역주도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인함
 - 즉, 일자리, 지역 산업 및 문화, 지역 재생, 연구 개발(R&D) 등 전 분야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게 됨

□ 지역혁신중심대학운영체계(RISE)는 큰 틀에서 보면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에서 고등교육 분야를 핵심으로 하는 체제를 의미

- 지역혁신체계(RIS)는 국가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를 지역 차원으로 적용시킨 개념임
 - 지역혁신체계란 지역 혁신의 주체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간의 상호작용, 학습 및 협력 과정을 통해 지역 내 기술 혁신, 역량 강화, 혁신 성장 등을 달성하는 것을 뜻함(강현수, 2006)

2.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의 주요 특징

□ RISE가 기존 대학 재정지원정책과 구별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가장 두드러지게 교육부가 주관하던 대학 재정지원 예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전환한다는 특징을 가짐
- 이를 위해 '23년부터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개편하여 약 9.74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7.2조원 중 1.5조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이관, 이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함

- 여기에 더하여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0.2조원이 지원되며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고등·평생교육분야 사업 중 8.02조원 수준의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됨

[그림 2-9]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개편 방향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3.02.01.)

□ 기존에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이 존재하였으며 비교를 통해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을 권한과 예산, 역할 등을 살펴볼 수 있음

- RIS는 교육부 주도 하의 대학 재정 지원 정책 내 하나의 사업인 반면, RISE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산업체 등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가짐
- RIS는 대학이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사업비 매칭을 하였다면, RISE는 지역 산업과 여건을 고려한 5년 단위 대학지원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수립하여 재정 지원을 한다는 차이가 있음
- 재원 집행에 있어서도 기존 RIS는 대학 소속 운영센터가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인데 반해, RISE는 지자체 산하 비영리법인이 집행하는 차이를 보임
- 기존 RIS 사업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교육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RISE는 지자체가 수립한 5개년 RISE 계획을 토대로 교육부와 협약을 맺어 별도의 공모 평가가 없음

[표 2-10] 기존 RIS와 RISE 비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RIS)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대육성법」 제21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대육성법」 제21조제1항 ※ 시범지역 운영 이후 전 지역 확대를 위한 「지방대육성법」 개정 추진 예정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대학 협력을 통해 지역 핵심 분야에 기반한 대학혁신·지역혁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의 주도 하에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재정지원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주도) 광역지자체, 기업 등 지역혁신주체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지자체(주도) 대학, 기초지자체, 기업 등 협력 및 참여
지자체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분야 선정 협력, 사업비 매칭, 사업공동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총괄(사업기획), 자체 성과평가 ※ RISE센터를 통한 예산배분, 집행, 선정, 관리
지역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지자체 단일형 또는 복수형(초광역권의 플랫폼) 구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지자체(시·도)
사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이 선정한 소수 핵심 분야 예) (충북) 제약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대구·경북) 전자정보기기, 미래차 전환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연계 가능 분야에 대해 지역 산업 및 여건 고려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예) 산학협력, 대학평생교육, 직업교육, 지역혁신, 취·창업 등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3+2년) 매년 예산 심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단위 RISE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필요시 협약 변경 가능) RISE계획에 대한 예산 심의
재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원 지원 규모 고정 (예) 단일형 국고 300억원 복수형 국고 48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RISE 통합 예산에 대한 지역별 기준액 산정 (관계부처 협의 및 정책연구) 지자체 재원, 타부처 재원 등을 활용한 연계 지원
재원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자체) 자체재원(총사업비 3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 RISE 통합 예산 (지자체) 자체재원 등
재원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괄대학 소속 총괄운영센터가 사업비(국비+지방비)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산하 비영리 법인이 사업비(국비+지방비) 집행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RIS)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절차	• 공모 선정 평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재정 지원	• 지자체가 마련한 RISE 계획안에 대해 교육부-지자체 협약 체결: 별도 공모 평가 없음
심의기구	• (지방) 지역협업위원회	• (지방) 지역고등교육협의회(신설추진)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 참고하여 재작성

□ RISE의 향후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음

- '23년에는 7개 시범 지역(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운영, '25년부터 기존 5개 사업 통합과¹³⁾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 및 규모 조정 등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2조원+α)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예산 집행 예정임

[표 2-11] RISE 사업 향후 추진계획

구분	2023년 시범 운영	2024년 확대 기반 조성	2025년 전 지역 확대
핵심 과제	• 7개 지역 시범운영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 전 지역의 RISE 기반 조성 • 법령 완비	• RISE 전 지역 확대 • 사업 개편으로 대학재정 지원 예산 50% RISE 활용
추진 내용	• 공동설계·조정(Co-design) 을 거쳐 교육부-지자체 협약 체결 • 시범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 • 시범지역에 사업관리 위한 비영리 법인 운영 • 정책메뉴판 마련을 위한 부처 협력	• 전면 시행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굴·협조 • 전 지역 지자체의 조직마련, 전담기관 신설 등 협의 ※ 재정지원사업 위한 법인 설립 등 • 지역·대학발전계획 수립 및 협약안 마련 ※ 지방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인력양성 계획 구상 등	• 17개 전 광역지자체 RISE 체계 구축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구조 개편 및 RISE로 통합 지원
재정 투자 계획	• RIS(지역혁신) : 3,540억원	• 시범지역 RISE 전환	• RISE로 통합 1) 5개 사업 통합

13) 기존 5개 사업은 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3,540억원), ②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4,070억원), ③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 510억원), ④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900억원), ⑤ 지방대학성화(2,500억원) 등이며 사업 규모는 총 1조 1,520억원에 달함

구분	2023년 시범 운영	2024년 확대 기반 조성	2025년 전 지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NC 3.0(산학협력) : 4,070억원 • LiFE(대학평생교육) : 510억원 • HiVE(전문직업교육) : 900억원 • 지방대활성화 : 2,5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대학 간 협력 강화 	2)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 및 규모 조정 → 전체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50% 이상을 예산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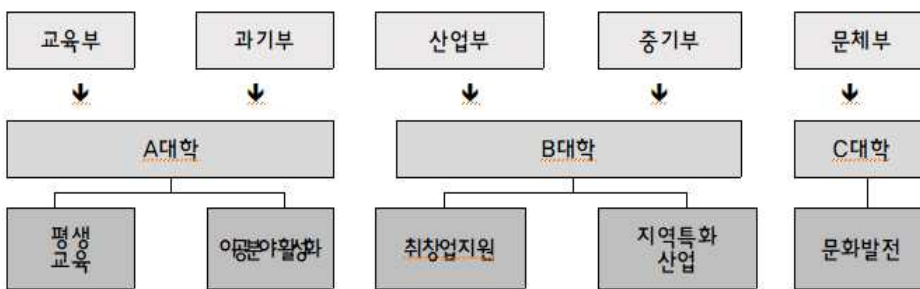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 및 보도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지역혁신 중심 대학운영체계(RISE) 하에서 지역-대학 역할 재정립

□ 기존 대학지원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관련 부처와 대학이 직접 연계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음

○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내 대학과의 연계 및 협력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음

[그림 2-10] 기존 대학지원정책 추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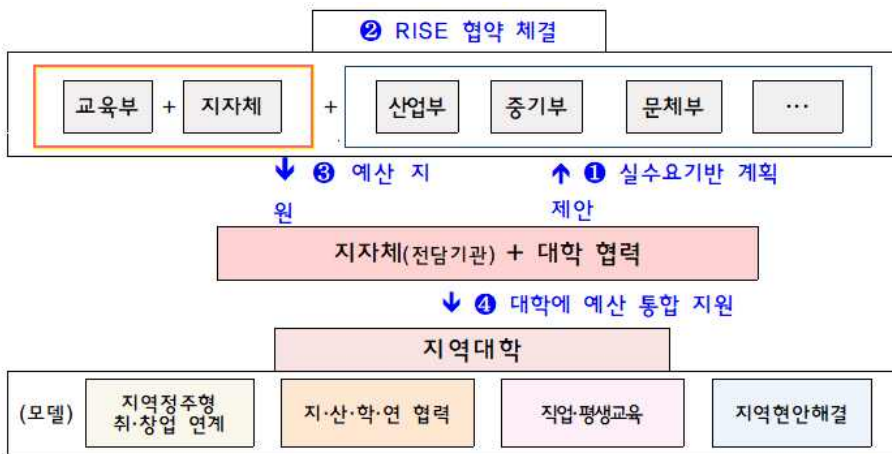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별첨자료(2023.02.01)¹⁴⁾

14) 교육부 보도자료(2023.02.01.)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으로 대전환, 대학·지역·국가의 경쟁력을 높인다<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379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8&s=moe&m=020402&opType=N>

□ 지역주도 대학지원정책 체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역할 재정립이 필수적으로 예상됨

- 지역주도 대학지원정책 체계 하에서 지자체는 예산 부담, 대학 협력, 지역 대학에 예산 배분 및 핵심 사업 집행 및 관리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임

[그림 2-11] RISE에서의 대학지원 정책 방식 변화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3.02.01)

□ 구체적으로 RISE 체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조직 구성, 고등교육 기본계획 수립,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게 됨

- (조직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관련 업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게 되며 지역 주도 대학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는 일명 'RISE 센터'를 비영리법인 형태로 설치해야 함
 - 교육부는 중앙 RISE 센터를 지정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RISE 센터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음

[그림 2-12] RISE 추진 체계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3.02.01)

- (고등교육 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실수요에 기반한 대학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와 협약을 설치해야 함
 - 지역 발전 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음
 - 지역 주축 산업 외에도 국가 산업단지 지정 등 국가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 관련 계획과 연계될 필요가 있음
 - 계획 수립시 지역 일자리 창출의 중심으로 지역 대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지역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고등교육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지방대 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대학 총장, 산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신설
 - 심의 및 조정 사항은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산학협력 강화, 대학의 평생교육 관련 사항, 지방 대학생들에 대한 취업 지원 및 정주 여건 조성, 고등교육과 초·중등 교육기관 간 협력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등임

- (관련 제도 정비) 지역 대학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 및 행정규칙 등 정비 필요함
 - 앞서 논의한 대학 전담부서 설치, 지역협의체 구성 등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규제 완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청하거나 이미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청 연장 등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함




제3장

충청남도 지역·대학 여건 분석

제1절 충남 지역 발전 전략 분석

제2절 충남 지역 여건 분석

제3절 충남 대학 여건 분석



제1절 충남 지역 발전 전략 분석

-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여건 및 대학 여건 분석에 앞서 현재 충남의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기적 비전과 중기 목표, 단기적 현안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수임
-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우선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으로서 충남 지역의 발전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계획, 민선 8기 역점 과제, 당면 현안 등의 자료를 우선 분석하고자 함

1.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¹⁵⁾

□ 비전과 목표

-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서는 2040년 충청남도의 미래비전을 ‘삶의 질이 높은 더 행복한 충남’으로 설정함
- 이를 위한 5가지 발전목표는 ‘경제 중심 충남’, ‘환경 중심 충남’, ‘사람 중심 충남’, ‘복지 중심 충남’, ‘문화 중심 충남’임
 - 충청권 메가시티의 국가기간산업을 담당하는 ‘경제중심 충남’은 서해안 전략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제성장을 선도하는 환황해권 경제교류 중심지로 약동
 - 수도권의 전력생산기지로 인해 발생했던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의 국가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중심 충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측면에서 신수도권의 새로운 지역 환경기준을 부여

15)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자료를 요약 및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 인본주의에 기반한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중심 충남’은 사회적 약자를 사회정책과 공간 정책에서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 사람 중심의 행복사회를 추구
- 충남의 3대 문제인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중심 충남’은 주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 최적 기준(local optimum)을 제시
- 찬란한 지역문화를 지닌 ‘문화중심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기능과 연계하여 백제문화, 기호 유교문화, 내포문화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지식산업 클러스터와 경쟁하기 위해 도약

□ 발전 방향

- 발전을 위한 공간구상에 있어 계획권역을 3대 균형발전권역, 5대 산업발전권역, 5대 관광진흥권역, 6대 지역생활권역 등으로 유연화하여 권역별 발전 방향을 제시함
- 3대 균형발전권역은 북부권, 서해안권, 금강권으로, 성장동력이 약한 남부지역 백제문화권과 금강권을 통합하여 확정함
 - 북부권(천안, 아산, 당진): 자립경제권 구축
 - 서해안권(보령, 서산, 서천, 홍성, 예산, 태안): 국가 서해안축의 중심으로 기능
 - 금강권(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콘텐츠 문화산업의 정수(精髓)로 기능
- 5대 산업발전권역은 북부스마트산업권, 충남혁신도시권, 해양신산업권, K-바이오산업권, 국방·웰빙산업권으로, 전략산업 배치 및 산업클러스터 형성 등을 고려하여 확정함
 - 북부스마트산업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 스마트 신산업 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 전환 및 다양화 추구
 - 충남혁신도시권(홍성, 예산):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대로 조성
 - 해양신산업권(보령, 서천, 태안): 해양자원을 활용한 신산업벨트 구축
 - K-바이오산업권(공주, 부여, 청양): K-바이오 소재 산업벨트 구축
 - 국방·웰빙산업권(논산, 계룡, 금산): 지역자원(국방, 바이오)을 활용한 산업벨트 구축

- 5대 관광진흥권역은 북부권, 서북부권, 서해안권, 백제권, 남부권으로,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고려하여 획정함
 - 북부권(천안, 아산): 호국·온천 관광권 - 휴양형 의료관광지대 개발 및 호국 테마 관광환경 조성
 - 서북부권(서산, 당진, 홍성, 예산): 내포문화 관광권 - 내포문화 관광자원 활용 관광지 조성 및 서해안권과 연계한 광역관광벨트 확장 유도
 - 서해안권(보령, 서천, 태안): 해양·레저 관광권 - 관광벨트 구축 및 생태관광 도시 조성
 - 백제권(공주, 부여, 청양): 백제문화 관광권 - 충남권 관광네트워크의 중심 지대로 육성
 - 남부권(논산, 계룡, 금산): 군사·유교문화권
- 6대 지역생활권역은 중추도시생활권, 혁신도시생활권, 서해북부생활권, 내륙생활권, 서해남부생활권, 남부생활권으로, 지역적 동질성, 생활권 연계성, 생활 SOC 공동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획정함
 - 중추도시생활권(천안, 아산): 스마트 광역도시권 조성
 - 혁신도시생활권(홍성, 예산): 환황해권의 중심 혁신도시권 육성
 - 서해북부생활권(서산, 당진, 태안):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복원, 태안기업 도시 및 서산웰빙특구의 지역 경쟁력 확보
 - 내륙생활권(공주, 부여, 청양): 국가행정도시권 내 도시 간 기능 분담
 - 서해남부생활권(보령, 서천): 서해안권의 신해양도시 조성
 - 남부생활권(논산, 계룡, 금산): 대도시 근교형 정주환경모델 육성

□ 전략별 추진계획

- 2040년 미래비전과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추진전략과 18개 주요과제를 설정함

[표 3-1]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

발전목표	추진전략	주요과제
경제 중심 충남	포용적 경제일자리 및 농업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과 혁신기반의 산업·경제 생태계 조성 - 농림축산업의 공익적 가치 증대 - 해양수산의 혁신성장 기반 조성
환경 중심 충남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및 자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지속을 위한 건강한 자연환경 확보 -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생활환경 조성 - 기후위기시대, 미래를 여는 에너지 전환
사람 중심 충남	삶의 질이 높은 정주환경 인프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시대 도시생활공간 조성 - 읍면 중심의 맞춤형 토지이용관리 - 충남형 스마트 도시 조성 - 총체적 지역사회 재난관리 여건 조성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생활서비스 제고 - 교통복지 증진 및 친환경·첨단 교통·물류기반 구축
복지 중심 충남	더불어 누리는 지역발전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하고 매력 있는 농촌 육성 - 풍요로운 일상을 영위하는 통합적 균형발전 -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택 및 주거복지 제공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 중심 충남	품격 있는 문화·관광 지역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기반 조성 - 지역이 주도하는 관광 개발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 저자가 정리하여 작성

○ (경제 중심 충남) 포용적 경제일자리 및 농업경쟁력 강화

- (포용과 혁신기반의 산업·경제 생태계 조성) 3가지 실행전략(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주력산업 구조고도화 및 균형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주민 주도형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과 새로운 창작·창업환경 구축, 다양한 경제주체가 상생·공존하는 포용적 경제생태계 조성)과 11개 정책과제 및 주요 사업(주력산업의 스마트 전환, 민간주도의 대안경제 기반 조성, 지역경제 선순환체계 구축 등)을 제시함
- (농림축산업의 공익적 가치 증대) 6가지 실행전략(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환경농업 체계 구축과 충남의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완성, 농민에 대한 촘촘한 소득안전망 구축, 지역농업과 농촌을 살려나갈 사람과 주체 양성,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거주 사회적 취약계층 통합돌봄 전환, 탄소배출 저감

Industry4.0 기술과 융합한 미래지향적 농림축산업 추구, 사람중심의 산림 통합관리 기반 마련)과 24개 정책과제 및 주요 사업(유기성 자원순환형 환경 농업 체계 구축, 농민 정체성·주체성을 인정하는 농민수당 확대, 준비 단계부터 안정화 단계까지 지속적인 신규 청년농민 양성체계, 공공 사각지대 최소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지역정책 발굴, ICT 기술을 적용한 농축산업 과정 중 3D 농작업 응용 확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능 중심의 산림자원 관리 등)을 제시함

- (해양수산의 혁신성장기반 조성) 6가지 실행전략(해양환경·생태 보전 및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제고, 무궁무진한 해양 자원의 가치 있는 활용으로 해양신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확보 및 전략적 양식산업 육성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 서해안 수산식품 유통·가공 중심지 및 식품안전성 강화,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살기 좋은 어촌 조성, 환황해권 국제적인 해양도시 위상제고 및 해양영토의 자주권 수호)과 19개 정책과제 및 주요 사업(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안 바다목장 및 인공어초 추진, 수산식품 체계적인 육성 추진, 어촌뉴딜 사업 추진,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등)을 제시함

○ (환경 중심 충남)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및 자원관리

- (미래 지속을 위한 건강한 자연환경 확보) 3가지 실행전략(충남 생태계 지속성 확보, 생태계 조절서비스 강화, 도민 자연복지 증진)과 15개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서식지 복원 및 개선사업, 하구(연안) 생태계 복원, 생활권 녹지 공간 확충 등)을 제시함
-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생활환경 조성) 3가지 실행전략(오염원 저감-영향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시스템 구축, 도민 누구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환경정의 실현, 지역단위의 생활환경정보 생산 및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과학적 정책수립 기반 마련)과 12개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저영향 개발 및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중부권 대기환경권역 관리정책 도입, 4차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생활환경·건강정보 생산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함

- (기후위기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에너지전환) 3가지 실행전략(지역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 충남 서해안권을 에너지전환 선도지역으로 전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충남형 그린뉴딜 전략 개발 및 추진)과 11개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에너지 시설의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강화, 석탄화력발전 폐쇄 지역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마련, 충남 그린뉴딜위원회 및 포럼 설립·운영 등)을 제시함

○ (사람 중심 충남) 삶의 질이 높은 정주환경 인프라 조성

- (인구감소시대 도시생활공간 조성) 5가지 실행전략(압축적 분산도시(decentralized concentration) 공간구조 형성, 인구감소시대 지역맞춤형 도시계획 수립, 뉴 노멀시대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 경쟁력 있는 네트워크 도시권 조성, 지역주도의 충남형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17개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도시재생지원형 성장관리 유도, 인구감소시대 지역맞춤형 도시계획 수립, 보행증진 설계기법을 통한 건강도시 조성, 환황해권의 혁신도시권 육성, 회복탄력성 높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을 제시함
- (읍·면 중심의 맞춤형 토지이용관리) 4가지 실행전략(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개발행위의 합리적 계획입지 전환 유도, 도시-농촌-환경의 통합적 토지이용 계획 수립, 토지이용 변화 영향에 대응한 토지이용관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농지다운 농지로 이용·보전·복원하기 위한 농지이용계획 수립과 실천)과 9개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읍·면 단위 토지이용계획 수립, 공간단위별 통합 계획 대상 발굴, 토지이용 특성별 관련 지표 개발, 농지총량과 농지 농업적 이용의 보전 및 농지환경의 복원 실현 등)을 제시함
- (충남형 스마트도시 조성) 4가지 실행전략(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공간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첨단 스마트팜 6차산업화 지원체계 구축, 제로 에너지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과 15개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5G 자가망 등 확충, 공간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충남형 스마트 팜 모델 구축, 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 구축 등)을 제시함
- (충체적 지역사회 재난관리 여건 조성) 3가지 실행전략(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지역사회 조성, 지역 맞춤형 위험관리체계 구축, 과학기술 기반 예측적 재난

관리 인프라 구축)과 11개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위험정보 종합지도 구축사업, 데이터 축적을 통한 대응자원 관리 종합 시스템 구축, 지하정보 통합지도 구축 등)을 제시함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생활서비스 제고) 3가지 실행전략(수요응답형 생활 서비스 지원, 지역주도 포용적 생활서비스 조성, 공간통합적 생활서비스 네트워크 조성)과 13개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취약계층 생활서비스 공급 확대, 충남형 생활서비스 최적기준 마련, 행복생활서비스권 육성 등)을 제시함
- (교통복지 증진 및 친환경·첨단 교통·물류기반 구축) 3가지 실행전략(교통 서비스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형평성 확보를 위한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친환경·첨단기술 교통정책 추진, 환황해 경제권의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직교류 교통SOC 구축)과 21개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대중교통 취약지역 데이터베이스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기·수소 버스 도입 확대, 남북 경제협력에 대비한 서해안 초광역 남북축 교통망과 중부권 동서축 교통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함

○ (복지 중심 충남) 더불어 누리는 지역발전 기반 강화

- (지속가능하고 매력 있는 농촌 육성) 3가지 실행전략(인구감소·고령화(마을 소멸) 대응 농촌 과소지역정책 추진, 농촌 공간정비 및 보전·활용을 통한 신농촌 공간 창출, 농촌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농촌커뮤니티 재편)과 10개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농촌마을 모니터링 및 진단·관리 시스템 구축,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패키지 지원, 다양한 작은 거점 육성 등)을 제시
- (풍요로운 일상을 영위하는 통합적 균형발전) 5가지 실행전략(저발전지역 지원 정책 통합 추진 및 권역 특성별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사업 추진, 거시적·대외적 영향에 따른 인구 이동·감소에 적극 대처, 산업·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특성별 종합대책 마련 및 다분야 간 선순환 체계 마련, 누구나, 어디서나 편안하게 누리는 삶의 질, 함께 꿈을 그리는 개방형 지역사회)과 17개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저발전지역 관련정책 통합 및 강화, 중대도시 세력권내 인구 이탈 최소화, 전략산업 연계 선순환 생태계 조성, 최소한의 안정적 삶 보장, 지역내·외 네트워크 추진 등)을 제시함

-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택 및 주거복지 제공) 3가지 실행전략(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서비스 시설 공급,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11개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생애주기 주거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주거복지센터 역할 강화 등)을 제시함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3가지 실행전략(도내 복지자원 편중 해소, 노인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지역주도의 육아 돌봄 기반 구축)과 12개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내륙권의 복지 인프라 구축, 노인친화도시 환경 구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포함 지역육아돌봄기반 확충 등)을 제시함

○ (문화 중심 충남) 품격 있는 문화·관광지역 조성

- (도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기반 조성) 6가지 실행전략(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접근성 및 맞춤형 문화서비스 체계 구축, 문화적 다양성, 포용성 증진과 지역재생·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유희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공간, 품격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재생·활성화, 역사와 전통에 기반한 세계적인 고도(古都)·역사문화도시 조성, 특색 있는 문화마을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기반 구축, 충남 역사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자산 활용과 신성장 문화콘텐츠 플랫폼 및 클러스터 육성,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과 건강수명 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과 35개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문화시설 소외지역을 위한 생활형 문화인프라 구축, 문화적 다양성 증진, 유희공간을 활용한 생활SOC형 문화공간 조성, 충청유교문화권 사업 추진을 통한 역사도시 조성, 문화지구 육성 및 ICT 기반 문화컨텐츠산업 육성,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함
- (지역이 주도하는 관광 개발) 3가지 실행전략(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화, 주민주도형 관광산업 추진과 지역 자원을 연계한 네트워크 관광상품 개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관광지 조성)과 8개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지역 전통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관광상품화, 충남형 주민주도 관광사업 추진, 유희자원과 폐 산업시설을 활용한 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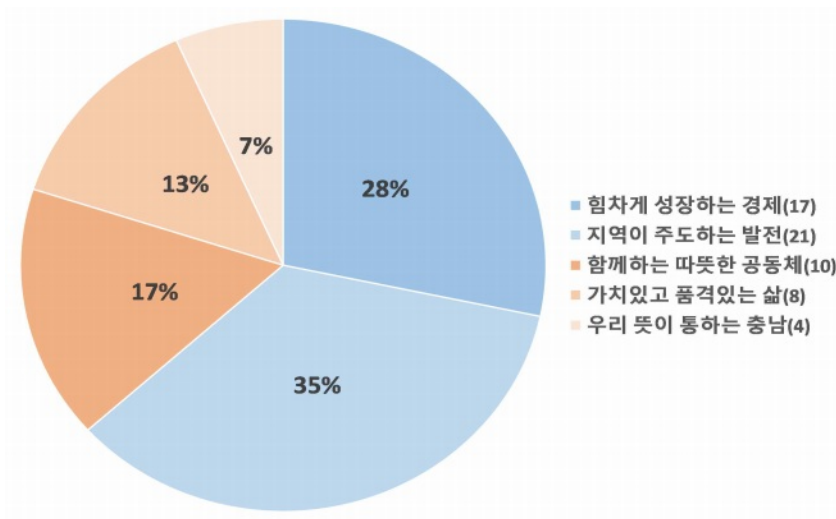
2. 충청남도 역점 과제¹⁶⁾

□ 충청남도 민선 8기는 5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60개의 역점 과제를 선정함

○ 충남 민선 8기에서 제시하는 5대 목표별 60개 역점과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충남은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등의 5대 목표를 설정함
- 세부적으로 60개 역점 과제는 경제 관련 17개 과제(28%), 지역 주도 발전 관련 21개(35%), 공동체 관련 10개(17%), 삶의 질 관련 8개(13%), 행정 관련 4개(7%)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 주도 발전과 경제에 대한 과제가 과반수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 충남 민선 8기 5대 목표별 역점 과제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 저자가 정리하여 작성

16) 충청남도(2022) 내부자료(민선 8기 충청남도 역점 과제) 요약 및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 충남 주력산업은 디스플레이, 자동차, 바이오 산업임 17)

- 디스플레이 산업은 다양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장치와 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부품, 장비, 패널/모듈을 개발 또는 제조하는 산업을 의미함
-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의 환경적 성능 향상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위한 소재 및 부품, 환경친화적인 소재 및 부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을 의미함
- 바이오 산업은 생명자원(식물·동물·미생물 등)을 활용하여 최신 바이오기술을 적용한 기능성 메디바이오, 기능성 뷰티제품, 동식물 기능증진 제품을 가공 및 제조하는 산업을 의미함

□ 민선 8기 충남의 역점과제 60개 중에서 ‘바이오 산업’ 관련 과제들은 다음과 같음

- (역점과제 01)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내에서 ‘스파 연계 재활 헬스케어 산업거점 구축’ 과제를 제시함
 - 거점센터의 ‘스파 연계 재활 헬스케어 산업 전국적 거점’ 위상을 확보하고 안전인증 시험, 시험평가,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의 기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스파시설용 5G기반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플랫폼 개발과 스파 연계 재활헬스케어 산업 거점 구축이라는 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스파시설용 5G기반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플랫폼 개발 사업은 5G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온천(스파)요법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및 사업화 지원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5.7억 원(국비 51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 민자 4.7억 원)임
 - 스파 연계 재활헬스케어 산업 거점 구축은 스파 연계 재활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제품 개발 및 산업 안전성·유효성 지원을

17) 2023년 충남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르면 충남의 3대 주축 산업은 디스플레이, 자동차, 바이오 산업이고 미래 신성장 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임

통해 완성도 높은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80.4억 원(국비 48.2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21억 원, 민자 2.2억 원)임

- 현재 스파시설용 5G 기반 바이오산업기술개발 국가 R&D를 추진하고 있고 ('22.7.~), 스파산업 거점 홍보를 위한 「2022 헬스케어·스파산업 박람회」를 개최하였음

○ (역점과제 02)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내에서 '보령 머드 활용 메디 바이오 소재화 실증기반 구축' 과제를 제시함

-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50억 원(국비 100억 원, 도비 45억 원, 시군 105억 원)임
- 보령머드의 인지도와 우수성에 비해 2차 산업 육성 및 활성화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능성 점토 광물의 핵심 원자재를 육성하고, 머드기반 시장 다각화 및 지역 선도기업 육성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업내용으로는 인프라 구축(머드 기능성 고도화 및 메디바이오 소재 실증센터 구축), 기술 서비스(효능·안전성 검증, 시제품 생산 등 기업 역량강화 지원), 연계 확산(기업유치·육성 및 특화 강소기업 연계를 통한 산업 활성화)이 있음
- 현재 전문 혁신기관(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자문을 통해 보령머드 메디바이오 산업화 방향과 기술에 대한 사업 기획을 추진하였음

○ (역점과제 09)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내에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상용화 및 실증기반 조성' 과제를 제시함

-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2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민자 20억 원)임
- 전주기 신뢰성 검증을 통한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업내용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 표준개발 및 인증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현재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을 사업 주관기관으로 매칭하였음

○ (역점과제 29)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내에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특화 단지 조성’ 과제를 제시함

-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99억 원(국비 39.5억 원, 도비 8.8억 원, 시군 20.7억 원, 용자 70억 원, 자담 60억 원)임
- 기 집약된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단지(예산 신암)를 활성화하고, 동물용의약품 제조 → 공동물류 유통 → 수출로 이어지는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업내용으로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현대화와 공동물류센터 및 수출 혁신품목 지원이 있음
- 충남동물약품수출단지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충남동물약품수출단지 안내판 제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민선 8기 충남의 역점과제 60개 중 관련 과제들은 다음과 같음

○ (역점과제 06)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내에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과제를 제시함

-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2억 원(도비)임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산업, 노동자를 보호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일자리 감소, 고용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업내용으로는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특구 지정 신청 및 심사, 특구 지정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이 있음
- 2022년 8월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연구용역 계획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고, 동년 9월 학술연구용역을 심의하였으며, 2023년 기금 운용계획에 예산을 반영하였음

○ (역점과제 07)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내에서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확충’ 과제를 제시함

-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에너지 전환 및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해 기금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야 및 계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에너지전환 기반 조성, 고용 및 일자리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도 전입금, 시군 부담금, 정부 보조금, 그 밖의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10,000억 원의 운용규모를 확보하고자 함
 - 2021년 2월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동년 4월 정의로운 전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년 6월 8일 충남 4개 시·군(보령, 당진, 서천, 태안)과 발전3사(보령 중부, 태안 서부, 당진 동서발전)가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역점과제 10)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내에서 ‘탄소포집활용(CCU) 소재 실증 지원센터 구축’ 과제를 제시함
-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60억 원(국비 280억 원, 도비 50억 원, 시군 110억 원, 민자 20억 원)임
 - 산업 배기가스 CO₂ 분리정제 기반 CCU 소재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기존 지역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국내 CCU 산업 활성화 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업내용으로는 기반구축, 기술실증, 기업지원, 인력양성이 있음
- (역점과제 16)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내에서 ‘여성경제인협회 충남여성종합 지원센터 건립(매입) 지원’ 과제를 제시함
-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임
 - 여성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업내용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을 위해 충남여성가족플라자 입주를 지원하는 것임
- (역점과제 17)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내에서 ‘여성 창업기업 특허 등 지식재산권 지원’ 과제를 제시함
-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25억 원(도비)임
 - 여성이 창업 시 특허 등 지식재산 권리 지원을 통해 여성 창업기의 성공적인 정착과 여성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업내용은 여성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권 취득을 지원하는 것임
 - 2022년 3월 여성창업보육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년 4월부터 여성 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창업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역점과제 19)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내에서 ‘국방산업단지 전력지원(비무기) 체계 기업유치’ 과제를 제시함
- 입주의향 기업 및 협회 등록기업의 조기 유치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업내용으로는 기업유치(입주의향 기업 및 협회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추진)와 지원제도(국방산단 유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제도 최대 활용)가 있음
 - 충남국방벤처센터와 국방벤처기업 간 협약을 체결하였음(2022년 11월 기준 46개사)
- (역점과제 22)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내에서 ‘충남디자인진흥원 설립’ 과제를 제시함
-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임
 - 도내 기업지원과 창업육성, 인력양성 및 교육·연구·정책개발,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 제조혁신 및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업내용은 충남 디자인산업 발전 등을 위한 충남디자인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이며, 충남디자인진흥원의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등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융복합 디자인 전문기업 및 디자인 인재육성, 디자인 주도형 인력 양성 등임
 - 2021년 9월 「충남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역점과제 30)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내에서 ‘서해안 마리나 산업 육성’ 과제를 제시함
-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539억 원(국비 300억 원, 시군 695억 원, 민자 2,544억 원)임
 - 충남이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의 중심축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서해안 마리나 산업 육성을 위해 ‘제2차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 기반시설 확충으로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업내용으로는 충남권 거점마리나 및 중소규모(바다역) 마리나 조성
크루즈 운항 기반 마련 및 마리나 관광 루트 개발이 있음
- 2020년 4월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9.)을 수립하였음

3. 충청남도 당면 현안¹⁸⁾

□ 2023년 충청남도 도정의 주요 당면 현안 중에서 산업 분야 관련 현안은 4개임

- (당면현안 5) 첨단국방산업(국방국가산단) 육성 기반 마련
 -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607억 원임
 - 전력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미래 첨단국방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업종을 유치하고자 함
 - 2018년 8월 논산시가 국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국토부), 2020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고, 현재('22.09.~)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
- (당면현안 7)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구축
 -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잠정) 총 1조 3천억 원 (국비 1조 원, 지방비 3천억 원)임
 - 사업 수행기관은 산업부, 충청남도, 아산시, 한국자동차연구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실생활 기반 테스트 존(Zone),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 센터, 종합 평가·검증 시험실 구축 등이 있음
- (당면현안 8) 천안 종축장 이전부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3,340억 원임
 - 사업내용은 종축장 이전부지에 4차산업 혁명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한 경제·지리적 여건과 풍부한 인력·소비 시장을 활용한 국가 신 성장동력 창출 첨단 국가산단 조성 및 국가산단 연계 배후단지 조성 및 원도심 내 주거·교육·문화·R&D 지구개발이 있음

18) 충청남도 내부자료(2023년 도정 주요 당면현안) 요약 및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 (당면현안 9) 독일 등 해외 기업 투자유치

- 민선 8기 동안 55개사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함
- 2023년에는 우량 외투기업 15개사를 유치하고 80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며, 세부적으로는 소부장·핵심전략기술·R&D 등 첨단·신산업분야 외투기업 발굴 유치, 코로나로 위축된 해외유치활동 재개 및 외투기업 소통·사후관리 강화, 외투기업이 선호하는 투자환경 조성 「전국 1위」 계속 유지가 있음
- 2022년에 12개사, FDI 319백만달러를 유치하였으며, 향후 투자유치설명회 및 해외유치 활동(IR)을 강화하고 외투지역 추가 조성(1~2개소) 및 첨단투자 지구 지정(3개소)과 함께 외투기업 전수 방문 상담, 외투기업 CEO 간담회 등 소통·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당면현안 18) 농업의 스마트 미래 성장 산업화

- AB지구 청년 농업인 영농단지 조성과 민선8기 청년농 스마트 팜 육성계획, 농촌 정주여건 개선, 충남형 스마트 ICT 축산단지 조성이라는 4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AB지구 청년 농업인 영농단지 조성) 청년농 영농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보급자리 주택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주체로서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민선8기 청년농 스마트 팜 육성계획) 스마트 팜 보급을 통한 역량있는 청년농 유입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까지 청년농 534명 육성 및 스마트팜 400ha 보급을 목표로 함
- (농촌 정주여건 개선) 세부적으로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농산어촌 지역 주민 기초생활수준 향상,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농산어촌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② 농촌공간정비사업 -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기반으로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여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농촌공간 재생 도모, ③ 농촌협약 -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하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이 있음

- (충남형 스마트 ICT 축산단지 조성) 보령·서천 부사간척지와 당진 석문간척지에 스마트 축사 및 분뇨에너지화 시설, 도축장, 가공장 등 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 (당면현안 32) 간척지 활용 및 시설 현대화로 수산양식 생산 증대
 -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400억 원(국비 220억 원, 지방비 180억 원)임
 - 사업내용은 도내 간척지를 활용하여 양식산업을 스마트화·고급화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 수산양식에 ICT·AI기술 융·복합 스마트양식시스템 개발 및 확산과 고급 양식품종의 상업화 및 대량생산 체계 구축이 있음
 - 2022년 9월 28일 양식산업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진 석문간척지 내 첨단 양식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22.~'23., 10ha)
 - 향후 도내 유휴 간척지 내 양식장 활용 가능 부지를 탐색하고, 공모사업 참여 및 기존 국비사업 활용방안 모색 등 해수부와 다각적·지속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

4. 지역발전전략 중 고등교육 분야 분석

1)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 5대 추진전략 18개 주요 과제 중 고등교육 분야와 연관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음

- 원도심의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및 인구 유입 정책 지속 추진
 - 공주시·보령시·논산시: 대학의 재학생·졸업생의 지역 내 안착·유도를 위한 일자리, 청년창업, 공유산업화, 공공주택, 문화서비스 확충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서비스 시설 공급
 - 도심 내부와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환경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고 지역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전략 추진
 - 도심지역 빈집은 직장인, 신혼부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하며 농촌형은 귀농자, 귀촌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급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 주거부담이 높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자립을 위하여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동생활시설을 조성
- 대학가 주변, 구도심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임대 형식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젊은 계층의 쉼어 하우스로 활용

○ 충남 역사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자산 활용과 신성장 문화콘텐츠 플랫폼 및 클러스터 육성

- 충남의 역사·문화 전통, 충남혁신도시, 천안·아산(문화·예술, 공학 관련 대학), 공주(공주대), 부여(한국전통문화대) 등의 지역창의인력, 대덕연구단지(산업 기술) 자원 등을 활용한 인문·기술 융합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플랫폼을 구축

□ 충남 도내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등교육과 관련있는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천안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1인 창조기업 육성, 청년·중장년 취·창업 지원, 대학생과 기업 연계 등 맞춤형 일자리지원시스템 고도화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

- 첨단 미래도시 대비 신성장 동력 확보, 주변 대학과 산업 기반을 연계한 산업 기반 클러스터 구축으로 지식거점지역을 육성하고 ‘(가칭) 충남데이터 센터’ 유치

□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나타난 고등교육 관련 정책을 살펴본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

○ 고등교육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계획 내에서 대학의 역할이 주도적이거나 두드러지지 않은 특징을 보임

-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이나 지역 환경에 맞는 주거 서비스 공급, 주거 복지 정책 등의 수요자로서 대학생을 상정하는 경향이 있음
- 이 외에 충남의 역사 문화 유산 자산과 관련하여 문화 콘텐츠 플랫폼 구축 및 클러스터 육성 등의 과제가 존재함
-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에서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지원시스템 구축과 산업과 대학이 연계한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2) 충청남도 역점 과제

□ 60개의 역점과제 중에서 고등교육 관련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역점과제 23)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내에서 ‘충남 소재 기업-대학 상생·협력 체계 구축’ 과제를 제시함
 -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천만 원(도비)임
 - 도내에 기업 맞춤형 계약학과(채용조건형, 재교육형)를 신설 및 확대 운영하고, 대기업 중심의 디지털 아카데미를 개설 및 운영하며, 산-학-관 실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계약학과 유치 등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재 충청남도·대학·기업 상생발전 협약(‘22.11.16.) 및 외투기업-지역대학 상생협력 협약(‘22.12.6.)이 체결되어 있음
- (역점과제 24)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내에서 ‘충남도민 국제화 역량 제고’ 과제를 제시함
 -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0억 원(도비)임
 - 도민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활동을 지원하여 민간차원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도민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제교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 주체로 교류 아젠다를 발굴하며, 대학과 기업, 학교 등 다양한 주체와 협업을 통해 민간 국제 교류 협력·지원시스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업 내용으로는 대학생 및 유학생이 참여하는 국제적 주요 이슈 정책 토론회 개최, 도민 대상 찾아가는 글로벌 교육(세계시민교육, 국제개발협력 교육 등) 추진, 경제·사회·교육·문화·체육·보건 분야의 민간 국제교류 사업 지원이 있음
 - 2022년 9~12월 외국인 유학생 초청 행사, 한일 청소년 문화 교류, 외국 공무원 초청 연수 등 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 시범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였음

- (역점과제 28번)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내에서 ‘충남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과제를 제시함
 -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22.3억 원(도 14.6억 원, 시군 7.7억 원)임
 - 충남학 교육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자긍심 및 애郷심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업내용으로는 충남학 교육 콘텐츠 개발(충남학 교육 영상콘텐츠, 충남학 교재 등), 충남학 교육 확대가 있음
 - 충남학 교육 확대는 도민 대상으로는 시·군 충남학 교육 지원, 대학생 대상으로는 도내 대학에 충남학 정규교양과정 개설 및 지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는 도내 청소년 충남학 동아리 발굴 및 지원으로 구분됨
 - 충남학 교육 및 지원 확대 예산(3억)이 2023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음

3) 충청남도 당면 현안¹⁹⁾

□ 2023년 충청남도 도정의 주요 당면 현안을 알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충남 고등교육 관련 비전과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33개의 항목들 중 고등교육과 관련된 현안은 3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당면현안 3) 지자체-대학 협력사업(RIS) 추진방향 재검토
 - 사업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3,411억 원 (국비 2,388, 충남 486, 대전 436, 세종 101)임
 - 충남(친환경 자동차 부품) - 대전(ICT) - 세종(자율주행서비스)의 주축 산업을 모빌리티 산업으로 융합·확장하여 미래 산업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은 모빌리티 분야(소재부품장비, ICT) 인재양성, 기술고도화, 기업 지원, 창업 활성화와 대학교육혁신(DSC 공유대학 설치·운영 등)의 2가지임
 - 충남과 대전시, 세종시의 3개 시도와 충남대, 공주대, 고려대(세종) 등 24개 대학, 35개 기업, 34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협력함

19) 충청남도 내부자료(2023년 도정 주요 당면현안) 요약 및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 (당면현안 10) 지역의대 설립 유치 및 대학병원 설치

- 의사면허 소지자 126,724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05,628명으로, 특히 활동 의사 중 5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가 3명인 반면, 충남의 경우 1.5명에 불과함
- 이로 인해 지방의 중증(심·뇌혈관·응급) 및 필수의료에 공백 문제가 있고, 따라서 환황해권 중심도시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안전한 의료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함
- 이에 도내 지역대학에 의과대학 설립을 유치하고, 의대 정원의 50% 이상을 지역 공공병원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시행하고자 함
- 또한, 내포권역(보령·서산·홍성·예산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학병원을 설치하기 위해 국립대 의대를 신설하여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당면현안 13) 안서동 대학로 조성

- 4만 8천여 명이 재학 중인 5개 대학이 위치해 있는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일원을 대상으로 대학로를 조성하고자 함
- 청년 문화 콘텐츠 발굴·육성 및 활동 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3년에는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연·행사, 예술창작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 문화예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실효성을 분석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고자 함
- '23년 하반기에는 도-천안-대학-농어촌공사 등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임

[그림 3-2] 안서동 대학로 조성 구상도



4) 소결

□ 충남 지역 발전 전략 분석 요약 결과

- 이상의 분석을 통해 충청남도 도정 운영에 있어 사회적 측면보다는 경제 및 지역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역점 과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략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향후 지역-대학 연계 핵심 분야 도출에 있어 복지나 문화 등 사회적 측면에 대한 새로운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충청남도 도정 운영에 있어 고등교육 분야 관련 과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후술하겠으나, 고등교육기관의 여건을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보았을 때 충남의 위상과는 격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으로 충남에는 21개의 대학이 있으며, 이는 17개 시도 중 부산광역시와 공동 4위에 해당하는 수치임²⁰⁾
 - 재학생 수 역시 173,254명으로 17개 시도 중 4위에 해당함
- 이러한 현황과 다르게 도내 대학교 양성 및 대학과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 등의 노력이 미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고등교육 사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교육부 등 중앙정부 소관인 것에서 기인하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같이 일찍부터 지역-산업-대학의 연계를 강조해 온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 일반대, 전문대, 교육대, 산업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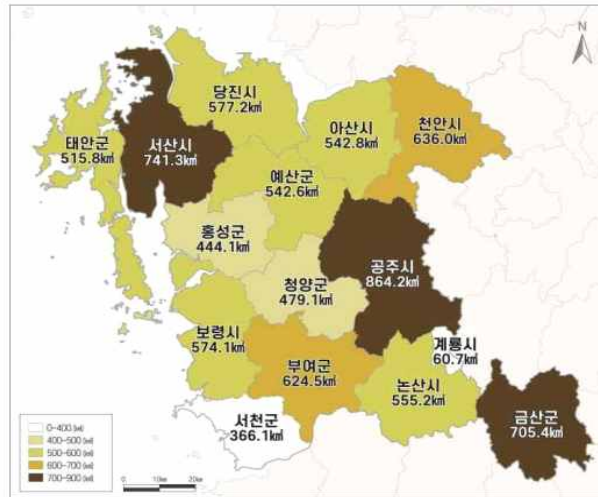
제2절 충남 지역 여건 분석

1. 인문 환경

□ 충남지역 행정 구역

- 충청남도의 총 면적은 2018년 기준 8,229.2㎢로 국토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구역상 8개 시와 7개 군으로 구성
 - 지역 내 시·군의 평균 면적은 549㎢으로 공주시가 864㎢(10.5%)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계룡시가 61㎢(0.7%)로 가장 작은 관할구역 보유

[그림 3-3] 충남 시·군별 면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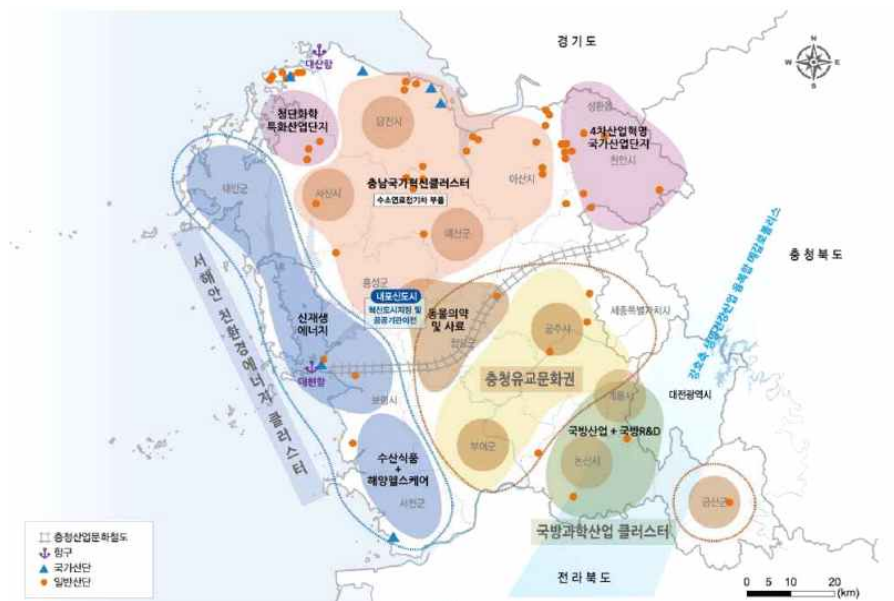
출처: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 충남은 크게 1)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권 지역(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2) 서해안과 인접한 서해안권(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3) 중남부에 해당하는 금강권(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으로 나눌 수 있음

□ 공간발전 구상

- 제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따르면 충남의 권역별 발전 전략을 알 수 있음
 - 북부권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서해안권은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중남부권은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및 충청 유교문화권 관광 개발을 구상함

[그림 3-4] 충남 공간발전 구상도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 문화·관광자원

- 충남지역은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이 지정되어 있고, 1,000점의 국가·지방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
 - 2019년 「국민여행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가 국내 여행지 중 경기, 강원, 경북, 경남 다음으로 숙박여행과 당일여행을 포함한 국내여행 방문 횟수가 높은 지역으로 선정

[표 3-2] 충남 문화·관광 자원 현황 (2022년)

구분		수량	내용
자연 자원	국·도·시·군립공원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공원(2개): 계룡산, 태안해안 도립공원(3개): 칠갑산, 덕산, 대둔산 시·군립공원(2개): 우산성, 지천생태공원
	온천지구	10개	천안, 온양, 도고, 덕산, 홍성 등
역사문화자원	문화재	1,121건	부여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금동대향로 등
	향토문화축제	102건	보령머드축제, 서천한산모시문화제, 서산강경젓갈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 등
관광자원	지정관광(단)지	25개	구드래, 태조산, 마곡사, 안면도 등
	관광특구	2개	보령해수욕장관광특구, 아산시 온천관광특구

출처: 충청남도 도정백서(2022)

- 국내 숙박여행 횟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6위, 당일여행 횟수는 전국 5위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한 도심에서 가까운 지리적 위치가 장점으로 작용
- 세계해양자원(갯벌, 사구, 독살 등), 세계문화유산(백제 공주, 부여), 인류무형 문화유산(당진 기지시줄다리기, 서천 한산모시짜기), 세계기록유산(아산 이순신의 난중일기)이 다수 분포
- 그러나 외부관광자본에 의존한 외생적 관광개발로 인한 거점 공간과 수용태세 미흡으로 관광수요 미창출

□ 지역발전 수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지수(Regional Development Index)를 통해 충남 지역의 발전 정도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음
 - 소득, 산업발전 정도, 혁신 역량 등을 종합한 지역경제력 지수와 주거생활, 근로 및 교육 여건 등을 종합한 주민활력지수로 구성된 지역발전지수에 따르면 충남은 2019년 기준 5위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제조업이 발달한 충남의 산업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표 3-3] 시도별 지역발전지수 변화 현황

구분	지역발전지수(종합)				지역경제력지수				주민활력지수			
	2010		2019		2010		2019		2010		2019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서울	6.71	1	6.68	1	7.02	1	7.04	1	5.90	12	5.84	13
부산	5.59	13	5.52	13	5.55	11	5.44	11	5.68	15	5.73	15
대구	5.62	12	5.56	12	5.52	12	5.45	10	5.90	13	5.82	14
인천	5.66	11	5.69	9	5.82	6	5.77	7	5.25	16	5.51	16
광주	5.84	6	6.04	6	5.66	8	5.80	6	6.31	7	6.58	3
대전	6.28	3	6.23	3	6.22	4	6.21	4	6.44	4	6.28	8
울산	6.36	2	6.17	4	6.41	2	6.24	3	6.23	10	6.03	11
경기	6.26	4	6.29	2	6.41	3	6.44	2	5.87	14	5.93	12
강원	5.41	14	5.52	14	5.03	14	5.10	14	6.41	5	6.48	6
충북	5.82	8	6.00	8	5.62	9	5.75	8	6.33	6	6.58	2
충남	6.10	5	6.05	5	5.93	5	5.86	5	6.54	3	6.49	5
전북	5.39	15	5.36	15	4.93	15	4.86	16	6.62	1	6.53	4
전남	5.18	16	5.36	16	4.90	16	4.87	15	5.93	11	6.47	7
경북	5.78	9	5.57	11	5.59	10	5.30	13	6.29	8	6.19	9
경남	5.83	7	5.62	10	5.67	7	5.41	12	6.26	9	6.11	10
제주	5.69	10	6.03	7	5.37	13	5.60	9	6.55	2	7.04	1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²¹⁾

- 반면, 40년 연평균 인구 증감률(인구지표)와 3개년 평균 재정자립도(경제지표)에 따라 지역발전수준을 평가한 결과 충남은 17개 광역시·도 중 13위로 분류됨

21) 한눈에 보는 균형발전 현황판-전국 지역발전지수 현황-시도
<https://www.nabis.go.kr/atlandisDetailView.do>

[표 3-4] 시도별 균형발전지표 현황 (2019년)

구분	지역
상위 25%	경기도,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중간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13위)
하위 25%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출처: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 인구 현황

- (인구 현황) 2021년 기준 충남지역의 주민등록인구는 211.9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4.1%를 차지하고 충남지역의 인구는 전년 대비 약 0.1%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 보면, 천안시가 65.8만명으로 전체 충남 인구의 약 3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아산시 32.5만명(15.3%), 서산시 17.7만명(8.3%) 등의 순임
 - 충남 지역의 전체 인구 중 약 60% 이상이 충남 서북부(천안, 아산, 당진, 서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5] 충남 시군별 주민등록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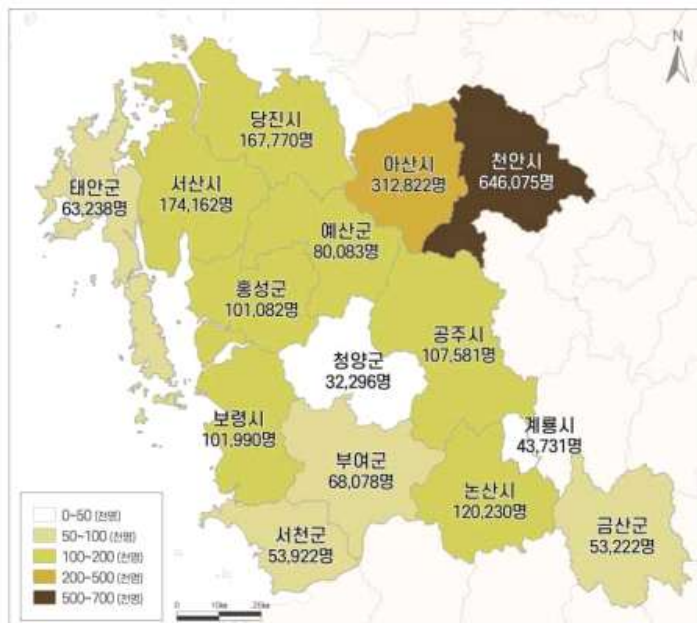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주민등록인구		
	2019년	2020년	2021년
충남	2,123,709	2,121,029	2,119,257
천안시	652,258	658,808	658,486
공주시	106,474	104,545	103,145
보령시	101,114	100,229	98,408
아산시	314,395	316,129	324,580
서산시	174,690	175,591	176,645
논산시	118,842	116,675	114,483

구분	주민등록인구		
	2019년	2020년	2021년
계룡시	42,971	42,822	43,331
당진시	167,042	166,249	167,092
금산군	52,257	51,413	50,477
부여군	66,740	65,354	63,774
서천군	52,805	51,866	50,745
청양군	31,717	30,948	30,440
홍성군	100,423	100,102	99,324
예산군	79,238	78,084	76,801
태안군	62,743	62,214	61,526

출처: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2021), 통계청(국내이동통계, 2021)

[그림 3-5] 충남 시·군별 인구 현황



출처: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주: 2018년 기준임

- (인구 증가율) 2010년~2018년 인구 증가율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권 지역(천안, 아산, 당진)과 대전광역시 및 충남 혁신도시 근교에 위치한 계룡시, 홍성군, 서산군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시·군에서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금강권(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의 인구 증가율이 평균 -0.97%으로 충남 전체 연평균증가율(0.81%)을 크게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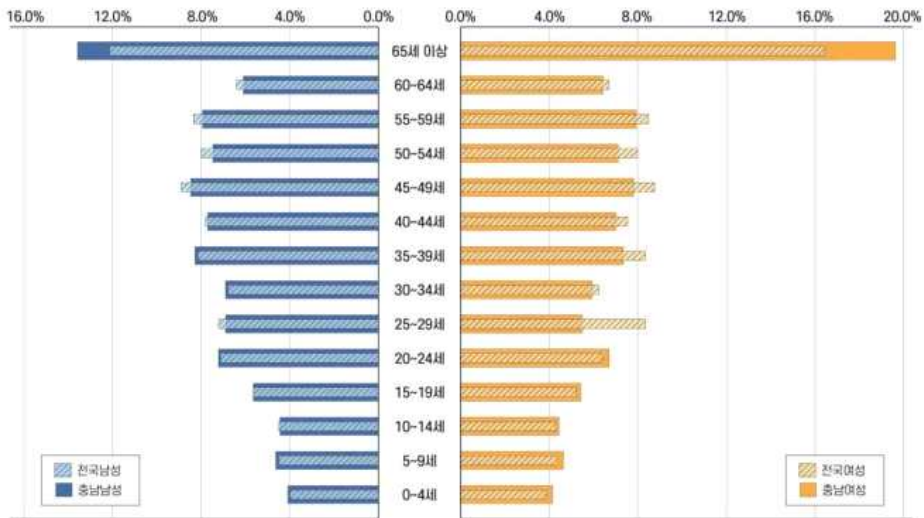
[그림 3-6] 충남 시·군별 인구 증가율 현황 (2010~2018년)



출처: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 (인구 구조) 충남 인구 구조는 15세 미만 인구가 적고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역피라미드 형태임
- 2018년 기준으로 충남의 15세 미만 인구는 13.6%, 15~64세 인구는 68.9%, 65세 이상은 17.5%임
 - 특히 고령화 인구 비율이 전국의 14.8%에 비해 높고 15~64세 이상 인구 또한 전국의 72.4%에 비해 낮은 상황임

[그림 3-기] 충남 연령별·성별 인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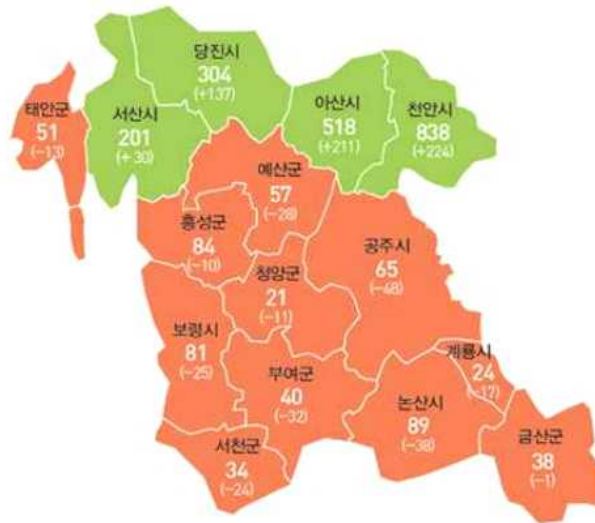
출처: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주: 2018년 기준임

□ 인구 전망

- (총량적 인구 성장) 통계청은 2040년 충청남도 장래인구를 236만명으로 전망하고 있어 총량적 인구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 (충남 내 지역 격차) 다만, 충청남도는 인구 성장지역과 인구 감소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방 소멸 위기가 커질 것으로 전망
 - 충청남도 제 4차 종합계획(2021~2040)에 따르면 천안, 아산, 당진, 서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2040년 인구는 감소될 전망이다

[그림 3-8] 2040년 충남 시·군별 인구 전망



출처: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 순이동인구 현황

- (순이동인구 현황) 순이동인구의 변화를 보면, 2021년 기준 충남 전체 유입인구는 8,522명으로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 대비 많은 상황
 - 충남지역의 지난 3년간 순이동인구를 보면, 2019년에는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2021년에는 유출 인구에 비해 유입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충남 지역에서는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로 유입하는 인구가 유출 인구 대비 많아서 양(+)의 값을 나타냈고 그 외의 시군 지역에서는 모두 유출인력이 유입인력 대비 같거나 높아 0 또는 음(-)의 순이동인구 변화를 나타냄
 - 충남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천안시의 경우 2020년에 2019년 대비 순이동 인구가 증가했으나 2021년 대폭 감소하여 음(-)의 값으로 나타남
 - 아산시의 경우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순이동인구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표 3-6] 충남 시군별 주민등록인구 및 순이동인구 현황

(단위: 명)

구분	주민등록인구			순이동인구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충남	2,123,709	2,121,029	2,119,257	-794	741	8,522
천안시	652,258	658,808	658,486	3,978	4,697	-668
공주시	106,474	104,545	103,145	-563	-1,274	-234
보령시	101,114	100,229	98,408	-421	-321	-756
아산시	314,395	316,129	324,580	822	1,210	8,884
서산시	174,690	175,591	176,645	400	936	1,475
논산시	118,842	116,675	114,483	-795	-1,386	-741
계룡시	42,971	42,822	43,331	-792	-155	556
당진시	167,042	166,249	167,092	-863	-649	1,378
금산군	52,257	51,413	50,477	-524	-363	-161
부여군	66,740	65,354	63,774	-643	-673	0
서천군	52,805	51,866	50,745	-583	-388	0
청양군	31,717	30,948	30,440	-230	-385	-458
홍성군	100,423	100,102	99,324	-279	17	-306
예산군	79,238	78,084	76,801	-239	-448	0
태안군	62,743	62,214	61,526	-62	-77	-60

출처: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2021), 통계청(국내이동통계, 2021)

- (연령별 순인구이동) 연령별로 이동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4세의 타 지역 이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대의 경우 2019-2020년 일시적으로 타 지역 이동이 증가하였으나 2021년 유입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7] 충남 연령별 순인구이동 현황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충남	19,401	10,084	-794	741	8,522
20 - 24세	-1,094	-1,772	-3,176	-4,226	-3,291
25 - 29세	1,398	313	-830	-492	211
30 - 34세	2,245	896	99	-184	288
35 - 39세	2,253	1,059	-300	-141	682
40 - 44세	1,872	1,071	-2	425	870
45 - 49세	1,565	1,252	678	541	1,287
50 - 54세	2,123	1,474	856	1,245	1,710
55 - 59세	2,334	2,061	1,357	1,877	1,943
60 - 64세	1,910	1,453	1,038	1,772	2,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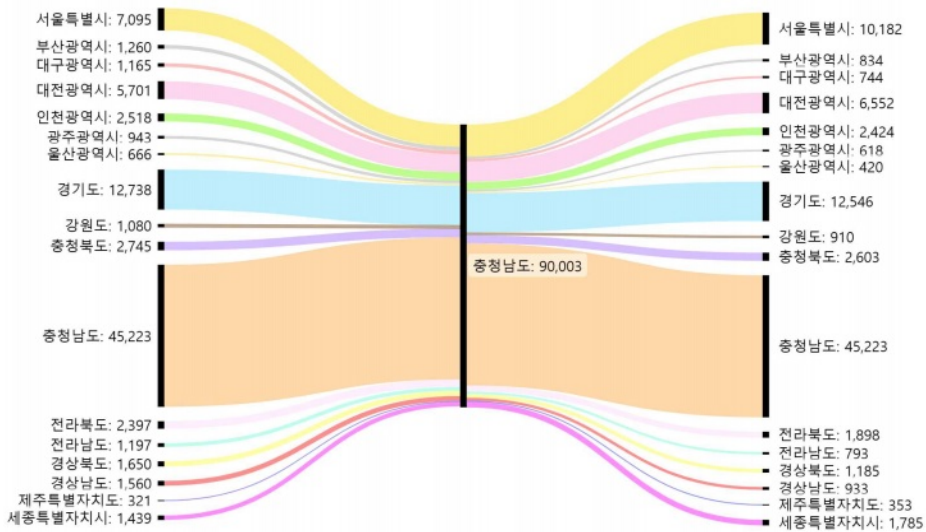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2021), 통계청(국내이동통계, 2021)

□ 지역 간 이동 실태

- 통계청 국내 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충남 청년층(20~34세) 유입과 유출 현황을 알 수 있음
 - 충남 청년 인구 유입은 총 89,698명이고 이들 중 대부분은 서울(7,095명)과 경기(12,738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충남 청년 인구 유출은 총 90,003명이고 이들 중 대부분은 다시 서울(10,182명)과 경기(12,546명)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9] 2022년 기준 충남지역 청년 전출입 현황

(단위: 명)



주: 20~34세를 청년으로 보고 작성

출처: 통계청 국내이동통계 (2022)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추가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를 활용하여 분석함
-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는 매년 전년도 2~3년제 대학 이상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졸업년도 다음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조사하며

그 중 약 4%에 해당하는 18,000여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1회 조사를 실시하는 횡단면 조사임(한국고용정보원, 2022)

- 본 자료는 각 연도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한 학생들의 졸업 후 1.5~2년 경과 시점의 노동 시장 성과를 측정함
- 각 연도별로 전국의 고등교육기관 졸업 명부를 바탕으로 대표성을 갖는 표본의 추출을 통해 약 2 만명을 조사하고 있음
- 2019년 조사 자료의 전체 조사 표본은 18,271명이며, 여기서는 조사 실시 당시 20대(만 기준)에 해당하는 1989년생부터 1998년생을 대상으로 하였음
- 분석 대상은 17,389명으로 가중치를 통해 전체 모집단을 추계할 경우, 460,348명이 분석 대상이 됨
- 본 연구에서는 일단 전체 대학(4년제, 2~3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음²²⁾

□ 본 자료를 활용하여 전반적으로 생애주기별 충남 청년의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²³⁾

- 생애주기별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은 1) 출생지, 2) 출신고등학교 소재지, 3) 출신 대학교 소재지, 4) 현재 거주지를 각각 청년 인구이동의 변곡점으로 삼았음
 - 출생지부터 살펴보면,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에서 태어난 경우가 많았으며 충남을 출생지로 둔 경우는 표본조사 및 모집단 추계 기준으로 약 3.5%인 것으로 나타나 대전 충북과 유사한 수준임

22) 한요셉(2021)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4년제 대학과 2~3년제 등 전문대학 입학자들의 지역 간 이동 패턴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대학 유형에 따른 청년층 인구 이동과 이에 따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3) 청년의 범위는 법령, 지자체 및 중앙부처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사 실시 당시 20대(만 기준)에 해당하는 1990년생부터 2000년생을 대상으로 하였음

[표 3-8] 생애주기별 지역 간 청년 이동 현황 (표본조사 기준)

(단위: 명, %)

구분	표본조사기준(n=17,389)									
	출생지		고교 소재지(A)		대학 소재지(B)		현재 거주지 (졸업 2년 후)(C)		진학시 이동 (B-A)	취업시 이동 (C-B)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서울	3,630	20.9	2,918	16.8	3,892	22.4	4,486	25.8	5.6	3.4
부산	1,430	8.2	1,182	6.8	1,509	8.7	1,038	6.0	1.9	-2.7
대구	1,227	7.1	1,140	6.6	865	5.0	949	5.5	-1.6	0.5
대전	665	3.8	687	4.0	897	5.2	735	4.2	1.2	-1.0
인천	895	5.2	882	5.1	449	2.6	862	5.0	-2.5	2.4
광주	690	4.0	644	3.7	635	3.7	579	3.3	0.0	-0.4
울산	497	2.9	493	2.8	220	1.3	343	2.0	-1.5	0.7
경기	2,739	15.8	3,533	20.3	2,554	14.7	3,776	21.7	-5.6	7.0
강원	478	2.8	493	2.8	605	3.5	434	2.5	0.7	-1.0
충북	644	3.7	668	3.8	914	5.3	637	3.7	1.5	-1.6
충남	611	3.5	754	4.3	1,266	7.3	668	3.8	3.0	-3.5
전북	717	4.1	701	4.0	758	4.4	509	2.9	0.4	-1.5
전남	632	3.6	580	3.3	391	2.3	412	2.4	-1.0	0.1
경북	1,014	5.8	1,014	5.8	1,325	7.6	751	4.3	1.8	-3.3
경남	1,252	7.2	1,377	7.9	825	4.7	928	5.3	-3.2	0.6
제주	183	1.1	171	1.0	124	0.7	146	0.8	-0.3	0.1
세종	36	0.2	42	0.2	160	0.9	136	0.8	0.7	-0.1
기타	49	0.3	110	0.6	0	0.0	0	0.0	-0.6	0.0
계	17,389	100.0	17,389	100.0	17,389	100.0	17,389	100.0	-	-

자료: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19년 자료 저자가 가공하여 작성

주: 기타는 해외 또는 무응답을 의미함

- 출생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충남은 경기, 강원, 충북 등과 같이 인구 증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모집단 추계 기준으로 16,038명에서 18,922명으로 증가하였음

-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충남의 경우 모집단 추계 기준 18,922명에서 31,566명으로 증가하여 출생지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경우보다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출신 대학교 소재지와 현재 거주지 간에 충남은 모집단 추계 기준으로 청년인구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나며 31,566명에서 17,159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9] 생애주기별 지역 간 청년 이동 현황 (모집단 추계 기준)

(단위: 명, %)

구분	모집단 추계 기준(n=460,384)									
	출생지		고교 소재지 (A)		대학 소재지 (B)		현재 거주지 (졸업 2년 후) (C)		진학시 이동 (B-A)	취업시 이동 (C-B)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서울	96,365	20.9	77,330	16.8	87,269	19.0	113,466	24.6	2.2	5.6
부산	34,741	7.5	29,004	6.3	36,833	8.0	26,962	5.9	1.7	-2.1
대구	32,819	7.1	30,446	6.6	25,689	5.6	26,214	5.7	-1.0	0.1
대전	16,328	3.5	16,351	3.6	22,422	4.9	17,942	3.9	1.3	-1.0
인천	25,251	5.5	25,206	5.5	15,048	3.3	25,211	5.5	-2.2	2.2
광주	18,452	4.0	17,589	3.8	18,728	4.1	16,377	3.6	0.3	-0.5
울산	13,374	2.9	13,048	2.8	7,032	1.5	9,485	2.1	-1.3	0.6
경기	76,689	16.7	99,219	21.6	86,378	18.8	105,947	23	-2.8	4.2
강원	13,574	2.9	13,723	3.0	16,524	3.6	12,220	2.7	0.6	-0.9
충북	16,462	3.6	16,983	3.7	22,156	4.8	16,241	3.5	1.1	-1.3
충남	16,038	3.5	18,922	4.1	31,566	6.9	17,159	3.7	2.8	-3.2
전북	19,705	4.3	19,134	4.2	20,351	4.4	14,221	3.1	0.2	-1.3
전남	17,872	3.9	15,870	3.4	11,033	2.4	11,012	2.4	-1.0	0.0
경북	25,692	5.6	26,010	5.6	32,721	7.1	18,819	4.1	1.5	-3.0
경남	29,854	6.5	33,038	7.2	18,988	4.1	21,764	4.7	-3.1	0.6
제주	5,136	1.1	4,753	1.0	3,591	0.8	4,274	0.9	-0.2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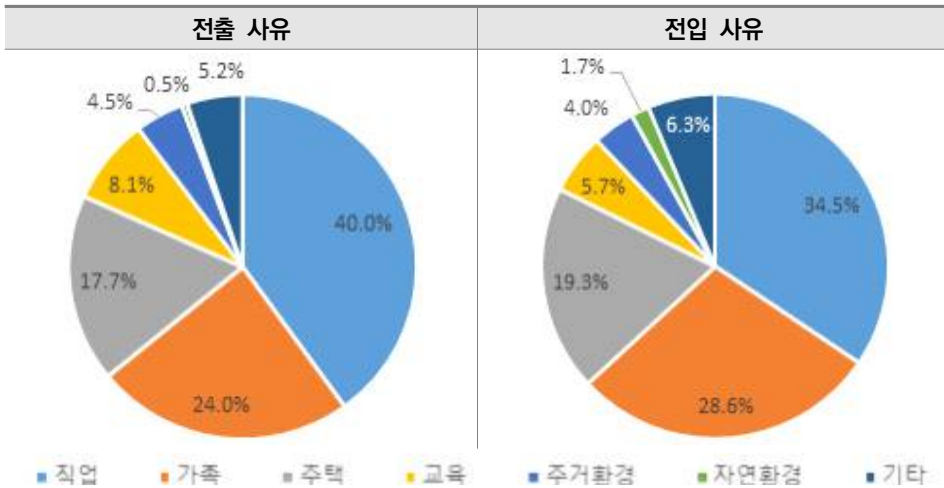
구분	모집단 추계 기준(n=460,384)									
	출생지		고교 소재지 (A)		대학 소재지 (B)		현재 거주지 (졸업 2년 후) (C)		진학시 이동 (B-A)	취업시 이동 (C-B)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세종	913	0.2	1,245	0.3	4,054	0.9	3,071	0.7	0.6	-0.2
기타	1,117	0.2	2,512	0.5	0	0.0	0	0.0	-0.5	0.0

자료: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19년 자료 저자가 가공하여 작성

주: 기타는 해외 또는 무응답을 의미함

- 2021년 기준 충청남도 청년의 전출 및 전입 사유는 1) 직업, 2) 가족 3) 주택으로 조사됨

[그림 3-10] 충남 청년의 전출 및 전입 사유 (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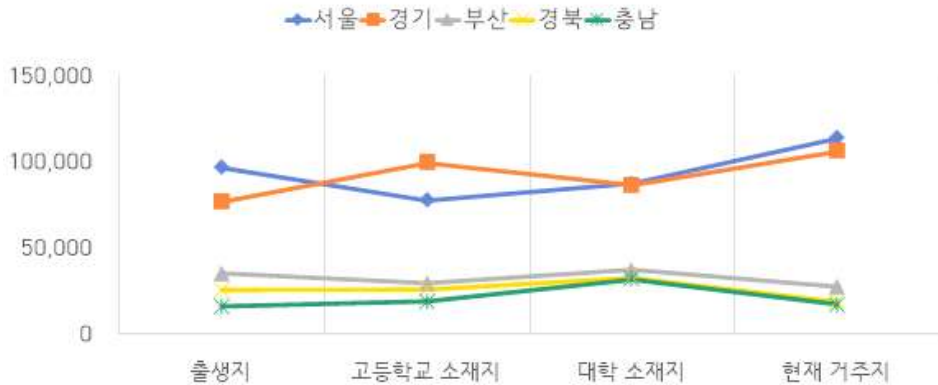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2023)

자료: 「충청남도 청년통계」(2021. 12월 기준)

- 종합해보면, 지역 간 청년인구의 시기별 이동 실태를 종합하면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출신 고등학생들이 충남 소재 대학에 유입되었다가 정주하지 않고 다시 졸업 이후에 유출됨을 알 수 있음

[그림 3-11] 주요 지역 생애주기별 청년 이동 현황



자료: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19년 자료 저자가 가공하여 작성

2.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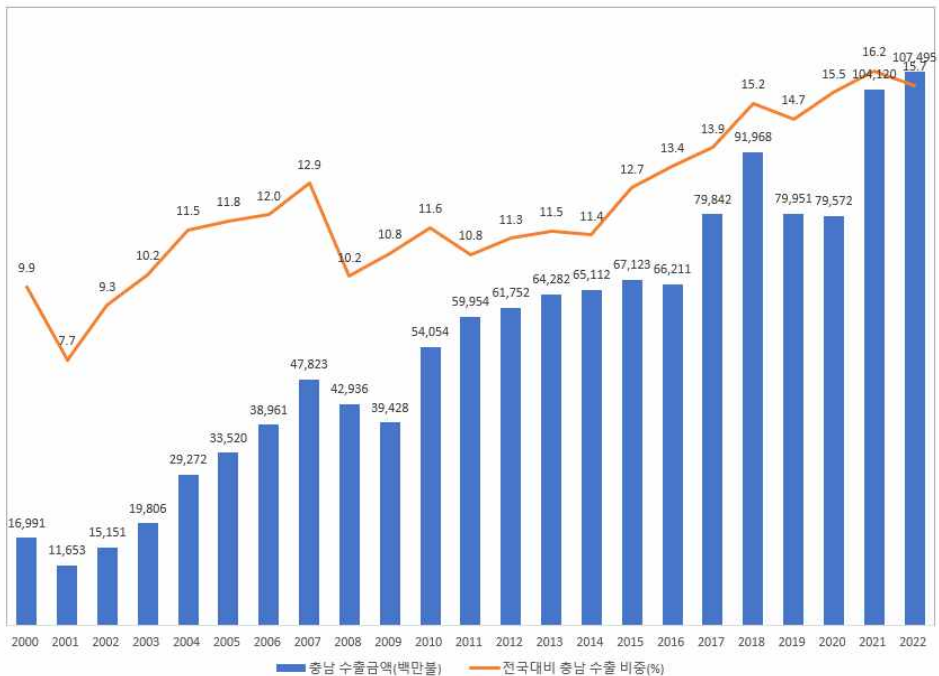
1) 충남지역 산업 여건

- 충남지역은 경제 개발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국내·외 대기업의 생산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됨
- 충남지역은 1980년대 후반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고 1994년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이 충남 북부권에 자리 잡아 연관 기업 및 관련 시설이 집적화되어 충남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함(충청남도, 2020)
 - 충남지역은 수도권과 근접하여 수도권 규제의 상대적 이익을 얻게 되며 이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됨
 - 한편, 대기업의 성장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연계된 1차 및 2차 밴더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고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로 인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임

- 충남지역 산업의 또 다른 특성은 수출 기반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임
- 전국 대비 충남 수출액 비중은 2000년 9.9%에서 2022년 15.7%로 확대되었으며 증가세 뿐 아니라 규모도 2000년 약 170억 달러에서 2022년 기준 약 1,075억 달러로 확대되는 추세임

[그림 3-12] 충남 수출 변화 추이 (2000~2022년)

(단위: 백만불, %)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수출입통계²⁴⁾ 자료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수출 중심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특성은 1) 대외 의존도가 높아 외부 환경에 민감하고 2) 원자재 수입을 통해 가공된 중간재 수출이 주를 이뤄 부가가치율이 낮고 3) 대기업 의존형 경제구조 하에서 지역 소득의 역외유출, 중소기업과

24) 국내통계-지자체 수출입 <https://stat.kita.net/stat/kts/prod/ProdWholeList.screen>

대기업 간 격차 심화 등 지역경제 순환생태계의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음

□ (산업 구조) 충남 산업구조는 국가 수출 주축 산업인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편임

- 충남지역의 경제활동 분야별 총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전국 대비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음
 - 2020년 기준 전국 평균은 총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7%이지만 충남지역은 53.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제조업 비중이 큼
 - 충남은 수도권 및 중국과의 근접성, 항만시설 보유, 저렴한 지가 등 제조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데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급속히 재편됨
 - 특히 천안, 아산 등 충남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대기업의 생산 공장이 다수 위치²⁵⁾

[표 3-10] 전국 및 충남 경제활동 분야별 총부가가치 비중

(단위: %)

구분	전국		충남	
	2016	2020	2016	2020
농업, 임업 및 어업	2.0	1.9	4.3	3.8
광업	0.2	0.1	0.2	0.1
제조업	28.8	28.7	51.1	53.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0	2.3	4.9	4.8
건설업	5.7	5.2	6.6	5.2

25) 천안: 삼성SDI(1995), 삼성전자 천안사업장(1998)

아산: 삼성전자 온양사업장(1991), 현대자동차(1996), 삼성디스플레이(2004)서산: 롯데케미칼·한화토탈·LG화학(1988), 현대오일뱅크(1989), 현대케미칼(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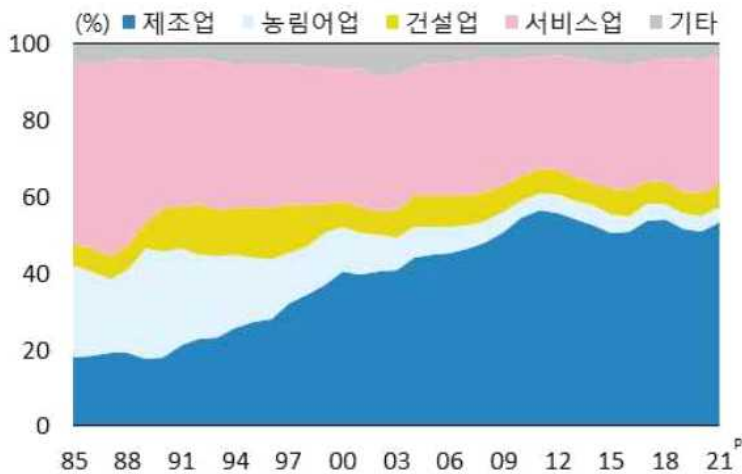
당진: 현대제철(1995), 동부제철(1999)

구분	전국		충남	
	2016	2020	2016	2020
도매 및 소매업	8.2	8.1	3.1	3.1
운수 및 창고업	3.6	3.0	2.4	2.2
숙박 및 음식점업	2.5	2.0	1.7	1.4
정보통신업	4.8	5.2	0.9	0.9
금융 및 보험업	5.7	6.6	2.3	2.5
부동산업	8.1	8.2	3.9	3.8
사업서비스업	9.4	9.4	4.4	4.3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3	6.6	5.5	5.9
교육 서비스업	5.3	5.1	4.0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4	5.1	2.7	3.0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3.0	2.6	1.9	1.6

출처: 통계청(지역소득통계)

[그림 3-13] 충남 산업별 총부가가치 비중 변화

(단위: %)



출처: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2023:10)

- '20년 기초가격 기준으로 총부가가치 중 제조업이 약 54조 6,457억원으로 50% 이상을 차지하여 제조업이 특화되어 있는 산업적 특성 보임
- 제조업의 5개년 연평균 증가율은 4.1%로 전체 산업의 평균 증가율 2.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외에 총부가가치액의 5개년 기준 성장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2%), 사업서비스업(4.8%), 제조업(4.1%) 등임

[표 3-11] 충남 총부가가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총 부가가치(기초가격)	94,264,372	99,630,422	100,452,872	102,076,888	102,919,680	2.8
농업, 임업 및 어업	4,062,777	4,057,495	4,017,635	4,227,809	3,960,571	-1.5
광업	165,371	127,575	109,330	100,121	119,748	-8.7
제조업	48,190,717	52,636,346	53,764,781	54,143,399	54,645,762	4.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656,937	5,396,813	5,091,934	5,280,521	4,920,541	2.2
건설업	6,260,429	6,171,211	5,334,840	4,951,911	5,315,629	-5.4
도매 및 소매업	2,939,108	3,067,913	3,123,213	3,159,668	3,238,143	2.4
운수 및 창고업	2,236,772	2,365,865	2,343,627	2,328,361	2,257,275	2.6
숙박 및 음식점업	1,588,211	1,597,320	1,640,814	1,670,379	1,431,416	2.9
정보통신업	803,327	792,227	812,724	860,906	892,740	3.3
금융 및 보험업	2,175,777	2,263,583	2,382,103	2,452,957	2,580,210	3.2
부동산업	3,696,121	3,733,073	3,754,324	3,795,404	3,913,627	1.3
사업서비스업	4,178,502	3,795,723	3,889,215	4,471,222	4,438,972	4.8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203,480	5,323,087	5,452,899	5,624,125	6,100,941	2.8
교육 서비스업	3,812,697	3,913,915	4,056,833	4,138,091	4,108,878	2.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547,253	2,663,100	2,860,795	3,100,973	3,107,327	7.2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1,746,893	1,711,790	1,738,252	1,733,533	1,668,345	0.2

출처: 통계청(지역소득통계)

□ (지역 경제 주도 산업) 부가가치로 판단했을 때 충남 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은 제조업 중에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탄·화력 발전, 자동차 부품 등임

- 제조업의 총부가가치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1)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36.3%) → 2) 석탄 및 석유화학제품(22.4%) → 3) 기계 운송장비(19.8%) 순임
 - 따라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석탄 화력 발전, 자동차(부품)이 충남도의 경제를 주도하는 주축 산업임을 알 수 있음

[표 3-12] 충남 제조업 지역내총생산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계	56,179,026	56,488,317	53,049,896	53,147,472	△1.83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2,093,872	2,357,077	2,481,129	2,664,871	8.37
섬유 의복 및 가죽 제품 제조업	432,187	391,423	323,958	394,423	△3.00
목재종이인쇄 및 복제업	713,304	841,034	787,763	783,692	3.19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13,197,756	13,284,215	13,118,642	11,882,454	△3.44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8,228,696	8,388,028	7,789,584	7,632,500	△2.48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21,060,658	21,732,823	19,169,173	19,292,479	△2.88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0,452,553	9,493,717	9,379,647	10,497,053	0.14

출처: 통계청 「지역소득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충청남도 내부자료에서 재인용

2) 충남 지역 경제 여건

□ 지역 내 총생산(GRDP) 현황

- '21년 충남 지역 GRDP는 약 124조로 전년대비 약 7.84% 증가하여 전국 평균 성장률인 6.77%를 상회하며, 전국 대비 비중은 6.00%로, '18년 수준으로 회복함
 - 지역 내 총생산은 '17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이 급감한 뒤 '19년 이후 회복 추세임

- 1인당 GRDP는 57.24백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69.13백만원인 울산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반면, '16년부터 '2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측면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체된 상황이며 '17년 이후 감소 추세임
- 종합해보면 충남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17년 이후 경제 성장 정체가 우려되는 상황임

[그림 3-14] 충남 지역내총생산 전국 대비 비중 및 성장률 추이

(단위: 백만원, %)



1. 지역 내 총생산 전국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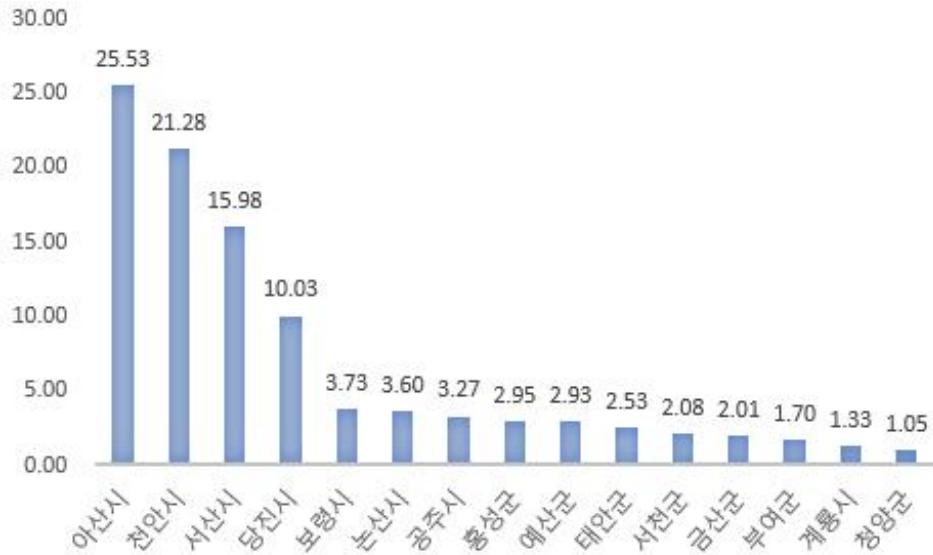
2. 전국대비 성장률 추이

출처: 2023년도 충남지역산업 진흥계획

- 한편, 충남 지역 북부권과 그 외 권역(서해안권, 내륙권, 남부권) 간 경제력 격차 심화로 인해 지역 내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19년 기준 충남 내 15개 시군의 GRDP 비중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 북부권 내 4개 시(아산, 천안, 당진, 서산)가 충남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8%에 달하며, 천안, 아산 두 지역이 충남 전체 약 46%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그림 3-15] 2019년 기준 충남 15개 시군의 GRDP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시군구 GRDP²⁶⁾ 자료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지역 내 총소득(GRI) 현황

- 충남 지역의 지역 내 총소득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42.1백만원이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연평균 증가율은 2.9% 수준임

[표 3-13] 지역별 1인당 지역 내 총소득 (2016-2020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5개년 연평균 증가율
전국	34.2	36.0	37.0	37.6	37.8	2.6
서울	44.1	46.7	48.4	48.7	49.0	2.7
부산	26.9	27.6	28.3	29.3	29.6	2.5

26)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65_03E&conn_path=I3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5개년 연평균 증가율
대구	25.6	26.6	27.0	27.7	27.9	2.3
인천	29.7	31.0	31.4	32.9	32.7	2.5
광주	27.4	28.8	29.8	31.2	31.7	3.7
대전	28.1	30.1	30.5	31.6	32.1	3.3
울산	52.2	52.2	52.7	54.2	53.9	0.8
세종	41.0	40.9	37.2	38.2	37.9	-2.0
경기	34.6	37.6	39.2	38.9	38.8	2.9
강원	25.3	27.2	28.5	29.4	28.9	3.3
충북	30.5	32.0	33.7	34.9	35.4	3.8
충남	37.6	39.3	39.9	41.1	42.1	2.9
전북	24.7	25.7	26.8	28.3	29.5	4.6
전남	33.8	34.5	35.2	35.7	38.6	3.4
경북	33.7	33.8	34.5	35.0	35.5	1.3
경남	30.4	31.0	31.0	32.0	31.6	1.0
제주	29.3	30.9	31.2	30.7	30.0	0.6

출처: 통계청(지역소득통계)

주: 1인당지역내총소득(백만 원/명)=지역내총소득(당해년가격)÷추계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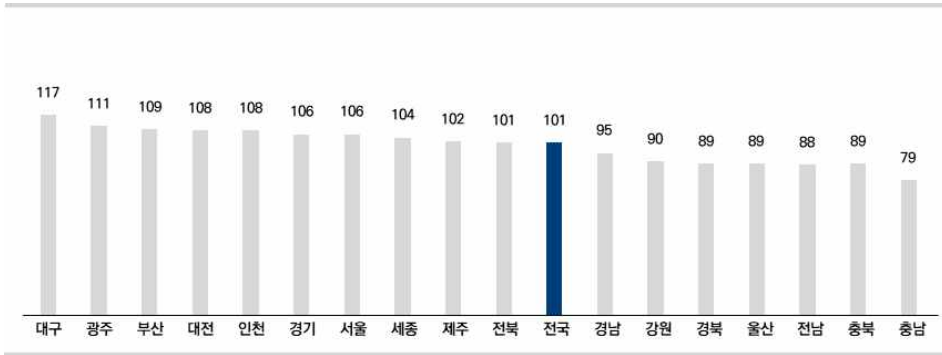
□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지역 내 총소득 현황

○ 충남 지역의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지역 내 총소득의 비중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79%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지역에서 산출된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지역 내 총생산(GRDP)의 상당 부분이 지역내 소득(GRI)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타 지역 소득으로 유출됨을 의미함
- 충남의 지역 경제가 LCD,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고용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 집약적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역 내 총소득 비중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내 생산액이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는 의미로, 충남지역 내 근로자 중 상당수가 수도권 및 대전, 세종 등 광역 경제권에 거주하거나 타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그림 3-16]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 내 총소득 비중 (2020년 기준)

(단위: %)



출처: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2)

- (지역의 순수취 본원소득)²⁷⁾ 소득 유입 및 유출 추세를 알 수 있는 지표인 지역의 순수취 본원소득을 보면 소득의 역외 유출 규모를 비교할 수 있음
- 2022년 기준 한국은행 목포본부 추정 자료를 보면 충남의 소득역외순유출 규모가 25.7조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의 경우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내내 계속 음수로 나타나 소득이 순유출되고 있어 전국 평균값이 양수인 것에 비해 소득 역외 유출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14] 시도별 소득역외순유출입 현황 (2022년)

(단위: 조원, %)

순위	GRDP(A)			GRI(B)			소득역외순유출입 (B-A)	
	시도	금액	비중	시도	금액	비중	시도	금액
1	경기	560.8	25.9	경기	594.0	27.1	충남	-25.7
2	서울	486.7	22.5	서울	531.4	24.2	전남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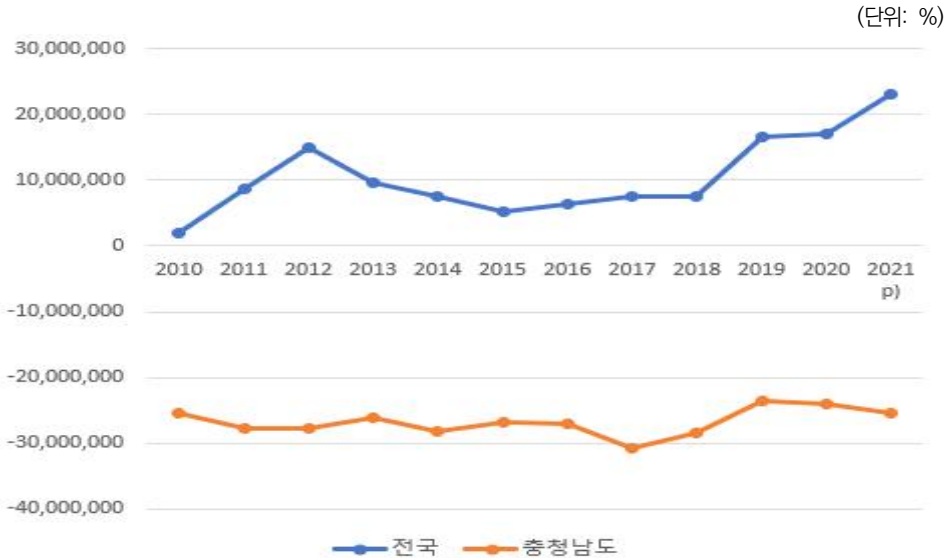
27) 지역의 순수취 본원소득은 거주지 기준의 지역총소득()과 발생지 기준의 지역내총생산(GRDP)과의 차이를 의미하며 양수인 경우에는 소득이 순유입되고 음수인 경우에는 소득이 순유출되는 것을 의미함. 더 자세한 내용은 조성민(2018)과 한국은행 목포본부 보도자료(2023.05) 참조

순위	GRDP(A)			GRI(B)			소득역외순유출입 (B-A)	
	시도	금액	비중	시도	금액	비중	시도	금액
3	충남	125.9	5.8	경남	116.7	5.3	충북	-13.8
4	경남	119.6	5.5	부산	111.0	5.1	경북	-12.5
5	경북	113.5	5.2	인천	109.5	5.0	울산	-11.3
6	부산	102.8	4.7	경북	101.0	4.6	강원	-4.1
7	인천	101.8	4.7	충남	100.1	4.6	경남	-2.9
8	전남	87.7	4.0	대구	72.8	3.3	전북	0.5
9	충북	80.0	3.7	전남	68.8	3.1	세종	0.8
10	울산	79.7	3.7	울산	68.4	3.1	제주	1.6
11	대구	63.3	2.9	충북	66.2	3.0	대전	3.7
12	전북	58.2	2.7	전북	58.7	2.7	광주	5.3
13	강원	54.9	2.5	광주	51.7	2.4	인천	7.7
14	대전	47.8	2.2	대전	51.5	2.3	부산	8.2
15	광주	46.3	2.1	강원	50.9	2.3	대구	9.6
16	제주	21.9	1.0	제주	23.6	1.1	경기	33.2
17	세종	16.3	0.8	세종	17.1	0.8	서울	44.7
	전국	2,167.0	100.0	전국	2,193.3	100.0	-	-

출처: 한국은행 목포본부(2023.05)

주: 2022년 소득 역외유출 금액, GRDP, GRI는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자체 추산한 부가가치액을 기초로
가정에 따라 산출된 수치로 추후 발표되는 공식통계인 지역소득(통계청) 통계와는 다를 수 있음에 유의

[그림 3-17] 전국 및 충남 지역의 순수취 본원소득 추세



출처: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자료 사용하여 저자 작성

3) 노동시장 여건

□ 주요 고용지표 현황

- (실업률 및 고용률) 2022년 기준 충남의 실업률은 2.3%로 전국 2.9%를 하회하는 수준이고 전년대비 유사한 수준이고 2022년 기준 충남 고용률은 약 64.3%이고 전년 대비 고용률이 약 1.3%p 증가하였음
 - 충남 지역 실업률은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이고 고용률은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충남의 노동시장은 다소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임
-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 2022년 기준 충남의 경제활동인구수는 1,225천명이고 15-64세 고용률은 69.5%로 전국 수준을(68.5%) 상회함
- (취업자) 2022년 기준 충남 취업자 수는 1,225천명으로 전국 취업자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실업자) 실업자 수는 2만9천명으로 전국 실업자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음

[표 3-15] 충남 주요 고용지표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실업률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 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 활동 참가율
전국	2017년	3.7	60.8	66.6	27,748	16,183	26,725	1,023	63.2
	2018년	3.8	60.7	66.6	27,895	16,287	26,822	1,073	63.1
	2019년	3.8	60.9	66.8	28,186	16,318	27,123	1,063	63.3
	2020년	4.0	60.1	65.9	28,012	16,773	26,904	1,108	62.5
	2021년	3.7	60.5	66.5	28,310	16,770	27,273	1,037	62.8
	2022년	2.9	62.1	68.5	28,922	16,339	28,089	833	63.9
충남	2017년	2.8	62.3	67.9	1,174	657	1,140	33	64.1
	2018년	3.1	63.5	69.0	1,216	639	1,179	38	65.6
	2019년	2.9	63.7	69.3	1,231	647	1,196	35	65.6
	2020년	3.5	62.4	67.8	1,218	667	1,176	42	64.6
	2021년	2.3	63.0	68.2	1,221	672	1,193	28	64.5
	2022년	2.3	64.3	69.5	1,225	653	1,226	29	65.8

출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21)

- 충남지역 청년층(1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 이후 2019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20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22년에 다시 증가하였음

[표 3-16] 충남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충남	전체	64.1	65.6	65.6	64.6	64.5	65.8
	15 - 64세	70.1	71.3	71.5	70.3	69.9	71.3
	15 - 19세	8.3	9.4	9.2	6.3	7.4	9.2
	20 - 29세	62	64.7	65.2	60.9	58.1	61.7
	30 - 39세	80.8	78.8	76.9	77.1	78.8	81.3
	40 - 49세	82.3	83.3	84.1	83.4	81.5	79.8
	50 - 59세	79.2	80.0	80.7	79.3	80.0	80.4
	60세 이상	46.2	49.4	49.2	50.2	50.9	53.1

출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7~2022)

4) 노동 수요 및 공급 현황

□ (사업체 현황) 충남의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충남 사업체 수는 253,192개('20년 기준)로 전국 사업체 수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사업체 수 연평균 증가율은 14.49%수준이며 충남은 이보다 약간 높은 15.05%임

[표 3-17] 충남 사업체 수 현황

(단위: 개,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충청남도	166,247	172,242	176,643	253,192	15.05
전국	4,019,872	4,103,172	4,176,549	6,032,022	14.49

출처: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원자료 가공, 충청남도 내부자료에서 재인용

□ (종사자 현황) 충남의 종사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충남 종사자 수는 1,064,810명('20년 기준)으로 전국 종사자 수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종사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4.69%수준이며 충남은 이보다 약간 높은 5.85%임

[표 3-18] 충남 종사자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충청남도	897,794	928,259	973,944	1,064,810	5.85
전국	21,626,904	22,234,776	22,723,272	24,813,449	4.69

출처: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각 년도 원자료 가공, 충청남도 내부자료에서 재인용

□ 전국과 충남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비교

- 사업체수는 산업별로 도매 및 소매업(23.9%)의 비중이 가장 크며, 숙박 및 음식점업(16.3%) → 제조업(9.6%) → 건설업(9.6%) → 운수 및 창고업(8.9%)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수는 산업별로 제조업(29.5%)의 비중이 가장 크며, 도매 및 소매업(11.4%)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건설업(8.5%) → 숙박 및 음식점업(8.4%) 순임

[표 3-19] 전국과 충남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비교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국	충남	전국	충남
	2020	2020	2020	2020
농업, 임업 및 어업	0.2	0.6	0.3	0.7
광업	0.0	0.1	0.1	0.1
제조업	9.6	9.6	17.2	29.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2	3.9	0.6	1.6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2	0.3	0.5	0.7
건설업	7.8	9.6	8.7	8.5
도매 및 소매업	26.0	23.9	14.9	11.4
운수업	9.8	8.9	5.3	4.3
숙박 및 음식점업	14.3	16.3	8.4	8.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9	0.7	3.1	0.7
금융 및 보험업	1.1	0.8	2.9	1.7
부동산업 및 임대업	4.6	3.5	2.8	1.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7	2.1	5.5	2.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5	2.4	5.3	4.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2	0.3	3.3	3.5
교육 서비스업	3.9	3.4	6.7	6.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6	2.7	9.1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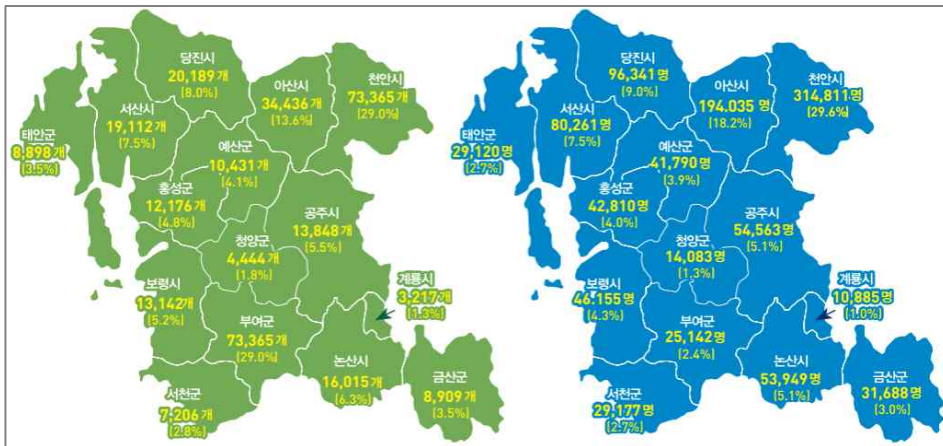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국	충남	전국	충남
	2020	2020	2020	202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4	2.3	1.7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9	8.6	3.7	3.6

출처: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2020) 자료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지역별로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순으로 종사자 수가 많고, 이는 인구 분포 및 지역별 사업체 분포와도 유사한 결과임

[그림 3-18] 충남 시군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명, %)



출처: 충남 내부자료(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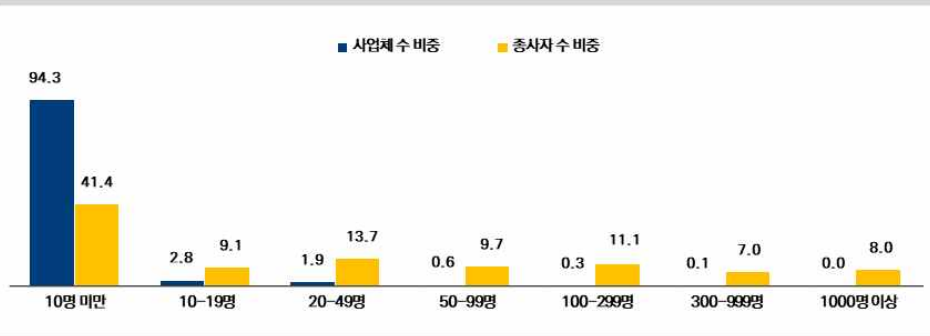
- 인구 10만 이상 시·군이 6개인 것에 비해, 종사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시·군은 천안, 아산 2개 지역에 불과하여 지역별 산업 편중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

□ 충남지역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

- 충남지역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을 보면, 10명 미만 사업체 수가 전체 사업체 수 대비 94.3%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이 기업이 영세한 상황임
- 다음으로 종사자 수 비중을 보면, 전체 종사자의 41.4%가 종사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체의 0.01%인 1,0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전체 종사자의 8.0%가 고용되어 있음

[그림 3-19]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중

(단위: %)



출처: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2)

□ 10년간 충남지역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중 변화

- 지난 10년간 충남지역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국 대비 제조업의 사업체 수 비중은 유사하나 종사자 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적임
 - 충남지역 제조업의 종사자 수 비중은 전국 평균인 17.2%의 두 배 수준인 29.5%로 나타남
 - 충남은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나,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비 제조업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편으로 나타남

[표 3-20] 최근 10년 간 전국과 충남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비중 변화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국		충남		전국		충남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농업,임업 및 어업	0.1	0.2	0.2	0.6	0.2	0.3	0.4	0.7
광업	0.1	0.0	0.1	0.1	0.1	0.1	0.2	0.1
제조업	10.0	9.6	9.5	9.6	19.4	17.2	31.0	29.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0	1.2	0.1	3.9	0.3	0.6	0.6	1.6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2	0.2	0.2	0.3	0.5	0.5	0.7	0.7
건설업	2.9	7.8	3.2	9.6	6.7	8.7	5.2	8.5
도매 및 소매업	26.0	26.0	26.1	23.9	14.8	14.9	12.5	11.4
운수업	10.3	9.8	8.3	8.9	5.6	5.3	4.1	4.3
숙박 및 음식점업	19.0	14.3	22.0	16.3	10.0	8.4	10.3	8.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8	1.9	0.4	0.7	2.6	3.1	0.8	0.7
금융 및 보험업	1.2	1.1	1.2	0.8	4.1	2.9	2.9	1.7
부동산업 및 임대업	3.4	4.6	2.8	3.5	2.4	2.8	1.6	1.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1	3.7	1.4	2.1	4.4	5.5	1.7	2.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4	2.5	1.3	2.4	4.7	5.3	2.7	4.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4	0.2	0.6	0.3	3.8	3.3	4.3	3.5
교육 서비스업	5.0	3.9	4.6	3.4	8.1	6.7	8.9	6.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2	2.6	3.4	2.7	6.2	9.1	6.3	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	2.4	2.8	2.3	1.8	1.7	1.6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9	7.9	12.0	8.6	4.5	3.7	4.4	3.6

출처: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2020) 자료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업종별로 보면, 농림어업, 건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체의 증가율이 높은 편임
- 충남지역의 총생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임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농림어업, 건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지난 10년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으로 파악됨
-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모두 10년 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체 수 증가에 비해 종사자 수의 증가는 그에 미치지 못하여 신규 사업체의 영세성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

[표 3-21] 최근 10년간 전국 및 충남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가율

(단위: %)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체	6.0	6.5	3.5	4.2
농업, 임업 및 어업	18.9	20.7	8.1	10.4
광업	2.3	2.8	-0.7	-2.1
제조업	5.6	6.8	2.2	3.7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1	10.2	4.3	4.5
건설업	16.9	18.9	6.3	9.5
도매 및 소매업	6.0	5.6	3.5	3.3
운수업	5.5	7.3	3.0	4.8
숙박 및 음식점업	3.1	3.4	1.7	2.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5.7	12.3	5.2	2.5
금융 및 보험업	5.0	2.4	0.2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9.3	8.9	5.1	4.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2.1	10.7	5.9	9.1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2.1	13.6	4.7	9.5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국	충남	전국	충남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5	-0.2	2.2	2.2
교육 서비스업	3.5	3.5	1.5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9	4.1	7.4	7.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5	4.6	2.8	2.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7	3.1	1.5	2.3

출처: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2020) 자료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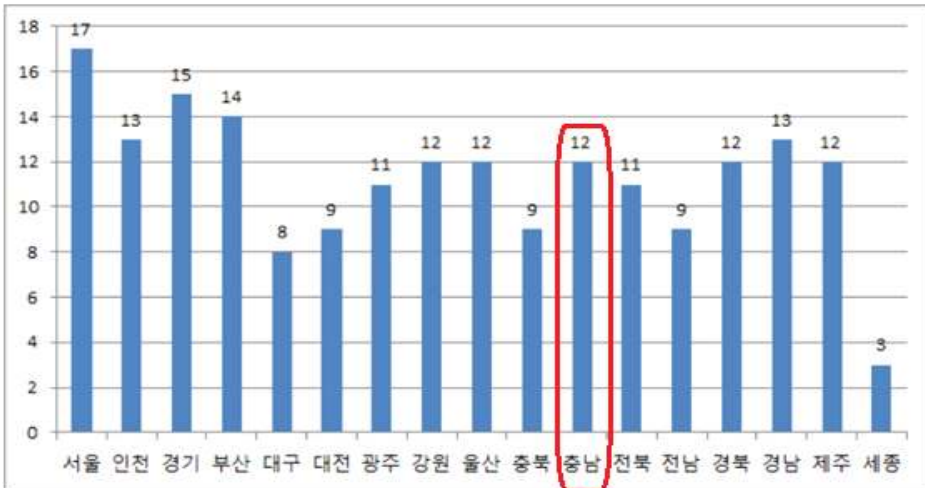
□ (일자리 격차 심화)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격차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

- 감사원(2021)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금감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²⁸⁾ 2,278개 중 약 73%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충남은 79개로 약 3.5% 차지하고 있었음²⁹⁾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산업은 총 18개이고 수도권에는 평균적으로 13~17개 산업이 분포한 반면 충남은 12개의 업종이 분포하고 있음
 - 특히 직원 훈련기관이나 성인 교육기관 등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서울, 인천, 부산에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8) 금감원 전자 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기업을 의미함

29) 서울 1,179개(51.8%), 인천 64개(2.8%), 경기 418개(18.3%)로 총 1,661개(72.9%), 지방은 충남 79개(3.5%), 경북 63개(2.8%), 경남 63개(2.8%) 등 총 617개(27.1%)의 회사가 분포되어 있어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3-20] 지역별 업종 분포 현황



출처: 감사원(2021:44), 금감원 제출 자료 재구성, 업종은 산업 대분류 기준임

- 충남지역 구인·구직 동향을 보면, 2021년 기준 구직인원은 173,556명으로 기업의 구인인원인 143,628명보다 높은 수준임
 - 연도별 구인·구직인원 추이를 보면, 구인·구직인원은 2016년 대비 2017년에 증가하였으나, 이후 2019년까지 감소 후 다시 2021년까지 증가하는 등 횡보하는 양상을 보임
- 기업체 신규 구인인력을 신규 구직자수로 나눈 '구인배수'가 1 미만일 경우에는 구인 인원(노동 수요)에 비해 구직 인원(노동 공급)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인력 수급 미스매치 척도의 하나로 활용되는 지표임
 - 2021년 기준 충남 지역의 구인배수는 0.83으로 전국 0.55 대비 높은 수준이고, 충남의 구인배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도 유지되었으나 2021년 다시 증가함
 - 전국 대비 구인배수가 높다는 것은 타 지역 대비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며 충남의 구인배수가 2021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표 3-22] 전국 및 충남 구인·구직 동향 추세

(단위: 명, 건, %)

구분	전국				충남			
	구인인원	구직인원	취업건수	구인배수	구인인원	구직인원	취업건수	구인배수
2016년	2,794,405	4,513,114	2,060,660	0.62	135,616	150,912	79,849	0.90
2017년	2,852,664	4,803,017	2,152,661	0.59	143,031	168,742	92,916	0.85
2018년	2,436,823	4,009,506	1,832,804	0.61	120,020	145,944	70,358	0.82
2019년	2,128,728	4,058,258	1,909,642	0.52	101,178	142,159	60,739	0.71
2020년	2,045,112	4,551,020	1,556,597	0.45	105,007	148,695	56,302	0.71
2021년	2,829,040	5,138,533	1,802,365	0.55	143,628	173,556	63,421	0.83

주: 구인배수 = 신규 구인인원 / 신규 구직인원

출처: 고용노동부(워크넷, 구인구직통계), 한국고용정보원³⁰⁾

○ 2023년 1월~3월 합계 기준 구인배율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충남의 경우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이 4.47%로 나타나 가장 높고, 그 외 농림어업직, 섬유·의복 생산직, 제조 단순직 등이 높게 나타나며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등이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충남지역에서 이들 직종의 인력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신규 구인배율이 1 미만인 직업은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전체,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전체, 보건 의료직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들 직종에서 일자리 공급 대비 구직자가 많아 고용 부진이 높고 유희 노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뜻함

[표 3-23] 전국 및 충남 직업별 구인배율 (2023년 1~3월 합계 기준)

(단위: %)

직업 대분류	직업 중분류	전국	충남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전체	0.55	0.83
	관리직(임원·부서장)	0.22	0.25
	경영·행정·사무직	0.31	0.42
	금융·보험직	0.18	0.13

3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101&conn_path=I2

직업 대분류	직업 중분류	전국	충남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0.28	0.07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0.24	0.4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0.16	0.19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0.80	1.33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0.58	0.91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교육직	0.15	0.14
	법률직	0.13	0.07
	사회복지·종교직	0.31	0.36
	경찰·소방·교도직	0.03	0.00
	군인	0.01	0.00
보건·의료직	보건·의료직	0.26	0.37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예술·디자인·방송직	0.12	0.15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0.32	0.5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미용·예식 서비스직	0.06	0.07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0.42	0.27
	음식 서비스직	0.48	0.44
	경호·경비직	0.33	0.19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0.88	0.75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0.95	1.41
영업·판매·운전·운송직	영업·판매직	0.40	0.52
	운전·운송직	0.69	0.78
건설·채굴직	건설·채굴직	0.53	0.47
설치·정비·생산직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32	1.79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2.38	2.95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0.58	0.77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0.88	0.60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2.48	4.47
	섬유·의복 생산직	0.89	2.52
	식품 가공·생산직	0.78	1.95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0.98	1.28
농림어업직	제조 단순직	1.45	2.11
	농림어업직	1.31	3.53

자료: 워크넷 구인구직통계현황³¹⁾

31) <https://eis.work.go.kr/>

- 2022년 기준 충남 지역 인력 부족 현황을 보면, 미충원 인원은 9,152명으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인력부족률 역시 3.8%로 증가하였음
- 충남의 인력부족률은 전국 3.4%보다 높은 상황이며, 2021년 이래로 충남의 채용 계획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부족률 역시 크게 증가하여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표 3-24] 전국과 충남 인력 부족 현황 추세

(단위: 명, 건, %)

구분		현원	구인 인원	채용 인원	미충원 인원	부족 인원	채용계획 인원	부족률
전국	'17년	11,706,956	720,850	636,172	84,678	279,539	303,380	2.3
	'18년	11,909,596	747,623	664,179	83,444	268,757	294,383	2.2
	'19년	12,018,829	672,671	598,269	74,402	241,402	255,867	2.0
	'20년	12,320,546	621,350	556,807	64,543	238,002	253,067	1.9
	'21년	17,223,546	1,153,221	1,018,212	135,009	553,798	598,405	3.1
	'22년	17,280,505	1,205,658	1,020,553	185,105	604,611	618,642	3.4
충남	'17년	486,160	29,188	24,920	4,268	11,384	12,587	2.3
	'18년	502,103	31,412	27,731	3,681	10,678	10,935	2.1
	'19년	508,259	26,084	23,167	2,917	8,589	9,058	1.7
	'20년	524,476	22,511	19,935	2,576	9,194	9,561	1.7
	'21년	725,930	49,477	43,457	6,020	26,222	35,932	3.5
	'22년	730,823	52,412	43,260	9,152	28,977	29,870	3.8

출처: 고용노동부(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하반기 기준)

부족률 = 부족인원 / (현원+부족인원) × 100

- 한편, 2022년 기준 전국과 충남 지역의 인력 부족 현황을 산업 및 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산업별로 보면 전국은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의 순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은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도매 및 소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제조업 순으로 전규모에서 인력 부족률이 높은 편임

- 전국과 충남의 인력 부족률은 300인 이상보다 5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 볼 때 300인 이상 규모의 인력 부족률이 높은 산업은 전국의 경우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표 3-25] 전국과 충남 인력 부족률 산업별 현황 (2022년)

(단위: %)

산업분류별	전국			충남		
	전규모 (1인이상)	5~ 299인	300인 이상	전규모 (1인이상)	5~ 299인	300인 이상
	부족률 (%)			부족률 (%)		
전산업	3.4	3.6	1.6	3.8	4.1	1.4
광업	2.0	1.6	0.8	1.6	1.8	0.0
제조업	4.2	4.8	1.0	4.2	5.2	0.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0.5	0.7	0.1	0.8	1.8	0.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2	2.0	4.1	2.3	1.8	0.0
건설업	2.0	2.1	1.0	3.3	3.2	0.0
도매 및 소매업	3.4	3.1	2.3	4.6	4.3	0.0
운수 및 창고업	6.5	8.5	2.1	3.8	4.6	3.1
숙박 및 음식점업	5.3	5.9	5.1	7.4	5.9	0.0
정보통신업	4.2	4.7	3.0	4.7	5.5	0.0
금융 및 보험업	1.8	0.9	2.0	2.1	0.7	0.0
부동산업	1.6	0.9	1.1	1.1	1.6	0.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7	3.1	1.5	3.4	2.8	6.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6	2.8	1.8	2.9	3.6	3.6
교육 서비스업	1.9	1.5	0.9	0.5	0.4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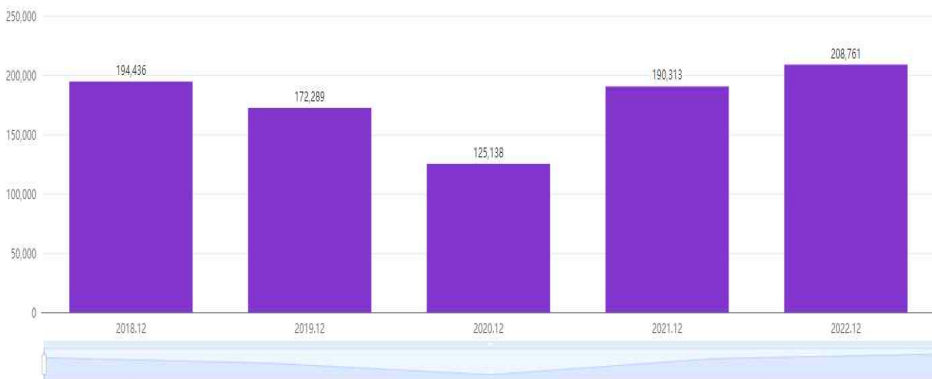
산업분류별	전국			충남		
	전규모 (1인이상)	5~ 299인	300인 이상	전규모 (1인이상)	5~ 299인	300인 이상
	부족률 (%)			부족률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8	2.9	2.2	3.3	3.3	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1	3.0	1.6	2.2	2.7	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7	3.2	2.3	4.4	5.1	0.0

출처: 고용노동부(산업별, 규모별 사업체노동력조사, 2022년 하반기 기준)

- 한 달 이내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빈일자리수’의 전국 현황을 살펴보면 ’18년(194,436명)부터 ’20년(125,138명)까지 감소하다가 ’21년(190,313명)부터 증가하여 ’22년 12월 기준 208,761명에 달하고 있음

[그림 3-21] 전국 빈일자리수 추세 (’18년~’22년)

(단위: 명)



출처: KOSIS 100대 지표³²⁾, 고용노동부(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매년 하반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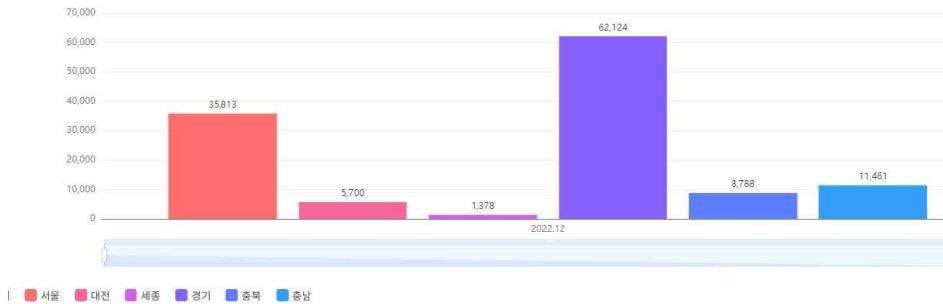
주: 근로자는 상용+임시·일용직

32) KOSIS 100대 지표 <https://kosis.kr/visual/nsportalStats/main.do> (검색일 기준: 2023., 07.10)

- 충남의 경우 '22년 12월 기준 빈일자리수는 11,461명으로 서울(35,813명), 경기(62,124명)에 비해 적은 수준이나 대전(5,700명), 충북(8,788명), 세종(1,378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3-22] 주요 지역 및 충남 빈일자리수 비교 (2022년)

(단위: 명)



출처: KOSIS 100대 지표,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매년 하반기 기준)

주: 근로자는 상용+임시·일용직

○ 빈일자리수와 빈일자리율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국적으로 빈일자리율은 1.2%이며,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충남의 빈일자리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1.4%이며 산업별로 보면 인력 부족률이 높았던 전통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과 제조업 등에서 빈일자리수와 빈일자리율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26] 전국과 충남 산업별 빈일자리수 및 빈일자리율 현황 (2022년)

(단위: 명, %)

산업분류	전국		충남	
	빈일자리수	빈일자리율	빈일자리수	빈일자리율
전체	213,573	1.2	11,294	1.4
광업	153	1.2	5	0.8
제조업	65,875	1.8	5,406	1.8

산업분류	전국		충남	
	빈일자리수	빈일자리율	빈일자리수	빈일자리율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45	0.2	2	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270	1.1	44	0.6
건설업	9,536	0.7	393	0.8
도매 및 소매업	25,489	1.3	1,342	2.4
운수 및 창고업	23,236	3.5	505	2.4
숙박 및 음식점업	20,708	1.9	544	1.4
정보통신업	7,346	1.1	118	1.6
금융 및 보험업	1,069	0.2	30	0.3
부동산업	1,962	0.5	205	2.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118	0.8	284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911	0.8	483	1.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21	0.1	49	0.1
교육 서비스업	5,056	0.4	155	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3,444	1.1	1,246	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726	1.0	121	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506	1.5	362	2.1

주: 근로자는 상용+임시·일용직, 빈 일자리율 = 빈 일자리 수 / (빈 일자리 수+근로자 수)×100

출처: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행정구역(시도)/산업별(대분류) 고용³³⁾, 매년 하반기 기준)

□ 충남 지역노동시장 특성

- 지역노동시장권(local labour market areas: LLAS)은 노동공급 자급률, 노동 수요 자급률, 주거지·근무지 비율 등의 세가지 척도로 규정됨(Laan & Schalke, 2001)
 - 노동공급 자급률(employment self-containment ratio: ESC)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중 역외로 유출되는 인력을 제외한 지역 내취업자 백분율을 의미

33) 사업체노동력조사, 행정구역(시도)/산업별(대분류) 고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MOND56&conn_path=I2

- 노동수요 자급률(housing self-containment ratio: HSC)은 특정지역 노동수요 총량 중 특정 지역 내 거주자 취업자의 백분율을 의미
- 주거지·근무지 비율(home-work ratio: HWR)은 노동공급 자급률과 노동수요 자급률의 상대적 비율에서 1을 차감한 값의 백분율을 의미함
- 근무지 기능이 강할수록 HWR 값은 보다 큰 양수가 되고, 주거지 기능이 강할수록 HWR값은 보다 작은 음수가 됨(김혜정 외, 2017)

[표 3-27] 지역노동시장권의 유형 분류

노동시장권 유형	분류기준
폐쇄형	• $-5\% < \text{HWR} < 5\%$ 그리고 ESC와 HSC가 모두 75% 이상
개방형	• $-5\% < \text{HWR} < 5\%$ 그리고 ESC나 HSC 중 어느 하나가 75% 미만
근무지형	• $\text{HWR} > 5\%$
주거지형	• $\text{HWR} < -5\%$

출처: Laan & Schalke (2001:212), 김혜정·배진한, 박창귀(2017)에서 재인용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2017년과 2021년 하반기)로 충남 노동시장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충남의 노동수요자급률이 최근 4년간 91.8에서 91.2로 하락하였으며 노동공급자급률도 95.8에서 95.2로 하락하였음
- 둘째, 2021년 기준 시군별로 볼 때 노동수요자급률이 90% 이상인 곳이 보령시, 서산시, 부여군, 태안군 등 4개 뿐이고 노동공급자급률이 90% 미만인 곳은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등으로 나타났음

[표 3-28] 충남 시군별 지역노동시장 현황

지역	취업한 총거주자	지역내 소재 직장 총취업자	지역내 소재 직장 취업 거주자	노동수요 자급률 (HSC)		노동공급 자급률 (ESC)		주거지· 근무지비율 (HWR)	
				'17	'21	'17	'21	'17	'21
충남 합계	1,238,885	1,293,156	1,179,818	91.8	91.2	95.8	95.2	4.33	4.38
천안	399,518	380,508	320,948	84.3	84.3	82.3	80.3	-2.43	-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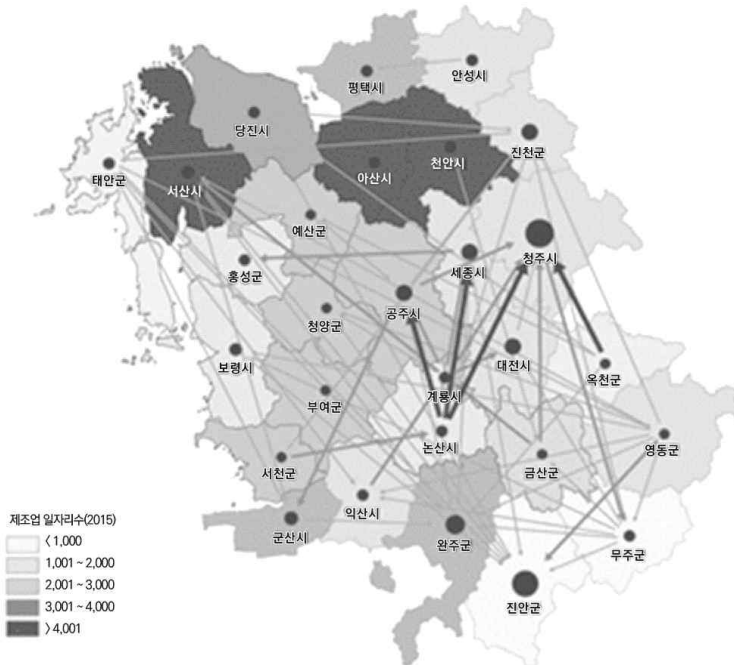
지역	취업한 총거주자	지역내 소재 직장 총취업자	지역내 소재 직장 취업 거주자	노동수요 자급률 (HSC)		노동공급 자급률 (ESC)		주거지· 근무지비율 (HWR)	
				'17	'21	'17	'21	'17	'21
공주	56,123	68,043	49,282	81.4	72.4	86.5	87.8	6.26	21.24
보령	56,341	57,130	49,282	94.6	94.6	98.0	95.9	4.0	1.4
아산	178,475	195,142	134,155	69.3	68.7	80.2	75.2	15.64	9.34
서산	101,405	101,788	96,062	94.2	94.4	94.3	94.7	0.07	0.38
논산	63,454	74,861	59,338	82.1	79.3	92.2	93.5	12.29	17.98
계룡	20,738	17,055	11,531	76.3	67.6	51.1	55.6	-33.1	-17.7
당진	100,134	110,803	96,029	90.4	86.7	95.6	95.9	5.80	10.65
금산	31,572	42,753	29,177	71.0	68.2	92.6	92.4	30.50	35.41
부여	39,039	40,413	37,022	87.2	91.6	93.8	94.8	7.53	3.52
서천	32,935	37,494	31,199	86.4	85.9	97.2	97.8	12.41	13.84
청양	20,304	22,393	19,438	89.8	86.8	95.8	95.7	6.71	10.29
홍성	51,915	55,006	48,033	89.7	87.3	91.2	92.5	1.67	5.95
예산	48,962	50,471	44,634	87.1	88.4	88.8	91.2	1.91	3.08
태안	37,971	39,297	36,806	92.3	93.7	97.1	96.9	5.21	3.49

출처: 김기희 외(2022:70)에서 자료 인용, 통계청 2017년, 2021년 지역별고용조사 하반기 원자료 사용

- 셋째, 앞서 언급한 지역노동시장권 분류에 따를 때 충남 노동시장은 2017년과 2021년 모두 주거지·근무지 비율(HWR)이 5% 미만이며, 노동수요자급률(HSC)과 노동공급자급률(ESC)이 75%를 상회하여 '폐쇄형 노동시장권'으로 볼 수 있음
- 넷째, 21년 기준으로 주거지형 노동시장권은 HWR이 -5% 미만인 계룡시가 해당됨
- 다섯째, 근무지형 노동시장권은 HWR이 5% 이상인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등이 포함됨. 이 도시들은 근로자들의 주거지가 인근 지역에 있어 통근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 여섯째, 폐쇄형 노동시장권은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부여군, 예산군, 태안군 등이 해당되며 개방형 노동시장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의 노동시장 특성은 생산과 소비의 괴리, 정주 환경 등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
 -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세종, 청주, 대전, 군산과 인접해 있어 실거주지와 근로지간 불일치로 역내 소비 진작에 한계가 있음

[그림 3-23] 충남과 주변 지역 직주 실태



출처: 백운성 외(2020:59)

□ 산업기술 인력³⁴⁾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2022)의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충남 지역 산업기술인력은 총 136,203명으로 파악됨
 - 충남 산업의 특성상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어 연구 개발, 기술직 생산직 등의 인력이 산업기술인력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임

34) 산업기술인력이란 고졸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정보통신 업무관련 관리자, 기업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의미함 (산업통상자원부, 2022)

- 산업별로 보면 12대 주력 산업 중 디스플레이 제조업이 22,8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제조업(17,482명), 화학 제조업(14,74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제조업 중에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등의 순으로 산업기술인력 현원이 많음
 - 학력별로 보면 전체 산업기술인력의 50% 이상이 고졸 이하 인력으로 나타난 반면, 석·박사 인력은 9,884명으로 매우 낮음
 - 제조업의 경우, 고졸 인력이 가장 많고 소프트웨어 분야, IT 비즈니스, 연구 개발업, 통신업 등은 전체 종사자 수는 적으나 대부분 전문 학사 이상 인력으로 구성됨
- 충남 지역 산업기술인력의 입사 3년차 연봉은 평균 4,722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이 6,567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제조업 중에서는 음료 제조업이 5,209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29] 충남 산업별 산업기술인력 현원 및 고용형태

(단위: 명, 만원)

구분		현원	학력 수준				입사 3년차 연봉
			고졸	전문 학사	학사	석·박사	
전체		136,203	70,794	21,852	33,674	9,884	4,722
12대 주력 산업	기계	11,682	6,447	2,100	2,778	357	4,853
	디스플레이	22,801	14,103	2,558	4,524	1,615	4,871
	반도체	15,668	8,984	2,419	2,962	1,302	5,277
	바이오 헬스	3,496	1,667	643	944	242	4,613
	섬유	864	343	267	249	5	3,957
	자동차	17,482	9,527	3,065	4,085	805	4,893

구분		현원	학력 수준				입사 3년차 연봉
			고졸	전문 학사	학사	석·박사	
	전자	13,967	7,492	1,913	3,975	587	4,547
	조선	171	146	9	12	3	3,763
	철강	7,589	4,086	1,510	1,833	161	3,867
	화학	14,742	8,502	2,062	3,510	668	4,724
	소프트웨어	759	8	101	591	58	5,843
	IT 비즈니스	320	33	90	173	25	4,886
기타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2,055	1,159	343	509	44	4,628
	음료 제조업	208	45	45	80	38	5,20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190	116	16	55	3	3,372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1,518	900	299	263	57	4,85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11	180	76	49	7	3,58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39	1,160	537	719	22	4,34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618	4,337	1,559	1,472	249	4,293
	가구 제조업	639	334	137	122	45	3,879
	기타 제품 제조업	1,751	596	529	564	62	5,08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3,304	71	121	1,078	2,034	5,427
	전문서비스업	311	78	194	39	0	2,90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176	185	345	1,736	909	6,56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2	0	0	63	39	4,663
영상 제작, 통신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제작업	16	0	0	16	0	4,500
	우편 및 통신업	658	53	393	190	21	4,153
기타 서비스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28	103	0	93	32	3,708
	임대업; 부동산제외	199	32	104	63	0	3,603

구분	현원	학력 수준				입사 3년차 연봉
		고졸	전문 학사	학사	석·박사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19	18	94	91	16	4,634
사업지원 서비스업	47	47	0	0	0	3,342
교육서비스업	445	0	92	257	96	4,019
보건업	1,231	43	230	577	382	5,052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2022)

- 2021년 기준 충남의 산업기술인력의 부족률을 보면, 약 1.1%로 전국 평균 2.2%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인원 수로는 1,446명으로 나타남
 - 산업기술인력의 부족 인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400명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1,840명, 2020년에는 2,086명까지 크게 상승하였고 2021년 다시 1,400명 수준으로 회복하였음

[표 3-30] 전국 및 충남 산업 기술인력 현원 및 부족인원 추세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산업기술 인력현원	1,617,053	1,634,346	1,661,446	1,672,937	1,657,673	1,681,423
	부족인원	36,271	36,908	37,484	37,924	36,450	37,667
	부족률	2.2	2.2	2.2	2.2	2.2	2.2
충남	산업기술 인력현원	102,519	104,328	99,751	122,911	121,575	136,203
	부족인원	1,374	1,407	1,471	1,840	2,086	1,446
	부족률	1.3	1.3	1.5	1.5	1.7	1.1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2017~2022)

- 전국 및 충남의 12대 주력산업별 부족 인원 현황을 보면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전국의 경우 소프트웨어, 전자, 화학, 기계, 자동차 등이 인력 부족을 보이고 충남의 경우 화학, 자동차, 기계, 반도체 순으로 나타났음

[표 3-31] 전국 및 충남 12대 주력산업별 부족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바이오헬스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소프트웨어	IT비즈니스
부족인원	전국	37,667	4,146	274	1,752	1,234	990	2,324	5,375	621	1,145	4,275	6,160	414
	충남	1,446	228	51	173	69	37	263	49	-	92	324	43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2022)

- 충남의 12대 주력산업별 부족 인원 현황을 학력 수준별로 살펴보면 생산인력 부족 분야와 석·박사 등 전문인력의 부족 분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고졸의 경우 화학, 자동차, 기계 순으로 부족 인원이 많게 나타났고, 전문학사의 경우 기계, 화학, 자동차 순이며 학사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순으로 인원이 부족했으며 석·박사의 경우 자동차, 반도체, 소프트웨어 순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표 3-32] 충남 12대 주력산업별·학력수준별 부족인원

(단위: 명, %)

구분		부족 인원 및 부족률	학력 수준				
			고졸	전문 학사	학사	석사	박사
소계		1,331 (1.2)	853 (1.4)	211 (1.2)	232 (0.9)	35 (0.7)	0 (0.0)
12대 주력 산업	기계	228 (1.9)	155 (2.4)	54 (2.5)	17 (0.6)	1 (0.4)	0 (0.0)
	디스플레이	51 (0.2)	30 (0.2)	9 (0.4)	12 (0.3)	0 (0.0)	0 (0.0)
	반도체	173 (1.1)	59 (0.6)	31 (1.3)	75 (2.5)	9 (0.9)	0 (0.0)
	바이오헬스	69 (1.9)	39 (2.3)	6 (1.0)	24 (2.4)	0 (0.0)	0 (0.0)
	섬유	37 (4.1)	31 (8.3)	0 (0.0)	6 (2.4)	0 (0.0)	0 (0.0)

구분		부족 인원 및 부족률	학력 수준				
			고졸	전문 학사	학사	석사	박사
	자동차	263 (1.5)	156 (1.6)	40 (1.3)	45 (1.1)	21 (3.1)	0 (0.0)
	전자	49 (0.4)	34 (0.5)	2 (0.1)	13 (0.3)	0 (0.0)	0 (0.0)
	조선	-	-	-	-	-	0 (0.0)
	철강	92 (1.2)	91 (2.2)	0 (0.0)	1 (0.0)	0 (0.0)	0 (0.0)
	화학	324 (2.2)	257 (2.9)	53 (2.5)	15 (0.4)	0 (0.0)	0 (0.0)
	소프트웨어	43 (5.4)	0 (0.0)	16 (14.0)	23 (3.7)	4 (6.6)	0 (0.0)
	IT 비즈니스	-	-	-	-	-	0 (0.0)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2022)

3. 소결

○ (청년 인재 유출) 출생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인구수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졸업까지의 인구수는 점차 증가, 대학교 졸업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대폭 감소가 있었음

- 충남의 경우 천안, 아산 등 수도권에 인접한 도시들이 있어 대학 여석이 많아 상대적으로 타지역에서의 진입이 많다고 분석할 수 있음
- 반면, 졸업 이후에는 다시 타지역, 특히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많음을 시사함
- 따라서 충청남도의 청년 인구 유출은 대학 졸업 후 일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학 진학 단계에서의 유출은 비교적 적으나 구직 단계에서의 2차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됨

- (대·내외적 산업 여건 전망) 대내적으로 도내 이전기업 유치실적이 1/10로 급감(충청남도, 2020),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충남의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외생적 요소에 민감할 수밖에 없음
 - 충남은 1) 기존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와 동시에 후발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 유지 2)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한 일부 IT제품 외의 수출 품목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2023)
- (지역 내 불균형 문제) 충남 지역 북부권과 그 외 권역(서해안권, 내륙권, 남부권) 간 경제력 격차 심화로 인해 지역 내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19년 기준 충남 내 15개 시군의 GRDP 비중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 북부권 내 4개 시(아산, 천안, 당진, 서산)가 충남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8%에 달하며, 천안, 아산 두 지역이 충남 전체 약 46%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노동시장 여건) 충남은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청년고용률에 있어 전국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의 경우 낮은 수준을 나타냄에 따라,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이 가능한 상황임
- (산업별, 학력별 부족 인원 분야 차별화) 충남의 12대 주력산업별 부족 인원 현황을 학력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의 경우 화학, 자동차, 기계 순으로 부족 인원이 많이 나타났고, 전문학사의 경우 기계, 화학, 자동차 순이며 학사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순으로 인원이 부족했으며 석·박사의 경우 자동차, 반도체, 소프트웨어 순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제3절 충남 대학 여건 분석

1. 충남 대학 일반적 여건

□ '23년 기준 전국 지자체별 고등교육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서울, 경기, 경북, 충남, 부산 순으로 고등교육기관 수가 많음
- 충남은 캠퍼스 포함 29개 고등교육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전체 고등교육기관 중 약 6.3%를 차지하고 있음

[표 3-33] 지방자치단체별 고등교육기관 현황 (2023년)

(단위: 개, %)

구분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	합계(비중)
서울	56	11	21	88 (19.1)
경기	38	34	14	86 (18.7)
경북	20	19	1	40 (8.7)
충남	19	9	1	29 (6.3)
부산	17	10	0	27 (5.9)
강원	13	11	0	24 (5.2)
경남	10	13	0	23 (5.0)
전남	11	11	0	22 (4.8)
전북	11	10	1	22 (4.8)
대전	13	5	2	20 (4.8)
충북	13	6	0	19 (4.1)
광주	11	7	0	18 (3.9)
대구	4	10	0	14 (3.0)
인천	6	5	2	13 (2.8)
울산	2	3	1	6 (1.3)
세종	3	1	1	5 (1.1)
제주	2	3	0	5 (1.1)
합계	249	168	44	461(100)

출처: 대학알리미

주: 1) 대학별 캠퍼스 등을 포함한 현황으로 대학알리미에 제외된 캠퍼스도 있음에 주의

2) 대학은 대학교, 교육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 기술학교 등을 포함하고 전문대학은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등을 포함하며 대학원 대학이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포함함

□ 충남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대학 종류 및 학교명은 다음 [표 3-34]와 같음

- 국립대학은 공주교육대학교와 공주대학교이며 특별법국립대학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고 공립대학으로는 충남도립대학교가 존재
- 사립대학교 중 1개의 사이버대학과 1개의 산업대학이 존재하며 그 외 전문대학과 기능대학 등이 본교 및 캠퍼스 형태로 소재하고 있음³⁵⁾

[표 3-34] 충청남도 고등교육기관 현황 (2023년)

학교 종류		설립 구분	소재지	학교
1	대학교	사립	논산시	건양대학교
2	대학교	국립	공주시	공주대학교
3	대학교	사립	논산시	금강대학교
4	대학교	사립	천안시	나사렛대학교
5	대학교	사립	천안시	남서울대학교
6	대학교	사립	천안시	백석대학교
7	대학교	사립	아산시	선문대학교
8	대학교	사립	아산시	순천향대학교
9	대학교	사립	금산군	중부대학교
10	대학교	사립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1	대학교	특별법국립	부여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2	대학교	사립	서산시	한서대학교
13	대학교	사립	아산시	호서대학교
14	교육대학	국립	공주시	공주교육대학교
15	전문대학	사립	천안시	백석문화대학교
16	전문대학	사립	당진시	신성대학교
17	전문대학	사립	보령시	아주자동차대학교
18	전문대학	사립	천안시	연암대학교
19	전문대학	공립	청양군	충남도립대학교
20	전문대학	사립	홍성군	혜전대학교
21	대학교(캠퍼스)	사립	천안시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35)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가 천안에 소재하고 있으나 전문 분야인 뇌교육만 담당하는 대학원 대학으로 여타 대학들과 거버넌스 등이 달라 제외하였음

	학교 종류	설립 구분	소재지	학교
22	대학교(캠퍼스)	사립	천안시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
23	대학교(캠퍼스)	사립	당진시	세한대학교 당진 캠퍼스
24	대학교(캠퍼스)	사립	아산시	유원대학교 아산 캠퍼스
25	기능대학(캠퍼스)	사립	아산시	한국폴리텍 IV 대학 아산캠퍼스
26	기능대학(캠퍼스)	사립	홍성군	한국폴리텍 IV 대학 홍성캠퍼스
27	기능대학(캠퍼스)	사립	논산시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바이오캠퍼스
28	사이버대학	사립	천안시	글로벌사이버대학교
29	산업대학	사립	홍성군	청운대학교

출처: 대학알리미³⁶⁾

주: 유원대학교 아산 캠퍼스와 세한대학교 당진 캠퍼스는 대학알리미 공시에서 제외되어 저자가 추가하였고, 천안에 위치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는 대학원대학교이고 전문 분야인 뇌교육만 담당하는 등 거버넌스가 달라 제외함³⁷⁾

□ 2022년 기준 재학생 수를 지방자치단체별,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³⁸⁾

- 전국 대학 재학생수의 약 6.32%가 충남 소재 일반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재학 중임
 - 충남은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 학교 유형의 대학은 존재하지 않고, 전북과 더불어 산업대학 재학생이 존재하는 지역임

[표 3-35] 지역별·학교 유형별 대학 재학생 수 현황 (2022년)

(단위: 명, %)

구분	일반 대학							전문 대학	계	비율
	대학교	교육 대학	기술 대학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 대학	각종 학교			
서울	365,828	1,496	44	99,308	96,748	0	2,655	31,958	598,037	29.59
부산	126,479	1,474	0	3,979	0	0	0	32,160	164,092	8.12

36) 대학알리미-공시대상대학 메뉴 및 학교개황(2023.02.28.기준) 참조

<https://www.academyinfo.go.kr/intro/intro0350/intro.do>

37) 유원대학교는 충남이 아닌 충북에 본교가 소재하고 있고 세한대학교는 전라남도 영암군의 영암 캠퍼스와 충청남도 당진시의 당진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 대학알리미 통계에서 유원대학교 아산 캠퍼스와 세한대학교 당진 캠퍼스가 제외된 이유는 확실치 않으며 향후 대학알리미 통계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임

38) 2023년 4월 기준 공시되고 있는 가장 최근 자료는 2022년 자료이며 대학원 대학은 44개이고 일반적이지 않아 본 표에서는 제외함

구분	일반 대학							전문 대학	계	비율
	대학교	교육 대학	기술 대학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 대학	각종 학교			
대구	42,563	1,553	0	0	0	0	0	35,501	79,617	3.94
대전	77,751	0	0	3,496	0	0	0	14,628	95,875	4.74
인천	29,509	0	0	0	0	0	0	16,533	46,042	2.28
광주	59,259	1,307	0	0	0	0	0	18,432	78,998	3.91
울산	13,115	0	0	0	0	0	0	1,684	14,799	0.73
강원	60,898	1,294	0	0	0	0	0	16,821	79,013	3.91
경기	167,273	1,281	0	3,356	0	0	0	97,632	269,542	13.34
충남	107,297	1,388	0	2,280	0	5,719	0	10,974	127,658	6.32
충북	64,063	1,172	0	0	0	0	127	13,549	78,911	3.90
전남	31,595	0	0	0	0	0	0	22,184	53,779	2.66
전북	57,978	1,139	0	5,645	0	5,362	0	17,685	87,809	4.34
경남	48,834	1,299	0	0	0	0	0	34,671	84,804	4.20
경북	92,619	0	0	4,562	0	0	0	36,806	133,987	6.63
제주	9,953	0	0	0	0	0	0	5,853	15,806	0.78
세종	11,823	0	0	0	0	0	0	534	12,357	0.61
계	1,366,837	13,403	44	122,626	96,748	11,081	2,782	407,605	2,021,126	100

출처: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³⁹⁾ 가공하여 저자 작성

주: 정원내·외 재학생 수 합산한 값

□ 2022년 기준 전국 지자체별로 학교 유형에 따른 재학생 및 신입생 충원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충원율은 모집 정원 대비해서 신입생과 재학생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임
-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재학생 및 신입생 충원율은 다음과 같음
 - 일반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은 평균적으로 94.15%로 나타났으며 신입생 충원율은 101.34%로 나타나 재학생의 중도 탈락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재학생 및 신입생 충원이 100%를 상회하고 있음

39) 대학알리미-공시데이터 다운로드 메뉴 참고

[표 3-36] 지역별·학교 유형별 재학생 및 신입생 충원율 현황 (2022년)

(단위: %)

구분	일반 대학		전문 대학	
	재학생	신입생	재학생	신입생
서울	119.47	80.43	119.11	124.35
부산	97.09	101.76	105.59	108.02
대구	102.88	107.04	107.39	118.52
대전	91.49	104.10	103.14	89.03
인천	81.18	110.94	97.13	110.98
광주	102.42	104.69	111.78	120.31
울산	108.80	106.19	62.16	121.20
강원	104.08	96.71	101.91	107.52
경기	93.03	109.11	101.58	110.04
충남	99.69	105.28	87.41	89.74
충북	94.81	101.05	92.05	89.71
전남	78.71	100.65	102.13	98.57
전북	107.83	100.48	102.35	110.43
경남	85.13	93.54	108.75	104.84
경북	85.10	98.77	103.63	118.38
제주	69.70	94.54	111.44	97.41
세종	79.10	107.42	205.38	118.18
평균	94.15	101.34	107.23	108.07

출처: 대학알리미 자료 가공하여 저자 작성

주: 1) 재학생충원율=[(정원내·외 재학생 포함한 값)/모집정원]*100

신입생충원율=[(정원내·외 신입생 포함한 값)/모집정원]*100

2) 일반대학에는 4년제 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등이 포함됨

□ 2022년 기준 대학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충남 소재 대학의 경우 국내 특허 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1%로 서울, 경기, 부산, 경북 등보다는 낮으나 인천, 충북 등보다는 높은 수준임

[표 3-37] 지역별 대학교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2022년)

(단위: 건, %)

구분	국내 특허				해외 특허				국내특허 출원대비 등록비율 (%)	해외특허 출원대비 등록비율 (%)
	출원		등록		출원		등록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	7,948	37.44	5,014	38.32	2,725	49.67	1,007	52.92	63.09	36.95
부산	1,305	6.15	705	5.39	150	2.73	39	2.05	54.02	26.00
대구	1,050	4.95	611	4.67	244	4.45	61	3.21	58.19	25.00
대전	2,004	9.44	1,243	9.50	624	11.37	245	12.87	62.03	39.26
인천	615	2.90	361	2.76	37	0.67	15	0.79	58.70	40.54
광주	779	3.67	480	3.67	165	3.01	48	2.52	61.62	29.09
울산	707	3.33	475	3.63	274	4.99	93	4.89	67.19	33.94
강원	687	3.24	452	3.45	44	0.80	22	1.16	65.79	50.00
경기	1,767	8.32	1,078	8.24	518	9.44	160	8.41	61.01	30.89
충남	852	4.01	669	5.11	72	1.31	35	1.84	78.52	48.61
충북	617	2.91	386	2.95	95	1.73	16	0.84	62.56	16.84
전남	229	1.08	114	0.87	17	0.31	3	0.16	49.78	17.65
전북	540	2.54	362	2.77	75	1.37	14	0.74	67.04	18.67
경남	656	3.09	368	2.81	108	1.97	18	0.95	56.10	16.67
경북	1,208	5.69	628	4.80	293	5.34	100	5.25	51.99	34.13
제주	108	0.51	74	0.57	24	0.44	14	0.74	68.52	58.33
세종	156	0.73	65	0.50	21	0.38	13	0.68	41.67	61.90
계	21,228	100	13,085	100	5,486	100	1,903	100	평균 60.46%	평균 34.48%

출처: 대학알리미 자료 가공하여 저자 작성

주: 전문대학 제외

□ 2021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대학재정지원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구개발(R&D), 인력양성(HRD), 연구 개발 및 인력양성 공통, 기타, 시립 및 도립대학 경상운영비 지원 등으로 구성됨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재정자립도가 비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대체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에 지원하는 재정 총액의 현황을 보면 서울, 전남, 경기, 경남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충남은 다섯 번째 정도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액에는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나 매칭 펀드로 지원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총액만으로 상호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표 3-38]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대학재정지원액 현황 (2021년)

(단위: 백만원, %)

구분	재정 자립도	총 지원액	경상운영비 제외금액	경상운영비 지원	인력양성 (HRD)	연구개발 (R&D)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기타
서울	65.30	104,662	37,842	66,819	23,682	1,426	514	12,219
부산	42.79	14,513	14,513	0	8,536	4,135	120	1,721
대구	41.10	15,644	15,644	0	6,660	1,085	1,471	6,425
인천	49.22	52,680	13,194	39,486	6,607	878	1,045	4,663
광주	36.41	19,182	19,182	0	7,363	1,946	3,650	6,222
대전	40.11	30,017	27,017	3,000	9,588	1,901	278	15,249
울산	44.78	23,931	23,931	0	4,087	4,192	7,780	7,871
세종	51.92	2,848	2,848	0	903	669	80	1,195
경기	52.93	60,804	60,804	0	12,926	3,366	4,091	40,419
강원	23.35	43,364	31,171	12,193	16,711	2,546	5,177	6,735
충북	28.16	34,474	24,055	10,418	10,150	5,433	1,899	6,572
충남	30.56	57,610	42,785	14,825	21,871	7,374	3,119	10,420
전북	22.79	26,111	26,111	0	16,552	1,839	2,077	5,642
전남	21.15	67,146	61,830	5,316	12,748	29,405	8,639	11,037
경북	24.16	36,625	36,025	600	14,315	4,336	3,008	14,365
경남	30.94	60,557	38,325	22,231	23,921	5,779	2,180	6,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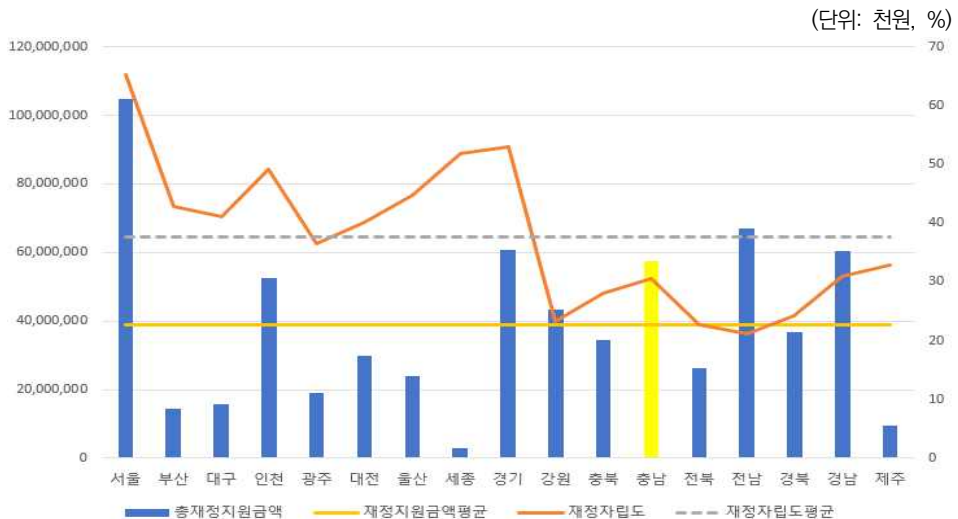
구분	재정 자립도	총 지원액	경상운영비 제외금액	경상운영비 지원	인력양성 (HRD)	연구개발 (R&D)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기타
제주	32.78	9,464	9,464	0	3,819	1,600	1,764	2,280
합계	-	659,641	484,749	174,892	200,446	77,917	46,896	159,488

주: 1) 지방재정자립도=자체 수입/세입결산, 개편 후 기준임

2) 대학재정지원액에는 대학 단위에 지원하는 금액 뿐 아니라, 집단, 개인 등에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지방재정365, 대학재정알리미

- 대학재정지원 총액과 재정자립도 현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충남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30.56%로 17개 시도 평균인 37.56%에 못 미치고 있으나 대학 재정지원 총금액은 57,610백만원으로 시도 평균인 38,802백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3-24]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대학재정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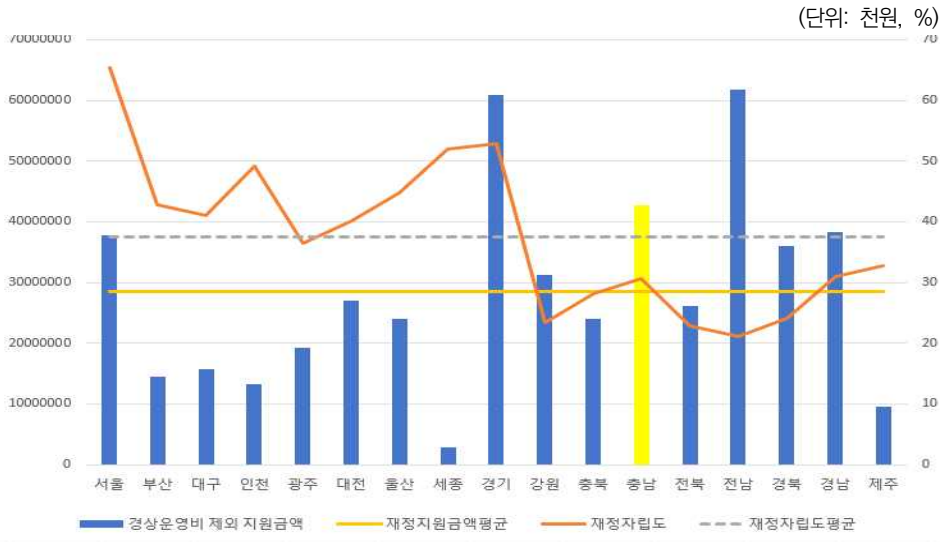


출처: 지방재정365, 대학재정알리미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2021년 기준이며 대학재정지원액= 연구 개발+인력 양성+연구 개발 및 인력 양성 공통+기타+경상운영비 지원
재정자립도 평균=37.56%, 대학재정지원금액 평균액=38,802,433.82(천원)

- 한편, 대학재정지원 총액에서 시립 및 도립대학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상운영비 금액을 차감한⁴⁰⁾ 그림은 다음과 같음
- 이를 보면 전남, 경기, 충남, 경남, 서울 순으로 대학재정지원 총액과는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
 - 충남의 경우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인 상황에서 경상운영비를 제외한 대학 재정지원금액도 42,785백만원으로 평균(28,514백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5]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대학재정지원 현황 (경상운영비 제외)



출처: 지방재정365, 대학재정알리미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2021년 기준이며 대학재정지원액= 연구 개발+인력 양성+연구 개발 및 인력 양성 공통+기타
재정자립도 평균=37.56%, 대학재정지원금액 평균액=28,514,650(천원)

40) 시립 및 도립대학에 지원하는 경상운영비는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제외한 대학 재정지원금액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지원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음

2. 충남 도내 대학별 여건

1) 지역 인재 정책 현황

□ 지역인재의 개념

- 지역인재에 대해 합의된 명확한 정의는 없고 다만 관점에 따라 지역 인재에 대한 개념이 변화함
 - 정부는 200년대 중반부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출신을 우대하고 수도권 청년의 비수도권 지역 유입을 위해 지역인재 개념을 도입하여 공무원 시험 및 공공기관 채용 등에 활용해왔음
 - 윤준상·송두범(2008:11)은 지역이 필요로 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방면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라고 정의하였음
- 한편, 지역인재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 인적 자원(regional human resource)을 들 수 있음
 -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따르면 인적 자원은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의미함⁴¹⁾
 - 이에 비추어 보면 지역 인적 자원은 지역민 개개인, 사회 및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 등으로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고용노동부고시인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지역 인적 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수요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지역 내 사업주 단체, 각종 협회 및 조합, 근로자단체, 대학, 전문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의미함
- 법적인 관점에서 지역인재의 개념과 다음과 같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지역 인재 혹은 지역 균형 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의미함⁴²⁾

41)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 2조 1호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지역 인재는 공공기관 이전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한 지방대학⁴³⁾ 또는 고등학교⁴⁴⁾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의미함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 5조와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 4조 제 2항의 6호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지역의 인재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고용정책 기본법」 제 9조에서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지역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훈련수요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지역인재의 개념,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 초·중·고등학교를 수도권에서 졸업했지만 대학교만 지방에서 다닌 경우와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경우 등을 진정한 지역인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존재함(조경호·김형성, 2017)
 - 즉 수도권 출신의 지방대학 졸업자도 지역인재의 범위에 해당되어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에 비해 지역에 애착이 적고, 지역 내 정착하기를 꺼린다는 의견 존재(윤소연 외, 2022)
- 이에 따라 지역인재의 범위를 축소하여 지역인재의 대상을 보다 엄격하게 조정하고 있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2021.09.24. 시행)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 계열은 지역인재를 강원 및 제주를 제외하고 40% 이상 선발해야 함

4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4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의미함

4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의미함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①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고, ②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임⁴⁵⁾
- 해당 내용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어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됨

□ 새정부 국정과제별 지역인재 정책 주요 내용

- 새정부 국정과제에 제시된 지역인재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역인재 정책 관련 국정과제는 약 13개이고 산업부, 고용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국토부, 중기부, 산업부 및 행안부 등이 관련 정책부처임
 - 첫째, 국가 인재정책의 주요 내용을 지역별 전략 산업과 연계하는 경향이 있음. 예를 들어 산업부에서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학과 정원 확대 검토,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둘째,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정책을 연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국정과제 85)’를 통해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지역산업, 대학 등과 연계하여 인재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셋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인재 정책을 연계하고자 함. 교통, 의료, 교육, 보육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별 특화발전을 지원하며 지역 주력산업의 전주기 성장경로 지원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넷째,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고 있음. 이를 위해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특화사업 신설, 인력수요 및 노동상황 등을 반영한 지역 일자리사업의 확대·개편 등 지역특화 고용 창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4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법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졸업요건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및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9. 24.>

[표 3-39]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인재정책 주요 내용

번호	국정과제명	관련 부처	주요 내용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인재양성 강화) •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관련 학과 정원 확대 검토 •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고용부	(산업구조전환 시 고용불안 최소화) •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직무전환훈련 등 선제적·체계적 패키지 지원 • 부처 간 연계를 통한 정책지원 강화 및 고용노동통계 분석 기능 확대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 양성	과기 정통부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 젊은 연구자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우수 연구자까지 연구생애 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 (대학 연구역량 제고) • 대학을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 전략기술 분야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확보 체계 구축 (전 주기 인재양성) •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의 체계적 지원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산업·지역 디지털 혁신) • 지역 디지털인재 양성 및 대규모 프로젝트(100대 지역 체감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등)를 통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
81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교육부	(디지털인재 양성) • 대학 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및 메타버스·반도체인재 양성 •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 및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대학 간 공유체계 활성화 (디지털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 •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 수립(인재양성위원회 구성), 부처별 인재양성 데이터 연계 및 통계 인프라 개선 (민관협력으로 디지털인재 양성) • 국내외 인력 활용을 위한 K-디지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전문가 대상 디지털 교육과정 확대, 디지털전환 전문가 육성·활용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		(융합인재 양성) • 대학 교양교육과정 혁신 및 융합연구 지원 확대, SW·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융합형 인재 육성 • 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 우수 유학생 유치 등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 • '창업교육 거점대학'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을 활용하여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

번호	국정과제명	관련 부처	주요 내용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p>(지자체 권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고등교육 협의회’ 설치 <p>(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약하에 지역산업, 대학 등과 연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 <p>(지역 거점대학(원)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소재 연구중심대학 육성 추진 및 지역 우수 연구자 양성, 국립대 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 역할 강화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p>(지자체-교육청-대학 간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이 함께 협업하여 재원을 공동편성·집행하는 공동사업을 발굴·추진(지자체 책임 강화)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협력 및 우수 유학생 유치 강화 <p>(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상향 등 개선, 지역인적 자원의 지방 공기업 등 채용 확대 방안 검토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국토부	<p>(혁신도시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도시별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교통·의료·교육·보육 등 정주 여건 개선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 촉진 문화·보육·주민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복합 혁신센터 구축 가족 특화시설 건립 등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중기부	<p>(창업·혁신 거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스타트업·혁신벤처의 성장거점인 「혁신캠퍼스 타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및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p>(지역기업 생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력산업(기업)의 전 주기 성장경로 지원과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 지원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을 양질 일자리 창출	산업부	<p>(지역 일자리사업 재구조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인력수요, 노동상황 등을 반영한 지역 일자리사업의 확대 개편 등 지역특화 고용창출 기반 구축 중앙정부 일자리사업 연계 특화사업 신설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확대 개편, 고용위기 단계별 지원체계 내실화

번호	국정과제명	관련 부처	주요 내용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중기부, 행안부	(로컬 크리에이터) • 지역 대학 내 로컬 크리에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실전창업, 인턴십 등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는 창업 훈련기관 육성 (지역특화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 • 지역의 고유 자산을 활용한 지역브랜드화, 청년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가 있는 도시재생 추진

출처: 대한민국 정부(2022.07), 전재식(2022:72)에서 재인용

□ 충남 지역인재의 범위

- 현재 충청남도에서 상정하고 있는 지역인재의 개념과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충남 지역대학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만 39세 이하 충남 소재 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최종학력)'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4개월 까지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⁴⁶⁾
 - 한편, 충청남도 평생교육 인재육성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대전 학사관의 신청 자격을 보면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에 한함)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대전, 세종, 충청권지역 대학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임
 - 서울학사의 경우에도 충남 출신 서울·인천·경기지역 대학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에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충남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충남 소재 대학 졸업 예정인 경우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본인 및 본인의 부모나 직계존속이 충남에 1년 이상만 거주 하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충남 학사에 거주할 수 있음

46) 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8100/cnnet/content.do?mnu_cd=CNNMENU02380
(검색일 기준: 2023.07.27.)

□ 충남 지역인재 정책 주요 내용

- 2022년 기준 충청남도의 지역 인재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수 인재 발굴 및 유인,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지자체-대학-지역 혁신 주체 간 협업 기반 구축(RIS 사업), 지방대학 지역 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운영 등의 사업을 지방 대학과 함께 운영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일자리 기반 구축, 취·창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인재 육성의 기반을 고도화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인재 유입을 위해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

[표 3-40] 충남 지역 인재 육성 정책 주요 내용 (2022년 기준)

추진 과제 및 사업	주관 부서	주요 내용
우수 인재 발굴 및 유인	교육법무 담당관 ⁴⁷⁾	(해외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 지원) • 지자체와 함께하는 해외 유학박람회 (지역인재 대학 학비 부담 완화 및 복지 확충) •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 충남 대전학사 및 서울학사 운영
교육·연구 환경 개선	미래성장과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 융합 바이오(바이오 + ICT)관련 기업을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유치(입주)하여 대학과의 공동 연구 및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도모 • 입주기업의 전주기 지원을 통한 기업 육성 • 대학 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대학 및 국외대학 연구기관의 국제교류 활성화) • 도내 대학과 해외우수연구기관 간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 추진하여 원천기술의 자립화와 사업화 도모
사회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교육법무 담당관	(지역 이해로 자긍심 확산 교육 지원) • 충남학 대학 정규 교양과정 개설 및 운영, 충남학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자체-대학-지역 혁신 주체 간 협업 기반 구축		(DSC 지역혁신플랫폼 협업 거버넌스 고도화) • 지자체,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지역혁신 플랫폼(충남, 대전, 세종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내 특화·주력산업과 연계한 대학 교육 체계 개편 등 맞춤형 인력양성
지방대학·지역 균형인재 육성 네트워크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운영) • 「지방대육성법」근거로 도-대학-산업경제기관 등 18개 기관 등이 지방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 지역 대학 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현안 과제 정책 수립

추진 과제 및 사업	주관 부서	주요 내용
일자리 기반 구축	일자리노동 정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 공동 훈련센터 운영, 파트너 훈련기관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 수급 종합 분석 실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 •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년층, 체육인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취업· 창업 지원 확대	기업지원과	(스타트업 파크 조성) • 천안역 인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스타트업 파크 조성(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파크' 공모사업 선정) (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 강화)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 지원 플랫폼 운영을 통한 지역 인재의 기술 창업 확대
	미래산업국 미래성장과	(충남 지식산업센터 건립) • 충남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를 건립함으로써 낮은 임대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
	보건정책과	(공공 간호사제 운영) • 지역간호대학과 협력하여 지역균형인재를 발굴, 의료원에 취업·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모델 마련
	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충남도서관 운영) • 충청남도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도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양질의 도서 구입 •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독서 생활화,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문화정책과, 충남 문화재단	(문예회관 기획공연 운영) • 매월 '문화가 있는 주' 기획공연 개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보) •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실내체육, 운동장 체육시설, 노인 건강 체육시설 • 국민체육센터 등 지원사업: 국민체육센터,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 시설 개보수 등
	교육법무 담당관	(상생과 협력의 마을 교육공동체 구축) • 충남 행복 교육지구: 공교육혁신 지원, 마을 교육 활동 활성화 및 마을 교육 생태계 조성 • 학교 교실 학생 주민 공동이용 활성화: 학교의 유휴 교실을 활용하여 학생·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문화정책과, 충남 문화재단	(생애주기별 지역 주민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사업) • 유아에서 노년까지 연령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운영

출처: 충남 내부자료(2022) 저자 정리⁴⁸⁾

47) 2023.06.30.자로 고등교육정책담당관으로 부서 개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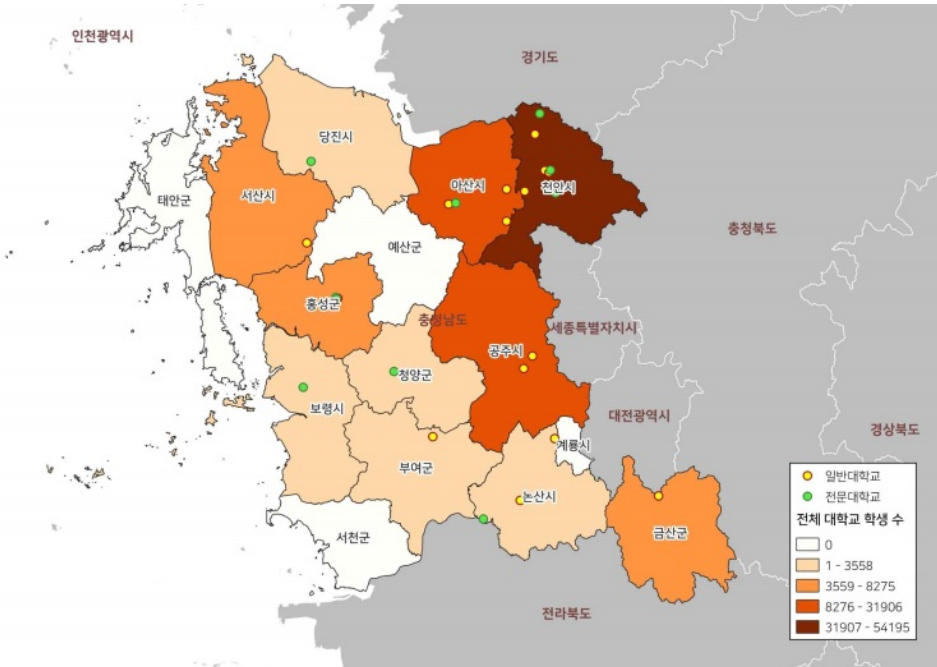
4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2022년 시행계획 충청남도 작성 자료

□ 충남 도내 대학의 지역 인재 투입 현황

○ 충남 시군별 대학 및 대학생수 분포 현황

- 대학 및 대학생수 분포를 보면 충남 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충남 도내 불균형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대학의 분포를 보면, 천안시에 10개, 아산시에 4개, 논산시에 3개, 홍성군에 캠퍼스 포함 3개, 공주시에 2개, 그 외 서산시, 홍성군, 부여군, 금산군 등에 1개의 대학이 분포하고 있음
- 다음으로 대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면 대학 수가 많은 천안시가 대학생 수 역시 많았으며 아산시와 공주시에 다음으로 많은 대학생이 분포하고 있으며, 서산시, 홍성군, 금산군 등에 분포하고 있음

[그림 3-26] 충남 시군별 대학과 대학생 수 분포 현황



출처: 대학알리미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충남 대학별 재학생·신입생 수 및 충원율

- 충남 지역 일반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은 평균적으로 99.69%이고 신입생 충원율은 105.28%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달리 충남 지역 전문대학의 재학생 및 신입생 충원율은 9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남지역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 간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

[표 3-41] 충남 도내 대학 재학생 및 신입생 충원율 현황 (2022년)

(단위: 명, %)

구분	학교명	2022년			
		재학생 수	재학생 충원율	신입생 수	신입생 충원율
대학교	건양대학교	2,957	82.5	777	95.4
	공주교육대학교	1,388	90.5	380	100
	공주대학교	12,154	94.7	3,237	99.9
	글로벌사이버대학교	2,280	64.5	735	66.7
	금강대학교	210	47.5	33	30
	나사렛대학교	4,841	89.3	1,306	98.3
	남서울대학교	9,208	91.5	2,335	100
	단국대학교_제2캠퍼스	10,629	99.4	2,521	99.7
	백석대학교	11,767	91.5	3,160	99.9
	상명대학교_제2캠퍼스	5,554	94.3	1,445	99.9
	선문대학교	9,174	94.6	2,236	99.8
	순천향대학교	10,517	94.2	2,673	99.9
	중부대학교	7,262	82.3	1,816	87.8
	청운대학교	5,719	86.8	1,288	9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133	106.3	983	10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591	102.5	145	100
	한서대학교	6,542	93	1,589	94.7
	호서대학교	11,758	92.8	3,087	99.8

구분	학교명	2022년			
		재학생 수	재학생 충원율	신입생 수	신입생 충원율
전문대	백석문화대학교	4,394	71.3	1,698	66.8
	신성대학교	2,898	76.7	1,114	69.8
	아주자동차대학교	820	77.5	427	81.3
	연암대학교	1,100	95.5	586	100
	충남도립대학교	995	84.4	485	99.1
	한국폴리텍 IV 대학 아산캠퍼스	457	81.1	232	77.3
	한국폴리텍 IV 대학 홍성캠퍼스	177	72	82	69.5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바이오캠퍼스	391	94.2	180	85
	혜전대학교	2,379	72.8	880	75.5

출처: 대학알리미 자료 가공하여 저자 작성

주: 충원율은 정원 내만 포함

□ 충남 도내 대학 지역 인재 유·출입 현황

○ (대학 진학 단계) 1차적으로 충청남도 청년들이 주기별로 어느 지역으로 얼마나 유출되고 타지역 청년들이 어느 시점에 얼마나 유입되는지를 GOMS를 통해 살펴보았음

- 먼저 고등학교 졸업에서 대학교 유입의 경우 경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서울, 인천이 뒤를 이어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충남 대학 소재지로 유입됨을 알 수 있음
- 충남 지역 고등학교 졸업에서 타지역 대학교 유출의 경우 충남 고등학생의 경우 대전, 충북, 전북, 전남 등의 대학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2] 충남 고등학생의 지역별 대학 진학 현황 (2019년)

(단위: 명, %)

구분	표본조사기준			모집단기준(n=486,912)		
	유입	유출	순유입	유입	유출	순유입
전체 합계	1,305	788	517	32,680	19,942	12,086

구분	표본조사기준			모집단기준(n=486,912)		
	유입	유출	순유입	유입	유출	순유입
합계 (충남 제외)	1,028 (100)	511 (100)		25,231 (100)	12,107 (100)	
서울	169 (12.95)	111 (14.09)	58	4,452 (17.64)	2,383 (19.68)	2,069
부산	10 (0.77)	14 (1.78)	-4	271 (1.07)	238 (1.97)	33
대구	15 (1.15)	9 (1.14)	6	356 (1.41)	205 (1.69)	151
대전	84 (6.44)	138 (17.51)	-54	1,796 (7.12)	3,461 (28.59)	-1,665
인천	121 (9.27)	15 (1.9)	106	3,007 (11.92)	342 (2.82)	2,665
광주	12 (0.92)	7 (0.89)	5	238 (0.94)	184 (1.52)	54
울산	9 (0.69)	2 (0.25)	7	187 (0.74)	64 (0.53)	123
경기	433 (33.18)	55 (6.98)	378	10,833 (42.94)	1,799 (14.86)	9,034
강원	18 (1.38)	8 (1.02)	10	490 (1.94)	243 (2.01)	247
충북	51 (3.91)	64 (8.12)	-13	1,184 (4.69)	1,450 (11.98)	-266
충남	277	277	0	7,449	7,449	0
전북	20 (1.53)	44 (5.58)	-24	428 (1.70)	1,038 (8.57)	-610
전남	25 (1.92)	9 (1.14)	16	610 (2.42)	262 (2.16)	-428
경북	28 (2.15)	13 (1.65)	15	722 (2.86)	312 (2.58)	460
경남	22 (1.69)	4 (0.51)	18	413 (1.64)	73 (0.60)	101
제주	3 (0.23)	3 (0.38)	0	100 (0.40)	53 (0.44)	27

구분	표본조사기준			모집단기준(n=486,912)		
	유입	유출	순유입	유입	유출	순유입
세종	8 (0.61)	15 (1.9)	-7	144 (0.57)	386 (3.19)	91

자료: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19년 자료 저자가 가공하여 작성

주: 본 표는 충남 기준으로 작성되어 충남 내부에서의 유입과 유출이 같으며 순유입도 0이 됨

○ (졸업 후 취업 단계) 2차적으로 충남 소재지 대학교 졸업생의 졸업 이후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았음

- 서울, 대전, 충북, 전북, 경기 등에서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출은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3-43] 충남 대졸자의 지역별 이동 현황 (대학→현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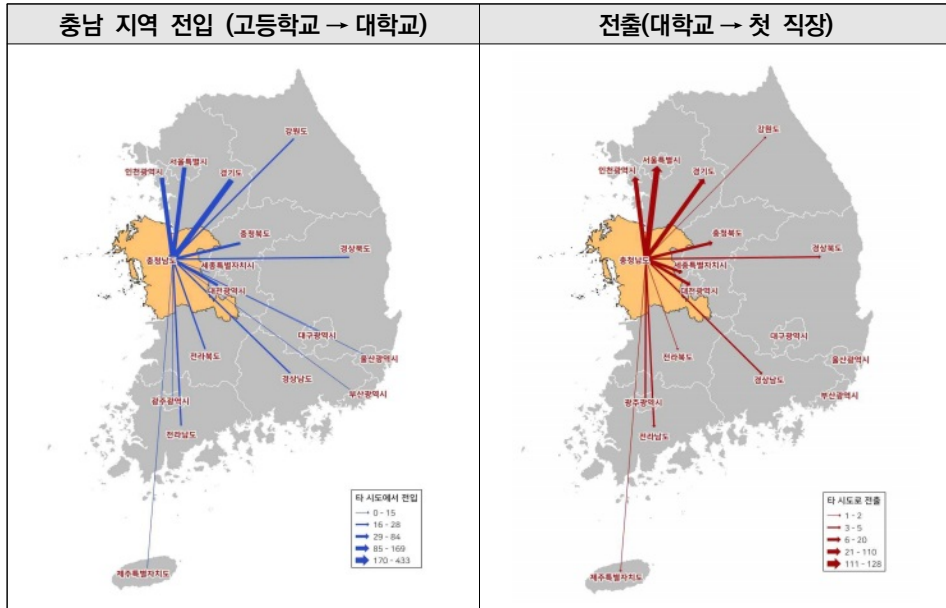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표본조사기준			모집단기준(n=486,912)		
	유입	유출	순유입	유입	유출	순유입
전체 합계	699	1,310	-611	18,017	32,848	-14,831
합계 (충남 제외)	388 (100)	999 (100)		9,861 (100)	24,692	
서울	61 (15.72)	256 (25.63)	-195	1,285 (13.03)	6,644 (26.91)	-5,359
부산	32 (8.25)	7 (0.70)	25	666 (6.75)	138 (0.56)	528
대구	14 (3.61)	6 (0.60)	8	507 (5.14)	158 (0.64)	349
대전	79 (20.36)	66 (6.61)	13	2,098 (21.28)	1,424 (5.77)	674
인천	8 (2.06)	111 (11.11)	-103	196 (1.99)	2,794 (11.32)	-2,598
광주	8 (2.06)	11 (1.10)	-3	193 (1.96)	259 (1.05)	-66

구분	표본조사기준			모집단기준(n=486,912)		
	유입	유출	순유입	유입	유출	순유입
울산	2 (0.52)	4 (0.40)	-2	68 (0.69)	71 (0.29)	-3
경기	38 (9.79)	390 (39.04)	-352	1,235 (12.52)	9,902 (40.10)	-8,667
강원	7 (1.80)	16 (1.60)	-9	166 (1.68)	364 (1.47)	-198
충북	47 (12.11)	49 (4.90)	-2	1,009 (10.23)	1,069 (4.33)	-60
충남	311	311	0	8,156	8,156	0
전북	40 (10.31)	18 (1.80)	22	905 (9.18)	365 (1.48)	540
전남	12 (3.09)	15 (1.50)	-3	324 (3.29)	385 (1.56)	-61
경북	22 (5.67)	12 (1.20)	10	663 (6.72)	267 (1.08)	396
경남	9 (2.32)	13 (1.30)	-4	234 (2.37)	265 (1.07)	-31
제주	0 (0.00)	7 (0.70)	-7	0 (0.00)	213 (0.86)	-213
세종	9 (2.32)	18 (1.80)	-9	312 (3.16)	374 (1.51)	-62

자료: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19년 자료 저자가 가공하여 작성

[그림 3-27] 충남 청년 인구 이동 단계별 패턴 비교



자료: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19년 자료 저자가 가공하여 작성

□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자료에서도 충남 대학 졸업자의 유사한 이동 패턴을 확인할 수 있음

○ 2019~2021년 사이 충남 지역 대학 졸업자가 취업하는 지역은 주로 서울, 경기이며 이 두 지역으로 약 60%가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44] 지역별 대학 졸업자 취업 지역

(단위: 명, %)

구 분	2019.12.31. 자		2020.12.31. 자		2021.12.31. 자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서 울	35.4	1	32.5	1	32.3	1
부 산	0.5	13	0.7	13	0.8	13
대 구	0.3	16	0.4	15	0.4	15
인 천	6.1	4	5.8	4	5.7	4

구 분	2019.12.31. 자		2020.12.31. 자		2021.12.31. 자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광 주	0.3	17	0.4	16	0.4	17
대 전	3.1	5	3.3	5	3.4	5
울 산	0.4	15	0.4	17	0.4	14
세 종	1.0	7	1.1	8	1.0	8
경 기	25.3	2	26.3	2	27.8	2
강 원	1.0	9	0.9	11	1.0	9
충 북	2.1	6	2.3	6	2.4	6
충 남	20.6	3	21.4	3	20.3	3
전 북	0.8	11	1.1	9	0.9	10
전 남	0.9	10	1.0	10	0.8	11
경 북	1.0	7	1.1	7	1.2	7
경 남	0.8	12	0.7	12	0.8	12
제 주	0.5	14	0.5	14	0.4	1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충청남도 내부자료(2023)에서 재인용

□ 충남 도내 대학 인재 산출 현황⁴⁹⁾

- (취업 현황) 전국 대학 평균 취업률은 59.54%, 전문대의 경우 70.80%를 보이고 있음
 - 충남 대학의 경우 63.09%, 전문대는 75.17%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표 3-45] 지역별 대학 평균 취업률 (2021년 기준)

(단위: %)

지역	대학교	전문대
서울	59.48	69.55
부산	62.43	64.03
대구	62.65	68.08

49) 지역 인재의 산출 변수를 취업 현황만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자료 및 시간의 한계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취업률 지표만 살펴보았음

지역	대학교	전문대
인천	50.04	70.48
광주	58.11	74.76
대전	59.01	71.74
울산	59.85	79.53
세종	40.37	70.50
경기	58.40	68.06
강원	62.08	72.54
충북	62.33	71.92
충남	63.09	75.17
전북	63.16	70.91
전남	55.01	72.17
경북	58.44	74.01
경남	61.15	71.58
제주	61.70	69.10
평균	59.54	70.80

출처: 대학알리미

취업률=취업자수/(졸업생-(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

○ 세부적으로 충남 도내 대학별 취업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에 따른 2021년 취업률을 보면 평균보다 낮은 취업률을 보이는 대학은 공주교대, 공주대, 금강대, 나사렛대, 백석대, 한국전통문화대 등으로 나타났음
- 대학이 충청남도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취업률은 21년에 비해 상향된 것으로 보이나 취업률 산정을 위한 산식이 같다는 보장이 없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특히 대학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충남 내에 취업하는 인원보다 충남 외에 취업하는 졸업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46] 충남 도내 대학별 취업 현황

(단위: 명, %)

대학명	2021년 취업률	23년 3월 말 기준 (내국인)			
		충남 내 취업 인원	충남 외 취업 인원	취업자 수 소계	학과별 취업률 평균
건강대학교	66.7	210	1,013	1,223	73.8
공주교육대학교	55.8	-	-	-	-
공주대학교	56.7	353	1,136	1,489	68.0
금강대학교	58.6	9	49	58	62.3
나사렛대학교	61.7	133	486	619	64.8
남서울대학교	64.7	148	1,137	1,285	67.2
단국대학교_제2캠퍼스	61.6	-	-	-	-
백석대학교	61.4	158	1,542	1,700	64.1
상명대학교_제2캠퍼스	61.7	-	-	-	-
선문대학교	64.3	266	820	1,086	70.1
순천향대학교	65.2	304	1,070	1,374	67.7
중부대학교	62.9	55	867	922	67.8
청운대학교	67.8	71	546	617	78.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75.9	89	404	493	77.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58.9	-	-	-	-
한서대학교	64.4	103	658	761	67.7
호서대학교	64.3	352	1,306	1,658	65.7
백석문화대학교	68.6	267	862	1,129	70.0
신성대학교	74.2	-	-	-	-
아주자동차대학교	70.5	40	263	303	73.5
연암대학교	79.3	-	-	-	-
충남도립대학교	65.6	-	-	-	-
세한대학교 당진 캠퍼스	-	-	-	-	-
유원대학교 아산 캠퍼스	-	-	-	-	-
한국폴리텍 IV 대학 아산캠퍼스	81.3	-	-	-	-
한국폴리텍 IV 대학 홍성캠퍼스	74.5	-	-	-	-

대학명	2021년 취업률	23년 3월 말 기준 (내국인)			
		충남 내 취업 인원	충남 외 취업 인원	취업자 수 소계	학과별 취업률 평균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바이오캠퍼스	91.6	-	-	-	-
해전대학교	70.9	-	-	-	-

출처: 2021년 취업률은 대학알리미 상 가장 최근 자료이며, 2023년 3월말 취업 인원 및 취업률은 대학교 제출 자료

주: 1) 유원대학교 아산 캠퍼스의 경우 대학알리미 상 본교 자료(충북 소재)만 존재하고 세한대학교 당진 캠퍼스의 경우에도 전남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2) 미제출 학교 있어 자료의 한계 존재하며, 학교 자체 제출 취업률 정의가 다를 수 있음에 주의

2) 산학협력 현황

(1) 산학협력 개념 및 유형

□ 산학협력이란 민간기업을 포함한 사적 영역인 산(産)과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는 영역인 학(學)간에 인재 양성과 지식·기술 창출 및 확산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활동을 의미함(김종호, 2012)

- 협의 차원에서 산학협력은 산업체와 대학 간의 공식적인 협력을 뜻하며, 광의 차원에서 정부,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참여 주체 간의 공식적·비공식적 협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음 (장후은, 2015)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산학협력법)」 제 2조 제 6호에 따르면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함
 -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다)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 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 「산학협력법」의 개념 정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의 경우 협의보다는 광의의 산학협력 개념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산학협력을 크게 인력 양성, 연구·개발, 기술 이전과 산업자문, 유·무형의 자원 공동활용 등의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주로 대학과 산업체 간의 협력관계를 의미하는 협의의 산학협력 개념을 사용해왔으며(채창균 외, 2022)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되어온 산학협력 활동 자료 또한 협의의 개념을 따르는 경우가 많음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경우 광의의 산학협력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여부 및 기존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산학협력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협의의 산학협력 개념을 따르고자 함

□ 산학협력은 참여 주체, 추진 체계, 목적 및 추진 내용, 협력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음

- 우선 산학협력 주체로 분류할 경우 대학 주도형, 기업체 주도형, 정부(중앙 및 지방) 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음(Etzkowitz, Henry, & Chunyan, 2007)
 - 산학협력이 전개되는 추진 체계에 따르면 지역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단지 집적 유형, 연구 중심 대학에 기반을 둔 기초 연구 중심 유형, 컨소시엄 형태, 창업보육센터 중심형, 학교기업을 통한 산학협력 등으로 나눌 수 있음(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2012)

[표 3-47] 대학 산학협력 분류 체계

구분		항목
산학협력 운영과 인프라	전담 조직	• 산학협력단 설치 여부
	인력	• 산학협력단 직원 구성 및 현황, 산학협력 중점교수 등
	제도	• 교원 업적평가 산학협력 영역 별도 설정 여부, 재임용승진 평가의 산학협력 실적 연구실적대체가능 비율 등
	물적 자원	• 공동활용장비
	네트워크 자원	• 가족기업
산학협력 교육	교육활동	•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계약학과, 주문식교육 등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R&D, 기술사업화	• 특허출원, 지식재산권 등 • 기술이전, 권역 및 지역내외 기술이전

구분	항목
창업 교육 및 지원	창업교육 지원
	• 창업강좌, 창업 동아리, 창업 경진대회, 창업캠프 등
	• 창업휴학제,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창업장학금제, 창업 특기생제, 창업강좌 학점 교류제 등
	창업 지원
	• 학생 및 교원 창업 및 대학의 창업 지원

출처: 교육부·한국연구재단(2021), 재창균 외 (2022) 참고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매년 발간하는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⁵⁰⁾ 산학협력 현황은 크게 1) 산학협력 인프라, 2) 산학협력 교육, 3)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현황, 4) 창업교육 및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음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21)

- 산학협력 인프라는 대학 내 인적 자원(산학협력단 직원, 산학협력중점 교수 등)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사제도(교원 업적평가 산학협력 영역 별도 설정 여부, 재임용승진평가의 산학협력 실적의 연구실적 대체가능 비율 등), 조직적 자원(산학협력단), 물적자원(공동활용연구장비), 네트워크 자원(가족 기업) 등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산학협력 교육은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계약학과, 주문식 교육과정, 학교 기업 등을 들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는 대학법인 및 산학협력단 명의의 지식재산권 보유와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술 이전⁵¹⁾ 현황 등을 의미함
- 창업교육 및 지원은 첫째, 창업 강좌,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등의 학생 창업교육 지원과 둘째, 창업휴학제나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창업 장학금제, 창업특기생제, 창업강좌 학점 교류제 등의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 셋째, 학생 및 교원 창업 및 대학의 창업 지원 등의 세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50)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는 기존의 ‘대학 산학협력백서’에 해당하며 2011년도 판부터 명칭이 바뀌어 매년 발간되고 있음 (한국연구재단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시스템 참고, <https://www.uiccre.kr/member/mainlogin.do>)

51)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뜻하며,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2021)에서는
① 양도(매매) ② 라이선스 ③ 기술제휴 ④ OEM/ODM ⑤ M&A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2) 충남 도내 대학 산학협력 현황

□ 본 연구에서는 충남 도내 대학의 산학협력 운영과 인프라는 제외하고 산학협력 교육 활동,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등의 산학협력 성과, 창업 교육 및 지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하에서 기존의 산학협력 운영제도와 인프라가 대폭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산학협력 인프라 및 운영 제도의 현황을 살펴볼 실익이 작다고 판단한 것에서 기인함
 - 또한 산학협력 중에서 산학협력 교육, 연구 개발 등을 창업교육 및 지원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충청남도 산학협력 정책 현황

- 충남은 2023년 현재 지역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과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 전략으로 삼고 세부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음
- 기존의 충남 산학연협력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는 1) 기업 수요에 대한 대응 성격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2) 직업계고,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많으며 3) 대학 관련 사업은 지역혁신플랫폼(RIS) 관련 공유 대학 운영이나 모빌리티 분야 인재 양성 및 산학 협력 등에 그친다는 것임

[표 3-48] 충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정책 내용 (2023년 기준)

추진 전략 및 세부 과제		주관 부서	주요 내용
지역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충남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지역산업 수요·공급조사 결과 토대로 취업 연계(양성) 및 재직자 교육훈련 실시 양성과정 운영, 향상과정 운영, 협약기업 관리 및 발굴, 협약기업 직무 분석 등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투자통상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학연 연계형 지역특화교육, 협력업체 현장실습 및 인턴십 등 실무중심의 무역현장 교육 실시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한 협력업체 수출 실적 달성

추진 전략 및 세부 과제		주관 부서	주요 내용
	직업계고 지원	충청남도일자리 경제진흥원 (일자리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계고 협의회 운영 • 직업계고 취업 선호도 조사 실시
	충남 특성화고 현장학습 교사공동체 운영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지자체-기업체 취업지원협의체 협의회 운영 • 기업맞춤형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교사공동체 운영: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협력하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협의, 취업선호도 조사 등
	직업계 고교생 지역 정착 활성화 취업 지원	청년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38개 직업계고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정규직) 직업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기업 인건비 지원,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 목표 지원인원 유지 및 관리, 사업 점검 및 정산 등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	충남산학융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기적 인력양성 기반 조성: 진로교육 특강, 진로 비전·인성함양 프로그램 • 취업역량 강화 지원: 직업계고 취업역량강화 캠프, 취업연계교육, 취업박람회 개최 • 창업활성화 지원: 창의융합 창업캠프, 창업교육 특강
	직업계고 재구조화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계고 학과개편 추진 및 교사 전문성 신장 지원 • 학생 취업·창업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 교내 현장 실습실 안전망 구축 • 직업계고 바로알기를 통한 직업계고 인식개선 등
	지역혁신플랫폼 (RIS) 내 지역 산학연협력 활성화	고등교육 정책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 운영 • 모빌리티 분야(소재부품장비, ICT) 인재 양성, 기술 고도화, 기업지원, 창업 활성화 등

출처: 충청남도(2023) 내부자료⁵²⁾

□ 충남 도내 대학 산학협력 교육 현황

○ 최근 3년간 충남 도내 대학의 현장 실습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현장실습 학생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같은 경향성은 학제 및 설립 유형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거나 이는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201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임

52) 충청남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2022년도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시행계획

- 산학협력활동조사보고서(2022)에 따르면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 감소 원인으로서는 현장실습 참여학생에 대한 권익 및 안전강화, 그리고 현장실습 제도 내실화를 위한 정책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산업체의 실습기관 참여 결정에 신중 등의 요인을 들 수 있음

[표 3-49] 최근 3년간 충남 대학 현장실습 이수 학생수

(단위: 명)

대학 유형		2019	2020	2021
학제 유형	일반대(18)	6,284	4,694	1,756
	전문대(9)	3,916	1,960	233
계		10,200	6,654	1,989
설립 유형	국공립(4)	283	289	25
	사립(23)	9,917	6,365	1,964
계		10,200	6,654	1,989

출처: 대학알리미

○ 캡스톤디자인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캡스톤디자인 개설 대학 비율은 2020년에 감소된 것을 제외하면 최근 3년간 비교적 꾸준히 유지되는 경향을 보임

[표 3-50] 최근 3년간 충남 대학 캡스톤디자인 개설 대학 비율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일반대(18)	14(77.8%)	14(77.8%)	14(77.8%)
전문대(9)	5(55.6%)	4(44.4%)	5(55.6%)
계	19(70.4%)	18(66.7%)	19(70.4%)
국공립(4)	2(50%)	2(50%)	2(50%)
사립(23)	17(73.9%)	16(69.6%)	17(73.9%)
계	19(70.4%)	18(66.7%)	19(70.4%)

출처: 대학알리미

○ 주문식 교육과정⁵³⁾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충남 도내 대학의 대부분이 사립 대학이며 주문식 교육과정수와 참여 학생 수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표 3-51】 최근 3년간 충남 대학 학제별 설립유형별 주문식 교육과정 대학 비율

(단위: %)

		2019	2020	2021
일반대	국공립(3)	0	0	0
	사립(15)	20	20	20
전문대	국공립(1)	100	100	100
	사립 (8)	37.5	37.5	37.5
계(27)		25.9	25.9	25.9

출처: 대학알리미

【표 3-52】 최근 3년간 충남 대학 주문식 교육과정 수 및 참여학생 수

(단위: 명)

		2019	2020	2021
일반대	교육과정 수	58	53	31
	참여학생 수	1,735	1,880	690
전문대	교육과정 수	43	41	26
	참여학생 수	1,597	1,544	1,111
주문식 교육과정 수		101	94	57
참여학생 수		3,332	3,424	1,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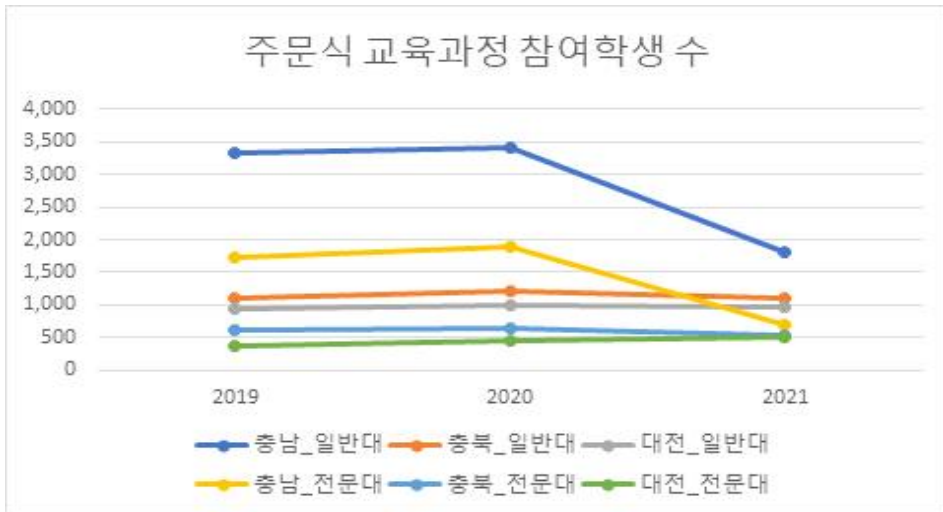
출처: 대학알리미

- 주문식 교육과정수와 참여 학생 수 감소 추세는 충북이나 대전과 비교할 때 충남에서 두드러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53) 주문식 교육과정이란 학칙의 범위 내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협약에 의해 정원 내로 개설·운영할 수 있는 과정임. 주문식교육과정은 산업체 경비부담의무가 없으며, 산업체가 주문식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채용을 약정 또는 우대하는 형태로 운영됨

[그림 3-28] 최근 3년간 충청권 대학 주문식 교육과정 참여학생 수

(단위: 명)



출처: 대학알리미

[표 3-53] 최근 3년간 충청권 대학 주문식 교육과정 참여학생 수

(단위: 명)

	2019	2020	2021
충남	3,332	3,424	1,801
충북	1,090	1,204	1,108
대전	933	990	980

출처: 대학알리미

○ 특허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내 특허 출원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해외의 경우 2019년 대비 2021년에 증가하였음
- 대전과 충북의 경우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수가 늘고 있어 충남 도내 대학의 특허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임

[표 3-54] 최근 3년간 충청권 대학 국내외 특허 출원 수

(단위: 개)

		2019	2020	2021
충남	국내	1,010	966	889
	해외	55	46	72
충북	국내	592	615	625
	해외	29	52	95
대전 ⁵⁴⁾	국내	1,683	1,651	2,011
	해외	492	566	630

출처: 대학알리미

[표 3-55] 충남 도내 대학교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2022년)

(단위: 건)

구분	학교명	국내특허		해외특허	
		출원	등록	출원	등록
대학교	건양대학교	32	35	0	1
	공주교육대학교	4	0	0	0
	공주대학교	133	140	6	1
	글로벌사이버대학교	0	3	0	0
	금강대학교	-	-	-	-
	나사렛대학교	-	-	-	-
	남서울대학교	12	16	0	0
	단국대학교_제2캠퍼스	169	86	15	6
	백석대학교	8	3	0	0
	상명대학교_제2캠퍼스	20	17	0	0
	선문대학교	93	57	0	0
	순천향대학교	138	100	18	16
	중부대학교	17	5	2	0
	청운대학교	6	3	0	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47	131	24	5

54) 카이스트가 소재하여 특허 비율 매우 높은 편이다.

구분	학교명	국내특허		해외특허	
		출원	등록	출원	등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	1	0	0
	한서대학교	12	23	2	0
	호서대학교	59	49	5	6
전문대	백석문화대학교	7	0	0	0
	신성대학교	8	7	0	0
	아주자동차대학교	20	2	0	0
	연암대학교	2	1	0	0
	충남도립대학교	-	-	-	-
	한국폴리텍 IV 대학 아산캠퍼스	-	-	-	-
	한국폴리텍 IV 대학 홍성캠퍼스	-	-	-	-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바이오캠퍼스	-	-	-	-
	해전대학교	-	-	-	-

출처: 대학알리미⁵⁵⁾

□ 충남 도내 대학 연구개발(R&D) 현황을 지역 주력산업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역 주력 산업) '23년 '충남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르면 지역 주력 산업은 크게 주축 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나뉨
- 주축 산업은 1) 디스플레이 부품 장비 산업, 2) 탄소저감 자동차부품 산업 3)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 등으로 구성
 - 디스플레이 부품 장비 산업은 다양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장치와 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부품 장비 패널 모듈을 개발 또는 제조하는 산업을 의미함
 - 탄소저감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동차의 환경적 성능 향상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위한 소재 및 부품 환경친화적인 소재 및 부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을 의미함

55) 출원 건수보다 등록 건수가 많은 대학교가 있는데 대학알리미 원자료상의 문제가 있거나, 전년도 출원한 특허를 다음 해 등록한 것으로 보이며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은 생명자원식물 동물 미생물 등을 활용하여 최신 바이오기술을 적용한 기능성 메디바이오 제품 기능성 뷰티제품 동식물 기능증진 제품 등을 가공 및 제조하는 산업 등을 뜻함

○ 미래 신산업은 1)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산업, 2)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산업 등으로 구성됨

-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산업은 모든 전자제품의 하드웨어 구조물과 관련된 기술로써 하드웨어 구조물은 반도체와 같은 능동소자와 저항, 캐패시터(Capacitor)와 같은 수동소자로 구성되며 웨이퍼에서 칩을 잘라내고 단품화 하는 공정 산업을 의미함
-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산업은 수소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 수송용 발전용 스택, 모듈, 연료전지 시스템 및 BOP(Balance of plant) 등 수소발전 핵심 기술 및 제품, 부품, 소재,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을 뜻함

□ (주력산업 학과 현황) 공주대학교,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충남의 3대 주축 산업(디스플레이, 자동차, 바이오) 및 2대 미래 신산업(반도체, 수소 전지 및 발전)과 관련된 학과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음

○ 충청남도 도내 28개교 중 22개교가 5개 분야와 연관된 학과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도내 대학은 바이오 16개, 반도체 10개, 자동차 9개, 디스플레이 7개, 수소전지 6개 등 충남 주력 및 신성장 산업 관련 학과를 보유하고 있음
- 공주대학교,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의 경우 5대 분야 관련 학과를 모두 보유하고 있음
- 한편, 공주교육대학교, 금강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백석대학교, 한국 전통문화대학교, 연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혜전대학교 등은 3대 주축 산업 관련 학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디스플레이 분야) 디스플레이 지역 중점 대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호서대학교, 단국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선문대학교가 있음

○ 디스플레이 분야 관련 주요 대학에 소재한 관련 학과는 다음과 같으며 주요 기능으로 중소기업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공용장비 활용, 기술연구 등이 있음

- 디스플레이 관련 연구기관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남연구원 등이 있으며 후방산업 원천기술개발 연구, 디스플레이분야에 대한 지역 정책·경제 연구 등의 산업혁신 선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지역혁신기관으로 충남 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경제진흥원이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 공용장비 활용 지원, 특허 출원·시험 인증 등 사업화 지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표 3-56] 디스플레이 분야 충남 도내 대학 및 관련 학과 현황

대학명	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전기전자통신공학부
한국폴리텍IV 대학_아산캠퍼스	• 반도체디스플레이과
호서대학교	• 전자디스플레이공학부_전자공학과 • DSC(대전충남세종) 공유대학 융합전공_디스플레이·반도체소부장전공
단국대학교	• 융합기술대학_디스플레이공학과
순천향대학교	• 자연과학대학_전자물리학과 • 공과대학_전자공학과,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선문대학교	• 공과대학_디스플레이반도체공학과, 스마트정보통신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공주대학교	• 천안공과대학-전기전자제어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광공학과, 화학공학부
상명대학교(제2캠퍼스)	• 공과대학_전자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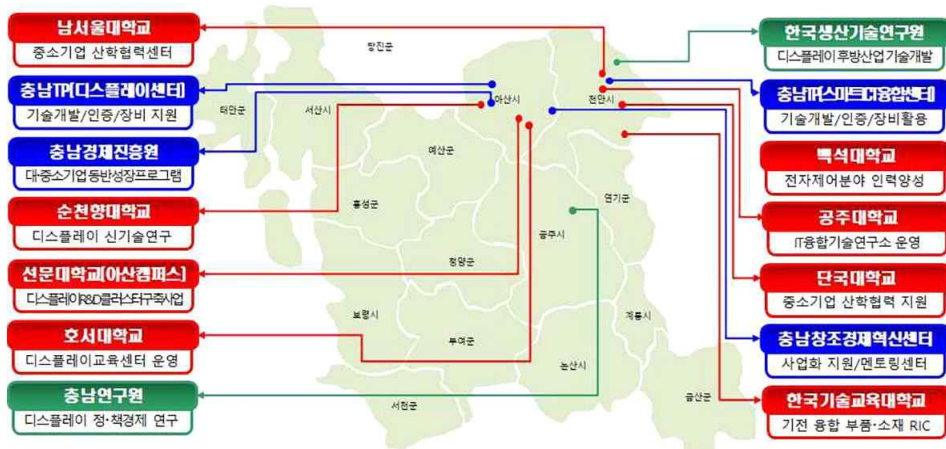
출처: 고등교육통계서비스 및 각 대학 홈페이지 검색

[표 3-57] 디스플레이 분야 충남 도내 혁신 자원 현황

구분	현황	역할
선도기업	• 삼성디스플레이(주)	• 글로벌랜드 및 시장 선도
전후방 연관기업	• 세메스(주), 코닝정밀소재(주), 하나마이크론(주), (주)이녹스첨단소재, (주)에스에프에이반도체	• 1~2차 밴더, 협력기업
대학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호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선문대학교, 공주대학교, 단국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백석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 디스플레이 신기술 연구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연구 • 기술 컨설팅 및 시험 검사 인증특허 지원
연구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남연구원 등	•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연구 • 디스플레이 경제정책 연구
지역혁신 기관	• (재)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스마트 ICT융합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경제진흥원, (사)충남벤처협회, (사)충남디스플레이산업기업협의회	• 기술사업화 지원 • 마케팅 전시회 지원 • 산·학·연 네트워킹 지원

출처: 충남 내부자료(2023)

[그림 3-29] 디스플레이 분야 대학 및 지역혁신기관 분포



주: 대학-빨간색 표시, 지역혁신기관-파란색 표시, 연구기관-초록색 표시

출처: 충남 내부자료

[표 3-58]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인력 현황

(단위: 명, %)

산업	연구인력 소속	2019	2020	2021	연평균증가율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기업체	3,898	3,969	4,356	5.7
	대학	88	108	178	42.2
	연구소·혁신기관	51	56	54	2.9
	합계	4,037	4,133	4,588	6.6

출처: 충남 내부자료(2023)

□ (자동차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자동차 분야 지역 중점 대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IV대학, 호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공주대학교가 있으며 주요기능으로 산학협력 공동기술연구 및 신뢰성 인증·평가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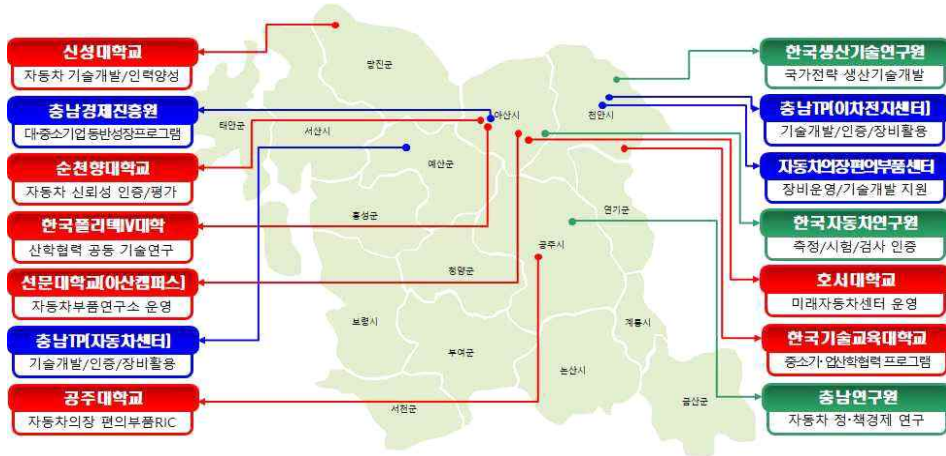
- 연구기관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남연구원이 있으며 자동차 전문 연구 및 측정, 시험, 검사 인증, 생산기술개발 연구, 정책경제 연구 등의 산업혁신 선도 역량을 보유
- 지역혁신기관으로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자동차 의장 및 편의 부품 지역혁신센터 등이 있으며 공용장비 활용 지원·특허 인증 및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혁신 활동을 지원

[표 3-59] 자동차 분야 충남 도내 대학 및 관련 학과 현황

대학명	학과
공주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학부 • 천안공과대학-기계자동차공학부, 미래자동차공학과, 신소재공학부, 디지털융합금형공학과, 지능형모빌리티공학과
순천향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과대학_기계공학과, SCH미디어랩스_스마트자동차학과
전문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과대학_기계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_미래자동차공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한국폴리텍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융합기계과
호서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학부_친환경미래자동차 연계전공 • 공과대학_기계자동차공학부, 자동차CT공학과, 신소재공학과 • DSC(대전충남세종) 공유대학 융합전공_모빌리티SW/AI 전공, 친환경동력 시스템 전공, 자율주행시스템 전공, 니증형 전장제어시스템 전공 등

출처: 고등교육통계서비스 및 각 대학 홈페이지 검색

[그림 3-30] 자동차 분야 대학 및 지역혁신기관 분포



주: 대학-빨간색 표시, 지역혁신기관-파란색 표시, 연구기관-초록색 표시
출처: 충남 내부자료

[표 3-60] 자동차 분야 충남 도내 대학, 연구 및 지역혁신기관 현황

구분	현황	역할
선도기업	• 현대트랜시스(주)	• 글로벌트렌드 및 시장 선도
전후방 연관기업	• (주)현보, (주)신원, 대원강업(주), 대우공업(주)	• 1~2차 밴더, 협력기업
대학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호서대학교, 공주대학교, 한국폴리텍IV대학, 순천향대학교, 선문대학교, 신성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건양대학교 등	• 산학협력 공동 기술 연구, 학술연구
연구기관	•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남연구원 등	• 전문연구 및 측정 시험 검사 인증 • 생산기술개발 및 정책 연구
지역 혁신기관	• (재)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이차전지센터, 자동차의장 및 편의부품 지역혁신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경제진흥원, (사)충남산학융합원	• 공용장비 활용, 특허, 인증, 시제품 제작, 사업화, 마케팅 등 혁신 활동 지원

주: 1) 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소(본원/지역본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본원/지역본원), 지역 연구특화산업
기술개발/기술지원, 장비활용지원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관 등을 의미함
2) 지역혁신기관은 지역전략산업 자원을 위한 인프라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역산업혁신
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TP내 통합센터, TP 비통합 독립재단, 연구소 부설조직 등으로
존재하는 조직을 포함함
출처: 충남 내부자료(2023)

[표 3-61] 자동차 분야 연구인력 현황

(단위: 명, %)

산업	연구인력 소속	2019	2020	2021	연평균증가율
탄소저감 자동차부품	기업체	3,161	3,160	3,329	2.6
	대학	411	380	367	-5.5
	연구소·혁신기관	244	245	248	0.8
	합계	3,816	3,785	3,944	1.7

출처: 충남 내부자료(2023)

□ (바이오 분야) 바이오 분야는 크게 바이오 식품(건강기능식품) 분야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개인 건강관리 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재활기기, 뷰티케어 등)로 나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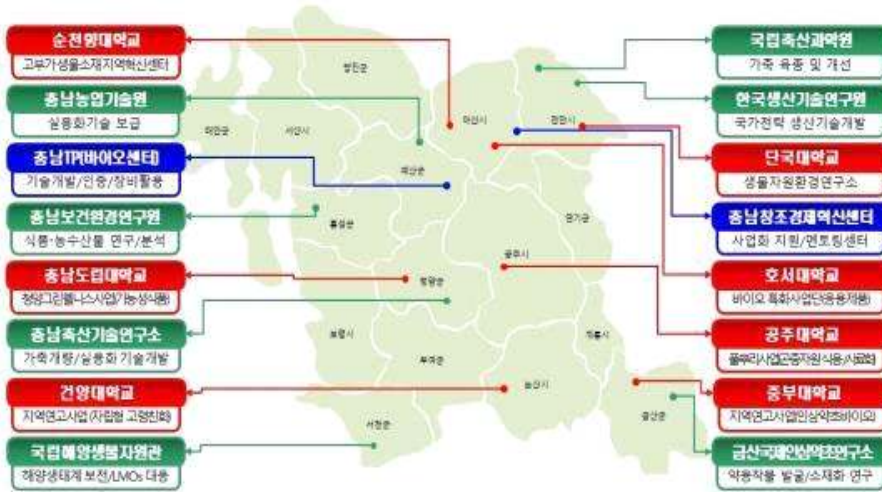
- 바이오 식품 분야에 대한 지역 거점대학은 건양대학교, 중부대학교, 호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공주대학교 등이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 산학협력 공동기술연구, 특화 사업단 운영 등이 있음
 - 그 외 바이오 식품 분야 연구기관으로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충남농업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이 있으며 소재화 연구, 안전 검사, 생산기술 개발 연구, 정책경제 연구 등의 산업혁신 선도 역량을 보유
 - 바이오 식품 분야 지역혁신기관으로 충남 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 공용장비 활용 지원, 특허 출원·시험 인증 및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혁신 활동을 지원
-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지역 거점대학은 단국대학교, 건양대학교, 중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등이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 산학협력 공동기술 연구, 사업단 운영 등이 있음
 -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연구기관으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충남보건환경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있으며 소재화 연구, 안전검사, 생산기술 개발 연구, 정책경제 연구 등의 산업혁신 선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표 3-62] 바이오 분야 충남 도내 대학 및 관련 학과 현황

대학명	학과
건양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과계열-임상병리학과 • 의료공과계열-의공학과, 제약생명공학과 • 창의융합대학-의약바이오학과, 나노바이오화학학과, 임상약학과
공주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학부 • 자연과학대학-화학과, 생명과학과, 화학공학부 • 산업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 식품공학과
나사렛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재활치료학부_임상병리학과
남서울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복지대학_임상병리학과 • 미래융합대학_바이오헬스컨디셔닝학과
단국대학교_제2캠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공학대학_의생명공학부, 제약공학과 • 공공보건과학대학_임상병리학과
상명대학교_제2캠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기술대학_식물식품공학과
선문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건대학_제약생명공학과, 식품과학부
순천향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학대학_식품영양학과, 생명과학과 • 의료과학대학_의료생명공학과, 의료IT공학과, 임상병리학과, 의약공학과, 의공학과
중부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학부_바이오식품학전공, 바이오화장품학전공 • 바이오융합학부_헬스케어제약공학전공
한국기술교육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_화학생명공학전공
한서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학부_바이오식품과학과
호서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건대학_식품공학과, 제약공학과, 임상병리학과, 화장품생명공학부, 식품영양학과
백석문화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학계열_식품영양학과
신성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학계_임상병리과
국제뇌교육 종합대학원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생명과학과

출처: 고등교육통계서비스 및 각 대학 홈페이지 검색

[그림 3-31] 바이오 식품 분야 대학 및 지역혁신기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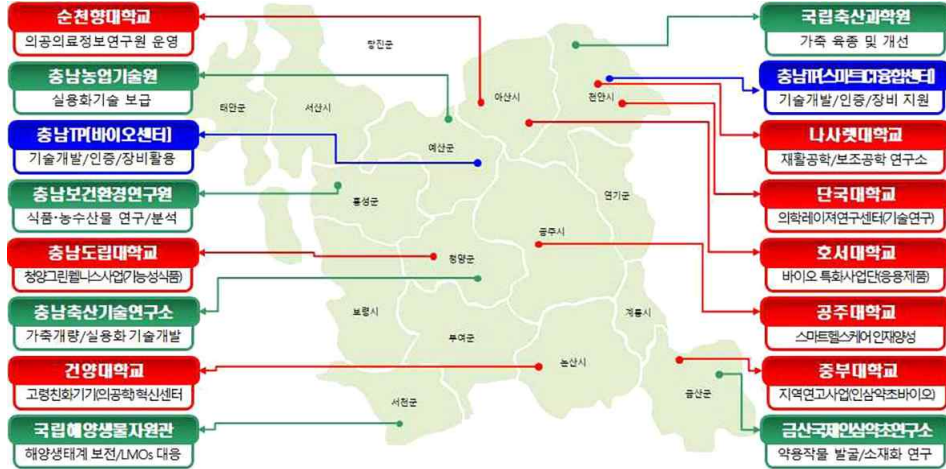


주: 대학-빨간색 표시, 지역혁신기관-파란색 표시, 연구기관-초록색 표시

출처: 충남 내부자료

-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지역 혁신기관으로 충남 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창조 경제혁신센터가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 공용장비 활용 지원, 특허 출원·시험 인증 및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 전문가 활용 컨설팅, 수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그림 3-32]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대학 및 지역혁신기관 분포



주: 대학-빨간색 표시, 지역혁신기관-파란색 표시, 연구기관-초록색 표시

출처: 충남 내부자료

[표 3-63] 바이오 식품 및 헬스케어 분야 충남 도내 혁신 자원 현황

구분	현황	역할
선도기업	• 웅진식품(주), 미래메디엔텍(주), (주)인바디	• 글로벌트랜드 및 시장 선도
전후방 연관기업	• 종근당건강(주), 대동고려삼(주), 한남메디팜(주), (주)파마젠, (주)세라젠, (주)녹십자메디스, 스펙셀메디칼, (주)지니메디	• 1~2차 밴더, 협력기업
대학	• 건양대학교, 공주대학교, 나사렛 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중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선문대학교, 백석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호서대학교, 등	• 바이오 핵심 융합 기술 연구 • 천연물 유용자원 소재 개발 연구 • 기술 컨설팅 및 시험 검사, 인증 특허 지원
연구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남연구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설치예정)	• 바이오 생물공정 기초 원천 연구 • 바이오산업 경제정책 연구 • 농축산 및 해양 산업 기술지원
지역 혁신기관	• (재)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PMC, 헬스케어스파 산업진흥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경제진흥원, (사)충남벤처협회, KTL, KTR	• 기술사업화 지원 • 마케팅 전시회 지원 • 산·학·연 네트워크 지원

출처: 충남 내부자료(2023)

[표 3-64] 바이오 분야 연구인력 현황

(단위: 명, %)

산업	연구인력 소속	2019	2020	2021	연평균증가율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기업체	1,464	1,519	1,627	5.4
	대학	909	998	1,071	8.5
	연구소·혁신기관	98	95	100	1.0
	합계	2,471	2,612	2,798	6.4

출처: 충남 내부자료(2023)

□ (반도체 및 수소전지 분야) 반도체 및 수소전지 분야 도내 대학 관련 학과는 다음과 같음

- 반도체 및 수소전지 분야 대학 학과는 공주대, 남서울대 상명대 2캠퍼스, 선문대, 순천향대, 한기대 등에 분포되어 있음

[표 3-65] 반도체 및 수소전지 분야 충남 도내 대학 학과 현황

구분	대학명	학과
반도체	공주대학교	• 천안공과대학-전기전자제어공학부, 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부 • 계약학과-반도체기계공학과, 전기전자응용공학과, 생산기계공학과
	남서울대학교	• 공과대학_전자공학과
	상명대학교_제2캠퍼스	• 공과대학_전자공학과,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선문대학교	• 공과대학_디스플레이반도체공학과, 스마트정보통신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자공학과
	순천향대학교	• 공과대학_전자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전기전자통신공학부
	호서대학교	• 공과대학_신소재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 반도체공학과
	백석문화대학교	• 공학계열_전기과
	충남도립대학교	• 전기전자공학과
	한국폴리텍IV대학_아산캠퍼스	•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수소 전지	공주대학교	• 천안공과대학-화학공학부, 신소재공학부
	선문대학교	• 공과대학_에너지화학공학과
	순천향대학교	• SCH미디어랩스_에너지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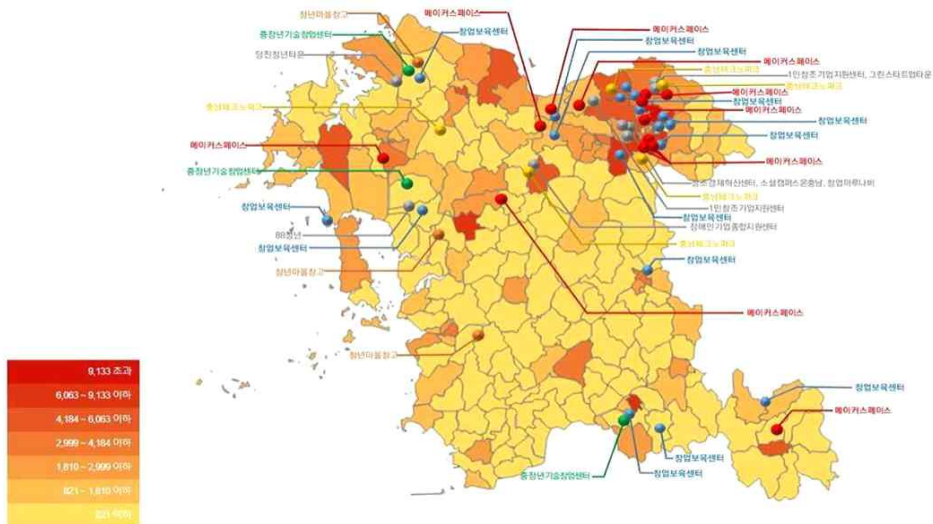
구분	대학명	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_에너지신소재공학전공 기계공학부
	호서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과대학_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신성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학계_화학공학과, 신재생에너지과

출처: 고등교육통계서비스 및 각 대학 홈페이지 검색

3) 창업 현황

- 충남 창업 정책 환경을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창업기업이 적으며, 창업 생태계 측면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초기창업 인큐베이터를 위한 인프라 사각지대 존재함
-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창업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중심 전략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함
 - 창업인프라 사각지대 중 지역 내 경제역량 등을 고려하여 창업보육센터 등의 창업 인프라 추가 조성 추진 필요

[그림 3-33] 충남 전체 기업 분포 및 창업 인프라 현황



출처: 충청남도 창업육성 기본계획: 2023년~2025년(2022:21)

□ 창업 관련 주요 도정 과제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충남·경기 간 초광역 협력을 통한 글로벌 메가시티 육성
- (신기술·신산업 기반 산업육성 정책 추진)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26, 아산시), 메디바이오 산업(보령), 이차전지 기술 실증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그린 K-UAM(도심항공교통) 실증기반 조성,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 조기 추진, 내포도시 첨단산업단지 기업유치, 국가산단 조성(천안 종축장), 천안 역세권 도시 재생 사업 등
- (에너지전환 및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 조성)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추진 (화력발전소),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당진), 수소 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천안·아산·당진·서산 일대)
- (수도권 우수 혁신생태계와의 연계강화) GTX-C 천안·아산 연장, 지하철 1호선 전철 연장
- (충남 혁신 및 글로벌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충청지역 기반 지방 은행 설립, 미국·일본·중국에 해외경제조직 부활, 충남디자인진흥원 설립
-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아산·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보령), 내포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국방국가산업 육성(논산), 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수소특화), 김산읍 진흥구역 지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동물용의약품 특화 단지(예산),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서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서산·태안), 서해안 마리나 산업 육성

[표 3-66] 충남 창업 육성 정책 주요 내용 (2022년 기준)

추진 전략	세부 과제	주요 내용
충남형 혁신창업 벨트 구축	디지털 혁신창업 벨트 구축	• 민선8기 ‘베이벨리 조성’ 중 충남 북부권 혁신인프라 연계를 통한 혁신역량 집중기반 조성, 제 2의 판교벨리 목표
	디지털, 신산업 융합 창업거점 강화	• 천안·아산 제조산업단지 중심의 제조 혁신창업 인프라 구축 • 창업마루 나비를 지역 내 투자중심 거점으로 전환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 및 그린 창업벨트 기반조성	• 제조(중화학)+관광+에너지*를 연계하는 충남 서부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해양레저관광 및 그린창업벨트 육성 • 관광중심 창업전략을 기반으로 산업전환과 연계, 충남 서부권의 그린창업벨트와 보령~부여~공주 백제문화권과 연계한 관광창업 벨트 조성 추진 (홍성: 청운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관련 기능 등)
제조혁신 창업의 인큐베이터	제조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충남 대표적 제조 집적 지역인 천안, 아산에 공유공장 (share factory) 개념의 제조혁신 창업 인프라 조성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Scale-up 촉진	• 대기업-스타트업 문제해결형 플랫폼(중기부) 구축 및 투자중심 거점 확보
	제조·IT 융합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 디지털 전환 및 제조·서비스 융복합 대비 장기적으로 혁신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여건 조성
충남이 끌고 중앙이 미는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	민간과 함께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중앙 사업연계 강화	• 지역 내 민간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 지원을 통해 중기부 대표 민관협력 창업지원 정책인 TIPS 프로그램 연계 강화
	중앙 지원정책 연계, 맞춤형 창업 지원정책 강화	• 지역 내 창업보육센터, 창업마루 나비, GST 등 지역 내 창업인프라를 통해 보육 중인 스타트업 중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지원
창업-투자- 성장의 선순환 생태계 기반 마련	지역 내 우수 투자기관 유치 및 투자역량 강화	• 외부 우수투자기관 지역 내 신규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투자기업 발굴 및 투자한 경우 도에서 운영사와 기업 각각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 추진
	스케일업 촉진을 통한 지역 내 혁신역량 축적	• 기업의 두 번째 데스밸리 극복을 지원하고, 지역 내·외 초기투자를 받은 우수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촉진을 위한 지역펀드 조성
지역 내 창업 정책 사각지대	창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창업 인프라 확대	• 창업보육센터와 메이커스페이스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시군을 중심, 연계지역의 주요 산업을 고려, 창업보육센터 대학 내 1개 추가 구축

추진 전략	세부 과제	주요 내용
해소	권역별 특화산업 중심, 창업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권역별 특화산업 중심 창업 활성화 계획 추진) • 충남 천안·아산을 제외한 제2 및 신산업 기반이 부족한 시군을 중심으로 권역별 또는 지역별 특화산업을 선정,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 • (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연계지원 강화) • 기초지자체에서 로컬크리에이터를 관리,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 모델 창출 및 지역 내 주관기관 (산학협력단, 지역연구소 등) 활용 사업기획 도출 • 충남도에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우선지원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창업분 확산	창업지원 총괄역할 및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창업지원기관·자원들을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연계, 창업생태계 요소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창업협의회 결성 및 대학 연합체 강화를 통한 네트워크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창업네트워크 실효성 제고 • 지역 내 창업중심대학 (호서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학 창업교육 협의회' 구성 및 '충남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구성
	창업친화적 제도 및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관련 통합포털 구축, 창업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창업지원 환경 개선 • 규제자유특구 등 기획을 전담한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창경센터와 연계, 창업관련 규제발굴 및 규제개선 추진

출처: 충청남도(2022.12) 내부자료⁵⁶⁾

□ 도내 대학의 창업 관련 운영 현황

- (전반적 창업 현황) 충남 대학의 창업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충남은 창업 관련 강좌 및 경진대회 등 창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노력은 우수하나, 지원액, 공간, 전담인력 등 지원은 전국 평균 대비 낮음
- 충남 지역에서 대학별 창업 인프라, 전담 인력 등 대학발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국평균 대비 낮고 대학 간 연계성도 부족
 - 타지역 대비 충남지역 내 대학기술지주를 통한 벤처투자가 없음⁵⁷⁾

56) 충청남도 창업육성 기본계획: 2023년 ~ 2025년

57) The VC (2017~2022년) 자료 분석 결과,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 외 10개 대학기술지주에서 벤처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전북, 부산, 대경은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를 통해 벤처투자가 이루어졌음

[표 3-67] 충남 대학 학생 창업 및 창업 지원 현황 (2022년 기준)

학교명	학생 창업 현황						학생 창업 지원 현황				
	창업자 수 (명)	창업기업 수(개)		고용 인원 (명)	매출액 (천원)	자본금 (천원)	전용 공간 (㎡)	지원액 (천원)		창업 전담 인력(명)	
		교내	교외					교비	정부 지원	교원	직원
건양대	5	0	5	0	0	0	1,146	45,057	54,194	4	3
공주대	8	1	7	0	120,411	198,000	352	45,202	11,978	1	3
글로벌 사이버대	0	0	0	0	0	0	0	0	0	1	1
나사렛대	3	1	2	0	9,000	1,500	611	4,360	265,179	1	3
남서울대	1	1	0	0	0	0	348	59,712	0	1	2
단국대_ 제2캠퍼스	5	2	3	5	5,322	0	252	24,800	14,710	1	4
백석대	9	1	6	0	405,560	86,300	392	10,095	318,918	2	4
상명대_ 제2캠퍼스	7	0	7	2	35,386	90,700	228	15,431	23,127	1	3
선문대	15	3	11	0	0	0	611	16,391	139,104	2	8
순천향대	10	0	10	0	23,105	0	2,059	160,000	2,014,628	10	8
중부대	0	0	0	0	0	0	1,313	1,181	85,556	5	3
청운대	0	0	0	0	0	0	125	3,472	10,023	1	2
한국 기술 교육대	9	4	5	2	55,268	25,000	908	99,237	445,454	1	7
한국 전통 문화대	0	0	0	0	0	0	242	49,000	0	1	1
한서대	4	2	2	0	0	0	161	10,261	82,634	1	1
호서대	33	0	17	19	0	0	299	38,081	257,072	8	15
백석 문화대	8	0	8	0	0	0	50	19,014	41,392	1	3
신성대	0	0	0	0	0	0	31	37,936	0	1	0
아주 자동차대	0	0	0	0	0	0	696	0	0	1	0

학교명	학생 창업 현황						학생 창업 지원 현황				
	창업자 수 (명)	창업기업 수(개)		고용 인원 (명)	매출액 (천원)	자본금 (천원)	전용 공간 (㎡)	지원액 (천원)		창업 전담 인력(명)	
		교내	교외					교비	정부 지원	교원	직원
연암대	1	0	1	0	0	0	436	900	19,328	0	3
충남 도립대	0	0	0	0	0	0	77	9,811	0	1	1
해전대	0	0	0	0	0	0	106	1,800	0	0	0

출처: 대학알리미

주: 대학알리미 자료 상 유원대학교 아산 캠퍼스와 세한대학교 당진 캠퍼스 제외되어 있음

○ (창업 교육 지역별 비교) 충남은 충북이나 대전 대비 창업 관련 강좌와 이수자 수가 월등히 높음

- 창업 강좌 개설 대학 비율을 보면 전문대보다는 일반대가 높고 국공립 대학보다 사립대학이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3년간 충청권 대학 창업 강좌 수를 보면 충남이 충북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대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으며, 창업강좌 이수학생수를 보아도 유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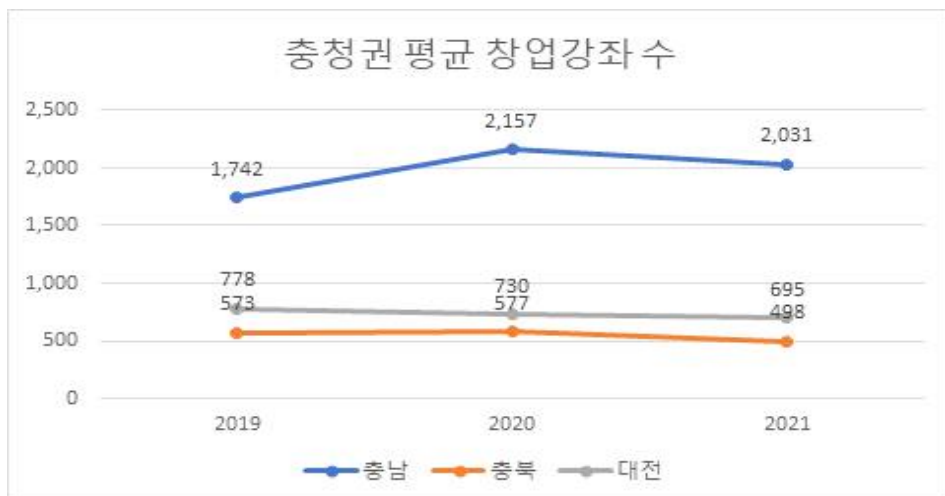
[표 3-68] 최근 3년 충남 대학 창업강좌 개설 대학 비율

(단위: %)

	2019	2020	2021
일반대(18)	94.4	94.4	94.4
전문대(9)	66.7	66.7	66.7
국공립(4)	75	75	75
사립(23)	86.7	86.7	86.7
계 (27)	85.2	85.2	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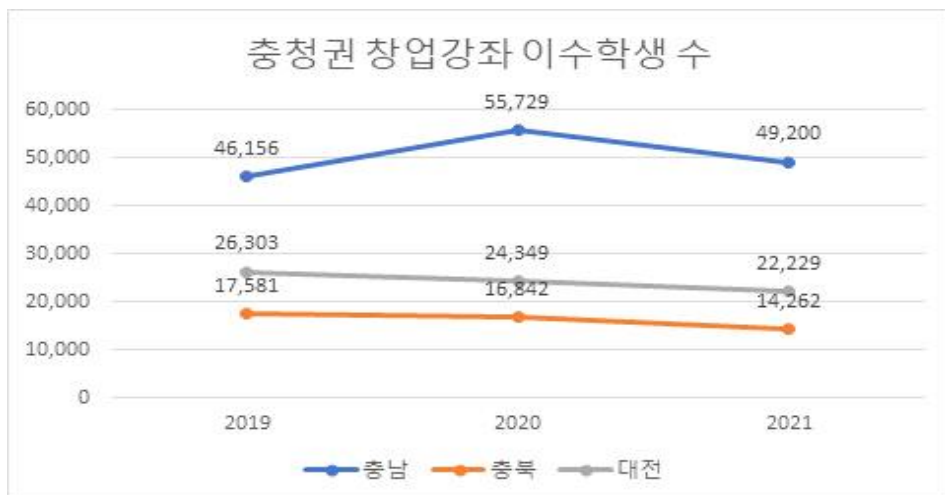
출처: 대학알리미

[그림 3-34] 최근 3년 충청권 평균 창업강좌 수



출처: 대학알리미 자료 저자가 작성

[그림 3-35] 최근 3년 충청권 대학 창업강좌 이수학생 수



출처: 대학알리미 자료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표 3-69] 최근 3년 충남 대학 창업강좌 수 및 이수학생 수

(단위: 개, 명)

		2019	2020	2021
창업 강좌 개수	전체	1,742	2,157	2,031
	일반대	1,404	1,630	1,702
	전문대	338	527	329
이수 학생 수	전체	46,156	55,729	49,200
	일반대	38,132	43,110	41,088
	전문대	8024	12619	8,112

출처: 대학알리미

- (도내 대학별 비교) 호서대학교가 '22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 지역 내 대학창업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전문대로는 백석문화대학교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보임
- 호서대학교는 '21년 기준 지역 내에서 창업 관련 강좌 이수자가 가장 많으며, 창업 교육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창업 강좌 이수학생 수 기준 전국 대학에서 2위를 기록하였고 학생창업 배출 전체 대학 18위를 기록함⁵⁸⁾
 - 전문대학으로는 백석문화대학교가 창업강좌 이수학생 전국 2위, 학생창업 배출 전체 대학 전국 9위, 창업동아리 수 전국 5위 및 창업 동아리 참여 학생 수 7위 등을 기록함

58) 2021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 기준

https://www.uicc.re.kr/bbs/files/bbsView.do?bbsGubun=nologin&contId=B_000000000000005825

[표 3-70] 충남 대학 창업 교육 현황 (2022년 기준)

(단위: 개, 명, 회)

학교	창업강좌 현황								비정규교과(창업활동)현황					
	교양과목				전공과목				창업 동아리		창업 경진대회		창업캠프	
	이론형		실습형		이론형		실습형		수	참여 인원	개최 횟수	참여 인원	개최 횟수	참여 인원
	강좌	이수자	강좌	이수자	강좌	이수자	강좌	이수자						
건양대	42	1,239	0	0	3	42	0	0	11	61	2	177	1	25
공주대	20	575	3	4	22	491	2	18	43	201	2	141	3	65
글로벌 사이버대	1	127	0	0	5	131	0	0	0	0	1	10	0	0
나사렛대	28	1,230	0	0	21	416	147	909	22	75	3	435	5	301
남서울대	27	1,394	0	0	7	221	12	147	13	86	1	44	3	121
단국대_ 제2캠퍼스	4	192	0	0	90	2,798	8	111	2	8	1	96	0	0
백석대	451	6,935	0	0	21	424	28	462	32	563	4	586	4	147
상명대_ 제2캠퍼스	8	458	0	0	8	344	1	18	6	23	1	10	0	0
전문대	20	1,265	0	0	42	1,021	0	0	51	347	2	214	1	11
순천향대	46	1,874	0	0	35	813	2	15	49	218	5	339	2	73
중부대	61	2,510	0	0	113	2,953	2	31	24	146	4	391	2	127
청운대	7	343	19	157	22	280	6	67	27	88	3	36	0	0
한국기술 교육대	4	137	2	177	12	371	7	104	22	63	1	80	1	20
한국전통 문화대	2	22	0	0	0	0	0	0	7	21	2	43	1	79
한서대	18	812	0	0	3	51	10	41	40	180	1	53	3	144
호서대	159	5,981	0	0	11	359	0	0	23	102	6	76	5	73
백석 문화대	175	4,032	0	0	17	352	10	171	31	425	1	46	1	30
신성대	3	72	1	32	1	56	25	422	3	72	2	38	2	51
아주 자동차대	4	146	0	0	0	0	0	0	0	0	0	0	0	0
연암대	16	431	0	0	0	0	8	122	15	225	1	20	3	608
충남 도립대	3	69	0	0	1	20	2	28	7	118	1	42	0	0
해전대	21	553	0	0	13	256	2	28	3	55	1	15	0	0

출처: 대학 알리미

주: 대학알리미 자료 상 유원대학교 아산 캠퍼스와 세한대학교 당진 캠퍼스 제외되어 있음

[표 3-71] 충남 도내 대학 창업교육 지원 현황 (2022년 기준)

(단위: 명, 원)

학교	창업교육 전담 조직 현황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 현황	
	교직원 수	운영비(원)		창업 휴학제 시행여부	창업 대체 학점인정제도 시행 여부
		교비	사업비		
건양대	4	45,057,694	54,194,343	Y	N
공주대	5	59,876,440	114,998,020	Y	Y
글로벌사이버대	1	5,100,000	0	N	N
나사렛대	6	4,360,000	372,756,870	Y	N
남서울대	3	0	0	Y	Y
단국대_제2캠퍼스	5	24,800,000	14,710,790	Y	Y
백석대	5	10,095,000	318,918,927	Y	Y
상명대_제2캠퍼스	4	15,431,663	23,127,600	Y	Y
선문대	3	16,391,000	139,104,000	Y	N
순천향대	15	160,000,000	1,953,177,230	Y	Y
중부대	8	1,181,230	85,556,406	Y	Y
청운대	5	3,472,430	10,023,060	Y	Y
한국기술교육대	10	99,237,201	445,454,259	Y	Y
한국전통문화대	3	43,600,000	50,000,000	Y	N
한서대	2	10,261,650	82,634,790	Y	Y
호서대	25	300,000,000	8,639,799,077	Y	Y
백석문화대	2	19,014,780	41,392,730	Y	Y
신성대	2	0	37,936,436	Y	N
아주자동차대	4	0	6,235,200	N	Y
연암대	4	0	0	N	N
충남도립대	2	0	0	Y	N
혜전대	4	151,601,097	0	Y	Y

출처: 대학 알리미

주: 대학알리미 자료 상 유원대학교 아산 캠퍼스와 세한대학교 당진 캠퍼스 제외되어 있음

4) 대학 특성화 현황

□ 충남 도내 대학 특성화 일반 현황

○ (특성화 학과 기준) 충남 도내 대학의 특성화 학과 설치 대학 현황과 특성화 대분류 및 소분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특성화학과가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분류하였고, 특성화 대분류는 건설 및 교통, 공공서비스, 기계, 기초과학(인문·사회·자연), 농림수산식품, 문화·예술·체육, 보건·의료, 사업 지원, 생명과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특화교육 시스템, 화공, 환경 등임

[표 3-72] 충남 도내 대학 특성화 현황 (2021년 기준)

특성화 대분류	특성화 소분류 예시	학교
건설·교통	국토 계획 및 개발, 시설물 설계 및 해석, 건축·토목(융합), 항공교통, 건축설비	남서울대, 순천향대, 한서대, 호서대
공공서비스	군인·경찰, 사회복지(융합),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일반직공무원, 아동복지, 종교전문직(융합)	건양대, 글로벌사이버대, 금강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선문대, 중부대, 청운대
기계	기계부품·소재(융합), 신재생에너지 기계, 에너지 기계(융합), 자동차·철도(융합), 자동차조립·정비, 기계부품·소재(융합), 우주·항공기계(융합), 기계설계	건양대, 공주대, 순천향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서대, 호서대
기초과학 (인문·사회·자연)	사회·인류·생활과학, 문헌정보·언론정보·커뮤니케이션학, 정치·행정·법학, 물리학, 자연과학(융합), 지구과학, 화학, 사회과학(융합), 언어학, 인문학(융합)	건양대, 공주대, 글로벌사이버대, 금강대, 나사렛대, 선문대, 순천향대, 중부대, 한서대, 호서대
농림수산식품	동물자원·수의과학, 식물자원과학, 농림기술(융합), 식품가공·안전·조리(융합), 해양수산기술(융합)	공주대, 단국대 제 2캠퍼스, 선문대, 중부대, 한서대, 호서대
문화·예술·체육	관광(융합), 디자인(융합), 체육, 문화콘텐츠(융합), 헤어·메이크업·피부관리, 영상(방송·통신)콘텐츠, 캐릭터·만화·애니메이션, 음악, 환경디자인, 연극,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게임콘텐츠, 모바일·뉴미디어콘텐츠	건양대, 공주대, 글로벌사이버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제 2캠퍼스,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중부대, 청운대, 한서대, 호서대
보건·의료	의과학(융합), 간호과학, 기초의과학, 임상의학, 치의과학, 의약품(융합), 기능복원·보조기기, 의약품 개발·안전, 한의과학	건양대, 공주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제2캠퍼스,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중부대

특성화 대분류	특성화 소분류 예시	학교
사업 지원	국제경영, 마케팅·경영정보, 재무·회계, 물류·유통(융합), 인사관리, 국제무역	건양대, 글로벌사이버대, 금강대, 선문대, 순천향대, 한국기술교육대, 호서대
생명과학	생물청정기술, 기능성 식품 소재, 바이오 화장품·소재	공주대, 중부대
전기·전자	전기·전자 기기(융합), 반도체·디스플레이(융합), 반도체 소자·설계	공주대, 선문대, 순천향대, 한국기술교육대, 호서대
정보·통신	IT 기기 및 기술(융합), 정보 보호·보안, 소프트웨어(융합), 통신 기기 및 기술, IT 정보서비스(융합)	건양대, 공주대, 글로벌사이버대, 남서울대, 백석대, 상명대 제2캠퍼스, 순천향대, 중부대, 청운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서대, 호서대
특화교육시스템	국제화 교육, 전공특화교육·주문식교육, 기초·인성 교육	단국대 제2캠퍼스, 호서대
화공	나노화학, 정밀화학	순천향대, 호서대
환경	환경평가·방재(융합), 대기환경, 환경보건·평가, 생태환경	건양대, 공주대, 순천향대, 중부대

출처: 대학 알리미 대학 특성화 자료

주: 대학알리미 자료 상 유원대학교 아산 캠퍼스와 세한대학교 당진 캠퍼스 제외되어 있음

□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 따른 특성화 현황

- 대학혁신지원사업 III 유형에 해당하는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은 일반재정지원 대학 중 비수도권 사립대학은 대학-지자체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이 사업에 따라 비수도권 사립대학은 대학은 지자체-대학 간 협의·조정 및 대학별 발전 전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 후 대학별 대학 혁신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함
- 충남 발전계획과 연계한 도내 대학별 특성화 분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충남 발전계획은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서남부권 응급의료체계 구축,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스마트팜 집단지화 추진, 생활체육 활성화, 베이벨리 메가시티 조성, 스마트 건강도시 조성, 미래교통 사업 추진, 해양바이오 인프라 집적 등임

- 특성화 분야는 국방(군수) 안전, 헬스케어, (장애인)재활복지, 스마트농업, 사회복지, 문화관광, 디지털 정보화, 모빌리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바이오 헬스케어, 2차전지, 해양바이오 등임
- 건양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중부대, 청운대, 한국 기술교육대, 한서대, 호서대 등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충남 내부자료, 2023.06.15.)

3. 대학 설문조사 분석

1) 분석 개요

□ 설문 개요

- 대학 대상 설문조사는 일반 및 산학협력 분야의 두 가지로 진행되었음
 - (설문대상) 설문은 대학 재정지원 정책 일반 현황 관련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충남 도내 대학 본부 보직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산학협력 관련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도내 대학 산학협력단 및 취업 관련 센터 보직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하였음
 - (설문 내용) 설문은 일반 및 산학협력 모두 2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의 경우 대학 재정지원 정책 일반 현황, 산학협력의 경우 산학협력 정책 일반 현황, 그리고 양자 공통으로 RISE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음
 - (설문 기간) 설문은 2023.08.08.~2023.08.23.으로 약 2주간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었고 충남도청에서 각 대학으로 보내 회수한 후 연구진이 취합하였음

[표 3-73] 대학 대상 설문조사 주요 내용

부문	영역	주요 내용
대학 재정지원 일반	대학 재정지원 정책 일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재정지원정책 참여 경험 여부, 참여 경험 있을 경우 만족도 • 대학 재정지원정책 참여시 주된 애로사항
일반 및 산학 공통	RISE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SE 추진에 따른 우려 사항 • RISE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나, 건의 사항 & 대학의 역할

부문	영역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SE 체제 하에서 지역-대학-기업체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활성화 방안 • 충남 RISE 체제 하 동반성장할 수 있는 분야별 과제 제안
산학협력	산학협력 일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산학협력 참여 경험 여부, 참여 경험 있을 경우 만족도 • 참여 경험 있는 산학협력 분야의 중요도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 산학협력의 주된 애로사항

□ 재정지원 일반 부문 응답자 특성

○ 재정지원 일반 부문에 대한 대학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대학 유형) 일반대 사립, 전문대 사립, 일반대 국공립, 전문대 국공립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충남 도내 대학 구성을 짐작했을 때 고르게 응답한 것으로 파악됨
- (소속 대학 계열) 응답 교수의 소속은 공학계열, 사회계열, 의약계열 및 예체능 계열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및 연령) 응답 교수의 성별은 남성이 90% 이상이었으며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았음
- (근속년수) 교수로 재직된 근속년수는 20년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기간은 유사하게 나타남
- (직급) 직급은 정교수가 가장 많고 부교수, 조교수 순으로 나타남

[표 3-74] 대학 재정지원 관련 설문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명, %)	구분		응답자(명, %)
전체		42 (100.00)	성별	여성	4 (9.52)
				남성	38 (90.48)
대학 유형	일반대 국공립 (교대 포함)	9 (21.43)	연령	40~49세	8 (19.05)
	일반대 사립	21 (50.00)		50~59세	29 (69.05)
	전문대 국공립	1 (2.38)		60~65세	5 (11.90)
	전문대 사립	11 (26.19)			

구분		응답자(명, %)	구분		응답자(명, %)
소속 대학 계열	인문계열	2 (4.76)	근속 연수	5년 미만	5 (11.90)
	사회계열(상경계 포함)	8 (19.05)		5년 이상 10년 미만	8 (19.05)
	교육(사범)계열	2 (4.76)		10년 이상 15년 미만	5 (11.90)
	공학계열	18 (42.86)		15년 이상 20년 미만	7 (16.67)
	자연계열	3 (7.14)		20년 이상	16 (38.10)
	의·약계열 (간호, 보건계열 포함)	4 (9.52)	직급	무응답	1 (2.38)
	예체능 계열	4 (9.52)		조교수	5 (11.90)
	기타	1 (2.38)		부교수	11 (26.19)
				정교수	25 (59.52)
				무응답	1 (2.38)

[표 3-75] 산학협력 관련 설문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명, %)	구분		응답자(명, %)
전체		32 (100.00)	성별	여성	4 (12.50)
				남성	28 (87.50)
대학 유형	일반대 국공립 (교대 포함)	5 (15.63)	연령	40~49세	7 (21.88)
	일반대 사립	17 (53.13)		50~59세	21 (65.63)
	전문대 국공립	1 (3.13)		60~65세	4 (12.50)
	전문대 사립	9 (28.13)			
소속 대학 계열	인문계열	2 (6.25)	근속 연수	5년 미만	3 (9.38)
	사회계열(상경계 포함)	3 (9.38)		5년 이상 10년 미만	3 (9.38)
	교육(사범)계열	1 (3.13)		10년 이상 15년 미만	5 (15.63)
	공학계열	11 (34.38)		15년 이상 20년 미만	8 (25.00)
	자연계열	9 (28.13)		20년 이상	13 (40.63)
	의·약계열 (간호, 보건계열 포함)	3 (9.38)	직급	조교수	4 (12.50)
	예체능 계열	3 (9.38)		부교수	5 (15.63)
				정교수	22 (68.75)
			비전임교원	1 (3.13)	

□ 산학협력 부문 응답자 특성

○ 산학협력 부문 대학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대학 유형) 재정지원 부문 응답자와 유사하게 일반대 사립, 전문대 사립, 일반대 국공립, 전문대 국공립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도내 대학 구성을 짐작했을 때 고르게 응답한 것으로 파악됨
- (소속 대학 계열) 응답 교수의 소속은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및 예체능 계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산학협력 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성별 및 연령) 응답 교수의 성별은 남성이 87% 이상이었으며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음
- (근속년수) 교수로 재직된 근속년수는 20년 이상이 가장 많았고 15년 이상 2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0년 미만의 순으로 나타남
- (직급) 직급은 정교수가 가장 많고 부교수, 조교수 순으로 나타남

2) 분석 결과

□ 일반 부문 분석 결과

○ 대학 재정지원 사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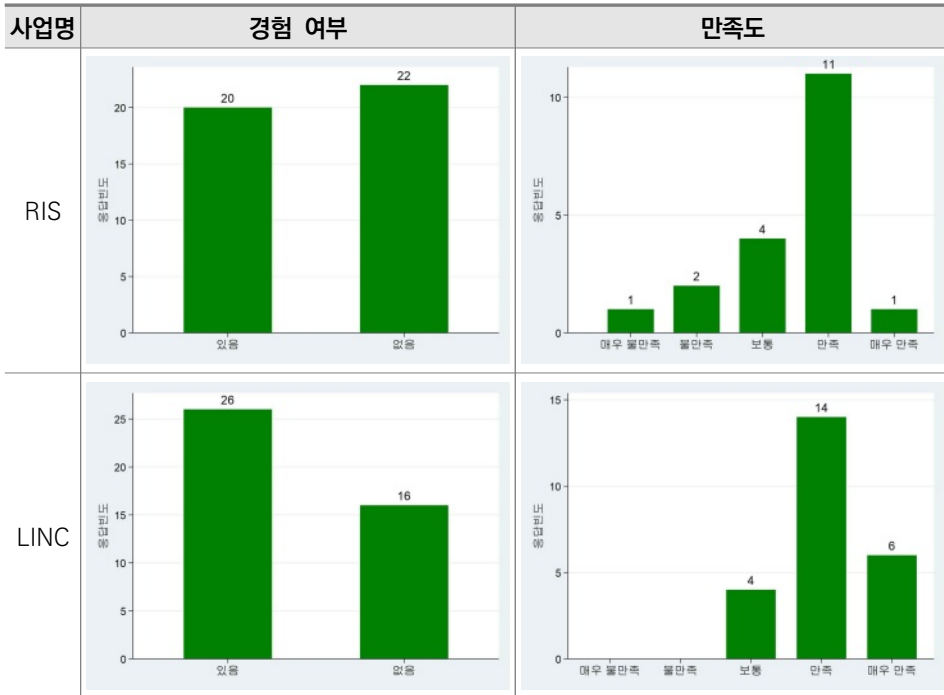
- (RISE 포함 사업) RISE에 포함되는 사업 중 참여한 대학은 고등직업교육거점 지구사업(HiVE)과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존 대학 재정지원 사업) 기존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대학 자율역량 강화 지원사업(ACE)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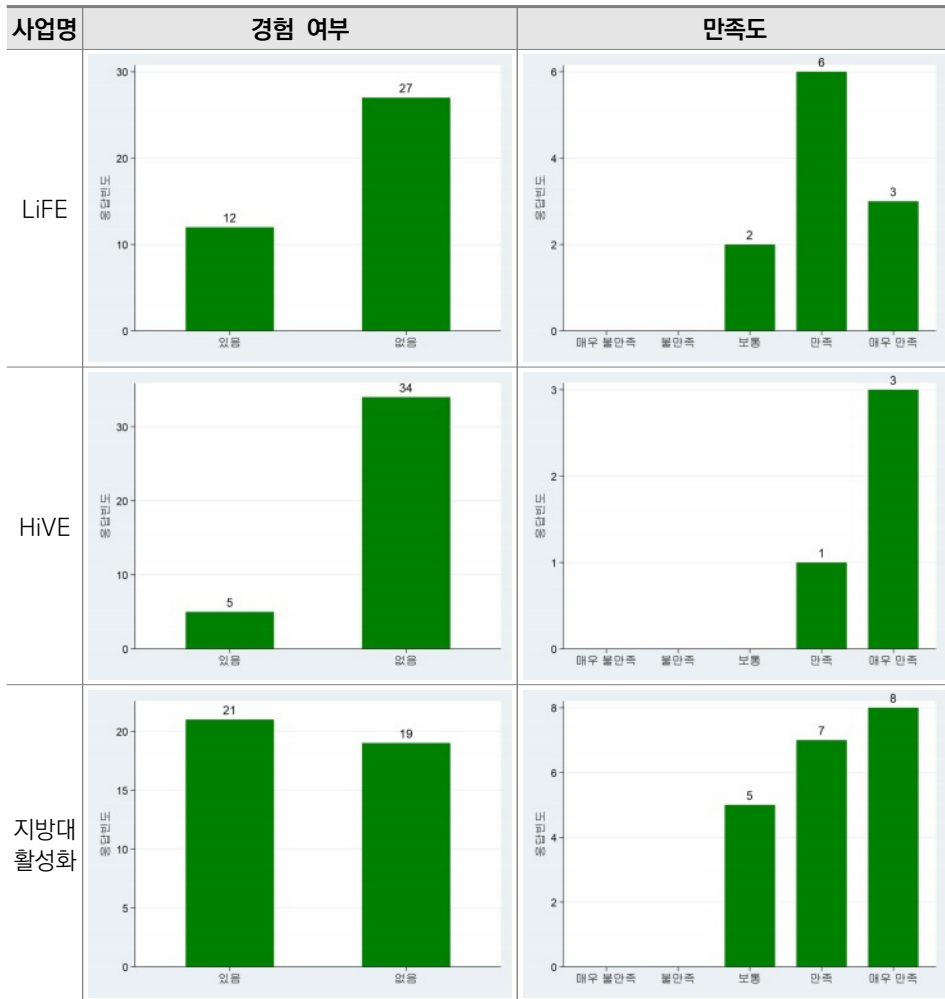
[표 3-76] 대학 재정지원사업별 만족도

분류	평균 (표준편차)	N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3.47 (0.96)	19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4.08 (0.65)	24

분류	평균 (표준편차)	N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4.09 (0.70)	11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4.75 (0.50)	4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4.15 (0.81)	20
대학 자율역량강화 지원사업(ACE)	4.50 (0.53)	8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	4.14 (0.71)	22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4.00 (0.89)	6
대학인문역량강화지원사업(CORE)	3.00 (0.00)	1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	3.80 (0.45)	5
글로벌 박사 양성사업(BK)	4.08 (0.79)	12

[그림 3-36] RISE 포함 사업 참여 여부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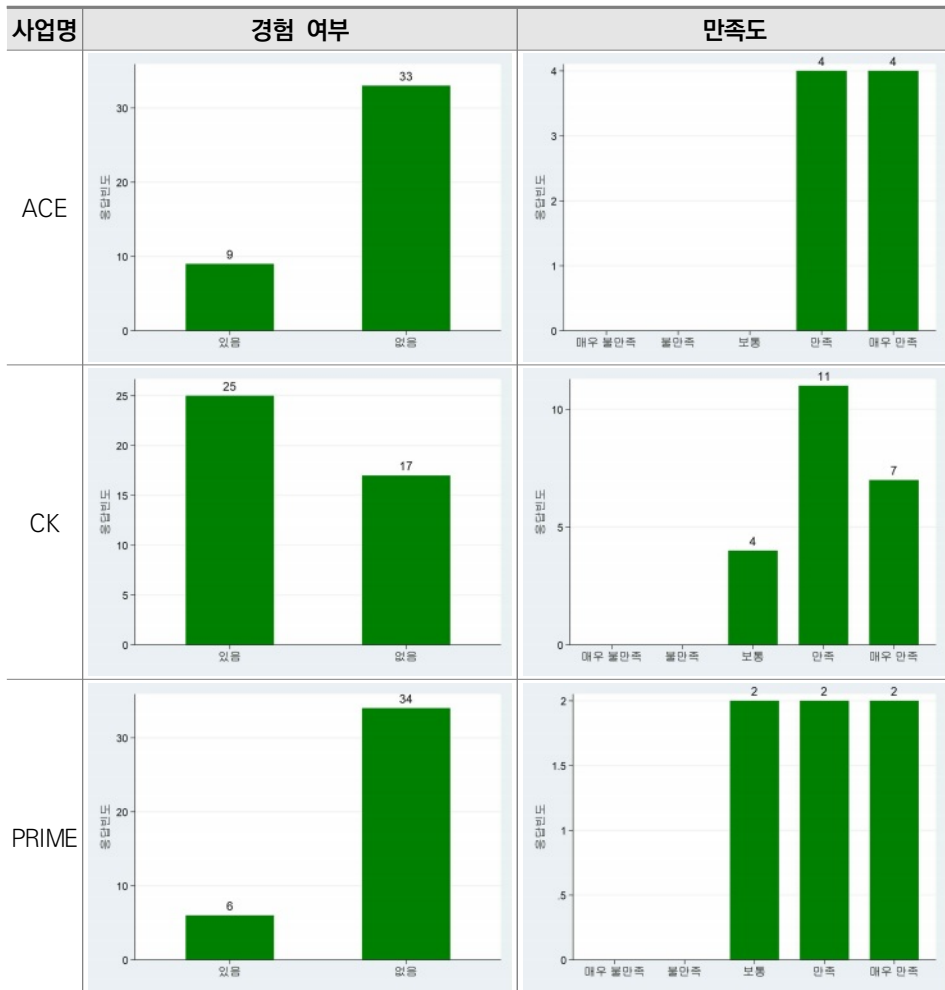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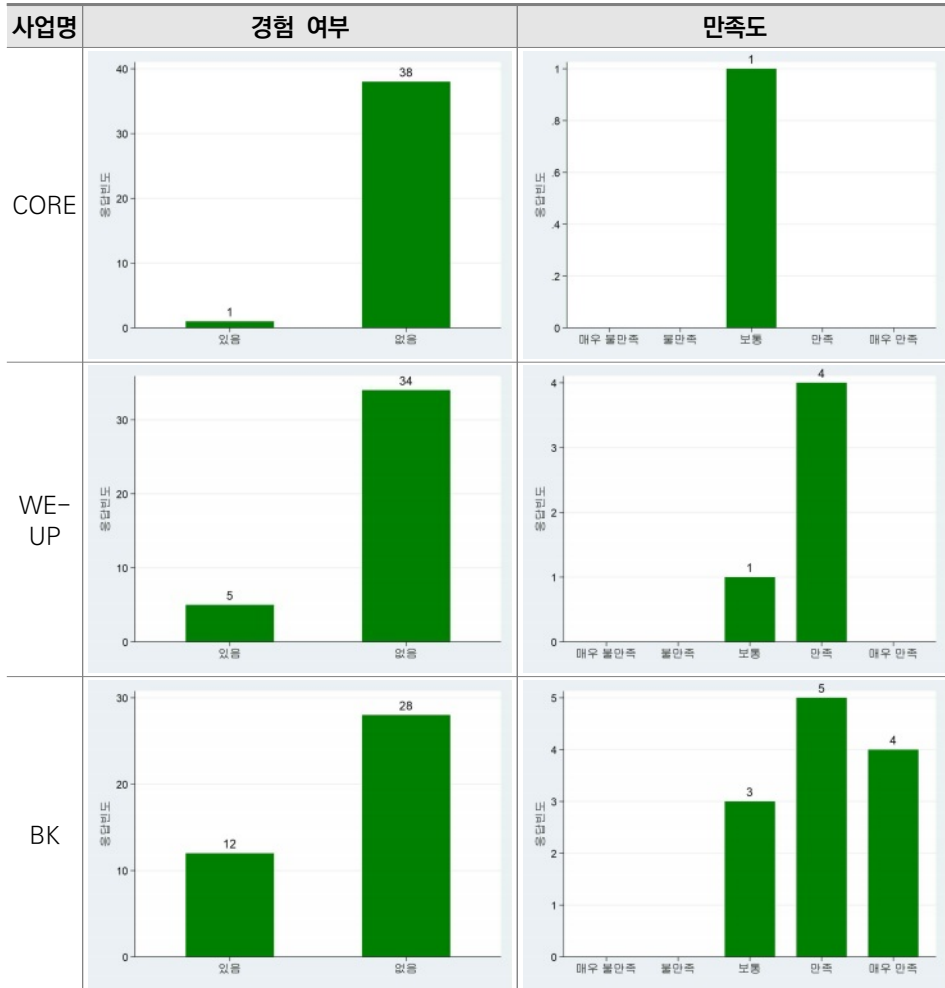
○ 대학 재정지원 사업 참여 여부

- (RISE 포함 사업) 충남 도내 대학들은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지방대 활성화사업,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등 RISE에 포함되는 사업에 참여한 경험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이나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의 경우 비교적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 대학 재정지원 사업) 기존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 참여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인문역량강화지원 사업(CORE)에 대한 참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고 그 외 사업들은 유사한 비율로 참여 경험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그림 3-37]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 참여 여부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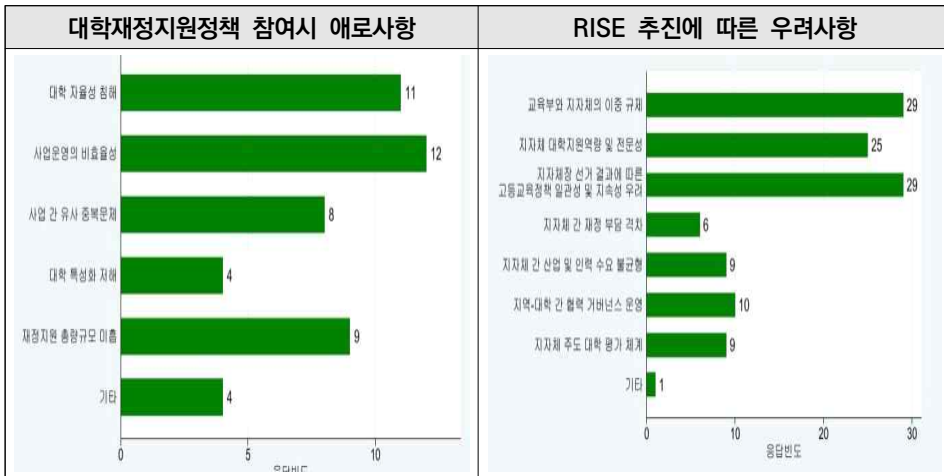




○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RISE에 대한 우려 사항

- (기존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기존 대학 재정지원 사업 관련한 주된 어려움으로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 대학 자율성 침해, 재정 지원 총량 규모 미흡 등을 꼽았음
- (RISE 사업 추진 관련)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중 규제에 대한 우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정책의 변화 우려 등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 관련 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그림 3-38] 대학지원정책 참여시 애로사항 및 RISE 추진에 따른 우려사항



□ 산학협력 부문 분석 결과

○ 산학협력 유형별 만족도

- (인력개발) 인력 개발 중 대학들은 주문식 교육, 캡스톤 디자인, 재직자 위탁 훈련 등의 과정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개발) 연구 개발 중에서는 특허 출원, 기술 및 경영 관련 자문, 기술 개발 순으로 만족함

- (창업 관련)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4.05의 만족도를 보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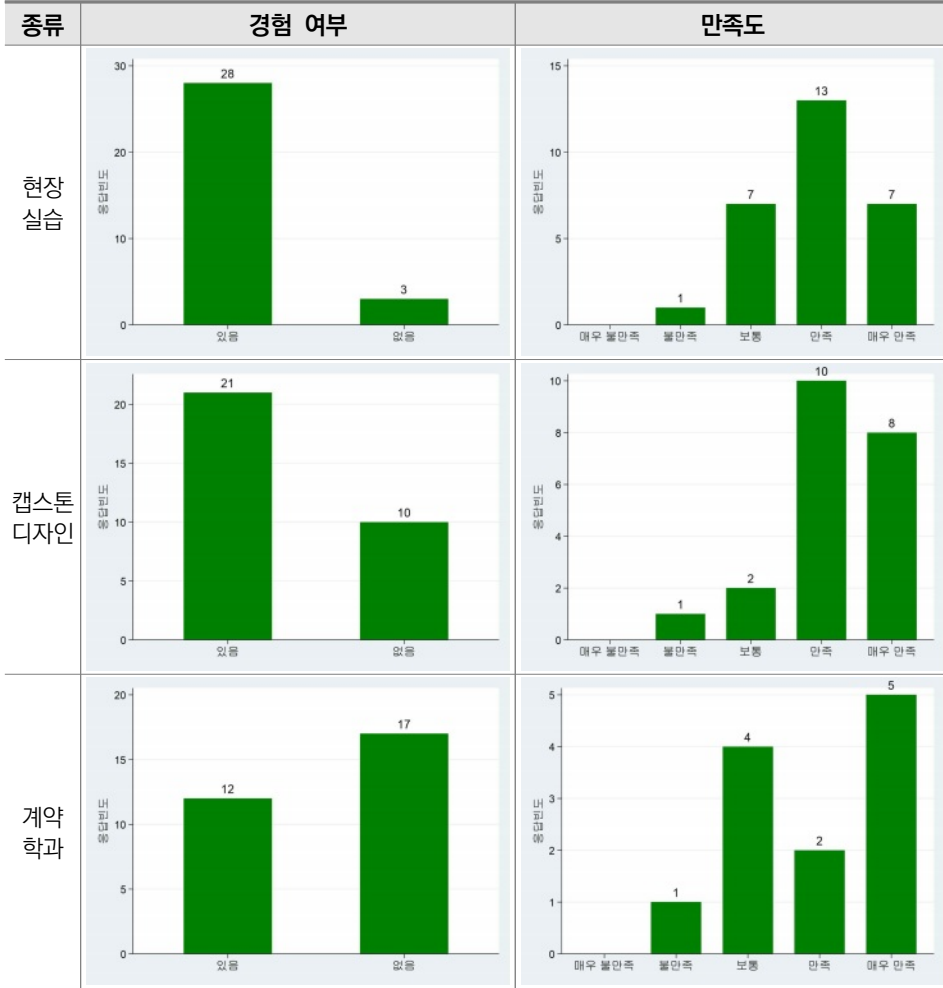
[표 3-77] 대학 산학협력 유형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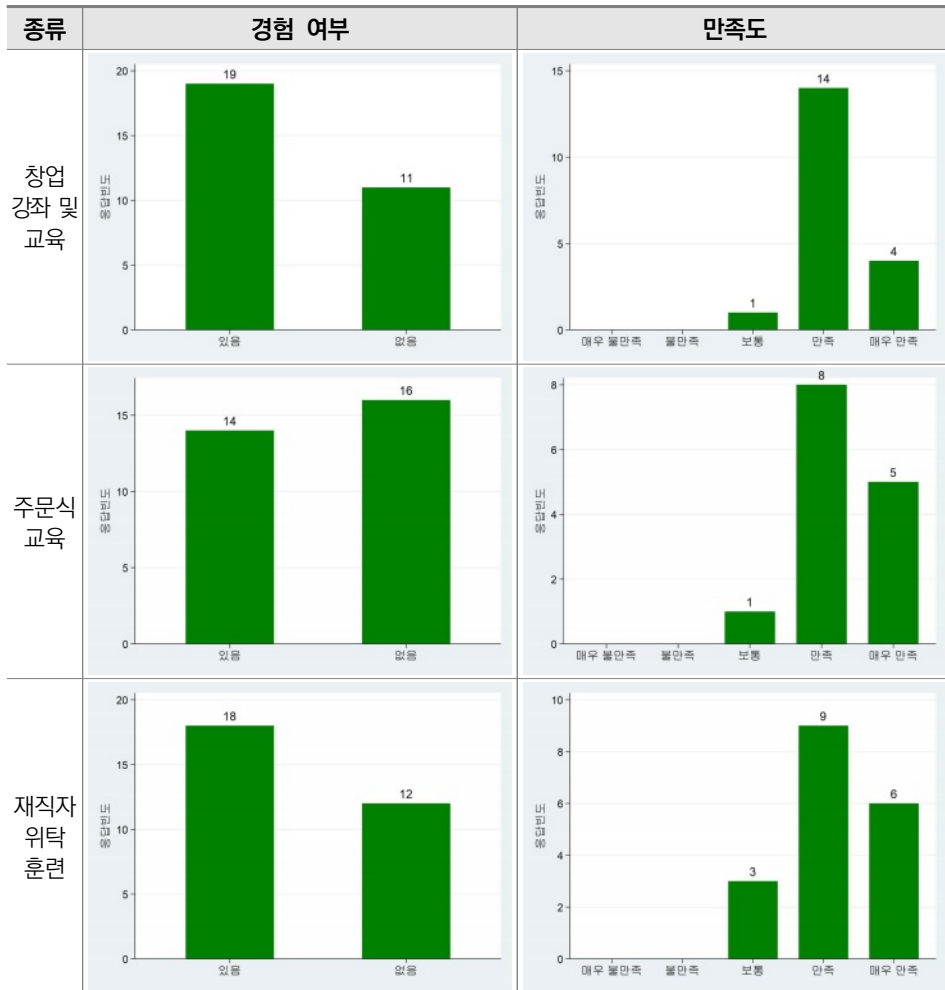
분류		평균 (표준편차)	N
인력개발	현장실습	3.93 (0.81)	28
	캡스톤디자인	4.19 (0.81)	21
	계약학과	3.92 (1.08)	12
	창업 강좌 및 교육	4.16 (0.50)	19
	주문식 교육	4.29 (0.61)	14
	재직자 위탁 훈련	4.17 (0.71)	18
연구개발	기초 및 응용연구	3.85 (0.59)	20
	기술개발	4.00 (0.59)	18
	특허 출원	4.27 (0.70)	22
	기술 관련 기업체 자문	4.17 (0.76)	24
	경영 관련 기업체 자문	4.09 (0.54)	11
창업 관련	창업 지원	4.05 (0.65)	22

○ 산학협력 유형별 경험 여부

- (인력개발) 인력 개발 중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창업강좌 및 교육 등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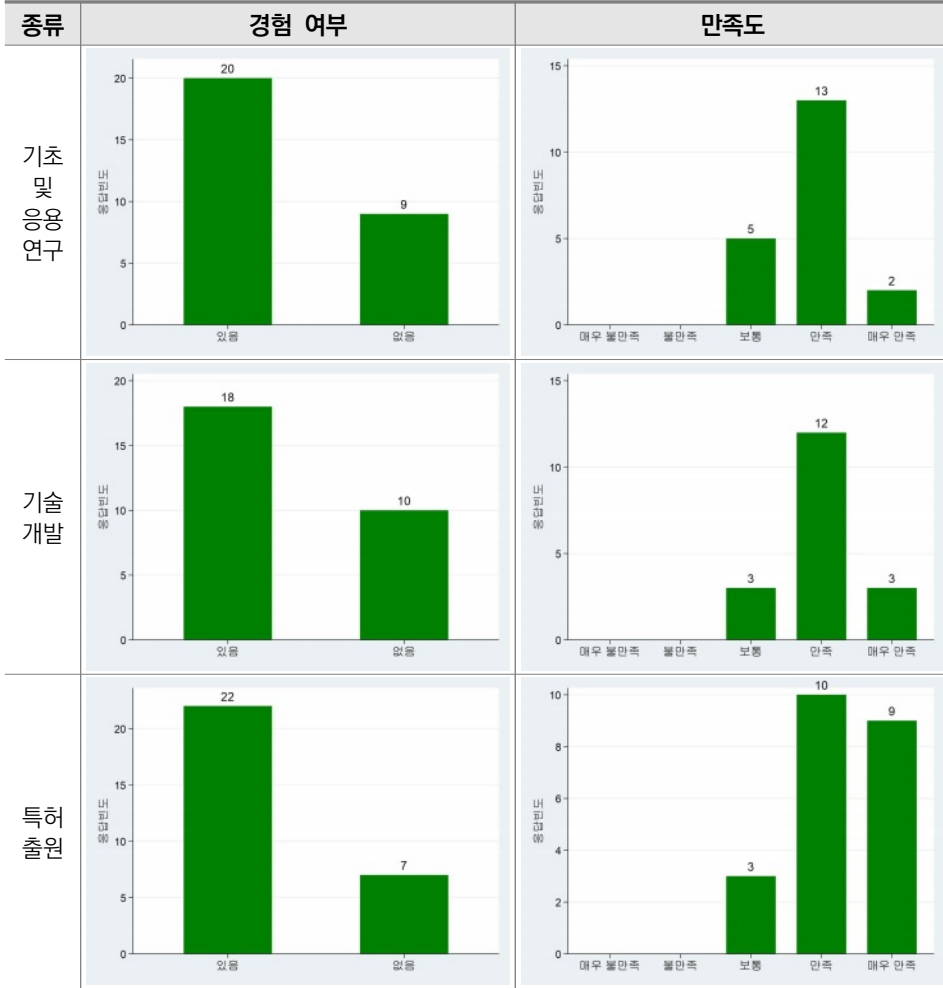
[그림 3-39] 인력개발 분야 산학협력 경험 여부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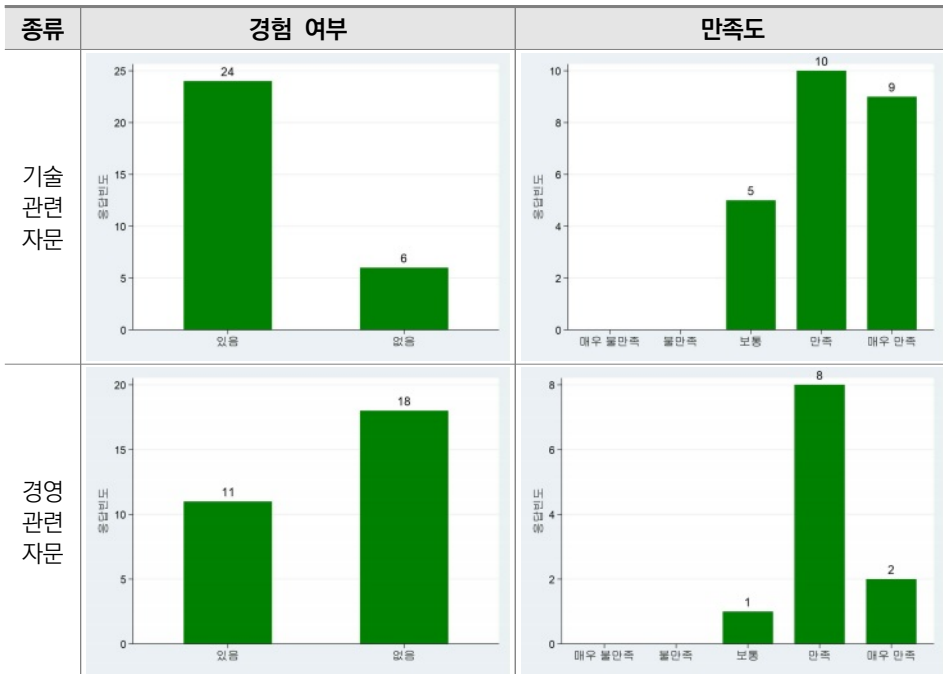




- (연구개발) 연구 개발 중에서는 기술개발 관련 자문, 특허 출원, 기초 및 응용 연구 순으로 참여를 많이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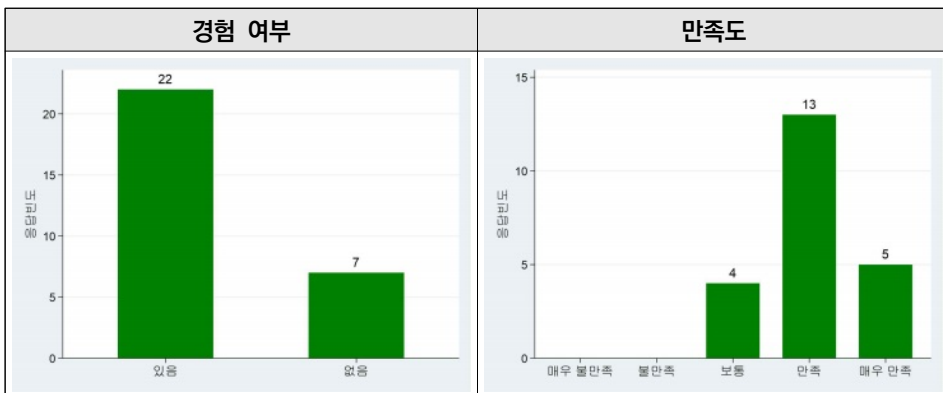
[그림 3-40] 연구개발 분야 산학협력 경험 여부 및 만족도





- (창업 관련) 창업 지원 정책 관련 경험하지 못한 대학보다는 경험한 대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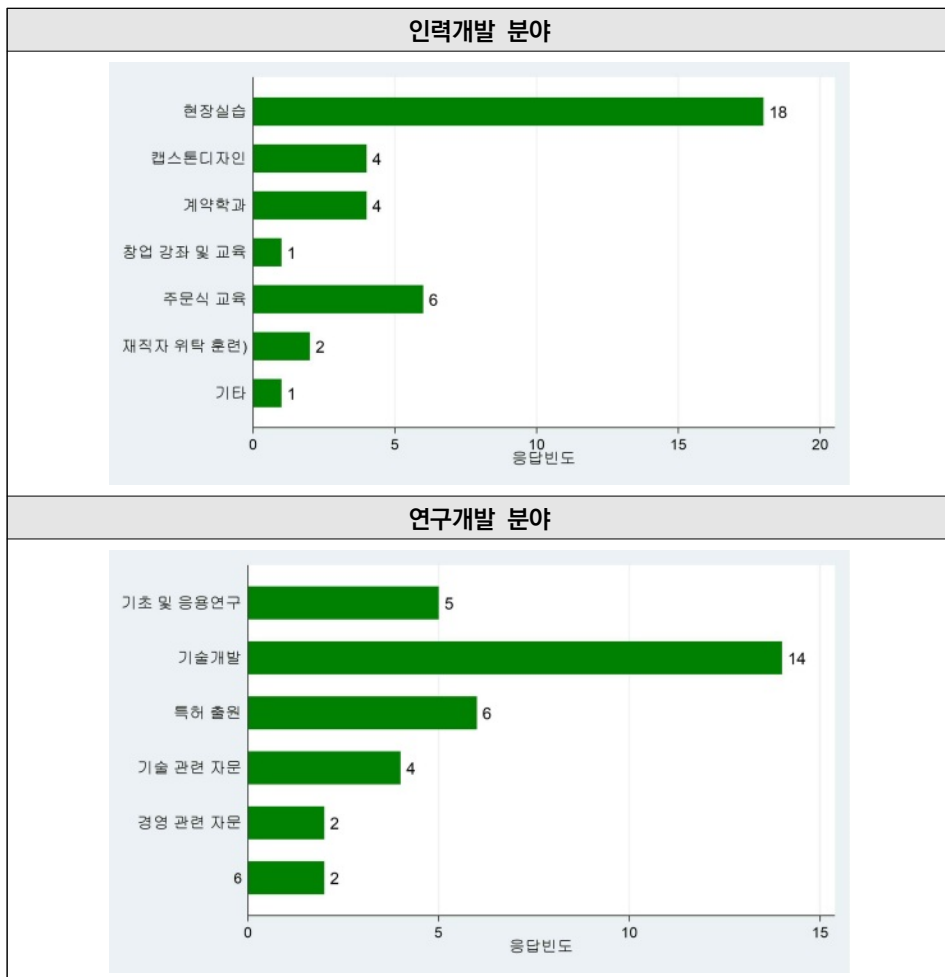
[그림 3-41] 창업 분야 산학협력 경험 여부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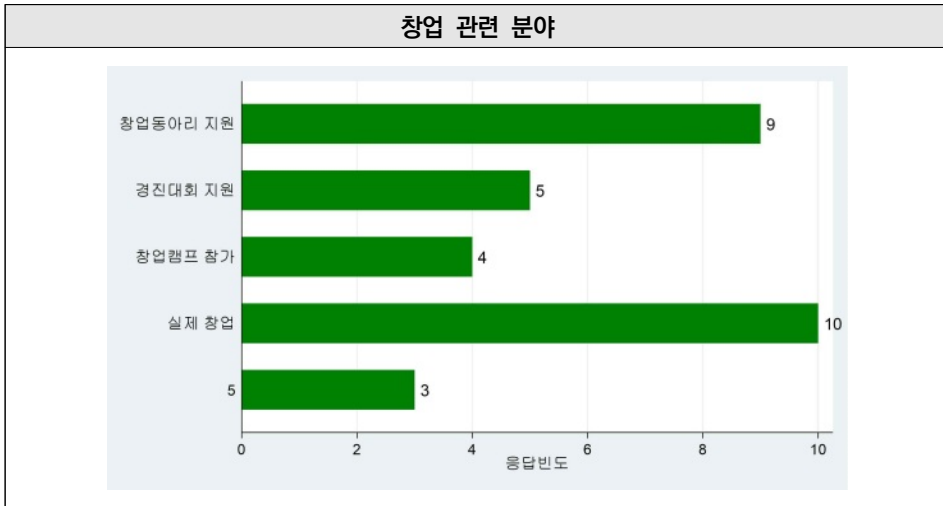


○ 산학협력 분야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인력개발) 현장실습, 주문식 교육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음
- (연구개발) 기술개발, 특허출원, 기초 및 응용연구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함
- (창업 관련) 실제 창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창업 동아리 지원, 경진 대회 지원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림 3-42] 분야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산학협력 종류 (복수 응답)





- 산학협력 분야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RISE 추진에 따른 우려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 우려,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걱정,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중 규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학 평가 등에 대한 우려 사항이 많았음

[그림 3-43] RISE 추진에 대한 우려사항: 산학협력



□ 공통 질문 분석 결과

- (지방자치단체 역할) RISE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주관식 설문의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대학 지원 확대, 대학-지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자체 전문성 강화, 청년 정주 여건 개선,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역할, 평가 관련 제안,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기타 등으로 분류됨
 -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 사항으로 대학별 특성화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 등이 존재함
 - 대학 지원 확대에 있어서는 특히 각 대학이 사업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고 각 대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대학-지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제도 정비, 추진 체계 및 전담 단일 조직, 순환보직이 아닌 전문인력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평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며, 전문역량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청년 정주 여건 개선 및 우수 기업 내지 공공기관 유치 등의 전략이 같이 갈 필요가 있다고 봄
 - 평가 관련해서도 경쟁을 부추기기보다는 공유와 협력을 주요 가치로 걸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이해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부 업무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정기적인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봄

[표 3-78] RISE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구분	내용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산업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대학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며, 차별화된 대학의 강점을 타대학에도 전파하기 위한 통로 마련 필요 주요과제 또는 지역별 그룹핑을 통해 공유대학의 개념으로 가야하며, 특히 컨소시엄의 형태로 비참여 대학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여 충남형 대학으로 모델을 설정해야 함 충남에 집중화된 산업체 인력 양성 일부와 고등교육적 가치를 위한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양성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별로 규모, 예산, 대학지원역량 및 전문성 편차가 심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함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추진의지가 다르고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있으므로 사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수 지역 내 대학의 중복 학과를 정리하고, 각 대학의 특성화분야 투자 유도 필요 지자체 의원의 대학에 대한 이해도 제고
대학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대학이 각 사업에 형평성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 확대, 공평한 배분과 지역 발전 함께 고려, 대규모 대학에만 지원이 집중되지 않을 필요 참여 주체별 사업추진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 및 전문인력,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방안 수립 필요 수도권과 충남에 동시에 캠퍼스가 있는 학교의 경우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충남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함 지역인재의 교육, 취업, 정주의 포괄적인 지원 필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각 지역 산업과의 대학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이해
대학-지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공동으로 찾는 것이 중요 RISE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조례 등) 정비, 추진체계 및 전담조직 정비, 전문인력 배치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대학의 취·창업, 산학협력 관련 위원회에 자치체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 대학 간 상생 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충남도가 플랫폼 역할을 적극 수행 지역 대학-지자체-기업 간 서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혁신 아이디어 도출할 수 있도록 시간과 예산 투자 지자체와 대학 간의 수평적 소통 체계 마련 단발성 사업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정 수립 지자체-교육청-대학간 의사소통 강화를 통한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연계
지자체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 관련 전문역량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지원역량 및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한 인력 총원과 조직 정비, 전문역량 강화 지자체 공무원의 대학교와 전문대학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 필요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년간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의 교육부(연구재단) 직원들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교육 필요 • 관리중심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해결 중심의 행정 역량 증진 필요 • 주기적 순환 배치에 따른 자리 이동이 아닌 관련분야 지속적 역할을 통한 전문성 확보 고려 • 대학 회계와 지방자치단체 회계 운영이 다르므로, 대학 회계에 대한 이해와 집행의 유연성 이해 필요
청년 정주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을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 • <u>학생의 지역 정주를 위한 다양한 산업체 지원 제도 마련과 지역 인프라 구축 방안</u>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대학 졸업생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우수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역 유치 등에 대한 노력 필요</u> • 지역 우수 기업에 대한 현장실습지원 • 대학 내 창업보육 관련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수 지역 기업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필요
평가 관련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를 제시하고 책임과 그에 따른 자율성을 부여 • <u>대학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쟁보다는 공유와 협력의 방향 제시</u> • 획일적 기준에 의한 대학의 지역기여도 평가 지양 •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치 성향·지역성향 등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구가 신설되어 관리·운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기존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기존 교육부 중심 사업(RIS, LINC3.0 등)에 대한 정확한 사업취지와 사업의 연속성을 통한 실질적 성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협업체계의 지속성 구축</u> • 기존 교육부 지원 사업비 집행에 있어 지자체의 집행정산 부분 등이 기존 교육부 지원과 다른 점을 이해하고, 추진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필요 • 현재 교육부 지원사업 참여 대학이 해당 사업 후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업무추진가이드 수립 및 제시 • 정책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 (대학 역할) RISE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인재 양성) 대학 고유의 핵심 기능인 인재 양성에 있어서 지역 내 산업 수요와의 정합성을 논의함
- (교육 혁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산업 등과 연계한 교육 혁신과 대학 특성화, 대학 발전보다 지역 발전을 우선시하는 자세, 대학 발전계획과 지역 발전 계획의 연계, 다양한 학제 제도 개편 및 지역 수요 프로그램 개발 등
- (지역 연계) 지역 기업체와의 적극적인 소통, 포럼 및 워크숍 개최, 지방자치

단체와의 소통 창구 개설과 공동 TF팀 구성, 지역 주민을 위한 대학 인프라 개방, 평생직업교육 거점 역할 수행 등

- (대학 거버넌스 개선) 대학 내에 외부 인사를 참여 시켜 의사결정을 다각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과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 및 소통 정례화 등의 방안을 제시함
- (기타) 대학이 이미 기존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바탕으로 한 경험과 역량 등을 토대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율 프로그램 운영,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주력 산업이 다룰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파악 중요, 대학의 인력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프라 활용 등을 RISE 성공방안으로 제시함

[표 3-79] RISE 성공적 운영을 위한 대학 역할

구분	내용
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 필요한 융합적 소통 인재 양성 • <u>지역내 산업수요에 부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u>
교육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지자체 및 지역 산업 등과 연계한 교육혁신 및 대학 특성화를 적극 추진</u> • 지역의 산업과 사회의 수요를 고려한 대학의 혁신방향 설정 • <u>대학의 발전보다 지역 발전을 우선으로 하는 전향적 자세 필요, 대학의 발전 계획이 지역 발전과 연계되도록 조정</u>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학사제도 개편 • 지역발전 분야에 대하여 대학 교육프로그램으로의 적극적 수용체계 수립 • 졸업생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체와 취업연계 • 교육수요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학제 제도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지역 기업체의 수요 반영을 위한 유연성 확보 • 대학의 모든 역량을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기업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의 일자리 플랫폼 등을 구축하여 지역 발전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 • <u>지역 기업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에 안착</u> • <u>지역사업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한 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서 발전방향 제시</u> • <u>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개설과 공동 TF팀 구성등으로 지역 기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업무 신설</u> •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콘텐츠 개발, 지역민에 필요한 교육콘텐츠 개발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정책 개발에 적극 참여 및 정책방향을 명확히 파악하는 능력 필요 • 지역주민을 위해 대학 인프라 개방 및 평생직업교육 거점 역할 수행 • 졸업생 및 신중년들의 지역 이탈을 막기 위한 지역 기업과의 취업연계 및 대학 캠퍼스 인근에 청년 공동 생활 공간 조성
대학 거버넌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다양한 거버넌스에 외부(지자체·기업·연구소 등) 인사 참여 • 자치단체와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관계 유지 및 소통의 정례화 • 기업이 고등교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및 실행 필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인력풀에 대한 정보 공유 • 대학 자원의 지자체 활용으로 대학 발전과 지자체 발전의 선순환 구조 마련 • 대학은 이미 교육부 지원사업(링크 3.0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율 프로그램(정해진 예산 하에서 산학협력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율적 프로그램 운영) • 광역 지자체의 주력 산업과 기초 지자체의 주력 산업이 상호 다를 수 있음. 기초 지자체 산업 특성을 고려한 기업, 대학과 소통 그리고 의견 반영이 필요함

○ (의사소통 활성화 방안) RISE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정기적 협의체 구성) 대부분의 대학들은 지자체 주도의 정기적인 협의체 구성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례적 회의와 계층별(실무자급, 고위급)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협의체 외의 소통 활성화) 직접적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 외에도 산학 협력 전문가, 교육 전문가, 지역 인재 전문가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포럼 및 워크숍 등의 다양한 형식에 대한 의견도 존재
- (정보 공유) 의사소통의 한 방식으로 정보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충남 홈페이지에 대학 메뉴 신설, 도내 대학 학과 및 특성화 소식지 발행, 기업 내 부족 인력에 대한 정보 대학에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의 의견 제시함
- (기타) 지방자치단체 내에 RISE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고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조 및 제도가 뒷받침될 필요 있음

[표 3-80] RISE 성공적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안

구분	내용
정기적 협의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주도로 지역-대학-기업-지역혁신기관-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회의 • 계층별(고위급, 실무자급 등)로 구분하여 협의체 구성 및 정례화, 분기별 교류 추진 • 지자체 주도로 각 대학별 특성에 부합하는 기업체를 매칭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 모임을 통해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 지역-대학-기업체 관계자 이외의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해서 협의체 역량을 강화시키고 대학-지역-기업체 여건에 적합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총괄 위원회 및 산업별 분과 위원회 등 목표 지향적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자체 추진 정책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의견 수렴
협의체 외의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 양성하려고 하는 인재상과 RISE 체제하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이 요구됨 • 산학협력 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의사소통 • 정기적인 상생발전을 위한 포럼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상호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함
정보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 홈페이지에 「대학」 관련 항목을 두어 다양한 정보 공유 및 활용 • 지방자치단체 내의 모든 대학에 대한 학과 및 특성화 소식지(on line/off line) 발행 및 기업체 배포 • 지방자치단체 기업체에서 부족한 인력에 대한 정보를 대학에 공유 • 자산관학 정보 및 성과 공유 플랫폼 구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SE센터 주도의 “지역-대학-기업체” 협력체제 유지 및 중복지원 관리 • 고용부 인적자원관련 사업(예: NC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적자원위원회(상근조직)를 둔 것처럼 RISE사업을 위한 지자체 지원 산하 상근 조직이 필요함. 이 조직을 통하여 지역, 대학, 기업체 연결고리 역할 수행 • 지자체에 소속히 RISE 전담조직과 인력을 배치하여 소통창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함 • 대학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조 및 제도 마련

4. 소결

□ 지역 인재 현황 및 시사점

- 지역대학에서 졸업한 학생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으로 취업하게끔 유인하는 단기적 유인 방안 추진도 중요함
 - 예를 들어 취업자에게 일정액의 소득장려금 지급, 청년주택 보급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고 기업에는 지역 인재 채용시 인건비 지원, 세율 감면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우수 일자리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세울 때 대학 재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등의 지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근시안적 정책으로 사료됨
 - 근본적으로 청년 인구의 유출 방지 및 지역 착근, 기업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양성, 정주 여건 개선과 직업·평생 교육 활성화 등 핵심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충남과 대학의 공생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산학협력 현황 및 시사점

- 지역 주력산업별 도내 대학, 지역 혁신기관, 연구소 및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현황을 보면 충남의 경우 혁신 자원이 많은 편에 속함
- 반면, 충남지역 산업기술인력 부족 문제 해결 필요
 - 2020년 충남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1.7%로 전국 평균(2.2%)보다 낮은 수준이나, 2015년(1.4%) 이후 부족률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으로 인력 구인·구직의 미스매칭 해결 필요
 - 2020년 충남 미충원인력 발생 원인 중 ‘현장 투입이 가능한 숙련·경력 갖춘 인력이 없어서(29.1%)’, ‘직무수행을 위한 학력·자격을 갖춘 인력이 없어서(27.3%)’가 큰 비중을 차지

□ 창업 관련 현황 및 시사점

- 창업 교육 및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한 창업 인력 양성 및 창업촉진을 위해 지역 내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창업 지원 확대, 창업 강좌 등 교육 확대, 창업 중심 대학 추가 선정 등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충남도 및 창업 유관기관, 대학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내 창업 활성화 도모 필요
 - 창업지원 총괄기능 강화,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과 대학 연합기능 강화를 통한 네트워크 실효성 제고
 - 창업활성화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및 통합포털 구축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 필요

- 충남 천안·아산 지역을 제외하면, 지역 내 신기술·신산업 기반 창업생태계 여건이 미약, 지역 또는 권역별 특화산업 중심의 지역발전 계획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 필요
 - 중점 육성 산업과 민선8기 도정 방향이 특정된 시군의 경우 중점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장기 창업생태계 조성 방향 설정 필요
 - 시군별 중점 육성 산업이 연계되거나, 별도 산업특정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권역별 특화산업을 지정, 장기 창업생태계 조성 방향 설정
- 충남 창업 생태계 관련 지역-대학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협의회 결성 필요
 - 창업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창업네트워크 실효성 제고
 - 창업기업육성 정책방향 제시 및 역할 조정을 위한 ‘창업협의회’ 구성
 - 지역 내 창업기업육성 전문기관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 충남도청 및 창업관련 유관기관 연계 창업협의회 구축, 연 1회 이상 운영 필요

□ 대학 특성화 현황 및 시사점

- 충남 발전계획과 연계한 도내 대학별 특성화 분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특성화 분야는 국방(군수) 안전, 헬스케어, (장애인)재활복지, 스마트농업, 사회복지, 문화관광, 디지털 정보화, 모빌리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바이오 헬스케어, 2차전지, 해양바이오 등임
 - 건양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중부대, 청운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서대, 호서대 등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의 사업 선정 및 성과평가, 성과관리 차원에서 지역사회 수요와 연계된 중점 과제 및 세부 사업 발굴이 필수적임

□ 대학 설문조사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충남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에 따른 고등교육정책 일관성 및 지속성 우려,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중 규제,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 역량 및 전문성 우려 등이 제기됨

- 성공적인 충남 RISE 추진을 위해 대학이 충남의 역할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았음
 - 도내 모든 대학에 대해서 소외 없는 지원 약속, 대학 재정 지원액 총량 확대, 대학-지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 대학 정책 관련 지자체 전문성 강화, 청년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노력 확대와 연계된 정책, 대학 평가에 있어서 경쟁보다 공유 우선시, 기존 대학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등을 피력함
- 성공적인 충남 RISE 추진을 위해 대학의 역할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았음
 - 인재 양성, 교육 혁신 등 전통적인 대학 역할 강화뿐만 아니라, 이제껏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지역과의 연계, 대학 거버넌스 개선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광역 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의 대학과 지역 협력이 필수라는 의견 존재




제4장

충청남도 고등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구상(안)

제1절 충남형 고등교육 기본계획(안)

제2절 재정투자계획 관련 고려사항

제3절 성과관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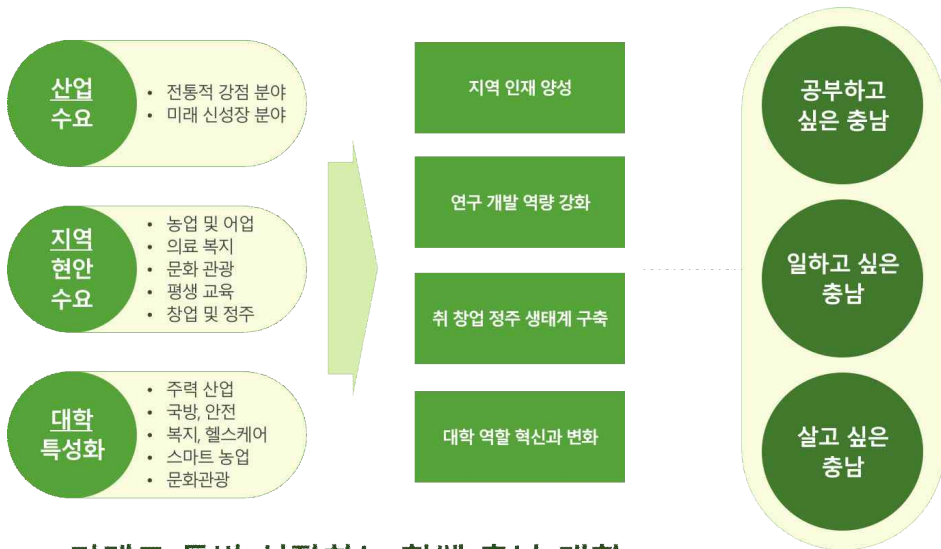
제1절 충남형 고등교육 기본계획(안)

1. 충남형 고등교육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도출

□ 충남 RISE 비전 및 목표 도출을 위한 지역-대학 연계 방향성

- 이상의 충남 지역발전 전략 및 지역 여건, 대학 여건 분석 등을 토대로 다음의 지역-대학 연계 방향성을 설정함
- 충남의 산업 수요, 지역의 현안 수요,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반영하여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4-1] 충남지역-대학 연계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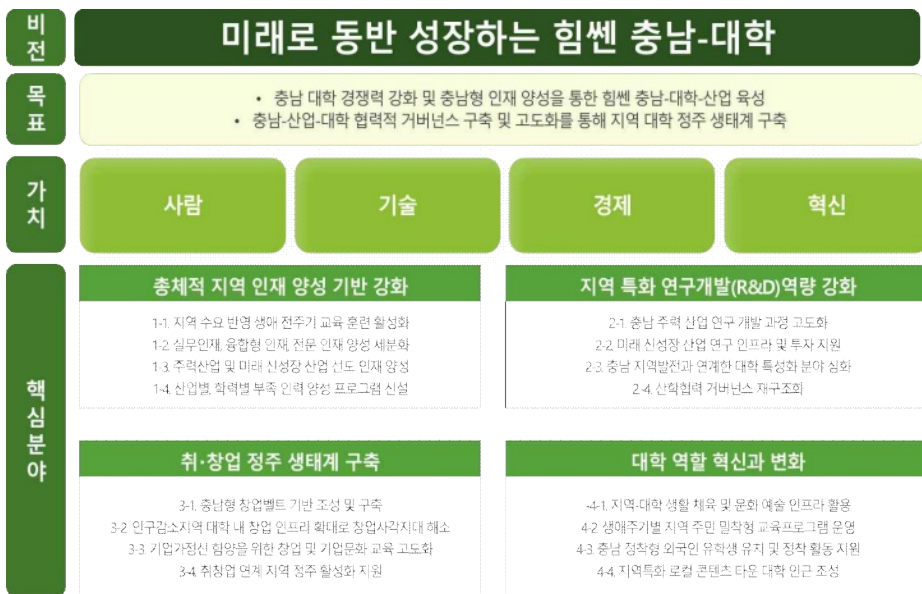


미래로 동반 성장하는 힘센 충남-대학

□ 충남 지역과 대학 간 연계 방향성을 토대로 충남 RISE 비전 및 목표 도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비전은 ‘미래로 동반 성장하는 힘센 충남-대학’이며 이는 대학과 지역이 고루 성장하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의미함
- 목표는 크게 2가지이며 충남의 대학 경쟁력 강화와 충남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힘센 충남-대학-산업 육성, 그리고 지역-기업-대학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정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임

[그림 4-2]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안)



-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가치는 사람, 기술, 경제, 혁신 등의 4가지로 구분
 - 구체적으로 ‘사람’은 지역 인재 양성 기반 강화를 의미하고, ‘기술’은 연구 개발(R&D) 역량 선도 대학을 육성하여 지역 산업에 기여하며, ‘경제’는 지역-산업체-대학이 연계하여 취·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 인재 착근을

목표로 하며, ‘혁신’은 고등교육 기본계획의 주요 주체인 대학의 역할의 변화와 혁신을 의미함

- 5대 목표를 통한 핵심분야는 1) 총체적 지역 인재 양성, 2) R&D 역량 강화, 3) 취·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 인재 착근, 4) 대학 역할 혁신과 변화임

2. 핵심 분야 세부 내용

□ 핵심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총체적 지역 인재 양성 분야는 교육 단계별(직업계 고등학교-일반대학, 전문대학)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전략, 교육 대상별(실무인재, 고급인재, 융합인재, 재직자, 은퇴 및 고령자 등)로 차별화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전략, 산업별(주축 및 미래 신성장, 의료 및 복지, 문화 및 관광 등) 인재 양성을 선도하겠다는 전략 등으로 나뉨
 - 이는 대학의 고유한 역할 중 하나인 인재 양성과 관련한 것이며 기존의 취업 관련 인재 양성에서 벗어나 교육 단계와 대상, 산업에 따라 지역 수요와 대학의 교육 과정을 연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산업체-대학 간의 공유 거버넌스 확충을 통해 가능할 것임
- R&D 역량 집중 분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충남의 전통적 강점에 대한 연구 개발 기술 역량 강화,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선도적 연구 역량 강화, 지역 발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연구 역량 강화 등을 의미함
 - 이는 대학의 또 다른 전통적 역할 중 하나인 연구 개발과 관련된 것이며 충남 지역이 전통적으로 강했던 주력 산업 관련 신기술 개발과 수출 제조업 산업의 다변화 등에 대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임
 - 이와 별개로 미래 먹거리 탐색을 위해 신성장 산업에 대한 선도적인 기술 개발과 연구 역량 투자 등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의료와 복지 등 충남 지역 발전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연구 역량 강화 등을 포함

- 취·창업 생태계 구축 분야는 민선8기에서 추진하는 특화산업 육성 및 특화단지 조성, 베이밸리 건설, 산업벨트 조성, 기업-대학 상생·협력 체계 구축 시 창업 분야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성을 제시함
 - 민선8기 ‘베이밸리 조성’ 중 충남 북부권 혁신 인프라 연계를 통한 혁신역량 집중기반 조성 및 서해안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해양레저 관광 및 그린창업 벨트 전략 수립, 충남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장기 창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낙후 지역 중심으로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신설, 기업 문화 고도화를 위해 최고경영자 대상으로 조직 문화 개선 등에 대한 교육 과정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대학 역할 혁신과 변화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교육과 연구 역량 외에 대학, 학생, 기업,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교류와 협력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즉, 지역과 대학 간에 인프라를 공유하여 지역 현안을 같이 해결하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과 정주 여건 개선을 같이 해결하며 고령화 인구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인프라 고도화 등을 세부 내용으로 함

3. 핵심 분야별 중점 과제

□ 충남-대학 연계 사업 후보군 도출

- 핵심 분야별 중점과제 사업 후보군 유형화
 - 기존 교육부 주도 대학재정지원 사업 분석(HiVE, LiFE, LINC 3.0, RIS, 지방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사업 등), 대학 특성화 자료, 대학 제출 자료 유형화 등을 통해 사업 후보군을 형성함
 - 아래 [표 4-1]은 충남 도내 대학이 자체적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 중 일부를 정리한 것임

[표 4-1] 충남-대학 연계 사업 후보군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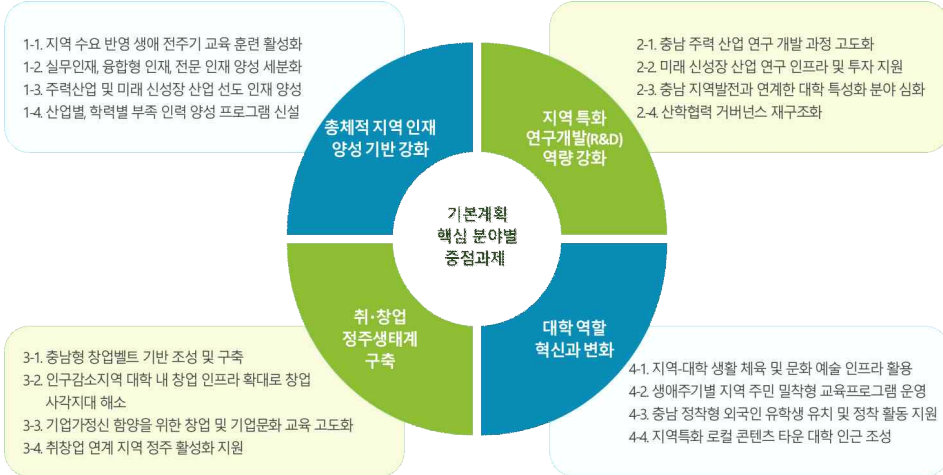
연번	구분	사업 내용
1	분야	• 충청남도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사업
	효과	• 의료 여건이 취약한 충남 서북권 지역 도민들에게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방 인구감소에 대응 가능
2	분야	• 산학 공유 플랫폼 구축 및 맞춤형 인재 양성, 로컬크리에이터창업활성화 사업
	효과	• 지역특화분야인재를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양성하여 대학 입학-교육-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창출
3	분야	• 농어업의 스마트 미래성장 산업화
	효과	• 대학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산업체 재직자를 포함한 성인학습자, 개방·공유를 통해 지자체 및 지역사회에 농축산분야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4	분야	• 충남 전략산업 분야(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재직자 기술 역량 강화
	효과	• 지역 내 주요 산업 재직근로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발전 도모, 지역 핵심 산업의 인력 부족 해결 및 지역 경제 활성화
5	분야	•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도내 초·중·고 학생의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 향상
	효과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 과정 개편 지원, 교육 운영, 일반고대상으로 전공체험 및 진로특강 개최하여 지역 수요 대응
6	분야	• 해외 인재 유치, 양성, 정착 사업
	효과	•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이 지역산업 맞춤형 해외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에 정주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7	분야	• 반도체 후공정특화 기술 인재양성, 주문형 교육과정 운영, 산학 공동연구 진행
	효과	• 충남지역 주력산업 분야 전문 인력양성을 통한 지역산업 성장동력 마련
8	분야	• 평생교육원 교육콘텐츠개발 프로젝트
	효과	• 지역사회의 성인학습자,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재취업희망자 등의 니즈를 파악 하고, 평생교육원 강좌로 개설이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학위과정 연계
9	분야	• 기업 임직원 위탁 보수교육, 도내 기업과 졸업 예정자들의 인턴 및 일자리 연결 센터 활성화
	효과	• 지역산업체의 교육 필요 인력 양성
10	분야	• 해양 관광, 축제 신산업육성, 내포문화 권역별지역 축제 산업화
	효과	• 충남 서해안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중추적 역할

자료: 각 대학 제출 자료 가공하여 저자 재작성

□ 핵심분야별 중점 과제 도출

- 총체적 지역 인재 양성 기반 강화 핵심 분야 관련 중점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지역 수요를 반영한 생애 전주기 교육 훈련 활성화를 통해 대학생 뿐만 아니라 초, 중, 고, 대학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이어지는 충남의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함
 - 실무형, 융합형, 고급형 인재 양성 세분화를 통해 차별화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함
 - 주력 산업 및 미래 신성장 산업 선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각 대학별 특성화 분야와 연계하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약학과, 주문형 교육과정 등을 고도화 함
 - 충남 지역 산업별, 학력별로 부족한 인력 양성을 위해 보다 유연화된 학과 개설 등을 지원함
- 지역 특화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충남 주력 산업 연구 개발 과정을 고도화함
 - 반도체, 2차전지 등 미래 신성장 산업 연구 인프라 및 투자를 지원하고 대학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함
 - 이공계를 중심으로 하는 주축 산업 외에 문화관광, 헬스케어, 복지, 국방, 안전, 스마트 농업 등 지역 발전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분야 고도화 전략을 수립
 - 지역 특화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산업-대학 간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함

[그림 4-3]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 핵심 분야별 중점 과제 도출(안)



○ 취·창업 정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점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베이밸리,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 및 그린 창업 벨트 등 충남형 창업 벨트 구축 및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함
- 충남 지역 내 인구감소지역 대학에 창업 보육센터 등의 인프라를 확대하여 창업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고자 함
- 기업이 정신 함양을 위해 창업 중심대학 위주로 창업 교육과정을 고도화하고 기업 문화 발전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기업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신설
- 취·창업 연계 지역 정주 활성화 관련 규제 개선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와 창업 유관기관, 대학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학 창업 교육 협의회 신설 및 충남지역 대학 연합 기술 지주 구성, 충남창업펀드 조성 등을 달성하고자 함

○ 대학 역할 혁신과 변화를 위한 중점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지역과 대학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생활체육 및 문화 예술 인프라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공동으로 이용함

- 주민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운영하여 충남 지역의 역사, 문화 관련 이해도를 높임
- 충남 대학에서 공부하고, 충남 지역에서 일하며 정착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활동을 운영하고 지원함
- 충남 지역에 특화된 ‘로컬 콘텐츠타운’을 대학 내 혹은 인근에 조성하여 지역 대학과 주민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 이용 인프라를 고도화함

[표 4-2]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 중점 과제 주요 내용 구성(안)

핵심 분야	중점 과제	관리번호	사업 내용 예시
1. 총체적 지역 인재 양성 기반 강화	1-1. 지역 수요 반영 생애 전주기 교육 훈련 활성화	1-1-①	초·중·고등학생 대상 충남 지역 역사 문화 이해 프로그램 제공 및 활성화(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의체 구축)
		1-1-②	의료 복지 등 지역 수요 반영 교육 훈련 활성화 (공공간호사제,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등)
		1-1-③	대학 우수 인프라 활용을 통한 재직자 직업 역량 향상, 직업 전환,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유연하게 운영
	1-2. 실무인재, 융합형 인재, 전문 인재 양성 세분화	1-2-①	산업 현장 우수 연구자(기업 재직자 및 연구소 연구자 등)가 교육하는 실무 인재 양성
		1-2-②	유관기관, 기업, 대학이 협력하는 융합형 인재 교육 프로그램 신설
		1-2-③	직업전문교육 거버넌스 체계 구축 (HiVE 참여 대학 거점)
		1-2-④	기업 성장 단계 및 산업 분야별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1-3. 주력산업 및 미래 신성장 산업 선도 인재 양성	1-3-①	주력산업(모빌리티, 바이오, 디스플레이) 선도 고급 인재 교육 강화
		1-3-②	미래 신성장 산업(반도체, 2차전지) 선도 고급 인재 양성
	1-4. 산업별, 학력별 부족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1-4-①	생산 인력 부족 산업 및 전문 인력 부족 산업별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1-4-②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핵심 분야	중점 과제	관리번호	사업 내용 예시
2. 지역 특화 연구개발 (R&D) 역량 강화		1-4-③	산업기술인력조사 결과에 맞추어 대학 내 학과 신설 지원
	2-1. 충남 주력 산업 연구 개발 과정 고도화	2-1-①	모빌리티, 바이오,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 중심 대학 육성
	2-2. 미래 신성장 산업 연구 인프라 및 투자 지원	2-2-①	반도체, 2차전지 기업-대학 공동 산학연구, 인프라 고도화 및 투자 지원
	2-3. 충남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분야 심화	2-3-①	군수, 안전, 헬스케어, 복지, 스마트농업, 문화 관광 등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분야 심화
	2-4. 산학협력 거버넌스 재구조화	2-4-①	대학-지역혁신기관-산업체 연계 통합 플랫폼 구축
3. 취·창업 정주 생태계 구축	3-1. 충남형 창업벨트 기반 조성 및 구축	3-1-①	베이밸리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벤처창업 전 주기 지원시스템 구축
		3-1-②	서해안 해안·온천·문화재·축제·호텔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밀착형 축제 및 문화공연 개발 및 관련 인력 양성
		3-1-③	가로림만, 해양레저관광 등을 기반 제조와 서비스 융합의 그린창업벨트 육성
		3-1-④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기반 강화 (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26년 예정)
	3-2. 인구감소지역 대학 내 창업 인프라 확대로 창업사각지대 해소	3-2-①	충남 도내 인구감소지역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신설
		3-2-②	창업중심대학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창업 문화 확산
	3-3.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창업 및 기업문화 교육 고도화	3-3-①	재학생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3-3-②	기업 임원 대상 기업 문화 교육 고도화를 통한 인력 미스매치 해소
	3-4. 취·창업 연계 지역 정주 활성화 지원	3-4-①	창업선도 중심 대학 추가 지정 지원
		3-4-②	대학 중심 충남 청년 도시재생 지산학 플랫폼 구축
4. 대학 역할 혁신과 변화	4-1. 지역-대학 생활 체육 및 문화 예술 인프라 활용	4-1-①	대학 내 공간 개방 및 지자체와의 공동 운영으로 주민 문화 및 생활체육 수요 대응

핵심 분야	중점 과제	관리번호	사업 내용 예시
	4-2. 생애주기별 지역 주민 밀착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4-2-①	평생교육 프로그램 신설 및 대학 간 연계를 통한 평생교육체계 구축(LiFE 참여 대학 거점)
		4-2-②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사이버 대학, 지자체 평생교육학습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on-off로 제공
		4-2-③	소단위 학위과정(마이크로 디그리) 도입 및 활성화 지원
	4-3. 충남 정착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활동 지원	4-3-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자체-대학 공동 박람회 개최
		4-3-②	유학생 정착을 위한 취업 및 정주 여건 개선
	4-4. 지역특화 로컬 콘텐츠 타운 대학 인근 조성	4-4-①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 문화 콘텐츠 타운 조성하여 기초 지자체-대학-공공기관 협력 사업 발굴
		4-4-②	기초 지자체-대학 연계하여 로컬 크리에이터 스쿨 운영하여 발굴 및 양성 위한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활성화

제2절 재정투자계획 관련 고려사항⁵⁹⁾

1. RISE 시행에 따른 지방 재정 영향⁶⁰⁾

□ 중앙 부처 직접 수행 사업에서 지자체 중심 사업으로 변화하여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상이 필요함

○ 2022년 12월 24일 교육부 보도자료와 이후 발표되고 있는 자료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지자체 고등·평생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은 시도 RISE 센터(비영리법인) 지정 외에는 구체화된 내용이 없음

- 2023년 2월 1일자 RISE 시범지역 선정·운영계획상 재정 지원은 ‘지역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법인에 예산 지원, 관련사업 관리 권한 위임’이라고 적시될 뿐, RISE 사업과 예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출할지 명확하지 않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용 주체 또한 교육부 장관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시행 2023.01.01.)

제3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3.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5. 제7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59) RISE 관련 교육부 예산 계획 및 자원 배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여 본 절에서는 재정투자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하였음

60) 김성주·김진(2023) 부분 발체 및 수정하여 재구성함

- 이 외에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배분할 때 RISE에 통합되는 기존 재정지원사업 선정 대학수(비율) 및 지원 규모 등을 활용하거나,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대학수나 학생 수 등의 포괄적 지표를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이 예측되고 있음(문보은, 2023)
- 이처럼 사업 운영 방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앙부처 사업의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해보면 기존 사업들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이관 형태는 국고보조 사업 형태일 가능성이 있음
 - 즉, 기존의 교육부나 기타 타 부처의 고등교육관련 사업의 경우 지방으로의 사업 이양 형태가 아니라 부처 직접 사업에서 지자체 주도의 사업으로 이관될 경우, 국비 보조 형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기존에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2023년부터 RISE에 포함된 5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을 경우 국고 70%, 지방비 30% 형식으로 부담될 가능성이 있음(김성주·김진,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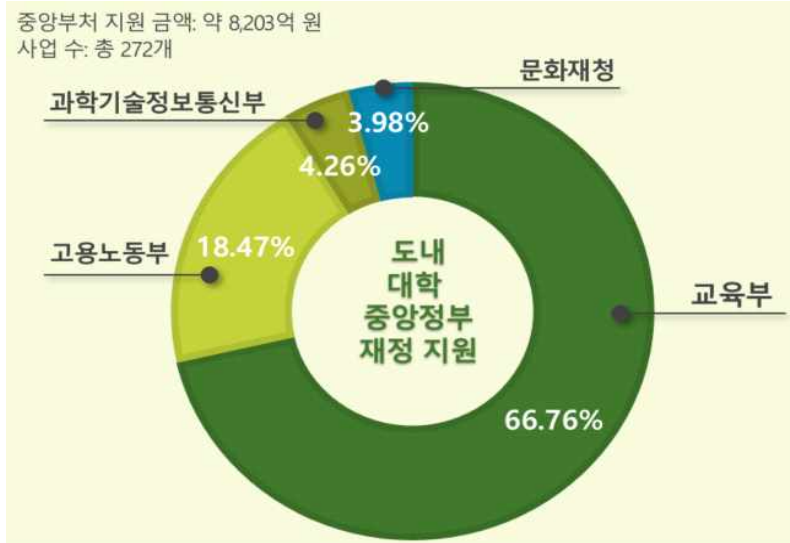
2. 중앙부처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 2021년 기준 중앙부처의 충남 도내 대학 재정 지원 현황

- 각 중앙부처별로 충남 내 어떤 대학에 어떤 사업들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음⁶¹⁾
 - 중앙부처가 충남 도내 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은 약 8,20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수는 총 272개로 나타났음
 - 교육부가 도내 대학 재정 지원액의 약 66.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 도내 모든 대학이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교육부 외 사업에도 다수 참여하고 있음

61) 한국사학진흥재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구득한 자료 기준이며, 충남 도내 대학 캠퍼스, 대학원 대학 등은 제외되어 있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4-4] 중앙부처 충남 도내 대학 지원 현황 (2021년)



출처: 사학진흥재단 정보공개청구하여 저자 작성

주: 2021년 기준이며 해당 원자료에 충남 도내 대학 캠퍼스, 대학원 대학 등은 제외되어 있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교육부 다음으로 고용노동부가 도내 대학 재정 지원액의 약 18.47%를 차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26%, 문화재청 3.98%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재정지원비중이 높은 편인 것은 충남 도내 한국 전통문화대학교가 존재하고 상당수가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인 것으로 판단됨

[표 4-3] 중앙부처의 충남 도내 대학 지원 현황 (2021년 기준)

(단위: 천원, %)

중앙부처	지원총액	참여 대학	사업명 예시
교육부	547,658,898 (66.76)	도내 대학 전체	국가장학금 지원(유형, II유형, 지역인재, 다자녀),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지원,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대학 혁신 지원(R&D),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 대학,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등
경찰청	120,000 (0.01)	백석대	실종 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 인지 기술 개발 사업
고용노동부	151,532,439 (18.47)	건양대, 공주대, 남서울대,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중부대, 한기대, 한서대, 백석문화대, 신성대, 아주자동차대, 한국폴리텍특성화대, 해전대	직업 능력 개발 담당자 양성 및 훈련 매체 개발, 국공립대 경상운영비지원사업(한기대, 폴리텍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등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34,909,549 (4.26)	건양대, 공주교대, 공주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중부대, 청운대, 한기대, 전통문화대, 한서대, 호서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	국가 우수 장학생(이공계), 개인 기초 연구, 집단연구 지원, 차세대 수소 혁신 기술, 실전 문제 해결형 인재 양성 등
국가보훈처	1,028,946 (0.13)	건양대, 공주대, 글로벌사이버대, 금강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중부대, 청운대, 한기대, 한서대, 호서대, 백석문화대, 신성대, 아주자동차대, 연암대, 한국폴리텍특성화대, 해전대 등	제대군인 위탁교육, 학자금 지원사업(사립대수업료 등 국고보조, 수업료 등 보전금 등)
국토교통부	1,697,849 (0.21)	공주대, 남서울대, 순천향대, 중부대, 한기대, 전통문화대, 한서대, 호서대 등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R&D),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등
기상청	776,500 (0.09)	공주대, 한서대 등	기후변화 대응 및 정보 생산·활용 연구,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기술개발, 기상관측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등

중앙부처	지원총액	참여 대학	사업명 예시
농림축산 식품부	3,443,911 (0.42)	공주대,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중부대, 전통문화대, 호서대, 신성대, 연암대	예비농업인교육지원, 기후변화 및 농업재해 대응기술, 스마트팜 실증·고도화 연구 등
농촌진흥청	2,008,250 (0.24)	건양대, 공주대, 선문대, 중부대, 청운대, 호서대 등	지역 농산물 식재료 이용 최적화 기술 개발, 시스템 합성 농생명 공학 혁신기술 개발, 빅데이터기반의 농식품 성분 DB 구축 등
문화재청	32,682,800 (3.98)	백석대, 전통문화대 등	국공립대 경상 운영비 지원 사업이 대부분, 그 외 민간 문화 유산 교육, 수리 및 안전관리 혁신 등
문화체육 관광부	7,247,456 (0.88)	건양대, 공주대, 나사렛대,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중부대, 청운대, 전통문화대, 호서대 등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콘텐츠 분야 인재 육성, 학교 체육 활성화, 문화 서비스 확산형 기술 개발 등
법무부	390,710 (0.05)	건양대, 한서대 등	이민자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보건복지부	2,232,500 (0.27)	건양대, 순천향대, 한기대, 호서대 등	의료 수요 연계형 중개 연구, 연구인재성장지원 (혁신형의사과학자양성), 디지털 헬스케어 효과 검증 연구 등
산림청	1,205,500 (0.15)	공주대, 순천향대, 호서대 등	산림 연구 인력 교육 훈련, 치유 물질, 인자 활용 기술 등
산업통상 자원부	16,461,506 (2.01)	건양대, 공주교대, 공주대, 글로벌사이버대, 금강대, 남서울대,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중부대, 한기대, 한서대, 호서대, 신성대 등	소재 부품 패키징형,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첨단 바이오 신소재, 교육 훈련 등
소방청	1,676,000 (0.20)	호서대	국민 위해 인자에 대응한 기체 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사업, 구조 구급 인명 안전 기술 등
식품의약 안전처	2,009,000 (0.24)	공주대, 호서대 등	농축산물 안전 관리 선진화, 담배 제품류 관리 연구 등
여성가족부	94,983 (0.01)	건양대, 공주교대, 백석대, 호서대 등	청소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 청소년 정책 연구개발 및 실태조사 등
외교부	1,195,144 (0.15)	건양대, 순천향대, 한기대, 한국폴리텍특성화대 등	연수과정 운영비(국별, 다국가, 특별), 주제별 프로그램, 사업평가 및 심사 등

중앙부처	지원총액	참여 대학	사업명 예시
중소벤처 기업부	9,961,383 (1.21)	건양대, 공주교대, 공주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청운대, 한기대, 한서대, 호서대, 백석문화대, 한국폴리텍특성화대 등	메이커 활성화 지원, 초기창업패키지, 시군구 지역 연구 산업 육성,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지원 사업,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등
질병관리청	94,800 (0.01)	순천향대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데이터센터)
통일부	27,800 (0.00)	공주교대, 공주대 등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개설 지원
해양수산부	210,000 (0.03)	호서대	수산연구인력 연구지원, 연근해어업 안전 및 자동화 기술개발 등
행정안전부	100,000 (0.01)	공주대	지진 방재 분야 전문 인력 양성
환경부	1,561,525 (0.19)	공주대, 남서울대, 순천향대, 한서대, 호서대, 신성대 등	미세 먼지 연구, 실내공기 생물학적 유해인자 분석 및 측정, 친환경 자동차 보급촉진 및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소계		820,327,449 (100.00)	

출처: 대학재정알리미 대학재정지원현황 정보공개 청구하여 저자 작성

주: 대학알리미 비공시대학 제외, 캠퍼스 등 제외되어 실제 대학 측에서 인지하고 있는 금액과 다를 수 있음 주의

□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중 RISE에 포함되는 주요 사업 내용

○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중 RISE에 포함되는 주요 사업 개요 및 2023년 예산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산학협력 육성사업(LINC),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방대 활성화 사업,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대학평생교육 체제지원(LIFE) 순으로 2023년 예산이 높게 책정되었음을 확인 가능함
- 5개 사업 중 지방비 매칭 비율이 존재하는 사업은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이며 각각 30% 및 10%의 하한선을 두고 있음

[표 4-4] RISE에 포함되는 주요 사업 예산 및 지방비 비율

(단위: 억원, %)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예산		지방비 비율
			'22년	'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1)플랫폼을 구축, (2)지역의 핵심분야를 선정, (3)지역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a)교육체계를 개편하고, (b)지역 혁신기관과 협업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 총 9개 플랫폼 중 3개 플랫폼 선정하여 추가 지원하는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 	2,440	3,540	30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 (전문) 대학 육성사업 (LINC3.0)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대학의 여건과 특성 등을 바탕으로 대학의 인재양성 체계를 지속 고도화하고, 산업 지원 및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을 강화하여 대학-산업계 상생발전을 지원 (유형1) 기술혁신선도형-산학연 협력 기술혁신 및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선도 (유형2) 수요맞춤성장형-산업계/미래사회 수요 인력양성 고도화 및 기업지원 활성화 (유형3) 협력기반구축형-산학협력 기반 조성 및 대학 산학 협력 역량 강화 	3,025	4,070	-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맞춤성장형) 미래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고도화 및 기업 가치창출 지원 강화 (협력기반구축형) 산학협력 친화형 체제 조성 및 채용 연계 기반 현장적응형 전문기술인 양성 강화 	1,045		
대학 평생교육 체제 지원(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정주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 수준의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 지역 인재 육성의 지속적 기반을 제공할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및 성인친화형 대학체제 전환 지속 추진 (유형1) 평생교육체제 구축형 (유형2) 평생교육체제 고도화형 (유형3) 광역지자체 연계형 	273	510	-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H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유형)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내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맞춰 교육체계를 연계·개편 하는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지원 -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거나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 (2유형) 전문대학이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특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수준별 DX역량 교육과정 및 지역 산업체 수요 맞춤형 재직자 DX교육과정을 제공 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한 新중장년의 직업전환 교육기관(DX-Academy) 역할 수행 지원 	900	900	10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예산		지방비 비율
			'22년	'23년	
지방대 (전문대) 활성화 사업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의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지방대학 활성화: 대학혁신지원 일반재정지원 대상 중 비수도권 사립대학 대상 	-	1,900	-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전문대학혁신지원 일반재정지원 대상 중 비수도권 사립전문대학 대상 	-	600	

출처: 김성주·김진(2023)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통합 포털⁶²⁾, 교육부 보도자료⁶³⁾ 등 참고하여 저자 정리

□ RISE 포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충남 도내 대학 현황

○ RISE에 포함되는 주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충남 도내 대학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RIS)에는 공주대, 건양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백석대, 선문대, 신성대, 아주자동차대, 충남도립대, 한기대, 한서대, 호서대 등이 참여
-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의 경우 건양대, 공주대, 선문대, 순천향대, 한기대, 한서대, 호서대 등이 참여하고 있음
- 대학평생교육 체제지원(LiFE)사업의 경우 청운대와 호서대가 참여 중임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에는 혜전대, 신성대, 연암대, 백석문화대 등이 참여하고 있음
- 지방대 활성화 사업의 경우 건양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중부대, 청운대, 한기대, 한서대, 호서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62) 대학재정지원사업 통합 포털 <https://uniall.nrf.re.kr/main.do>

63) 교육부(2023.02)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 2.0) 기본계획, 교육부(2023.02) 2023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기본계획, 교육부(2023.05) 2023년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교육부(2023.02.24.)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예비 선정결과 발표

[표 4-5] RISE에 포함되는 주요 사업 및 참여 충남 도내 대학

사업명	참여 대학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 공주대, 건양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신성대, 아주자동차대, 충남도립대, 한기대, 한서대, 호서대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LINK3.0)	• (수요맞춤성장형) 건양대, 선문대, 순천향대, 아주자동차대, 연암대, 한기대, 한서대, 호서대 • (협력기반 구축형) 공주대
대학 평생교육 체제지원(LIFE)	• 백석문화대, 청운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HIVE)	• 백석문화대, 연암대, 신성대, 충남도립대, 혜전대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	• 건양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백석대, 백석문화대, 선문대, 순천향대, 신성대, 아주자동차대, 연암대, 중부대, 청운대, 충남도립대, 한기대, 한서대, 호서대

출처: 각 사업별 소개 홈페이지 및 사업발전협의회, 충남 내부자료 등 참고

주: 참여 대학은 최근년도 기준이며 가나다 순임

□ 교육부 외 중앙부처 주요 대학재정지원 사업 현황

- 2021년 결산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로 이관될 예정인 교육부의 5개 사업 외에도 타 중앙 부처의 연관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형 자동차 현장 인력양성사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산학연 협력 기술창업 법인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계약학과 추진, 국토교통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행정안전부의 지역 소멸기금 관련해서 충남 인구 감소지역 내 대학과의 연계·협력 사업 추진 등을 들 수 있음

[그림 4-5] 교육부 외 중앙부처 주요 대학재정지원 사업 현황 (2021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인재양성	창의융합형공학 인재양성지원	대학 ICT 연구센터	제조데이터 촉진자양성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	지역소멸기금
	미래형자동차 환경인력양성	지역지능화인재양성	기술사관 육성		
	에너지인력양성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연구기반 활용		
취업창업 (산학협력)	산학융합지구조성	데이터 청년 캠퍼스	중소기업 계약학과	도심융합특구	
	중견기업 DNA융합 산학협력	산학연 협력 기술창업 법인 육성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캠퍼스 혁신파크	
교육과정 연계운영	재직자 맞춤형 기술교육	SW 중심대학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특화단지 재직자 교육				
	AI 융합형 산업현장 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2023.08.16.)

□ 충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연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1년 기준으로 충남은 자동차, 바이오, 디스플레이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중앙정부 부처와 산학협력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 중임

[표 4-6] 충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 가용 자원 현황 (2021년 기준)

(단위: 백만원)

혁신 전략산업	내역사업(세부사업)	소관	예산		주요 내용
			국비	지방비	
자동차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R&D)	중기부	2,855	705	• 주력산업 상용화 R&D, 스타기업 성장 견인 R&D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비R&D)	중기부	1,904	1,205	• 주력산업 비R&D과제 지원, 바우처 지원, 스타기업 육성지원, 수출기업 지원, POST-BI지원, 지역투자 생태계 조성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20~’22)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구축 사업)	산업부	2,196	981	• ISO 26262 규격의 자동차부품 개발·검증 시스템 구축

혁신 전략산업	내역사업(세부사업)	소관	예산		주요 내용
			국비	지방비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21~’23)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	산업부	400	120	• 친환경 자동차부품 및 공정스마트화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지원	과기부	6,000	1,200	•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업 육성 -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기술이전 사업화(R&BD),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등
바이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R&D)	중기부	2,855	705	• 주력산업 상용화 R&D, 스타기업 성장 견인 R&D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비R&D)	중기부	1,904	1,205	• 주력산업 비R&D과제 지원, 바우처 지원, 스타기업 육성지원, 수출기업 지원, POST-BI지원, 지역투자생 태계 조성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21~’23)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사업)	산업부	1,337	576	•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장비 확충을 통해 사용성·성능평가, 효능 평가, 유효성평가 등 고도화 지원체계 구축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20~’22)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	산업부	4,000	3,375	• 온천의 산업 자원화를 통한 고부가 가치 신성장 동력 발굴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각화 - 센터·시설장비(플랫폼) 구축, 제품 및 서비스 임상·실증 지원, 기술· 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디스 플레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R&D)	중기부	2,855	704	• 주력산업 상용화 R&D, 스타기업 성장 견인R&D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비R&D)	중기부	1,904	1,205	• 주력산업 비R&D과제 지원, 바우처 지원, 스타기업 육성지원, 수출기업 지원, POST-BI지원, 지역투자 생태계 조성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22~’24) (초실감 디스플레이 융합형 스마트 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산업부 (신규)	0	0	• 초실감 디스플레이 융합형 스마트 센서 모듈 기술개발 지원으로 센서 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 - 플랫폼 및 장비구축, 센서 종합 기술

혁신 전략산업	내역사업(세부사업)	소관	예산		주요 내용
			국비	지방비	
공통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과기부	180	180	• 지방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시행 계획 수립,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기획, 성과확산 등
	지역SW산업진흥지원	과기부	828.6	828.6	• 지역 수요기반의 강소SW육성으로 지역의 SW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혁신성장 (R&D)	산업부	360	176	• 기업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공동 R&D 지원 • (품목) 전통웰빙식품, 스마트유통, 언택트콘텐츠
	사회적경제혁신성장 (비R&D)	산업부	343	147	• 기업의 제품·서비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지역 공동체 간 네트워킹·협업 모델 개발 지원 • (품목) 스마트유통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산업부	570	570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농촌자원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제조·유통의 혁신거점' 조성
	산학협력력고도화지원 (R&D) - 지역선도대학육성	교육부	17,372	550	• 지역산업발전 선도 인력양성 및 지역 기업 기술개발지원 • 교육과정 개발, 취·창업지원, 현장 실습, 기업지원, 캠퍼스디자인, 지역사회 지원

출처: 충남 내부자료(2022)

3.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와 연계

□ 2025년부터 RISE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기존의 5개 사업 포함 행·재정 관련 권한과 의무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예정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세부 사업 단위의 신규 지방재정 투자사업이 발생하는 것임

- RISE에 포함되는 5개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도 교육부 및 RISE센터,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됨
- 향후 RISE사업 예산은 비영리법인인 RISE 센터를 통해 고등·평생교육특별 회계 형식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될 예정이며 중앙정부 지원 예산이 남아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복합 재원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즉, RISE 사업은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필연적이므로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존의 5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RISE 이후 지속되고, 기본계획 상의 신규 세부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을 가정하면 현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업이 존재할 것임
 -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 자체 심사를 수행하고,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총사업비 규모에 관계없이 자체심사가 원칙임
 - 기초 지자체 이외에 광역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 및 민간투자 등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포함되는 복합재원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의뢰 심사를 받아야 함
 -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전액 자체 재원일 경우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이면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며, 시·군·구와 동일하게 자체 심사가 원칙임
 - 다만 이 경우에도 과대한 청사/문화/체육시설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음

- (심사 면제 규정)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규정심사규칙 제3조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임
- 이 규정은 대규모의 중앙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중앙정부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지방정부의 중복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함
- 복합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상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음
- 광역 단위의 고등교육기관 지원 부서에서 사업 수행 시,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은 자체심사를, 300억 원 이상은 행정안전부의 중앙 의뢰심사 대상이 될 것임
 - 기초 단위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총사업비 60억원 미만은 자체 심사를, 200억 원 미만은 시·도 의뢰심사를, 200억 원 이상은 행정안전부의 중앙 의뢰심사를 받게 됨

[표 4-기] 지방재정 투자사업 개요

구분			시·군·구 자체 심사	시·도 의뢰심사	중앙 의뢰심사
광역	일반투자사업	이전 재원 포함	-	30~300억원	300억원 이상
		전액 자체 재원			
	외국 차관 도입사업, 해외투자사업		-	30억 이상, 30~40억원 이상 (청사, 문화, 체육)	40억원 이상 (청사, 문화, 체육)
	행사성		-	3~30억원	10억원 이상
홍보성 사업		5~30억원		30억원 이상	
기초	일반투자사업	이전 재원 포함	(인구 100만명 미만): 20~60억 원 (인구 100만명 이상): 20~200억 원	60~200억원	200억원 이상
		전액 자체 재원	20억원 이상		
	외국 차관 도입사업, 해외투자사업		5~10억원	-	10억원 이상
	행사성		1~3억원	3~30억원	30억원 이상
	홍보성 사업		3~5억원	5~30억원	

출처: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2022)

주: 인구 100만 이상 시·군·구는 200억원 미만까지 자체 심사함

제3절 성과관리 방안

1. 이론적 논의

1) 성과관리의 의의

- 성과관리는 개인과 조직에 대한 자원의 투입과 운영과정, 산출결과의 연계, 목표의 설정과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 등이 포함되는 일련의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음(조경훈·박형준, 2021)
- 광의의 성과관리는 조직 및 하위 부서와 개인의 성과가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관리로 정의하기도 하며(이세구, 2003), 협의의 성과관리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여 정책 및 사업 방향에 대한 관리자의 결정에 성과정보를 활용하는 것(이세구, 2003)

[그림 4-6] 성과관리의 구성요소



자료: 행정자치부(2007)

- 성과계획은 조직의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고 성과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활동계획 및 평가계획을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임무(mission): 조직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조직 고유의 사명과 역할
 - 비전(vision): 임무 달성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
 - 전략목표(strategic goals): 임무 수행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으로 조직의 목표·가치·기능 등을 포함
 - 성과목표(performance goals): 전략목표의 하위개념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목표
- 2006년 시행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는 정부 업무의 추진에 있어 기관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함⁶⁴⁾
 - 이러한 측면에서 성과관리는 조직의 전략적 관리로써 조직이 기대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성과평가는 2001년 1월 제정된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2003년부터 실시되었고 현재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음
 - 정부업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합동평가와 개별평가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자체 평가가 있음

64)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 2조 6호

[표 4-8]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제도 개요

구분		평가 시행기관	평가 목적	근거
중앙행정 기관에 의한 평가	합동 평가	중앙행정기관 합동	•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평가·환류하여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확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개별 평가	개별 중앙행정 기관	•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밖에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해서 평가 대상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 5항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		지방 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의 추진 과제와 성과지표를 제시, 내부 관리 개선 및 외부 대응성 강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자료: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여 저자 작성⁶⁵⁾

주: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 중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관련해서는 기본 방향에서 후술함

2) 성과관리 방법론 유형

(1) 목표 관리제(Management by Objective: MBO)의 개요

□ MBO의 개념

-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조직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실현 가능한 성과목표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임

□ MBO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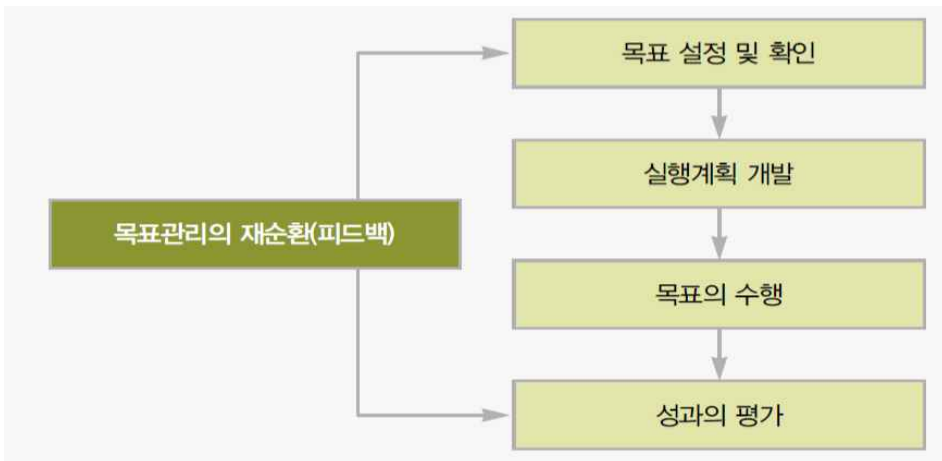
- 구성원의 참여와 상·하위직간 협의를 통한 목표 설정 및 책임 한계 규정으로 조직구성원의 동기유발을 도모함
 - 조직의 목표를 실체화하는 과정이며,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함

65)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36

□ MBO의 과정

- 목표설정: 상·하위직간 사전 협의로 업무목표와 달성기준(평가지표)을 명확히 설정함
- 실행계획 개발: 설정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
- 목표수행: 조직단위 및 구성원들은 상호역할을 분담하여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 평가/피드백: 일정 기간 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피드백하여 목표를 재설정함

[그림 4-7] 목표관리제의 추진 과정



자료: 행정자치부 (2007:18)

(2) 프로그램 논리 모형(Program Logic Model)의 개요

□ 프로그램 논리모델의 개념

- 성과관리에 있어 논리 모델이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투입 → 활동 → 산출 → 결과의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업무의 영향을 심도있게 추적함으로써 성과를 관리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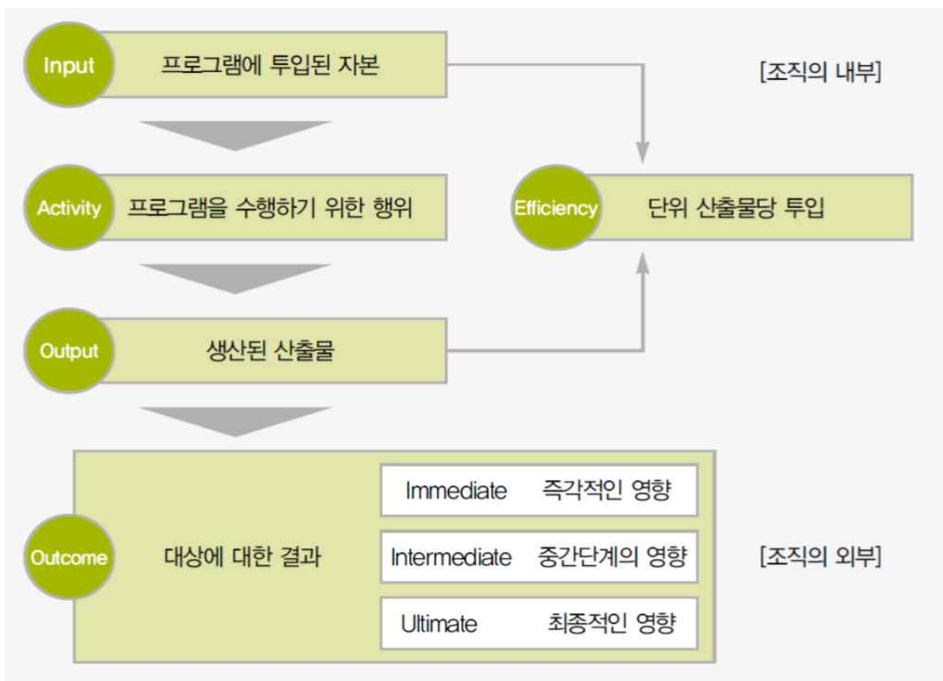
□ 프로그램 논리모델의 목적

- 업무의 난이도와 양을 나타내는 산출물(1차 결과물, 단기적 성과)의 관점을 넘어서 고객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정보인 결과(최종 결과물, 궁극적 성과)를 지향하는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를 수행함
 - 장기적인 결과 위주의 지표 도출을 통해 과소한 목표 설정을 방지함

□ 프로그램 논리모델의 추진과정

- 구조적인 틀(framework) 하에서 평가지표 개발에 치중함
 -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투입지표(Input), 활동지표(Activity), 효율성 지표(Efficiency), 산출지표(Output), 결과지표(Outcome)를 개발함

[그림 4-8] 논리모델의 추진 과정



자료: 행정자치부 (2007:17)

(3) 균형성과표 (Balanced Scorecard: BSC)의 개요

□ BSC의 개념

-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들을 도출하고, 핵심성과지표 간의 인간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관리하는 도구임
-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으로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구성하고, 재무·고객·내부프로세스·학습과 성장 등의 관점에 의해 장·단기, 원인·결과, 내·외부적으로 균형 있게 성과를 관리하는 모형임
- 1992년 하버드 대학의 캐플란 교수와 노튼 박사가 미국의 일류 다국적 기업 12개사의 공동연구를 통해 창안·정리된 실증적인 이론으로서, 전세계 다양한 조직(사기업 및 공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성과중심의 경영관리기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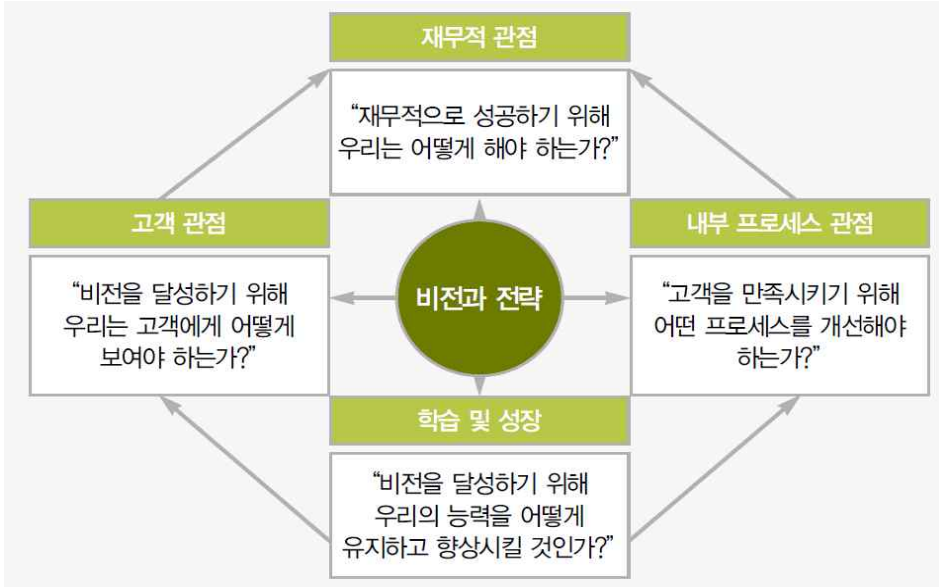
□ BSC의 목적

- 재무·고객·내부 프로세스·학습과 성장 등과 같은 4가지 관점의 균형적 결합을 통해 재무/비재무, 단기/장기, 내부/외부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균형적 성과관리를 추구함

□ BSC의 특징

- 조직을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관련부서간(수평적), 상·하위 부서간(수직적)의 상호 연계성을 강조함으로써 조직의 성과에 대해 전체적인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짐

[그림 4-9] BSC의 기본구조



자료: 행정자치부 (2007)

2.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 성과관리의 기본 방향

1) 이해관계자 간담회 의견수렴 결과

□ 향후 성과평가 방식에 대한 경쟁 지양 의견 존재

- 주요 사업을 정하고 대학을 매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평가하여 사업비를 차등 배분하는 방식을 건의
 - 단순히 기술과 산업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술, 사회, 경제, 산업, 문화 등 다방면의 기여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존재

제2차 충남고등교육정책(실무)협의회(2023.07.25.) 현장 의견 수렴**(A 교수)**

“전체 대학에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미리 주요 대학을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전체 신청서를 보시고 거기에서 사업비를 배분을 해서 예를 들면 A,B,C 등급으로 나누어서 이제 그렇게 주는 방향을 좀 하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경쟁 체제에서는 벗어나고 좀 더 대학에서는 지역 주력 산업이나 아니면 지역 수요 산업에 맞춰서 대학 자율화에 맞게끔 필요한 사업들에 공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B 충남 유관기관 소속 박사)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회에서 대학들이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지역의 효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방면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단순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 사회, 경제, 산업 분야에 있어서 고르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지역에 있어서 이렇게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녹여서 충남형으로 만든다면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사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지역 발전 및 산업과 연계되는 고등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 내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소외되는 대학이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 및 대학의 건의 사항 존재
 - 기존 중앙부처 주도 대학재정지원 사업에서 권역 내 경쟁이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대학 간 협업 체계 마련을 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이 주력 산업 등 지역 발전 산업 위주로 구성될 경우 필연적으로 소외되는 대학이 있어 비주력 사업 중에서 지역 수요에 맞는 필수 사업 발굴 요청

제2차 충남고등교육정책(실무)협의회(2023.07.25.) 현장 의견 수렴

(B 교수)

“그동안 대학 교육부의 대학 정책 자체가 좀 권역이 협업보다는 권역 내 경쟁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역량 진단도 보면 충청도 내에서 서로 경쟁을 해서 그 안에서 등수를 매겨서 탈락되는 방식으로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학의 관심은 저 과제는 어떤 대학이 어느 대학이 가져갈까 이런 관심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게 가버리게 되면 도에서 어떤 생각 하시는 그런 가치는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어떤 특정 과제에 대해서는 여러 대학들이 협업을 해서 결과물을 마련할 수 있는 협업과 공유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나와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C 교수)

“충남의 주력 사업 그다음에 핵심 사업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 사업을 얘기할 때 대학에서 바라보는 눈빛은 우리는 핵심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에서의 어떤 주력 사업이 있으면 비주력 사업 중에서도 필수적인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의료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대학과 같이 얘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D 교수)

“주력 산업이라든지, 미래 신성장 사업이라든지, 어떤 기본 틀을 기준을 미리 상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대학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정말 충남에 있는 대학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떻게 유형화하면 충남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고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하면 좋겠습니다.”

□ 이해관계자 간담회 의견 수렴 결과에서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되, 충남의 지역 발전과 대학 동반 성장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2025년 이후 대학 평가체계 개편으로 인해 대학평가체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대학 평가와 재정 지원이 강하게 결합된 구조에서 재정지원에 있어 평가의 기능이 최소화되어 경영 위기 혹은 최소 기준 미충족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예정임(문보은, 2023)

- 즉, 2025년부터 시행되는 대학 재정진단 결과의 활용에 있어서 경영위기 대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타부처 재정지원 사업 지원이 제한되지 않음
- 의무교육이 아닌 대학 교육, 특히 국·공립 대학 아닌 사립 대학에 대한 공공 재정 투자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함
 - 통합된 RISE 예산에서 소위 한계대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원 투입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고등교육기관 책무성 제고나 재정의 합리적 운용 등에도 부합하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지역 내 일반대와 전문대,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균형적인 육성 및 지원, 역할 분담과 배분 원칙, 고등교육기관 책무성 보장을 위한 제도 등이 충분히 논의되고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이종관(2018)에 따르면 대학으로 인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 하기 위해서는 대학 역량이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즉,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위해서도 지역 내 건전 대학을 중심으로 체제를 재편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문보은, 2023)

□ 최근 감사원(2022)도 교육부가 추진한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함

- 대학과 지역 일자리 연계 분야 실태분석 결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대학 특성화 사업은⁶⁶⁾ 지역사회 수요와의 연계 여부를 객관적·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 존재
 - 해당 재정지원 사업들은 대학 소재 지역의 산업 기반과 연계할 수 있는 학과를 특성화 학과로 지정해 재정을 지원해 왔으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원 대상 학과와 지역 간 연계성이 불분명하게 나타남

66)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대학 특성화사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CK), 전문대 특성화 사업(Specialized College of Korea: SCK), 산업·대학 연계(Program for Industrial Needs Matched Education: PRIME) 등이 여기에 포함됨

- 예를 들어 CK사업 선정 평가지표(2014년)에 따르면 대학 자율 및 지역 전략 분야에 지원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만 각각 ‘지역사회 및 산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항목에 총점 100점 중 5점만 배분하여 지역사회 수요와의 연계를 선정 평가한 바 있음
- 이로 인해 학교가 신청한 학과에 대해 지역 수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특성화사업 대상으로 선정·지원된 결과 산출, 강원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35개 중계열학과 대부분을 특성화한 것으로 확인됨

2) 재정사업 평가 방식 도입 고려

□ 앞서 제 4장 제 2절에서 언급했듯이 향후 RISE 하에서 도내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충남도청 및 도내 기초 지자체 재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음

- 즉, 충남 도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지방 재정이 투입되고 세부 사업 단위로 집행되는 이상,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사업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 경우 기존의 교육부 주도의 사업 평가 방식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재정 사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재정사업 평가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재정사업평가 개괄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재정사업평가는 2014년에 도입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조의 2에 의거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그 사업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이삼주·김성주, 2016)
 - 평가 대상과 지표 등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음
 - 평가 방식에 따라 매년 해당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보상과 연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지방 재정사업 평가 대상은 크게 1) 주요 재정사업 2) 민간 위탁 사업 3) 지방 보조 사업으로 나뉘며 주요 재정사업은 자체적으로 내부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 민간위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 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며, 지방 보조 사업은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 하기 위해 보조금 등을 교부하는 사업을 의미함

- 지방 주요재정사업의 평가지표를 보면, 계획-관리-성과 및 환류로 나타나며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 달성 및 사업 평가 결과의 환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4-9] 지방 주요 재정사업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계획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관리 (30)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성과· 환류 (50)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50)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출처: 행정안전부 예규 제 132호(2020)⁶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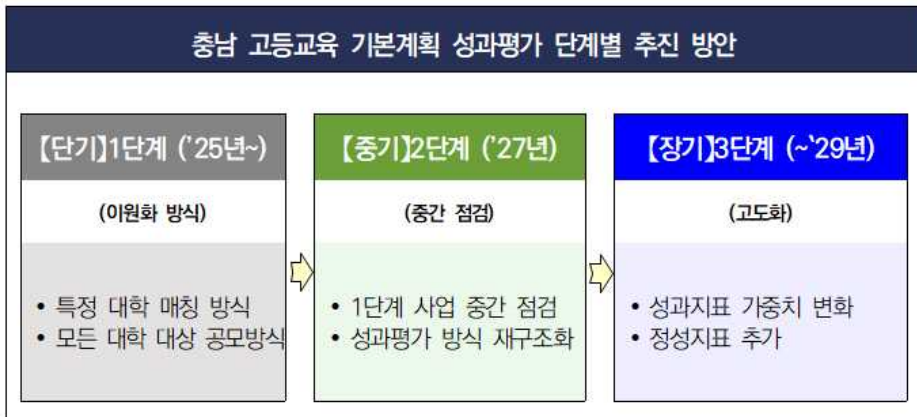
3) 연차별 성과평가 차별화 방안

- 기본적으로 종합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시행계획의 시간적 범위가 1년 단위인 점을 고려할 때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방식을 연차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67)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132호, 2020.11.13.)

- 사업 초기 단계의 혼란과 시행착오 등을 고려하여 초반 1~2년 동안은 1) 특정 대학 매칭 방식과 2) 모든 대학 대상 공모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원화 방식을 유지
- 3년차인 사업 중기 단계에서 1) 특정 대학 매칭 사업 중간 평가 2) 공모사업 중간 점검 등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성과 평가 방식 재구조화
- 사업 말기인 4~5년차의 경우 성과지표 가중치 변화,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 추가 등의 방식을 고려하여 고등교육 기본계획을 고도화할 필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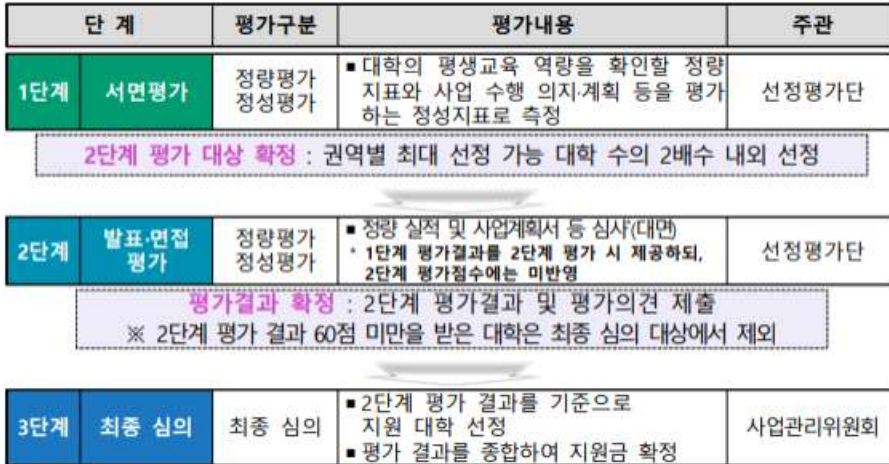
[그림 4-10]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단계별 추진 방안



□ 성과평가 방법

- 정량평가, 정성평가, 학내 구성원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활용하여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발표·면접 평가, 시도 RISE 센터 사업관리위원회 및 중앙 RISE 센터 심의를 통해 대학별 지원금 및 조치사항 결정
- 대학유형별·사업연차별로 성과가 미흡한 하위 20% 이내 대학은 컨설팅 실시 및 평가 결과에 따라 후반기 사업에서 제외하며, 대학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차등 지급 및 신규 진입대학 규모 결정하는 방안 고려

[그림 4-11] LiFE 사업 선정 평가 방식



출처: 교육부(2023.02)

□ 성과평가 지표 종류 구상

- (평가주기 차별화 시도) 매년 점검 및 평가가 필요한 연간 성과지표, 2~3년 주기로 성과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단계 성과 지표, 총 사업기간 종료 시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종합 성과지표로 나누어 평가주기 차별화 시도
 - 연차 평가시에는 연간성과지표 대상 평가를 진행하고, 단계평가시에는 연간 성과지표와 단계성과지표를 평가하고, 종합평가 시에는 연간성과지표, 단계성과지표, 종합성과지표를 모두 평가하는 방식을 고려
- 성과지표는 분야별로 핵심성과지표와 자율성과지표를 선정하여 가중치에 따라 사업별 성과 관리 추진
 - 예를 들어 핵심성과 지표는 80% 수준에서 충남도에서 정하고, 자율성과지표는 20% 수준에서 대학이 자율로 정하는 방식
 - 혹은 핵심성과지표의 80%는 충남도에서 일괄 부여하고, 20%를 대학 학사 조직 특성이나 사업 종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음

□ 성과 공유 및 홍보

- 고등교육정책협의회, 성과공유 대회, 전담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우수 사례 확산 및 성과 제고 지원
 - 우수 대학 및 우수 사업 선정하여 수상하고 관련 홍보 확대하여 지방시대 엑스포, 글로벌 인재포럼, 산학협력 엑스포 등에서 사업 성과 확산 및 공유

□ 성과 컨설팅 지원

- 교육부는 RISE 시범지역에 교육개혁지원관을 파견하고 있고 비시범지역 10개 시·도 중심으로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임
- 지역·산업계 인사, 고등교육 전문가 등 관련 분야별로 대표성이 갖춰지도록 평가단 구성하여 성과 평가단과 성과 컨설팅단 연계

3. 충남형 RISE 성과관리(안) 제안

1) 성과평가 추진 체계

□ 추진절차

- RISE 성과평가의 기본적인 추진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음
 - 지역·산업계 인사, 고등교육 전문가 등 관련 분야별로 대표성이 갖춰지도록 성과평가단(교육개혁지원관 1인 이상 포함)을 구성하여 외부전문가에 의한 1차 서면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평가 결과에서 제시한 개선의견을 바탕으로 환류 계획을 수립하여 차년도 사업 운영 개선에 반영함

[그림 4-12] 충남형 RISE 성과평가 기본절차



□ 추진단계

- 충남 고등교육기본계획 성과평가 방식을 준용하여 단계별 차별화 방식으로 구조화함
- 단기('25년~'26년): 성과평가 정착기
 - 사업내용에 따라 중점과제 세분화 후 과정/산출/결과 중 1개 단일지표 설정
 - 전략목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핵심지표 및 자율지표 분류
 - 사업 초기 단계에는 성과평가 도입에 따른 성과부담 최소화에 중점. 따라서 관리용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표별 균형 가중치 부여
- 중장기('27년~'29년): 성과평가 고도화기
 - 성과목표별 산출 1개, 결과 1개 총 2개 지표 설정하여 지표다양화 도모
 - 사업 중장기 단계에서는 성과평가에 대한 조직학습 효과 발현 가능
 - 지표성격(타당성, 난이도, 대표성)에 따른 지표품질평가 실시 후 가중치로 활용

□ 평가 대상

- 평가 대상은 핵심 분야별(i) 총체적 지역인재 양성 기반 강화, ii) 지역특화 연구개발 역량 강화, iii) 취창업 정주 생태계 구축, iv) 대학 역할 혁신과 변화)의 달성에 기여하는 16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설정한 34개의 세부 사업임

□ 평가항목 및 배점

- 성과평가는 성과지표에 대해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는 실적평가(34개)와 지표의 품질을 평가하는 성격평가(3개)로 구성됨
- 실적평가는 각 지표별 목표달성도(목표 대비 실적 비율)를 정량 평가하며, 배점은 80점으로 할당함
- 지표성격평가는 각 지표별 품질을 대표성(20%), 난이도(40%), 타당성(40%) 항목에 대해 정성 평가하며, 배점은 20점으로 할당함

[표 4-10] 충남 고등교육 성과 평가 항목 및 배점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목표 달성도 (정량 지표)	성과목표치 달성도	• 세부 지표별 목표치 달성 정도	80
지표 성격 (정성 지표)	대표성 (20%)	• 지표가 세부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하는지 여부 • 지표가 중점과제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	20
	난이도 (40%)	• 지표의 목표값이 기준값과 비교하여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 지표의 목표값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여부	
	타당성 (40%)	• 측정산식을 구체적이고 신뢰성있게 정의하였는지 여부 • 지표 내용이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총 계			100

□ 평가점수 산정 방식

- 평가점수는 실적지표 측정산식에 따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후 지표성격평가에 따른 값을 가중치로 곱하여 산정함

$$\text{평가점수(점)} = (\text{세부지표① 점수} \times \text{세부지표① 가중치}) + (\text{세부지표② 점수} \times \text{세부지표② 가중치}) + \dots$$

□ 평가점수 등급화 방식

- 성과지표별 평가점수가 확정되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4단계의 등급을 부여함

- 균등 가중치가 적용된 단일지표로 관리하는 단기('25년~'26년) 단계에서는 90점 이상을 '우수'등급으로 하고 10점 간격으로 등급 부여
- 지표성격별 차등가중치가 적용되고 산출-결과 유형의 2개 지표로 관리하는 중장기('27년~'29년) 단계에서는 85점 이상을 '우수'등급으로 하고 15점 간격으로 등급 부여

[표 4-11] 평가등급 부여방식

등 급	기 준	평 점	
		단기 ('25년~'26년)	중장기 ('27년~'29년)
우수	평가항목 부합 정도가 매우 잘 맞고, 상당한 성과가 있음	90점 이상	85점 이상
양호	평가항목 부합 정도가 잘 맞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음	80점 이상 ~ 90점 미만	70점 이상 ~ 85점 미만
보통	평가항목 부합 정도가 보통이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가 있음	70점 이상 ~ 80점 미만	55점 이상 ~ 70점 미만
미흡	평가항목 부합 정도가 낮으며,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성과가 있음	70점 미만	55점 미만

2) RISE에 포함되는 기존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고려

□ RISE에 포함되는 5가지 사업의 핵심지표 및 자율 지표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음

- 핵심지표는 각 사업별로 해당되는 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과지표를 의미하며 사업별로도 핵심지표가 다를 수 있음
 - 플랫폼 단위로 구성되는 RIS사업의 경우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구축 및 사업 간 연계 거버넌스의 활동 요소(Action)와 산출 요소(Output)에 집중
- 자율 지표는 사업 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사업 참여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지표를 의미함
 - 핵심 지표 외에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달성 가능하며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만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음

[표 4-12] RISE에 포함되는 기존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구분	핵심 지표	자율 지표 예시	비고
RIS	<p>[평가 개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년도) 지역 내 대학 관련 사업 정보 공유·관리체계 구축 • (2차년도 이후) 지역 내 대학 관련 사업 정보 공유·관리체계 활용 실적 <p>[기관 간 인력 교류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년도) 지역혁신기관 간 협업 지원을 위한 제도화 실적 • (2차년도 이후) 지역혁신기관 간 협업 실적, 지역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협업 노력 위주 <p>[사업 간 연계 추진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육혁신본부의 제안에 따른 대학의 교육혁신 추진 실적* <p>* 개편유형(대학 간 역할분담, 학사구조 개편, 교육과정 개편)별 가중치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플랫폼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 교육혁신지수 • 산업혁신지수 • 사회혁신지수 • 경제파급효과지수 • 사회영향력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별 핵심지표 상이
H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 구축·운영 • 특화분야 정규교육과정 •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 지역사회공헌 • 지역 정주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상생지수(지역상생Lab 활동, ESG지역사회 참여도) • 스마트 교육혁신지수(특화학과 혁신교수법 운영) • 지역사회 애로기술 지원지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지자체와 대학 간 컨소시엄 구성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여건 (성인학습자 신입생 충원률, 성인학습자 중도탈락률, 대학 규모 대비 성인학습자 정원 확보율) • 비전 및 운영체계 (지역-대학 평생교육 발전 계획 강화 실적, 교원업적평가·인사제도의 성인친화형 체질개선 실적 반영률) • 일터·학교 순환형 교육(성인친화적 교육 과정 개발·운영 성과, 장학금 지원 실적) • 지역 기반 대학 평생 교육 체제(대학-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실적,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실적) • 지속 가능성 (국고 예산 집행률, 교비 집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품질지수(전공, 교양 강의 만족도,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 • 학생 케어지수(재학생 상담비율, 부적응자 상담비율, 상담만족도) • 취업역량 강화지수(전공 학업성취도, 직무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율, 자격증 취득건수) • 평생학습 친화지수(교내 평생교육 과정 참여 교직원수, 평생직업교육 기관 협력 네트워크 실적, 교내·외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교원 강의 횟수, 등록금대비 1인당 성인학습비 지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구축형, 고도화형, 광역 지자체 연계형)별로 조금씩 차별화

구분	핵심 지표	자율 지표 예시	비고
LINC	[비전 및 체제] • 전임교원 참여비율, 교원업적평가, 인사제도의 산학협력 실적 실제 반영률 [인력 양성] • 취업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실적, 캡스톤디자인 운영 실적, 창업 교과 이수학생 비율 [기업가치 창출] • 기업협업센터 운영실적, 산학공동연구 실적, 대학창업실적, 기술이전 실적 [공유·협업] • (공용장비 운영 실적, 산업체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실적)	• 3S지수-진정성지수, 공유·협업지수, 지속가능성 지수 • 인력양성-취업 성과지수, 표준장기 현장실습 채용연계형 활성화 • 기술개발 및 사업화 • 공유협업 • 지자체 연계 지표: 관내 가족회사 가입비율, 관내 기업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 지자체 내 기관과의 공유 협업 실적, 지식학 협력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건수, 지역 내 기술 이전 계약건수 및 수입료	• 2023년도 사업계획서에 지자체 연계지표 명시
지방대 활성화	• 특성화 분야 재학생 충원율 • 특성화 분야 중도 탈락률	•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 개편 건수 •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 운영 만족도 • 가족회사 협약 건수 • 인턴십 및 멘토·멘티 참여율 • 융합교육활성화 지수(소단위 과정 개설 건수 및 개발 건수) • 특성화 교육법 운영 지수 • 정주형 인재육성 활성화지수(진로 취창업 프로그램 참여학생 수 + 특성화 분야 계열 참여학생 수) • 특성화 분야 역량강화 지수(혁신 교수법 참여교원수, 원격 콘텐츠 운영건수) • 특성화 분야 실습 강화(실습교과목 만족도, 스마트강의실 만족도)	

출처: 각 사업별 최근년도 교육부 기본계획 및 각 대학별 사업계획서

주: 사업 성과지표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 평가 지표 수록하였음

3) 핵심 분야 과제별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 중점과제별 최종 성과지표 선정 원칙

- 성과지표는 논리모형에 입각하여 전문가가 제시하나, 연도별 목표치는 목표 관리제(MBO)에 입각하여 지표 담당자가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가가 제시한 지표 Pool 가운데 측정 가능성,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결과 지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성과평가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하여 지표 설정 전(全) 과정에 반드시 실무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최종 지표 선정 시 현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 인재양성 또는 교육프로그램 사업은 기본적으로 과정 지표인 프로그램 운영건수, 산출지표인 교육생수, 결과지표인 교육만족도가 모두 포함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족도 지표의 경우 적정 표본에 대한 최소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표본 구성에 따른 만족도 조사결과의 왜곡이나 사업별 유불리를 최소화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만족도 조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본 규모는 최소 30명 이상이며, 모집단이 30명 이하일 경우 대상자의 80% 이상이 되어야 함
 - 만족도 측정산식은 전체 응답자 중 긍정 응답 이상 비율(긍정 이상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 \times 100과 만족도 점수 평균(응답자 점수 총합 / 전체 응답자 수) \times 20) 두 가지 방식이 주로 활용됨. 이는 사업 특성 및 응답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사업담당자(지표관리자)가 선택 가능함

□ 충남형 RISE 성과지표 후보군 제시

- 4개 핵심분야 16개 중점 과제에 대한 단계별(투입/과정/산출/결과) 지표 후보군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성과지표 도입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는 난이도가 비교적 수월한 과정 지표도 포함하였으나, 사업이 안정화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과정 지표는 일몰제 적용하여 점차적으로 삭제하거나 산출 및 결과지표로 전환하여 지표 고도화 도모가 필요

[표 4-13] 충남형 고등교육 기본계획 성과 목표별 성과지표 제시안

연번	핵심 분야	중점 과제	관리 번호	사업 주요 내용(성과목표)	성과 지표명	측정 산식	지표 단위	지표 성격	
1	1. 총체적 지역인재 양성기반 강화	1-1. 지역 수요 반영 생애 전주기 교육 훈련 활성화	1-1-①	초·중·고등학생 대상 충남 지역 역사 문화 이해 프로그램 제공 및 활성화(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의체 구축)	지자체 및 교육청과의 협의회 개최횟수	Σ(협의회 개최횟수)	회	과정	
2					역사문화이해 프로그램 참여자수	Σ(역사문화이해 프로그램 참여자수)	명	산출	
3					참여자 만족도	(긍정 이상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수) × 100	%	결과	
4				1-1-②	의료 복지 등 지역 수요 반영 교육 훈련 활성화(공공간호사제,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등)	교육수요 반영지수	Σ(수요조사 횟수)	회	과정
5					교육참여자수	Σ(공공간호사제 참여자수) + (스마트팜 사관학교 등록자수)	명	산출	
6					교육(참여자) 만족도	(응답자 점수 총합 / 전체 응답자수) × 20	점	결과	
7				1-1-③	대학 우수 인프라 활용을 통한 재직자 직업역량 향상, 직업전환,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유연하게 운영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수	Σ(재취업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수)	명	산출
8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긍정 이상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수) × 100	%	결과	
9									
10		1-2. 실무인재, 융합형 인재, 전문 인재 양성 세분화	1-2-①	산업 현장 우수 연구자(기업 재직자 및 연구소 연구자 등)가 교육하는 실무 인재 양성	실무인재 양성프로그램 참여자수	Σ(실무인재 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수)	명	산출	
					실무인재 양성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긍정 이상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수) × 100	%	결과	
11			1-2-②	유관기관, 기업, 대학이 협력하는 융합형 인재 교육 프로그램 신설	융합형 인재교육프로그램 개설수	Σ(융합형 인재교육프로그램 개설수)	개	과정	
12						융합형 인재교육프로그램 참여자수	Σ(융합형 인재교육프로그램 참여자수)	명	산출
13						융합형 인재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긍정 이상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수) × 100	%	결과
14			1-2-③	직업전문교육 거버넌스 체계 구축(HIVE 참여 대학 거점)	Hive 사업 협력지수	Σ(협약체결 기관수) + (업무협약 체결횟수)	건	산출	
15						Hive 참여기관 취업자수	Σ(Hive 참여기관 취업자수)	명	결과
16			1-2-④	기업 성장 단계 및 산업 분야별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참여 기업수	Σ(프로그램 참여자 수) 혹은 Σ(프로그램 참여 기업 수)	명, 개	산출	
17		참여자만족도			(응답자 점수 총합 / 전체 응답자수) × 20	점	결과		

연번	핵심 분야	중점 과제	관리 번호	사업 주요 내용(성과목표)	성과 지표명	측정 산식	지표 단위	지표 성격
18		1-3. 주력산업 및 미래 신성장 산업 선도 인재 양성	1-3-①	주력산업(모빌리티, 바이오, 디스플레이) 선도 고급 인재 교육 강화	주력산업 선도 교육과정 참여자수	$\Sigma(\text{프로그램 참여자수})$	명	산출
19					참여자 만족도	$(\text{긍정 이상 응답자 수} / \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결과
20			1-3-②	미래 신성장 산업(반도체, 2차전지) 선도 고급 인재 양성	미래 신성장산업 선도 교육과정 참여자수	$\Sigma(\text{주력산업 선도 교육과정 참여자수})$	명	산출
21					참여자 만족도	$(\text{긍정 이상 응답자 수} / \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결과
22		1-4. 산업별, 학력별 부족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1-4-①	생산 인력 부족 산업 및 전문 인력 부족 산업별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인력양성프로그램 개설수	$\Sigma(a\text{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설수}) + (b\text{산업 개설수}) + (c\text{산업 개설수}) \dots$	개	과정
23					인력양성프로그램 참여자수	$\Sigma(a\text{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수}) + (b\text{산업 참여자수}) + (c\text{산업 참여자수}) \dots$	명	산출
24					인력양성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text{긍정 이상 응답자 수} / \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결과
25			1-4-②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수	$\Sigma(\text{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수})$	명	산출
26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취업률	$(\text{취업자수} / \text{사업참여자수}) \times 100$	%	결과
27			1-4-③	산업기술인력조사 결과에 맞추어 대학 내 학과 신설 지원	수혜 대학수	$\Sigma(\text{수혜대학수})$	개	산출
28					신설 학과수	$\Sigma(\text{신설학과수})$	개	산출
29					부족인력 양성	$\Sigma(\text{신설학과 재학생수}) + (\text{신설학과 졸업생수})$	명	결과
30	2. 지역특화 연구개발(R&D) 역량강화	2-1. 충남 주력 산업 연구 개발 과정 고도화	2-1-①	모빌리티, 바이오,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 중심 대학 육성	재정지원금	$\Sigma\text{연구중심 대학육성 예산투입금}$	천원	투입
31					수혜 대학수	$\Sigma(\text{모빌리티 분야 수혜 대학수}) + (\text{바이오 분야 수혜 대학수}) + (\text{디스플레이 분야 수혜 대학수})$	개	산출
32					연구인력양성율	$(\text{대학원진학생수} / \text{전체 졸업생수}) \times 100$	%	결과

연번	핵심 분야	중점 과제	관리 번호	사업 주요 내용(성과목표)	성과 지표명	측정 산식	지표 단위	지표 성격
33		2-2. 미래 신성장 산업 연구 인프라 및 투자 지원	2-2-①	반도체, 2차전지 기업-대학 공동 산학연구, 인프라 고도화 및 투자 지원	재정지원금	$\Sigma(\text{기업-대학 공동 산학연구 예산투입금}) + (\text{인프라 고도화 및 투자지원 예산투입금})$	천원	투입
34					공동연구 추진실적	Σ 반도체, 2차전지 기업-대학 공동연구 건수	건	산출
35		2-3. 충남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분야 심화	2-3-①	군수, 안전, 헬스케어, 복지, 스마트농업, 문화관광 등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분야 심화	재정지원금	Σ 대학특성화 분야 예산투입금	천원	투입
36					지역발전 연계건수	Σ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특성화사업 추진건수	건	산출
37					지역주민 만족도	$(\text{긍정 이상 응답자 수} / \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결과
38		2-4. 산학협력 거버넌스 재구조화	2-4-①	대학-지역혁신기관-산업체 연계 통합 플랫폼 구축	고등교육정책협의회 개최횟수	$\Sigma(\text{고등교육정책협의회 개최횟수})$	회	과정
39					산학협력 거버넌스 구조조정지수	Σ 신규 참여기관수	개	산출
40					산학협력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지수	Σ 플랫폼 이용 기관수	개	결과
41	3. 취·창업 정주 생태계 구축	3-1. 충남형 창업벨트 기반 조성 및 구축	3-1-①	베이벨리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벤처창업 전주기 지원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률	$(\text{추진실적} / \text{연차별 계획}) \times 100$	%	과정
42					재정지원금	Σ 벤처창업 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투입금	천원	투입
43			3-1-②	서해안 해안·온천·문화재·축제·호텔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밀착형 축제 및 문화공연 개발 및 관련 인력 양성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수	$\Sigma(\text{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수})$	명	산출
44					인력양성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text{긍정 이상 응답자 수} / \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결과
45			3-1-③	가로림만, 해양레저관광 등을 기반한 제조와 서비스 융합의 그린창업벨트 육성	재정지원금	Σ 그린창업벨트 육성 관련 예산투입금	천원	투입
46					그린창업벨트 홍보율	$\Sigma(\text{그린창업벨트 공모사업 신청기업수})$	개	과정
47					그린창업벨트 육성지수	$\Sigma(\text{그린창업벨트 공모사업 참여기업수})$	개	산출
48			3-1-④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기반 강화(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26년 예정)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공정률	$(\text{추진실적} / \text{연차별 계획}) \times 100$	%	과정

연번	핵심 분야	중점 과제	관리 번호	사업 주요 내용(성과목표)	성과 지표명	측정 산식	지표 단위	지표 성격
49		3-2. 인구감소 지역 대학 내 창업 인프라 확대로 창업사각 지대 해소	3-2-①	충남 도내 인구감소지역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신설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수	$\Sigma 0.8 \times (\text{창업보육센터 신설 여부}) + 0.2 \times (\text{입주기업수})$	개	과정
50					창업 지원율	$\Sigma (\text{공간지원 수혜 (예비)창업자수}) + (\text{멘토링, 마케팅 등 사업지원 수혜 (예비)창업자수})$	명 (개)	산출
51					창업성공률(또는 사업화율)	$\Sigma [\{ (\text{판로 확보 창업자수}) + (\text{창업 완료 예비창업자수}) \} / \text{전체 (예비)창업자수}] \times 100$	%	결과
52			3-2-②	창업중심대학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창업 문화 확산	창업문화 확산지수	$\Sigma (\text{창업 관련 행사횟수}) + (\text{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창업관련 정보공유 활동건수})$	건	산출
53		3-3.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창업 및 기업문화 교육 고도화	3-3-①	재학생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설수	$\Sigma (\text{창업교육 프로그램 개설수})$	개	과정
54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Sigma (\text{창업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명	산출
55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text{긍정 이상 응답자 수} / \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결과
56			3-3-②	기업 임원 대상 기업 문화 교육 고도화를 통한 인력 미스매치 해소	기업문화교육 참여자수	$\Sigma (\text{기업문화 교육 참여 기업임원수})$	명	산출
57					인력 미스매치 해소율	$\{ [(\text{당해년도 구직율-구인율 격차}) - (\text{전년도 구직율-구인율 격차})] / (\text{전년도 구직율} - \text{구인율 격차}) \} \times 100$	%	결과
58		3-4. 취·창업 연계 지역 정주 활성화 지원	3-4-①	창업선도 중심 대학 추가 지정 지원	재정지원금	$\Sigma \text{추가 예산투입금}$	천원	투입
59					창업선도 중심대학 추가지정률	$(\text{창업선도 중심대학 추가선정 대학수} / \text{신청 대학수}) \times 100$	%	산출
60			3-4-②	대학 중심 충남 청년 도시재생 자산학 플랫폼 구축	자산학협의회 개최횟수	$\Sigma (\text{자산학협의회 개최횟수})$	회	과정
61					대학 중심 충남 청년 도시재생 자산학 플랫폼 구축지수	$\Sigma \text{플랫폼 이용 기관수}$	개	산출

연번	핵심 분야	중점 과제	관리 번호	사업 주요 내용(성과목표)	성과 지표명	측정 산식	지표 단위	지표 성격
62	4. 대학역할 혁신과 변화	4-1. 지역-대학 생활 체육 및 문화 예술 인프라 활용	4-1-①	대학 내 공간 개방 및 지자체와의 공동 운영으로 주민 문화 및 생활체육 수요 대응	대학공간 개방 건수	Σ 대학 내 체육 및 문화시설 개방 건수	건	과정
63					대학공간 이용주민수	Σ 대학 개방시설 이용주민수	명	산출
64		4-2. 생애주기별 지역 주민 밀착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4-2-①	평생교육 프로그램 신설 및 대학 간 연계를 통한 평생교육체계 구축 (LiFE 참여 대학 거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수	Σ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수)	개	과정
65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Σ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명	산출
66					평생교육 연계 대학수	Σ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계 운영 대학수)	개	산출
67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text{긍정 이상 응답자 수} / \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결과
68			4-2-②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사이버 대학, 지자체 평생교육학습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on-off로 제공	교육 프로그램 개설수	Σ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개설수) + (오프라인 개설수)	개	과정
69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Σ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참여자수) + (오프라인 참여자수)	명	산출
70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Σ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만족도) + (오프라인 만족도)	% (점)	결과
71			4-2-③	소단위 학위과정(마이크로 디그리) 도입 및 활성화 지원	소단위 학위과정 활성화 지수	Σ (소단위 학위과정 도입 학과수) + (전공별 소단위 학위과정 개설수)	개	산출
72					소단위 학위과정 이수자수	Σ (소단위 학위과정 이수자수)	명	산출
73		4-3. 총합 정착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활동 지원	4-3-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자체-대학 공동 박람회 개최	공동박람회 개최 횟수	Σ (공동박람회 개최횟수)	회	과정
74					공동박람회 참여 기관수	Σ (공동박람회 참여 지자체수) + (공동박람회 참여 대학수)	개	산출
75					외국인 유학생 유치건수	Σ (외국인 유학생 신입생수)	명	산출
76			4-3-②	유학생 정착을 위한 취업 및 정주 여건 개선	유학생 취업만족도	$(\text{응답자 점수 총합} / \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20$	점	결과
77					유학생 정주 만족도	$(\text{긍정 이상 응답자 수} / \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결과

연번	핵심 분야	중점 과제	관리 번호	사업 주요 내용(성과목표)	성과 지표명	측정 산식	지표 단위	지표 성격
78	4-4. 지역특화 로컬 콘텐츠 타운 대학 인근 조성	4-4. 지역특화 로컬 콘텐츠 타운 대학 인근 조성	4-4-①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 문화 콘텐츠 타운 조성하여 기초 지자체-대학-공공기관 협력 사업 발굴	청년문화콘텐츠타운 조성율	$\Sigma[(추진실적 / 연차별\ 계획)] \times 100$	%	과정
79					협력사업 발굴건수	$\Sigma(\text{지자체-대학-공공기관 신규 협력사업수})$	건	산출
80					협력사업 추진율	$\Sigma[\text{사업별}(\text{추진실적} / \text{연차별\ 계획})] \times 100$	%	과정
81			4-4-②	기초 지자체-대학 연계하여 로컬 크리에이터 스쿨 운영하여 발굴 및 양성 위한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활성화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건수	$\Sigma(\text{기초지자체 - 대학 연계 로컬 크리에이터 신규자(예비기업)수})$	명 (개)	산출
82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건수	$\Sigma(\text{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횟수})$	건	과정
83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자수	$\Sigma(\text{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자(예비기업)수})$	명 (개)	산출
84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자만족도	$(\text{긍정 이상 응답자 수} / \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결과




제5장

연구 종합 및 시사점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제2절 연구 시사점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1. 충남 지역 여건 분석 결과

□ 지역 여건 분석 결과

- 충남 지역 인구 여건을 보면, 출생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인구수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졸업까지의 인구수는 점차 증가, 대학교 졸업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대폭 감소가 있었음
 - 충남의 경우 천안, 아산 등 수도권에 인접한 도시들이 있어 대학 여석이 많아 상대적으로 타지역에서의 진입이 많다고 분석할 수 있음
 - 반면, 졸업 이후에는 다시 타지역, 특히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많음을 시사함
 - 따라서 충청남도의 청년 인구 유출은 대학 졸업 후 일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학 진학 단계에서의 유출은 비교적 적으나 구직 단계에서의 2차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됨
- 충청남도는 2000년대 들어 전국 대비 경제성장률 1위, GRDP 3위를 차지하는 등 고도의 양적 성장을 보였으나 지역 주축 산업의 위기, 수직 계열화된 제조업 생태계, 지역 경제 불균형 등의 난제가 여전히 상존
- 대내적으로 도내 이전기업 유치실적이 10분의 1수준으로 급감하고,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충남의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외생적 요소에 민감할 수밖에 없음
 - 충남은 1) 기존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와 동시에 후발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

하기 위한 전략 유지 2)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한 일부 IT제품 외의 수출 품목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2023)

- 충남 지역 북부권과 그 외 권역(서해안권, 내륙권, 남부권) 간 경제력 격차 심화로 인해 지역 내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19년 기준 충남 내 15개 시군의 GRDP 비중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 북부권 내 4개 시(아산, 천안, 당진, 서산)가 충남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8%에 달하며, 천안, 아산 두 지역이 충남 전체 약 46%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충남은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청년고용률에 있어 전국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의 경우 낮은 수준을 나타냄에 따라,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이 가능한 상황임
- 충남의 12대 주력산업별 부족 인원 현황을 학력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의 경우 화학, 자동차, 기계 순으로 부족 인원이 많게 나타났고, 전문학사의 경우 기계, 화학, 자동차 순이며 학사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순으로 인원이 부족했으며 석·박사의 경우 자동차, 반도체, 소프트웨어 순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2. 충남 대학 여건 분석 결과

□ 지역 인재 관련 기본 방향 설정

- 지역대학에서 졸업한 학생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으로 취업하게끔 유인하는 단기적 유인 방안 추진도 중요함
 - 예를 들어 취업자에게 일정액의 소득장려금 지급, 청년주택 보급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고 기업에는 지역 인재 채용시 인건비 지원, 세율 감면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우수 일자리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세울 때 대학 재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등의 지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근시안적 정책으로 사료됨
 - 근본적으로 청년 인구의 유출 방지 및 지역 착근, 기업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양성, 정주 여건 개선과 직업·평생 교육 활성화 등 핵심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충남과 대학의 공생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한요셉(2021)의 연구에서도 대학 입학 차원의 정책적 개입만을 통해 지방대학 진학을 유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더구나 이러한 개입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의 취업 및 정주 비중을 높이는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음

□ 산학협력 관련 현황 및 시사점

- 지역 주력산업별 도내 대학, 지역 혁신기관, 연구소 및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현황을 보면 충남의 경우 혁신 자원이 많은 편에 속함
- 반면, 충남지역 산업기술인력 부족 문제 해결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 2020년 충남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1.7%로 전국 평균(2.2%)보다 낮은 수준이나, 2015년(1.4%) 이후 부족률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으로 인력 구인·구직의 미스매칭 해결 필요
 - 2020년 충남 미충원인력 발생 원인 중 ‘현장 투입이 가능한 숙련·경력 갖춘 인력이 없어서(29.1%)’, ‘직무수행을 위한 학력·자격을 갖춘 인력이 없어서(27.3%)’가 큰 비중을 차지

□ 창업 관련 쟁점

- 창업 교육 및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한 창업 인력 양성 및 창업촉진을 위해 지역 내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창업 지원 확대, 창업 강좌 등 교육 확대, 창업 중심 대학 추가 선정 등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충남도 및 창업 유관기관, 대학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내 창업 활성화 도모 필요

- 창업지원 총괄기능 강화,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과 대학 연합기능 강화를 통한 네트워크 실효성 제고
 - 창업활성화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및 통합포털 구축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 필요
- 충남 천안·아산 지역을 제외하면, 지역 내 신기술·신산업 기반 창업생태계 여건이 미약, 지역 또는 권역별 특화산업 중심의 지역발전 계획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 필요
- 중점 육성 산업과 민선8기 도정 방향이 특정된 시군의 경우 중점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장기 창업생태계 조성 방향 설정 필요
 - 시군별 중점 육성 산업이 연계되거나, 별도 산업특정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권역별 특화산업을 지정, 장기 창업생태계 조성 방향 설정
- 창업생태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협의회 결성 필요
- 창업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창업네트워크 실효성 제고
 - 창업기업육성 정책방향 제시 및 역할 조정을 위한 ‘창업협의회’ 구성
 - 지역 내 창업기업육성 전문기관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 충남도청 및 창업관련 유관기관 연계 창업협의회 구축, 연 1회 이상 운영 필요
- 대학내 연합체 구성 및 대학별 특화 창업교육 과정 운영
- 지역 내 창업 중심대학(예를 들어 호서대학교)을 중심으로 ‘대학 창업교육 협의회’ 구성 및 ‘충남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구성을 통한 대학발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연계 강화
 - 타 지역의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대경 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참조
 - 대학별 특화 교육을 지정, 일반창업교육 외 특화 창업교육은 해당 특화대학에서 강의를 수강, 대학 연합 창업팀 구성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연계 등의 방안 필요

□ 충남 도내 대학 특성화 관련 시사점

- 기존의 대학 특성화 사업⁶⁸⁾의 효과를 분석한 최근 감사원(2022)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특성화한 대학 학과와 지역사회 수요의 연계가 낮게 나타남
 - 감사원은 권역별 주력 산업을 산출한 후 대학졸업자의 주력산업별 취업 비율을 분석한 다음, 권역별 주력 산업 취업비율이 높은 학과를 지역산업 수요가 높은 지역연계학과로 정의함
 - 대전·충남 권역의 경우 지역연계학과는 전국 공통학과 5개(간호, 의료, 약학, 치료·보건, 토목·도시)를 포함하여 기계·금속, 산업, 기타, 화공, 소재·재료, 전기·전자, 정밀·에너지, 생활과학, 건축 등으로 분류됨
 - 이렇게 산출된 지역연계학과를 특성화사업 추진시 우선 선정하고 지원하였는지 평가한 결과 대전·충남 권역의 경우 특성화학과 중 지역연계학과에 해당하는 비율이 약 39%로 나타나 비수도권 평균 36%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 평균 41%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성화한 학과와 지역 사회 수요 간 연계가 낮은 원인에 대해서 감사원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음
 - 지역사회 수요가 많은 학과를 중점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의 연계를 강화하는 특성화사업 목적과 달리 교육부는 CK사업 지역 전략 분야에 지원 예산을 가정 적게 배분하였음⁶⁹⁾

68) CK사업, SCK사업, PRIME사업 등

69) 교육부는 CK사업의 지원 분야를 '대학 자율', '국가 지원', '지역 전략' 등 3가지로 구분·지원하면서 '대학 자율 분야는 대학이 특성화 분야를 자율적으로 신청하게 하였고, '국가 지원 분야는 학문 균형발전 명목으로 인문·사회·예체능등사실상 모든 학과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한편, 각 분야 예산 지원 비율은 대학 자율 분야 65%, 국가 지원 분야 25%, 지역 전략 분야 11%로 나타났음(감사원, 2022:35)

2014년 CK사업 협약시 지원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원분야	대학 자율	국가 지원	지역 전략	계
주요 내용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분야를 선택 (대학 자율성)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계열 및 국제화 분야 (학문 균형발전)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지역 동반성장)	-
지원예산(비율)	165,687(64)	64,947(25)	29,427(11)	260,06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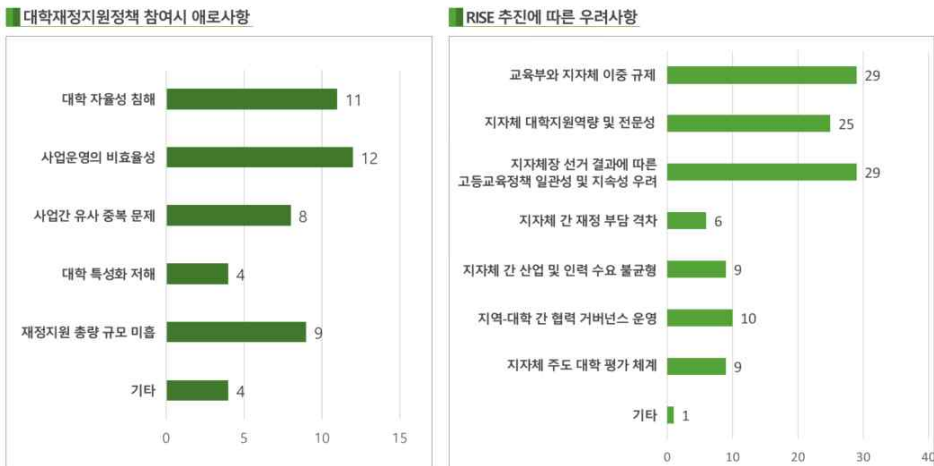
- 이와 달리 CK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수요와의 연계에 중점을 둔 SCK사업의 경우 지역연계학과비율이 CK사업보다 높게 나타남
-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의 사업 선정 및 성과평가, 성과관리 차원에서 지역사회 수요와 연계된 중점 과제 및 세부 사업 발굴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음

3. 충남 대학 대상 설문조사 결과

□ RISE 추진에 따른 우려 사항

- 충남 도내 대학 보직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에 따른 고등교육정책 일관성 및 지속성 우려,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중 규제,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 역량 및 전문성 우려 등이 제기됨
- 충남 측에서도 대학들의 우려를 파악하고, 일회성의 설문조사로 그치지 않고 향후 다양한 의견 청취 방식을 통해 소통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그림 5-1] 대학재정지원정책 및 RISE 추진에 따른 우려 사항



□ 성공적인 RISE 추진을 위한 충남 및 대학의 역할

- 설문조사 결과 성공적인 충남 RISE 추진을 위해 대학이 충남의 역할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았음
 - 도내 모든 대학 소외 없는 지원 약속, 대학재정 지원 규모 확대, 대학-지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 대학 정책 관련 전문성 강화, 청년 정주 여건 개선,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노력 확대, 평가에 있어서 경쟁보다 공유 우선시, 기존 대학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등을 피력함
- 성공적인 충남 RISE 추진을 위해 대학 스스로의 역할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았음
 - 인재 양성, 교육 혁신 등 전통적인 대학 역할 강화뿐만 아니라, 이제껏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지역과의 연계, 대학 거버넌스 개선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광역 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의 대학과 지역 협력이 필수라는 의견 존재

[표 5-1] 대학 대상 설문조사 주요 결과 요약

부문	영역	주요 내용
재정지원 일반	대학 재정지원 정책 참여도와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도내 대학들은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지방대 활성화사업,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등 RISE에 포함 되는 사업에 참여한 경험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LiFE)이나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의 경우 비교적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과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존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 참여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인문 역량강화 지원사업(CORE)에 대한 참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고 그 외 사업들은 유사한 비율로 참여 경험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학 자율역량강화 지원사업(ACE)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대학재정지원 사업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대학 재정지원 사업 관련한 주된 어려움으로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 대학 자율성 침해, 재정 지원 총량 규모 미흡 등을 꼽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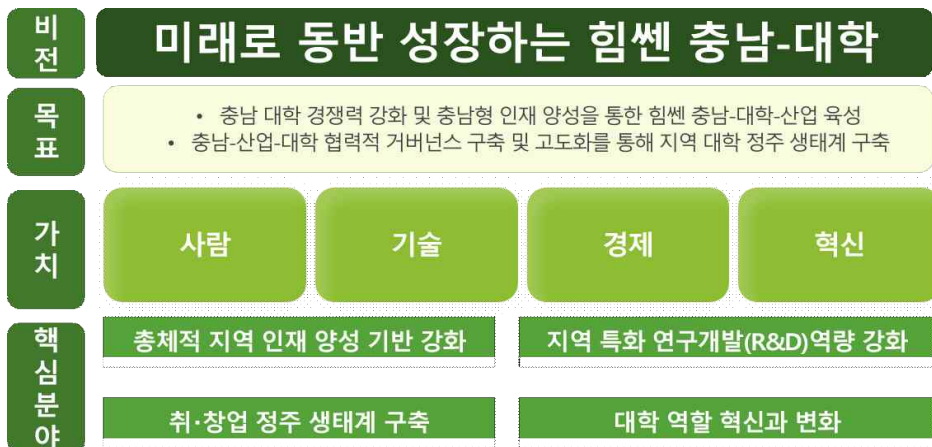
부문	영역	주요 내용
산학협력 일반	산학협력 활동 참여 여부와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 개발 중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창업강좌 및 교육 등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문식 교육, 캡스톤 디자인, 재직자 위탁 훈련 등의 과정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 개발 중에서는 기술개발 관련 자문, 특허 출원, 기초 및 응용연구 순으로 참여를 많이 하였으며 특허 출원, 기술 및 경영 관련 자문, 기술 개발 순으로 만족함 창업 지원 정책 관련 경험하지 못한 대학보다는 경험한 대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남
	산학협력 활동 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개발 분야에서 현장실습, 주문식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음 연구개발 분야 중 기술개발, 특허출원, 기초 및 응용연구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함 창업 분야 중 실제 창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창업 동아리 지원, 경진 대회 지원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함
재정지원 및 산학 공동	RISE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지원 일반 분야에 응답한 대학의 경우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중 규제에 대한 우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에 따른 대학 재정 지원정책의 변화 우려 등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 관련 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산학협력 분야에 응답한 대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 우려,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걱정,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중 규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학 평가 등에 대한 우려 사항이 많았음
	RISE 성공을 위한 주체별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의 역할로는 인재 양성, 교육 혁신, 지역 연계, 대학 거버넌스 개선 등이 선결되어야 하며 광역 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의 대학과 지역 협력이 필수라는 의견 존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기본계획 수립시 도내 모든 대학 소외 없는 지원 약속, 대학재정 지원 확대, 대학-지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 대학 정책 관련 전문성 강화, 청년 정주 여건 개선,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노력 확대, 평가에 있어서 경쟁보다 공유 우선시, 기존 대학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등을 피력함
	RISE성공을 위한 효과적 의사소통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적 협의체 구성, 협의체 외의 전문가 자문, 토론회 등의 소통 창구 마련,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 고도화, 전담조직 및 인력 조속히 마련 등의 의견 제시

4.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구상안 제안

1) 충남 RISE 비전 및 목표(안) 도출

- 이상의 충남 지역발전 전략 및 지역 여건, 대학 여건 분석,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충남 RISE 비전 및 목표(안)을 도출함
- ‘미래로 동반 성장하는 힘센 충남-대학’을 비전으로 총체적 지역 인재 양성 기반 강화, 지역 특화 연구 개발 역량 강화, 취·창업 생태계 구축, 대학 역할 혁신과 변화 등의 4대 핵심 분야를 제안함

[그림 5-2] 충남 RISE 기본계획 체계(안)



2) 재정투자계획을 위한 선결 조건

-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불확실성이 큰 시점에서 충남 RISE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함
-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배분할 때 RISE에 통합되는 기존 재정지원 사업 선정 대학수(비율) 및 지원 규모 등을 활용하거나,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대학수나 학생 수 등의 포물러 지표를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이 예측되고 있음(문보은, 2023)

- 기존의 교육부나 기타 타 부처의 고등교육관련 사업의 경우 지방으로의 사업 이양 형태가 아니라 부처 직접 사업에서 지자체 주도의 사업으로 이관될 경우, 국비 보조 형식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존재함 (김성주·김진, 2023)
- 교육부 및 그 외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고, 충남 도내 대학의 참여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충남 RISE 재정투자계획의 선결 조건으로 중앙 정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규모 및 건수 파악,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등을 제시함
- 또한 RISE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3) 성과관리 방안에 대한 제언

□ 충남의 지역 발전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중앙으로부터 이양받는 대학 관련 행·재정적 권한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대학 사무 관련 정보나 전문성은 현재 수준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음
 -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일정 부분 투입되는 점,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 관련 전체 권한이 이양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전 대학 위주로 충남 RISE 성과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이를 바탕으로 충남형 RISE 성과관리 추진 체계를 제안하고, RISE에 포함되는 기존 5개 사업의 평가 지표를 점검하였으며,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중점과 제별 성과지표 후보군을 제시함

제2절 연구 시사점

1. RISE 재정 관련 내·외부적 선결 요건

□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 재정투자계획 수립의 내부적 요건

- 향후 충남이 RISE 사업 예산을 기획하고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중앙부처에서 기지원하고 있는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거나, 중앙부처와의 면밀한 협력을 통해 RISE 사업과의 연계 및 사업 통합 등을 통해 재원의 합리적 운용이 가능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남 도내 대학의 협력이 필수이며 고등교육정책 협의회 등 정기적 회의와 의사소통 창구 마련 등을 통해 충남 측의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고보조 및 복합재원, 자체 재원 투자 형식 등 대학 재정 투자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할 때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심사 등이 필요할 것이고 이에 대한 충남도청 및 대학 차원의 협업을 통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임

□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 재정투자계획 수립의 외부적 요건

- 충남 내부적인 요건 마련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계획성 있고 투명한 재정 투자 계획이 필요함
 - 현재 교육부는 2023년 12월에 RISE 시범 지역 및 비시범 지역의 기본 계획 및 사업예산서를 제출받아 2024년 5월 기획재정부에 예산서를 제출할 예정임 (교육부 내부자료, 2023)
 -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자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일부를 활용하여 분배하는 방식인바,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음
 - 주관부처인 교육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불명확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지역과 대학의 거버넌스 체계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거버넌스 체계 또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RISE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대학정책 지원 방식을 지역 중심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대학 지원의 거버넌스와 재정 측면에서 기존 대학재정지원 정책과 차별화됨(문보은, 2023)
 - RISE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부처에서 대학에 지원하던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임
 - 우선,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로 이관될 예정인 5개 사업에 대한 사업 규모, 사업 내용 및 예산 배분 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지방 측에 제공해야 함
 - 또한, 교육부 외에도 대학의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재정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업이 필수적임
 - 행정안전부도 지역소멸기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음
 - 결국 타 중앙부처 연관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면밀한 연계·협력이 필수이며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공공 재정의 유사·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음

2. 대학 책임성 담보 방안 마련 필요

□ 대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에 반해 선행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음

- 대학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폐교 대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대학의 역할은 상당히 클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함
 - 폐교에 따른 인근 지역의 고용, 주택 가격, 매출 및 상업지역 임대료 등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강득구, 이태규, 정경희, 문정복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사립대학(혹은 학교)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이 법안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재정 진단, 경영 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폐교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⁷⁰⁾
 - 특히, 2023년 1월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폐교대학 주변 지역 경제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경영자문, 고용 안정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학의 폐교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경제 및 역량 저하 등과 연결됨을 시사하였음
- 선행연구들은 대학 폐교나 재정지원 제한 지정 등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일관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대학 폐교는 주변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고(김민규 외, 2022) 정부 재정지원 제학대학 지정이 지역의 지식기반사업 비율과 지식 재산권 출원 건수 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존재함(천지은 외, 2022)
 - 다른 한편 대학 폐교 자체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도 존재하는데, 이에 따르면 대학의 폐교가 단기적으로 지역 고용이나 지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폐교 이전부터 이미 부정적인

70) 의안정보시스템 (검색일 기준: 2023.09.0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영향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⁷¹⁾(이종관, 2018), 대학의 폐교와 학생수의 급감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수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고창수, 2023)

- 향후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방 대학들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대학들의 폐교 자체를 늦추는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일부 선행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대학으로 인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대학 역량이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함을 뜻함(이종관, 2018)
 - 또한 대학의 폐교를 지연시키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대학 부지나 인근 지역 토지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음을 의미함(고창수, 2023)

□ 종합하면 충남 RISE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충남 도내 대학 책임성을 담보할 방안이 필요함

-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해 공공 재정이 대학에 투자되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학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함
 - 특히 국·공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에 공적 자금을 투입할 때 지역 주민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이 필요함
- 충남은 지역 내 건전한 대학을 중심으로 RISE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이후 기존 대학 평가와 재정지원이 강하게 결합된 구조에서 경영위기 혹은 최소 기준 미충족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교육부를 제외한 타 중앙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될 예정임(문보은, 2023)
 - 이는 결국 역량이 미달하는 대학에도 지방 소멸 방지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71) 폐교 이전부터 상당 기간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폐교 시점 당시의 충격이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함

- 대학재정지원 일부의 행·재정적 권한을 이양받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대학에 대한 인사권 행사나 구조 조정 등 대학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수단이 많지 않아 결국 RISE 체제 하에서 성과관리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임

3. 참여 주체 간 정보 비대칭성 완화 필요

□ 태생적 정보 비대칭성 존재

- 교육 사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가 아닌 것에서 기인하는 태생적인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함
 - 즉,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교육 담당 중앙부처 및 타 부처 등과 비교할 때 교육 사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였음
- 본 연구에서 충남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에 따른 고등교육정책 일관성 및 지속성 우려,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중 규제,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 역량 및 전문성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음
 - 이러한 설문 결과는 2023년 7월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된 ‘대학총장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함
 - RISE 로 인해 대학 총장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 역량 및 전문성, 지자체장 선거와 고등교육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었음

□ 정보 비대칭성 최소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내 대학 담당 인력 및 조직 관리 필요

- RISE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 관련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인력 및 조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대학 재정 지원 사무를 오래 해왔던 한국연구재단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현재 교육부가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을 통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비시범지역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함
- 충남 RISE 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공무원 대상 교육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및 사학진흥재단, 연구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현수. (2006).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 국책 연구기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대덕 연구단지와 유럽 경험의 비교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1), 108-123.
- 고창수. (2023). 대학 폐교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방세입을 중심으로.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재정포럼. 현안분석.08-33.
- 김기희. (2022). 대전·세종의 노동시장 인력수급 협력방안. 대전세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민규, 김현수, & 최열. (2022). 대학의 폐교지정이 주변 지역 공동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동부산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한토목학회논문집, 42(2), 273-279.
- 김성주·김진. (2023).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발간예정)
- 김혜정, 배진한, & 박창귀. (2017).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 영향 요인. 노동경제논집, 40(1), 1-36.
- 나민주. (2002). '국민의 정부' 고등교육재정정책의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1(2)
- 문보은, 서영인, 최상덕, 윤지영, 이진권 & 오상아. (2021).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성과 및 과제-대학혁신지원사업을 중심으로-(OR2021-02). [KEDI] 연구보고서.
- 박진경·김도형. (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보고서.
- 백운성·우복남·신동호·한상욱·임우연·맹준호·강수현·김희영·송민정·윤종선·김우영·설영훈·전경숙·김미숙·김은하. (2020). 충남의 경제사회 구조변화와 양극화 대응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송기창. (2015). 5.31 교육개혁방안 중 '교육재정 GNP 5% 확보'의 성과와 과제. 교육 재정경제연구, 24(4), 1-23.
- 송기창(2010).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재정지원체제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8(2), 331-352

- 송기창(2000). 대학재정지원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9(2), 1-25
- 연덕원.(2021).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 정원 정책을 중심으로. 정의당 연구용역 보고서.
- 오세희, 이광현, 김영록, 남형우, 박준엽, 이정민, 변종석. (2021).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 수립 연구. 한국연구재단 용역보고서..
- 윤정일(2004). 교육재정학원론. 세영사
- 윤준상·송두범. (2008). 지자체의 효율적인 인재육성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연구보고서.
- 원세림, 남수경, & 이희숙. (2022). 범정부 고등교육 재정투자 방향 및 재정 확충 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31(3), 57-89.
- 이삼주·김성주. (2016).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 이상림. (2018).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세구. (2003).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성과관리방안: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8(1), 135-159.
- 이정미. (2010).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발전 방안 연구 (RR2010-15). [KEDI] 연구보고서, 1-641.
- 이종관. (2018). 대학교 캠퍼스가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18-02.
- 조경호·김형성. (2017).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인재채용 확대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4), 237-260.
- 조경훈·박형준. (2021). 「성과관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조성민. (2018).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월간 KIET 산업경제, 241, 33-43.
- 천지은, 최은호, & 김민곤. (2022).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행정학보, 19(3), 81-108.
- 한요셉(2021).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에 관한 연구: 대학 진학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허선영, 장후은, & 이종호. (2022). 대학 산학협력 역량의 공간적 패턴 및 군집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25(2), 59-71.

〈해외문헌〉

- Etzkowitz, H., & Zhou, C. (2007, May). Regional innovation initiator: the entrepreneurial university in various triple helix models. In Singapore Triple Helix VI Conference Theme Paper (pp. 1-25).
- Van der Laan, L., & Schalke, R. (2001). Reality versus policy: the delineation and testing of local labour market and spatial policy areas. *European Planning Studies*, 9(2), 201-221.

〈참고자료〉

- 감사원. (2021).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I(지역). 감사보고서.
- 감사원. (2022).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IV (교육·일자리 분야): 대학과 지역 일자리연계 및 일자리 창출·유지를 중심으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눈에 보는 균형발전 현황판-전국 지역발전지수 현황-시도
<https://www.nabis.go.kr/atlantidetailview.do>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2012). 2011년도판 2010 대학산학협력백서, 통권 제 6호. 한국연구재단.
- 교육부 보도자료. (2021.02.28.)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발표: 관계부처 및 14개 시도(비수도권) 합동으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교육부 보도자료. (2022.02.04.).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058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교육부 보도자료. (2022.10.0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2 결과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272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교육부 보도자료. (2022.12.24.). 교육부 2023년 예산 및 기금 102조원 국회 확정: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충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348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교육부 보도자료. (2023.02.0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운영 계획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379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5&s=moe&m=020402&opType=N>

남수경. (2023). 고등교육재정지원정책의 이해: 변천과정, 현황과 쟁점, 향후 개선방향. 감사원 특강 자료. https://keri.kangwon.ac.kr/board/view?bd_id=education02&wr_id=392

대학재정알리미.(2022). 고등교육재정지원 현황: 함께 알아보는 교육정보. (접속일 기준: 2023.03.24.) <https://uniarlimi.kasfo.or.kr/knowledge/accounting/drawing/82?pageldx=1&>

문보은. (2023). 지역중심 대학재정정책 및 주요 이슈. 한국교육개발원 창립기념 제 193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이종호. (2022). 대학 역량의 지역 간 격차와 과제.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 이슈분석. <https://www.keis.or.kr/user/extra/main/4081/publication/reportList/jsp/LayOutPage.do?categoryIdx=262&publdx=8452&reportIdx=5723>

충남연구원.(2021). 제 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2021-2040. 충남연구원 보고서.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22). 2022년 충남지역 인력 및 훈련 수급조사 결과보고서.

충청남도. (2022). 민선 8기 충청남도 역점과제. 충청남도 내부자료.

충청남도. (2022). 충청남도 도정백서.

충청남도. (202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2022년 시·도별 시행계획. 충청남도 내부자료.

- 충청남도. (2022.12). 충청남도 창업육성 기본계획: 2023년~2025년. 충청남도 내부자료.
- 충청남도. (2023). 2023년 충남 지역산업진흥계획. 충청남도 내부자료.
- 충청남도. (2023). 2023년 도정 주요 당면현안. 충청남도 내부자료.
- 충청남도. (2023.06.15.). 2023년 지방대학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위한 지역-대학-산업계 관계자 회의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
- 충청남도. (2023.02). 대학 현황 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
- 충청남도. (2023.04). 글로벌대학 선정 관련 대학별 사업계획서. 충청남도 내부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21.12.09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600&bid=207&tag=&act=view&list_no=415453&ref_bid=
- 통계청. (2021). 국내이동통계. 2021
- 한국고용정보원. (2021).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9년도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수출입통계. 국내통계-지자체 수출입 <https://stat.kita.net/stat/kts/prod/ProdWholeList.screen>
-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보도자료. (2023.05.08.). 최근 대전 세종 충남지역 실물경제 동향.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720/view.do?nttId=10077263&menuNo=200570&searchBbsSeCd=z16&pageIndex=1>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01.04. 사상 첫 인구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Id=82058
- 행정안전부. 2021. 주민등록인구현황.
- 행정자치부 (2007). 지방자치단체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참고 웹사이트〉

국립대학 육성사업 소개 <https://knu39.org/>

대학재정지원사업 통합포털 <https://uniall.nrf.re.kr/>

제2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성과포럼 <https://risforum.or.kr/html/main.php>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소개 <https://lincthree.nrf.re.kr/#/univ>

국가평생교육진흥원 LiFE 사업 소개 <https://univ.nile.or.kr/nile/main.do>

부 록

부록 대학용 설문지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권한 지방이양(RISE체계)에 따른 충남형 고등교육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설문

[대학용 I: 산학협력 유형]

OID			
ID			

안녕하십니까? 귀하와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조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권한 지방이양(RISE체계)에 따른 충남형 고등교육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위하여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설문입니다.

이번 설문은 현재 충남 도내 대학과 기업, 관련 유관 기관 등이 진행해 왔거나 진행하고 있는 산학협력 실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기업의 협력 필요성과 애로사항, 향후 RISE 체계 전환에 따른 지방-대학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파악하고자 선택형 및 기술형 설문으로 구성했습니다. 본 설문은 다음 주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대한 인식
2. 현재 충남 도내 대학-기업 산학협력 필요성과 애로사항
3. 향후 RISE 체계 전환에 따른 지방-대학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등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 순수하게 통계 자료로만 사용되며 연구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2.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의 개인 정보를 현행 법률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3. 개인 식별 정보는 연구 책임 하에 비밀 보장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	---

귀하께서는 본 안내문을 숙지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 네, 동의합니다.)



2023년 0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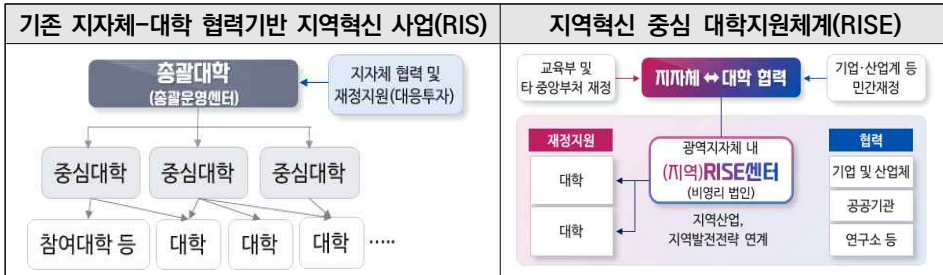
♣ 연구 책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진 부연구위원

♣ 설문 문의: 033)769-9875 ginakim733@krila.re.kr

참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기대효과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개요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는 대학 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RISE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에서 전담하던 대학 재정지원 예산과 기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지역 산업 및 문화, 지역 재생, 연구 개발(R&D) 등 전 분야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될 전망입니다.

□ 기대효과

주체	지자체	지역 기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의 다양한 난제 해결 • 경쟁력 있는 우수대학 육성으로 지역 정주인재 증가 • 지산학 협력 활성화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정주 여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 R&D 효율성 제고 • 지역대학이 길러낸 우수한 지역인재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 지역산업이 필요한 지역인재를 적기에 확보
주체	지역 주민	지역 대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휴 대학시설을 문화·복지시설, 연구단지 등으로 전환하여 지역 사회 활력 제고 • 자녀를 진학시키고 싶은 지역 내 우수대학이 많아져 교육비 부담 경감 • 대학의 다양한 평생교육,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은 자율적 혁신을 통해 경쟁력 확보 • 지역의 싱크탱크, 지역혁신의 허브로서 대학의 역할 및 위상 제고 • 예산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완화 및 유연한 재정 운영 가능

※ 아래 문항을 읽고 해당 사항에 체크(V)하여 주십시오.

I. 산학 협력 일반 현황

문 1. 지난 3년간 귀하께서 참여한 산학 협력을 기재해주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야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시오. (참여 경험이 없는 산학협력의 경우 만족도에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류	산학협력 종류	경험 여부		만족도				
		있음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인력 개발 (HRD)	현장실습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캡스톤디자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계약학과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창업 강좌 및 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주문식 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재직자 위탁 훈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그 외	주관식으로 종류 기입 ()		①	②	③	④	⑤
연구 개발 (R&D)	기초 및 응용 연구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기술개발			①	②	③	④	⑤
	특허 출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기술 관련 기업체 자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경영 관련 기업체 자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그 외	주관식으로 종류 기입 ()		①	②	③	④	⑤
창업 관련	창업 지원 (창업동아리, 경진대 회, 창업캠프, 창업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그 외	주관식으로 종류 기입 ()		①	②	③	④	⑤

* 주문식교육이란 학칙의 범위 내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협약에 의해 정원 내로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산업체가 주문식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채용을 약정 또는 우대하는 행태로 운영됩니다.

문 2-1. 위에서 제시된 산학협력 종류 중에서 **인력개발 분야**에서 귀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은 무엇입니까? 보기에 없을 경우 기타에 주관식으로 기입해주시시오

- ① 현장실습 ② 캡스톤디자인 ③ 계약학과 ④ 창업 강좌 및 교육
⑤ 주문식 교육 ⑥ 재직자 위탁 훈련
⑦ 기타 ()

문 2-2. 귀하가 문 2-1에서 선택한 **인력개발 분야** 산학협력 종류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관식으로 기입해주시시오.

(이유)

문 3-1. 위에서 제시된 산학협력 종류 중에서 **연구개발 분야**에서 귀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은 무엇입니까? 보기에 없을 경우 기타에 주관식으로 기입해주시시오

- ① 기초 및 응용연구 ② 기술개발 ③ 특허 출원 ④ 기술 관련 자문
⑤ 경영 관련 자문 ⑥ 기타 ()

문 3-2. 귀하가 문 3-1에서 선택한 **연구개발** 분야 산학협력 종류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관식으로 기입해주시십시오.

(이유)

문 4-1. 문1에서 제시된 산학협력 종류 중에서 **창업 관련 분야**에서 귀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은 무엇입니까? 기타를 택할 경우 주관식으로 기입해주시시오

- ① 창업동아리 지원 ② 경진대회 지원 ③ 창업캠프 참가 ④ 실제 창업
⑤ 기타 ()

문 4-2. 귀하가 문 4-1에서 선택한 **창업** 관련 분야 산학협력 종류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관식으로 기입해주시시오.

(이유)

문 5. 귀하 및 귀 대학이 지금까지 **산학협력**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느끼는 **주된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보기에 없을 경우 기타에 주관식으로 기입해주시시오.

- ① 대학 예산 및 인프라 부족
- ② 행정적 비용(시간, 인력 등) 부담
- ③ 지역 기업체의 호응 부족
- ④ 지역 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 연구, 교육 역량 부족
- ⑤ 산학협력 관련 정보 얻기 어려움
- ⑥ 기타 ()

II.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대한 인식

문 6.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는 대학 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 추진에 따라 **대학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개 보기 중 최대 3개 선택 가능하여 기타의 경우 직접 적어주시시오)

- ①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중 규제
- ② 지방자치단체 대학지원역량 및 전문성
- ③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에 따른 고등교육정책 일관성 및 지속성 우려
- ④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부담 격차
- ⑤ 지방자치단체 간 산업 및 인력 수요 불균형
- ⑥ 지역-대학 간 협력 거버넌스 운영
- ⑦ 지방자치단체 주도 대학 평가 체계
- ⑧ 기타 ()

문 7.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시시오. (예시: 지자체 공무원 고등교육 관련 전문역량 증진, 고등교육 사무 관할권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에 반영 등)

문 8. 그 외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시시오. (예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활성화, 지역 기업체의 수요 적극 반영 등)

문 9. 충남 RISE 체제하에서 지역-대학-기업체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입해주시시오.

문 10. 다음은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구상안(세부 과제 확정 아님)**을 제시한 것입니다. 참고로 기본계획은 교육부와 충남이 협약(MOU)을 맺은 후 수정 가능하며 기본계획 작성 후 세부 시행계획이 연차별로 수립될 예정입니다.

비전	미래로 동반 성장하는 힘센 충남 대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충남형 인재 양성을 통한 힘센 충남-대학-산업 육성 - 충남-산업-대학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지역 대학 정주 생태계 구축 			
가치	사람	기술	경제	혁신
핵심 분야	총체적 지역 인재 양성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지역 인재 양성 - 대상별 차별화된 인재 양성 - 산업별 인재 양성 선도 	지역 특화 연구개발(R&D)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점 분야 연구 역량 강화 - 미래 신성장 산업 연구 역량 강화 - 지역 발전 맞춤형 연구 역량 강화 		
	취·창업 정주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형 혁신창업 벨트 구축 - 창업 사각지대 해소로 취·창업 정주 생태계 구축 - 기업문화 고도화 교육 과정 지원 	대학 역할 혁신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학 교류 활성화, 직업-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인프라 고도화 - 외국인 유학생 교육 및 정주 여건 개선 - 대학 자원 및 인프라 전환 및 활용 		

충남의 지역 및 산업 여건과 귀 대학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충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하에서 귀 대학이 충남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분야별 과제(project)**를 자유롭게 1개씩 제안해주시시오.

1. 지역인재 양성 기반 강화	
2. 지역 특화 연구개발 역량 강화	
3. 취창업 정주 생태계 구축	
4. 대학 역할 혁신과 변화	

III. 통계처리

〈다음은 통계 처리를 위해서만 활용되는 질문들이며 익명을 보장합니다.〉

문 11. 소속 대학명을 기재해주시시오 ()

문 12. 현재 귀하께서 근무하는 대학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일반대 국공립(교대 포함) | ② 일반대 사립 |
| ③ 전문대 국공립 | ④ 전문대 사립 |

문 13. 현재 귀하의 소속 대학의 계열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인문계열 | ② 사회계열(상경계 포함) | ③ 교육(사범)계열 |
| ④ 공학계열 | ⑤ 자연계열 | ⑥ 의·약계열(간호, 보건 계열 포함) |
| ⑦ 예체능 계열 | ⑧ 기타 | |

문 14.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 ① 20~29세 | ② 30~39세 | ③ 40~49세 |
| ④ 50~59세 | ⑤ 60~65세 | ⑥ 66세 이상 |

문 15. 다음 중 귀하의 **성별**을 선택해주시시오

- ① 여성 ② 남성

문 16. 귀하의 근속년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문 17.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조교수 ② 부교수 ③ 정교수 ④ 명예교수
⑤ 비전임교원(산학협력 중점교수, 학술연구교수, 객원교수, 강의전담교수 등)

※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설문에 응답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설문해주신 내용은 정책 추진을 위해 소중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권한 지방이양(RISE체계)에 따른 충남형 고등교육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설문

[대학용 II: 일반산학협력 유형]

OID			
ID			

안녕하십니까? 귀하와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조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권한 지방이양
(RISE체계)에 따른 충남형 고등교육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위하여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설문입니다.

이번 설문은 현재 충남 도내 대학과 기업, 관련 유관 기관 등이 진행해 왔거나 진행하고
있는 산학협력 실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기업의 협력 필요성과 애로사항, 향후 RISE 체계
전환에 따른 지방-대학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파악하고자 선택형 및 기술형 설문으로
구성했습니다. 본 설문은 다음 주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대한 인식
2. 현재 충남 도내 대학-기업 산학협력 필요성과 애로사항
3. 향후 RISE 체계 전환에 따른 지방-대학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등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대학별
응답 결과는 비공개되며 연구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2.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3. 개인 식별 정보는 연구 책임 하에 비밀 보장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	---

귀하께서는 본 안내문을 숙지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 네, 동의합니다.)



2023년 0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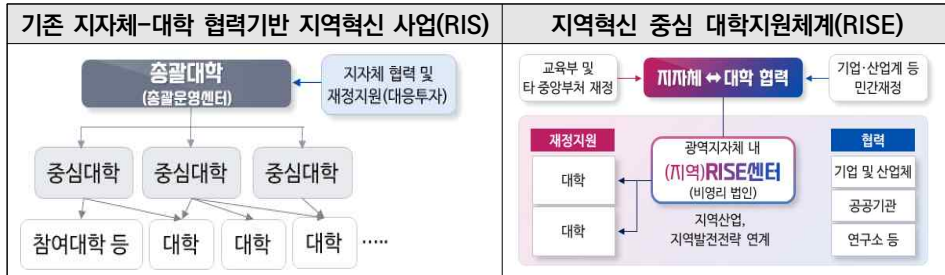
♣ 연구 책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진 부연구위원

♣ 설문 문의: 033)769-9875 ginakim733@krila.re.kr

참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기대효과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개요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는 대학 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RISE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에서 전담하던 대학 재정지원 예산과 기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지역 산업 및 문화, 지역 재생, 연구 개발(R&D) 등 전 분야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될 전망입니다.

□ 기대효과

주체	지자체	지역 기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의 다양한 난제 해결 • 경쟁력 있는 우수대학 육성으로 지역 정주 인재 증가 • 지산학 협력 활성화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정주 여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 R&D 효율성 제고 • 지역대학이 길러낸 우수한 지역인재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 지역산업이 필요한 지역인재를 적기에 확보
주체	지역 주민	지역 대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 대학시설을 문화·복지시설, 연구단지 등으로 전환하여 지역 사회 활력 제고 • 자녀를 진학시키고 싶은 지역 내 우수대학이 많아져 교육비 부담 경감 • 대학의 다양한 평생교육,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은 자율적 혁신을 통해 경쟁력 확보 • 지역의 싱크탱크, 지역혁신의 허브로서 대학의 역할 및 위상 제고 • 예산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완화 및 유연한 재정 운영 가능

※ 아래 문항을 읽고 해당 사항에 체크(V)하여 주십시오.

I. 대학 재정지원 정책 일반 현황

문 1. 귀 대학이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학 재정지원정책을 기재해주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야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시오.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 만족도에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류	경험 여부		만족도				
	있음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LINC)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대학 자율역량강화 지원 사업(ACE)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 (PRIME)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대학인문역량강화지원사업(CORE)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여성공학인재양성 사업(WE-UP)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글로벌 박사 양성사업(BK)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그 외	주관식으로 종류 기입 ()		①	②	③	④	⑤

문 2. 귀하 및 귀 대학이 지금까지 대학재정지원정책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느끼는 주된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보기에 없을 경우 기타에 주관식으로 기입해주시시오.

- ① 대학 자율성 침해 ②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 ③ 사업 간 유사 중복 문제
 ④ 대학 특성화 저해 ⑤ 재정지원 총량 규모 미흡
 ⑥ 기타()

II.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대한 인식

문 3.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는 대학 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 추진에 따라 대학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개 보기 중 최대 3개 선택 가능하여 기타의 경우 직접 적어주십시오)

- ①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중 규제
- ② 지방자치단체 대학지원역량 및 전문성
- ③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에 따른 고등교육정책 일관성 및 지속성 우려
- ④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부담 격차
- ⑤ 지방자치단체 간 산업 및 인력 수요 불균형
- ⑥ 지역-대학 간 협력 거버넌스 운영
- ⑦ 지방자치단체 주도 대학 평가 체계
- ⑧ 기타 ()

문 4.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시시오

(예시: 지자체 공무원 고등교육 관련 전문역량 증진, 고등교육 사무 관할권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에 반영 등)

문 5. 그 외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시시오. (예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활성화, 지역 기업체의 수요 적극 반영 등)

문 6. 충남 RISE 체제하에서 지역-대학-기업체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입해주시시오.

문 7. 다음은 **충남 고등교육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구상안(세부 과제 확정 아님)**을 제시한 것입니다. 참고로 기본계획은 교육부와 충남이 협약(MOU)을 맺은 후 수정 가능하며 기본계획 작성 후 세부 시행계획이 연차별로 수립될 예정입니다.

비전	미래로 동반 성장하는 힘센 충남 대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충남형 인재 양성을 통한 힘센 충남-대학-산업 육성 - 충남-산업-대학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지역 대학 정주 생태계 구축 			
가치	사람	기술	경제	혁신
핵심 분야	총체적 지역 인재 양성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지역 인재 양성 - 대상별 차별화된 인재 양성 - 산업별 인재 양성 선도 		지역 특화 연구개발(R&D)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점 분야 연구 역량 강화 - 미래 신성장 산업 연구 역량 강화 - 지역 발전 맞춤형 연구 역량 강화 	
	취·창업 정주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형 혁신창업 벨트 구축 - 창업 사각지대 해소로 취·창업 정주 생태계 구축 - 기업문화 고도화 교육 과정 지원 		대학 역할 혁신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학 교류 활성화, 직업-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인프라 고도화 - 외국인 유학생 교육 및 정주 여건 개선 - 대학 자원 및 인프라 전환 및 활용 	

충남의 지역 및 산업 여건과 귀 대학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충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하에서 귀 대학이 충남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분야별 과제(project)**를 자유롭게 **분야별로 1개씩** 제안해주십시오.

1. 지역인재 양성 기반 강화	
2. 지역 특화 연구개발 역량 강화	
3. 취창업 정주 생태계 구축	
4. 대학 역할 혁신과 변화	

III. 통계처리

〈다음은 통계 처리를 위해서만 활용되는 질문들이며 익명을 보장합니다.〉

문 8. 소속 **대학명**을 기재해주십시오. ()

문 9. 현재 귀하께서 근무하는 **대학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일반대 국공립(교대 포함) ② 일반대 사립
③ 전문대 국공립 ④ 전문대 사립

문 10. 현재 귀하의 소속 **대학의 계열**은 무엇입니까?

-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상경계 포함) ③ 교육(사범)계열
④ 공학계열 ⑤ 자연계열 ⑥ 의·약계열(간호, 보건 계열 포함)
⑦ 예체능 계열 ⑧ 기타

문 11.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65세 ⑥ 66세 이상

문 12. 다음 중 귀하의 **성별**을 선택해주시시오

- ① 여성
② 남성

- ① 여성
② 남성

문 13. 귀하의 근속년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문 14.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조교수 ② 부교수 ③ 정교수 ④ 명예교수
⑤ 비전임교원(산학협력 중점교수, 학술연구교수, 객원교수, 강의전담교수 등)

※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설문에 응답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설문해주신 내용은 정책 추진을 위해 소중한 자료로 사용됩니다.